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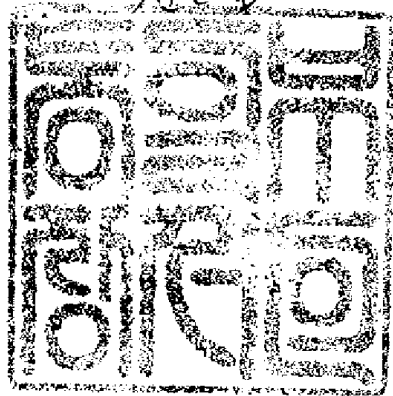
80-12-04

'98 新進研究者
北韓 및 統一關聯 論文集

統一教育·弘報 (V)

1998

서산필



統一部

본 논문집은 '98년도 북한 및 신진 연구자(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5권의 책으로 편집·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收錄論文 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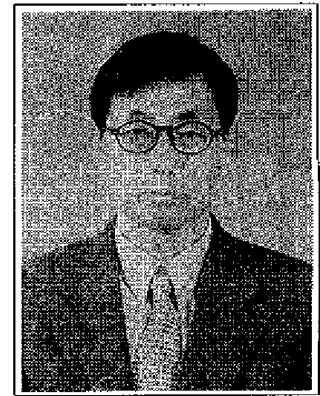
1. 大學 統一教育關聯 教養講座의 實態와 實驗的인 受驗모델 開發 1
金 鴻 秀 (경 성 대)
2. 統一以後의 國民統合을 위한 人性教育 方案 研究 69
金 國 鉉 (교 원 대)
3. 統一以後 社會科 教育目標로서의 市民性 概念의 再定立 및
具體化 方案 131
金 景 模 (경 상 대)
4. 統一準備를 위한 對國民 弘報戰略 樹立에 관한 일 研究 177
韓 美 靜 (성 결 대)
5. 새 統一 韓國의 영·유아 教育研究 223
林 明 姬 (동남보건전문대)

〈附 錄〉

1. 圈別 收錄論文 一覽表 309
2. 最近 年度別 研究 課題 目錄('96~'98년) 311

大學 統一教育關聯 教養講座의 實態와 實驗的인 授業모델 開發

- 부산지역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



金 鴻 秀(경성대)

목 차

<요약문>	5
1. 서론	9
2. 대학 통일교육의 기초적인 이해	13
3.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인 실태분석	19
4.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분석	26
5.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담당교수들의 인식조사 분석	39
6.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수업모델	48
7. 결론 및 제언	54
부록 : 학생, 교수 설문조사지	58
※ 참고문헌	65

【요약문】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적인 차원의 탈냉전은 지난 반세기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동북아의 국제관계도 지난 냉전시대의 이분법적인 대결보다는 공존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손에 잡힐 듯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관계는 여전히 적대적인 대결과 갈등을 유지하고 있고, ‘탈냉전의 비동시성’과 ‘분단의 중층성’에 의해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여전히 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한반도 통일문제를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현실적·구체적인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소위 탈냉전의 부정적인 영향이 분단의 부정적인 구조와 결합되면서 대외적인 위기로 표출되고 있고, 게다가 지난 연말에 불어닥친 국제금융위기는 한국자본주의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안 통일문제는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준비나 계획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당면 과제로서 지침과 실천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은 통일운동이 언제나 정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든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환경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속도와 폭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이전의 방향, 접근방법,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이 관심을 가진 대학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적실성을 동시에 갖춘 방향과 내용,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대학 통일교육이 대학생이라는 대상, 탈냉전시대라는 시간성, 분단된 한반도라는 공간성을 충분히 고려한 보다 생동감 있고 체험적이면서도 성숙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가지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부산 지역적인 차원에서 대학 통일교육을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과제이고, 둘째는 실제로 연구자 자신이 지난 5년동안 대학 통일교육의 경험에 근거한 실험적인 수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부산 주요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분석의 결과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① 지난 1990년 대학 교양강좌에서 『국민윤리』 강좌가 사라진 이후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는 교양선택 및 자유선택의 범주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과목은 『북한이해』 및 『북한사회의 이해』 강좌였다. ② 개설 강좌수가 학교별, 학기별로 많은 불균형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학교는 1-2학기에 각각 3학점의 비중으로 개설되고 있는 반면, 많은 대학은 1-2학기 중 한 학기만 개설되던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심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③ 통일관련 교양강좌는 전부가 교양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행해지고 있고, 조사대상의 6학교 중 2학교는 아예 통일관련 교양강좌가 한 강좌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④ 통일교육의 주관기관은 (국민)윤리교육 및 국민윤리학과가 있는 경우는 해당학과에서, 없는 경우는 정치행정학부 및 정치외교학과에서 주관하고 있었다. 둘째, 수강학생들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①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② 통일관련 정보는 주로 언론매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을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자는 27%를 차지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재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③ 통일관련 교양강좌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보면, 선배들의 권유-평소의 관심-시간표상의 여건-담당교수의 명성 순으로 선배들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경향은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타전공영역보다는 인문·사회 계열이 더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④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개설여부에 대해서는 약 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교양필수로 하는 안에 대해서도 약 80% 이상이 찬성했다. 이런 현상은 약 70%의 수강생이 통일교육관련 강좌를 타인에게 권유하겠다는 반응으로 연결되었다. ⑤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이해에 약 90% 정도의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수업의 예로 점으로는 교재와 교수의 수업방식을 가장 높게 지적했다. ⑥ 통일교육관련 수업을 듣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가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 높았다.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담당교수들의 실태와 발전적인 개선점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담당교수들 전부 남자였고 15명 중 13명이

시간강사였으며, 연령상으로는 30대(60%)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전공별로는 정치학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② 담당교수의 전공은 87%가 정치학이었으며 세부전공은 다양한 분포를 보여 통일 및 북한관련 전문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③ 통일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점은 적절한 교재와 자료의 부족과 입체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을 제시했다. ④ 주된 강의방식은 강의식+질의응답 식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강의 방식으로는 시청각+조별토론식을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통일교육관련 입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그 제도의 근본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응답하여 그 기본 취지는 찬성하고 있으나 이전의 반공교육과 같은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⑥ 통일교육관련 과목의 교양필수로의 전환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제시한 실험적인 수업모델의 근본 입장은 신세대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생동감 있고 체험적이며 창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대학 통일교육은 교양강좌로서 전인적인 교육의 내용을 가져야 하고, 그 방법은 3차원의 강의를 수용하며, 통일교육을 보는 기본 입장은 민족주의 시각, 삶의 체험, 생존의 논리라는 3가지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연구자가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주별 강의계획서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사랑과 통일』 주제를 발췌해서 지면화시켰던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결론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기한다.

첫째, 대학 통일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교수의 자질과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정보·자료의 부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전문가는 시일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지만, 적어도 자료의 개방을 비롯해서 통일교육 자료의 체계성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담당교수의 자질문제나 자료의 개방, 체계적인 공급은 지적되어왔다. 필자는 통일교육 담당교수 및 학생들의 자료이용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또다른 분단상황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광화문 우체국 『북한자료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북한영화도 상영되고 즉석에서 토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자료이용 뿐만 아니라 영화상영의 경우도 그 절차와 자료구입의 애로 등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학 통일교육관련 지원사업을 대학 현장의 통일

교육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본다.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나 통일문제학술세미나, 학생학술토론회 지원 등 통일부의 사업의 취지가 보다 살아나게 하려면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등과 연계시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셋째,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요청된다.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나 담당교수들의 한결같은 요구 중의 하나가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의 근본 취지 등이 담당교수나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90년대 신세대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통일교육의 수업방법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의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애로점 중의 하나도 바로 정보 및 자료의 부족과 함께 시청각 교육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었다. 이 분제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법은 강의식+시청각+조별토론식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청각 교육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통일교육이 요청된다.

다섯째, 전국적인 차원 및 지역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관련 담당교수들이 교육현장에서 갖는 애로점이나 각 개인들이 통일교육의 수업모델들을 공개하고, 건전한 상호비판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향후 통일교육은 현실성과 창조성, 미래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은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통일의 지혜를 도출하는 구조를 구축해야하고, 통일교육관련 제도화에는 학계 통일교육관련 담당교수들의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듯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소위 신세대 대학생들에 대한 비판의 우려가 많지만 통일교육에 한정시켜 평가한다면 통일문제에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놓칠 수 없다. 통일이 우리가 싫고 좋음의 대상이 아니듯이 신세대에 대한 기성세대 및 정부의 지원과 격려, 올바른 교육은 시대가 젊어지고 갈 의무인 것이다. 신세대의 용기와 지혜없이 21세기 통일된 조국은 상상하기 어렵다.

1. 서 론

1.1 문제제기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적인 차원의 탈냉전은 지난 반세기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동북아의 국제관계도 지난 냉전시대의 이분법적인 대결보다는 공존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¹⁾ 특히 동서독의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손에 잡힐 듯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관계는 여전히 적대적인 대결과 갈등을 유지하고 있고, '탈냉전의 비동시성'과 '분단의 중층성'에 의해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여전히 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한반도 통일문제를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현실적·구체적인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소위 탈냉전의 부정적인 영향이 분단의 부정적인 구조와 결합되면서 대외적인 위기로 표출되고 있고, 게다가 지난 연말에 불어닥친 국제금융위기는 한국자본주의의 허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남북관계는 인적·물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인 위기현상은 남한이 비록 IMF체제 관리하에 있지만 통일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처럼 현안 통일문제는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준비나 계획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당면과제로서 지침과 실천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 기아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통일운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이런 내외적 변화에 실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런 통일논의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함께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1)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서울 : 한울, 1998), 서론 참조.

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통일문제는 무엇보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국민들의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난 90년대 초까지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냉전적 영향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탈냉전적인 영향에 의해 통일문제가 우리 삶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 동안 통일교육은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 내용, 방법,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하여 적지않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다.²⁾ 기존 연구성과의 공통적인 내용은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는 데는 합의를 보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대학통일교육의 경우에는 지난 1980년대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교양필수였던 『국민윤리』 교과가 사라진 이후 그 개략적인 방향과 내용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일교육 관련 교양강좌가 전혀 개설되지 않은 대학도 있을 뿐더러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문교육에 밀려서 더욱 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이나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오늘날 대학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지난날의 통일교육이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일련 통일교육이었다기 보다는 정권적인 차원의 반공교육이었다는 점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통일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통일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통일교육은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어쩌면 통일조국의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역할을 맡을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실에 대한 우려가 최근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회³⁾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의의 공통된 기조는 '통일교육,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에 바탕하여 보다 체계화시키고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전의 통일교육, 특히 대학 통일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통일교육이 정권안보 차원에서 실시되고 전 민족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이 되지 못한 점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 못지 않게 대학자체의 통일교육 방법 및 내용이 대학생들에게 다

2) 통일교육의 제반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통일교육관련 논의 자료집」(서울 : 통일원, 1997).

3) 「통일대비교육지원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실천과제(서울 : 통일원, 1997.9);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1997.7).

가설 수 있는 내용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교환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학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수렴도 필수적이라 보여진다. 더구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보고서 하나 없는 상황에서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만 강조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는 지난 1992년 이후 대학에서 통일관련 강의와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통일시대를 열어갈 대학생들이 통일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고민해왔다. 시대와 세대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통일관련 강의의 자료와 교육방법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있었다. 즉, 이전의 문헌중심적·지식중심적 교육방법으로서는 오늘날 신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통일문제를 민족적인 과제를 포함하면서도 젊은 대학생들의 삶과 연결시켜 교육할 수 없을까라는 데 주목하게 되었다. 즉, 대학에서 이전의 국정교과서적인 틀을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창조적인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부산지역 주요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 동안 대학의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그 대안 등이 제기되었지만 그 기초적인 작업인 실태조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 주요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실태를 제도적인 측면과 교수·학생들의 인식조사의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둘째는 대학 통일교육 교양강의의 실험적인 수업모델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제도적인 실태분석과 함께 연구자가 지난 5년간의 강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업모델을 지면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화라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맞는 통일교육의 수업모델을 제시하여, 개별화되고 화석화된 대학 통일논의를 보다 생동감 있고 연대적인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1장에서 지난 1980년대 말 이후 한반도 국내의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문제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과, 이렇게 변화된 통일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계를 보다 발전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21세기 통일의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 부산지역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업모델 개발을 제기하였다.

2장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기초적인 이해로서 통일교육의 개념과 통일교육 관련 교양강좌의 범주, 그리고 대학 통일교육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기존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부산지역 주요 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부산지역 대학교의 현황 및 학교선정, 실태분석의 시간범위와 자료, 실태분석의 항목 등 실태분석의 개요를 제시하고 그 분석의 각 항목에 대한 실태를 각 대학에서 발행하는 수강편람과 담당학과 담당자의 도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대학 통일교육 관련 교양강좌에 대한 부산지역 주요 대학생들의 인식조사를 분석하였다. 1998년 1학기 통일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그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부산지역 4개 대학, 즉 국립의 부경대, 부산대와 사립의 경성대와 동의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인식조사의 결과와 담당교수들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6장에서는 연구자가 지난 5년 동안 통일교육 관련 교양강좌를 담당해 오면서 개발한 실험적인 수업모델을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 내용, 그리고 실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7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체감적이고 창조적인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2. 대학 통일교육의 기초적인 이해

2.1 대학 통일교육의 개념과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범주

2.1.1 대학 통일교육의 개념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우선 통일교육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정현 교수 등은 통일교육이란 “현존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국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우리 민족성원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⁴⁾이며, 그 구체적인 교육목표로는 첫째, 우리 민족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능력의 증진, 둘째,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로 통일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지적능력과 사고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셋째, 통일국가의 실현 이후 우리 민족이 대처해야 할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 넷째, 북한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평가능력의 고양, 다섯째,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된 인격체의 형성 등에 두고 있다.⁵⁾ 또한 민병천 교수는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치관과 능력을 갖게 하며, 분단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여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서 책임있는 민족성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그는 통일교육의 범주를 북한에 대한 교육, 자유민주이념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 생활교육, 안보교육, 반공교육, 협의의 통일자체에 대한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⁶⁾

둘째, 시대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을 들 수 있다. “세계화시대의 대학생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조선대의 김홍명 교수는 “통일교육은 통일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게 하는 교육”⁷⁾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건영은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

4) 신정현·신용철·권오정 공저,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서울 : 탐구당, 1997), p. 299.

5) 위의 책, pp. 300-301.

6) 민병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1997.1.)

하고, 통일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능력을 배양하고, 체제역량을 강화하며, 통일문화를 창조하고, 체제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⁸⁾ 또한 김국현은 통일교육을 통일한국의 미래상에서 찾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는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기존의 냉전체제하에서 심화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지양하도록 하고, 통일조국의 정신적 기초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 설정된 민족주의에 기초한 자유, 민주, 복지체제에 대해 확산을 가지도록 하고,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고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교육, 민주시민교육, 정보화교육을 포괄하며, 이 세 가지 교육은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셋째, 통일원은 통일교육을 "통일국가 건설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 최근에는 통일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통일대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¹¹⁾ 특히 1998년 새정부 출범 후 통일원이 통일부로 명칭이 바뀐 이후 통일교육은 전일보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주제,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교육의 주체가 기존의 일방적인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주도 민간지원' 방식에서 '정부-민간 협력'의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당위적·규범적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각론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방법이 피교육자의 의식과 수준, 정서에 맞추어 다양화·침단화되어야 한다.¹²⁾

7) 김홍명·안종철·이두유, 「세계화시대의 대학생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38호(서울 : 한국국민윤리학회, 1998.4), p.193.

8) 윤건영,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92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VI:통일조국의 헌법·토지·교육제도·통일교육 방향』(서울 : 통일원, 1992).

9) 김국현,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교육의 영역 및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2호(충주 :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59-183.

10) 통일원, 『통일교육 기본 방향』(서울 : 통일원, 1995), p. 4.

11) 통일연수원, 『통일문답』(서울 : 통일연수원, 1995), p. 199. '통일대비교육'이란 통일에 대한 국민적, 민족적 차원의 수용성을 높이 나가는 정치교육적 노력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과제로서, 다음의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일준비교육이다. 즉 현실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통일과 입에 대해 통일주체로서의 확고한 의지와 가치관, 바람직한 태도 등을 함양하도록 해주는 것. 둘째, 통일대비교육이다. 즉 통일이후의 민족전체의 삶이 좀더 평화롭고 복된 것이 되기 위해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 품성과 태도 등을 사전에 길러주는 것이다.

대학 통일교육은 이상의 통일교육의 기본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과 그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화의 요소이다. 변화된 통일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세계화 경향은 대학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통일교육이 이전의 일방적인 체제 우월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된 통일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¹³⁾ 둘째, 대학 통일교육은 의식 및 인식차원의 교육 뿐만 아니라 실천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통일교육은 교양교육으로서 대학인 전체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하지만, 특히 초·중·고 학생과는 다른 통일의 주도적인 세대로서 그 실천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모범적인 수업모델 개발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 통일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면 “대학생으로 하여금 통일과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통일에 대한 준비와 통일 후의 국가건설의 과제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목표를 “통일을 지향하는 의식을 개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일과정에서 사회 전체와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¹⁴⁾

2.1.2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범주

앞 절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에 따르면 대학 통일교육 교양강좌의 범주는 크게 통일준비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을 포함한다. 이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통일의 당위성을 비롯한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가치관 형성에 대한 내용,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체제통합 및 융합을 이끌 수 있는 통일준비교육, 통일 후 나타나게 될 제반

12)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답100』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1998), pp. 233-234.

13) 대학 통일교육에 있어서 개방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교육 그 자체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이점은 독일의 정치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통일교육은 개방적인 이데올로기 교육과, 상호인정과 존중, 그리고 화해와 이해와 인도적 협력과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교육, 장기적 전망 하에서의 교육, 구체적 교육과정과 교과성에 연결되는 통일교육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오인탁, 「통일준비-교육-」, 이영선 편, 『통일준비』 (서울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14)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연구』 제1권 제2호(서울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 71.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대비교육 등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중에서 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강좌를 선정하였다. 1988년 기준 부산지역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는 다음과 같다. 부산대는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민족동질성의 회복』, 『북한사회의 이해』, 부경대는 『민족과 통일』, 『북한의 이해』, 경성대는 『북한문화의 이해』, 『북한의 이해』, 동의대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아시아 평화와 남북통일』, 『북한사회의 이해』, 『북한의 정치와 사회』 등이 포함된다.

2.2 대학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2.2.1 대학 통일교육의 역사적인 변천과정

대학 통일교육은 1968년 정부가 『국민윤리』를 대학 교양과목으로 채택할 것을 권한 이후, 통일환경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과의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통일(반공)교육이 교육차원에서 체계화된 것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의 만들어지면서부터이지만 대학의 통일교육이 본격화된 것은 정부가 1970년에 『국민윤리』를 교양 필수과목(2학점)으로 지정한 이후 1988년까지 국책과목으로서 시행되었다. 1977년 서울대학교에서 국민윤리학과를 대학원 과정으로 신설하면서 그 교육내용의 체계화가 시도되었고, 1981년 전국의 국립 사범대에 국민윤리학과가 설치되면서 대학의 교양강좌를 주관했다. 이때부터 1988년까지 『국민윤리』교과목은 2학점씩 2학기에 걸쳐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이 되었고, 이념교육이 더욱 강조되었다.¹⁵⁾ 또한 사범대의 국민윤리교육과는 중등 도덕 및 윤리교과 담당교사의 양성기관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과 대학내의 학원자차화 운동에서 기존의 『국민윤리』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되고, 결국 1989년 정부는 대학의 『국민윤리』과목을 교양과목으로의 채택여부를 대학 자율에 일임하게 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민윤리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편하였다. 1990년 정부는 대학 『국민윤리』과목의 존폐문제를 대학의 자율에 맡겼고,

15) 이우영, 앞의 글(1997), p. 60.

이를 계기로 대학 교양과목에서 『국민윤리』라는 강좌는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 대학 통일교육의 이념적인 지향점을 중심으로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자. 전반적인 통일교육의 내용과 같이 대학의 통일교육의 이념·내용적인 기본 방향은 ‘반공교육’ → ‘통일·안보교육’ →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대학 통일교육이 시행된 1970년부터 1980년 제 3차 교육과정 시기까지는 초·중등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승공교육, 공산주의 이념 비판교육, 멸공교육 등 완전한 반공교육으로서 대학에서의 교련과목과 함께 시행되었다.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즉 제5공화국시대의 통일교육은 지난날 반공교육의 영역을 더욱 더 확대하여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정착시킨다는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반공위주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1989년 제5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통일교육은 지난날의 반공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정식 개칭되었다. 대학의 통일교육은 1989년 이후 사실상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사라졌다. 그리고 기존의 『국민윤리』 과목은 없어졌지만 내용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과목들의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반공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강조되고 있다. 1995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안보교육이 통일교육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도 통일교육에 관한 통일지향적인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평화와 세계화 시대의 통일문제를 강조하고 있다.¹⁶⁾

2.2.2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¹⁷⁾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학 통일교육은 지난 우리 민족의 고달픈 만큼이나 그 방향과 성격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현행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16)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세구, 「제7차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주최 초정강연회 자료집(1998. 3. 27).

17)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1권 제2호(1997), pp. 68-70.; 이영선, 「통일교육법 제정에 따른 통일교육체제의 개선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통일대비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발표문(1997.7.), pp. 47-49; 추병완,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통일교육·홍보(V) (서울: 통일원, 1997), pp. 17-21.; 신정현 외 공저,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론(서울: 탐구당, 1997), pp. 301-305.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발견한 점들을 함께 정리했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 성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의 통일교육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통일교육을 정치교육과 결부시킨 논의를 들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에 접근하고 있는 시도이다. 이는 정치와 교육을 결합한 정치교육의 하위체계로서 통일교육을 자리매김하는 시도이다.¹⁸⁾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을 윤리·도덕이라는 가치지향적인 접근을 들 수 있다.¹⁹⁾ 이와 같은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은 통일교육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정리가 요청된다.

둘째, 통일관련 교과목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학에 따라 북한 혹은 통일에 대한 과목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극히 소수인 경우가 허다하다.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 실태 분석대상의 6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는 한 개의 강좌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며, 개설된 학교의 경우에도 1학과 2학과의 편중이나 학교 별로 너무나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셋째, 강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 문제는 과목 담당교수의 전공의 편향성과 과목 자체의 부족, 그리고 수업진행 방식의 전편일률성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담당교수에 있어서 대부분 정치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담당함에 따라 통일의 원인이나 북한정치 및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강의를 강조되는 정치학적 관점의 편향성, 과목자체가 대부분 『북한의 이해』에 한정되어 북한의 전반적인 이해는 가능하겠지만 한 학기 동안에 실제로 북한의 무엇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는 과목자체가 부족하고 통일 및 북한 관련 전공자의 부족에서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수업진행 방식도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 보편 강의식에 그치고 있어서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 전반적인 통일교육이나 대학내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18) 세계화 시대와 관련하여 통일문제를 정치교육의 하위체계로서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1997년 한국 정치학회가 주최한 세계정치학회 17차 서울세계대회 동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들을 들 수 있다. 특히 다음의 글을 참조. 한만길, 「'개방적' 정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의 과제」, 손기웅,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기본방안」,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와 교육』(서울: 한국정치학회, 1997).

19) 대표적인 글로서는 추병완,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김대균, 「가치교육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통일교육·홍보(V)』(서울: 통일원, 1997).

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나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 그리고 중등의 통일교육이 대학 통일교육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는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들이 시청각 자료로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부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통일논문공모나 통일관련 학술세미나(대학 부설연구소 지원) 등이 통일관련 강좌와 연계없이 파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이 대학내 다른 교과목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서 일회적인 강의로 그치고 있다.

다섯째, 통일관련 담당교수의 상호의견교환이나 능력의 문제와 적절한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기존문헌에서는 담당교수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구자의 견해로는 자질이나 능력문제 못지않게 담당교수들간의 상호의견교환 및 지역차원 내지 정부 차원에서 담당교수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의 부족이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통일교육과 관련한 제반 자료에 대한 부족은 북한관련 자료의 공개화 문제와 아울러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지적 외에도 통일교육에 있어 북한의 일상생활 차원의 교육이 경시되고 있는 점, 교육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실과의 연계성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인 실태분석

3.1 실태분석의 개요

3.1.1 부산지역 대학교의 현황²⁰⁾과 학교 선정

부산지역의 4년제 종합대학은 아래와 같이 총 13개교이다. 즉, 국공립의 부경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4개교이고 사립은 경성대, 고신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카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동명정보대, 신라대 등 9개교이다. 본 연구는 이들 대학 중에서 국공립의 부산교육대, 한국해양대와 사립의 고신대, 동명정보대, 동서대, 부산카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등 특성화된 대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부산

20) 부산대학교 교수회, 『교수수첩』 p. 1111.

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나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 그리고 중등의 통일교육이 대학 통일교육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는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들이 시청각 자료로서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부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통일논문공모나 통일관련 학술세미나(대학 부설연구소 지원) 등이 통일관련 강좌와 연계없이 파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이 대학내 다른 교과목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서 일회적인 강의로 그치고 있다.

다섯째, 통일관련 담당교수의 상호의견교환이나 능력의 문제와 적절한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기존문헌에서는 담당교수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구자의 견해로는 자질이나 능력문제 못지않게 담당교수들간의 상호의견교환 및 지역차원 내지 정부 차원에서 담당교수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의 부족이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통일교육과 관련한 제반 자료에 대한 부족은 북한관련 자료의 공개화 문제와 아울러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의 지적 외에도 통일교육에 있어 북한의 일상생활 차원의 교육이 경시되고 있는 점, 교육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실과의 연계성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인 실태분석

3.1 실태분석의 개요

3.1.1 부산지역 대학교의 현황²⁰⁾과 학교 선정

부산지역의 4년제 종합대학은 아래와 같이 총 13개교이다. 즉, 국공립의 부경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4개교이고 사립은 경성대, 고신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카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동명정보대, 신라대 등 9개교이다. 본 연구는 이들 대학 중에서 국공립의 부산교육대, 한국해양대와 사립의 고신대, 동명정보대, 동서대, 부산카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등 특성화된 대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부산

20) 부산대학교 교수회, 『교수수첩』 p. 1111.

지역 통일교육 관련 교양강좌에 대한 제도적 실태분석은 국공립으로서 부산대, 부경대 2개교와 사립으로서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 신라대 등 4개교를 합해 총 6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부경대, 경성대, 동의대는 주간과 야간이 있는데, 본 실태분석에서는 개설강좌 수와 수강 학생 수 등은 주·야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1.2 실태분석의 기간범위와 자료

본 제도적인 분석의 기간범위는 1998년 1학기과 2학기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1997년 1학기과 2학기를 포함시켰다. 실태분석의 기본 자료는 1차적으로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위해 배부된 『수강편람』 및 『수업시간표』²¹⁾를 참고했으며, 수강신청 후 수강생 수 등의 확인을 비롯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위의 『수강편람』 및 『수강시간표』와 대조하여 각 대학 관련학과의 협조를 받았다. 특히 1998년 2학기 개설강좌와 수강생 파악은 해당 대학 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되도록 했다. 또한 담당교수의 현황 등 교과목에 대한 담당교수와 관련한 실태분석은 다음 장의 담당교수 실태 분석에서 고찰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3.1.3 실태분석의 항목

부산지역 주요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실태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설강좌의 명칭
- ② 개설여부 및 개설 학기
- ③ 교양선택, 교양필수, 학점의 분제
- ④ 주관기관
- ⑤ 강좌 개설 수 및 수강학생 수
- ⑥ 폐강 및 평가 기준

21) 각 학교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부산대와 신라대는 『수강편람』, 부경대는 『강의편람』, 경성대, 동아대, 동의대는 『강의시간표』로 표기하고 있다.

3.2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인 실태분석

3.2.1 개설강좌의 명칭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개설명칭은 부산대는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민족동질성의 회복』, 『북한사회의 이해』 등이며, 부경대는 『민족과 통일』, 『북한의 이해』, 경성대는 『북한문학의 이해』와 『북한의 이해』이며, 동의대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아시아평화와 남북통일』, 『북한사회의 이해』, 『북한의 정치와 사회』 등이다. 이들 강좌의 명칭을 종합해 볼 때 분단 및 통일문제와 북한사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부산대의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통일 및 북한문제의 문제의식을 보다 명확화한 과목으로 볼 수 있고, 경성대의 『북한문학의 이해』는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개설되고 있으나 1학기에만 개설되고 있고 98년의 경우 1강좌 개설되고 있다.

3.2.2 개설여부, 개설학기

1998년 기준 제 1, 2학기를 통해 통일관련 교양강좌가 하나라도 개설된 학교는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동의대 등 4개교이고, 동아대와 신라대는 전공강좌에는 있으나 교양강좌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개설학기도 학교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부산대와 경성대의 경우는 1학과 2학기에 각각 다른 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부경대는 1-2학기에 동일교과목이 개설되며, 동의대는 일부과목은 1-2학기 연속해서 개설되고 일부과목은 해당학기에만 개설되고 있었다.

3.2.3 선택, 필수와 학점

2장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한국 대학 교양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양필수, 교양선택, 자유선택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산지역 통일교육 교양강좌의 필수, 선택, 자유선택 및 학점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산대는 교양선택의 7개 영역²²⁾ 중에서 1학기에는 『민족분단과 통일문제』가, 2학

22) 7개영역은 I.언어영역, II.역사·철학영역, III.사회과학영역, IV.문학·예술영역, V.자연과학영역, VI.보건·체육영역, VII.한국문화의 정체성 영역 등이다.

기에는 『북한사회의 이해』가 사회과학영역이고 2학점이다.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은 한국문화의 정체성 영역이고 2학점이다. 부산대는 교양강좌의 경우 교양공통, 기초필수, 교양선택으로 나누고 있고, 각과별로 이수학점이 다르다. 즉 각 과별로 전체 이수 학점(140-160학점)에서 1-2학년에 나누어 교양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필수는 대략 8학점이고 교양선택은 15-20학점 사이에서 8개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²³⁾

부경대²⁴⁾는 『민족과 통일』 및 『북한의 이해』가 교양선택 6개 영역²⁵⁾ 가운데 사회과학영역에 1,2학기 모두 개설되고 있고, 1학년-4학년 사이에 언제든지 이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 3학점이다. 부경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교양과목을 다르게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양필수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10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교양선택은 인문계열이 23학점, 자연계열이 30학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각 학부(학과)는 그 특성에 따라 15학점(자연계열은 22학점) 이내에서 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일관련 과목은 한 과목도 지정되지 못했다.

경성대는 1학기는 『북한문학의 이해』, 2학기는 『북한사회의 이해』가 자유선택교양에 개설되고 2학점인데 대부분 1-2학년에 수강하고 있다. 경성대의 교양과정은 기본공통교양과목(7학점), 컴퓨터(Pass), 기본선택과목(15학점) 등 총 22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전공기초가 각 학부(학과)에 따라 12-18학점 이수하고 나머지 자유선택 교양과목이 있다. 여기서 기본선택과목은 주간의 경우 외국어(2)영역, 역사영역, 철학 및 사회사상영역, 과학영역 등 4개 영역 가운데 각 영역별로 1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 통일관련 강좌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통일관련 과목은 전체학점 중에서 자유선택교양을 제외한 교양과정 학점과 전공관련 이수학점을 제외한 남은 학점 중에서 자유선택과목과 더불어 이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

23) 부산대학교, 1998학년도 제1학기, 제2학기 수강편람.

24) 부경대는 1997년에 구 수산대학교와 부산개발대학이 통합되어, 1998년에 부경대학교로 출범되었다. 따라서 부경대는 구 수산대의 대연 캠퍼스와 구 부산개발대학의 용당 캠퍼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설강좌도 주·야간으로 대연 및 용당 캠퍼스 별로 개설되고 있다.

25) 6개 영역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자연과학, 영어, 제2외국어 등이다.

동의대는 기본적으로 2학년만 수강 가능한 선택교양과목이며 2학점이다. 기본교양과목, 선택교양과목, 자유교양과목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교양과목은 1학년, 선택교양은 2학년, 자유교양은 3.4학년이 수강할 수 있다. 통일관련 교양과목은 2학년이 수강할 수 있는 선택교양과목이며, 1학기에는 국민윤리학과에서 『북한사회의 이해』와 『남북한 관계와 통일』, 정치행정학부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개설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국민윤리학과에서 『북한사회의 이해』와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를 각각 개설하고 있다.

3.2.4 주관기관

통일관련 주관기관은 대체로 국민윤리학 및 윤리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는 정치행정학부에서 주관하기도 한다.

부산대는 『민족분단과 통일문제』와 『북한사회의 이해』 강좌는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부경대는 구 수산대의 경우 교양부(구 부산개방대학은 미개설)에서 주관해 오다가 부경대로 통합되면서 정치행정학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경성대는 『북한문학의 이해』는 국어국문학과에서, 『북한의 이해』는 문과대학 국민윤리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동의대는 『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과 『북한의 정치와 사회』는 정치외교학과(정치행정학부),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및 『북한사회의 이해』는 국민윤리학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3.2.5 강좌 개설 수 및 수강학생 수

1998년도 기준으로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개설 수와 수강 학생 수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대는 1998년 1학기에는 최초 사회과학영역 37개 분반 중에서 통일관련 강좌는 6개 분반이 개설되었고 최종 3개 분반이 개설되었다. 특히 부산대는 1997년도 1학기 교양선택의 영역 중 한국문화의 정체성 영역 가운데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1강좌

를 개설하여 팀타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2학기는 사회과학영역 34분반 중 7개 분반이 개설되고 최종 6개 분반이 개설되었다. 수강 학생 수는 1학기 『민족분단과 통일문제』는 3개 분반에 206명으로서, 평균 한 분반 수강생은 67명이고, 『민족동질성 회복』은 하나의 분반에 266명이었다. 2학기 『북한사회의 이해』는 5개 분반에 275명이고 평균 한 분반 수강생은 55명이다. 이는 통일관련 교양강좌가 그 개설 수와 수강생 면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1997년 1학기의 『민족분단과 통일문제』는 최종 5개 분반에 532명이 수강했고, 2학기 『북한사회의 이해』는 9개 분반에 656명이 수강했다. 전체 수강생 숫자에서 1998년 1학기는 1997년에 비해 약 2.5배, 2학기는 2.4배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부정대는 대연 캠퍼스와 용당(못골) 캠퍼스로 나뉘어 개설되는데, 1998년 1학기의 경우 대연·용당 캠퍼스 전체는 『민족과 통일』이 3개 분반에 101명으로 한 분반에 평균 33명이 수강했고, 『북한의 이해』는 7개 분반에 333명으로 평균 한 분반에 48명이 수강했고, 2학기의 경우는 『민족과 통일』이 4개 분반에 117명으로 한 분반에 평균 29명이 수강했고, 『북한의 이해』는 6개 분반에 309명이 수강하여 한 분반에 평균 52명이 수강했다. 이상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1998년 2학기에 대연 캠퍼스의 주·야간은 사회과학영역 교양선택이 전체 29개 과목에 97분반이었는데, 이 중 통일관련 강좌(민족과 통일, 북한의 이해)는 2과목에 5분반이 개설되었다. 용당 캠퍼스의 주·야간은 전체 20개 과목 74분반 개설에 통일관련 강좌는 2개 과목에 5개 분반이 개설되었다. 전체 개설강좌와 분반에서 보면 통일관련 교양강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를 알 수 있다.

경성대는 1998년 1학기에 『북한문학의 이해』 1강좌에 58명이 수강했고, 2학기 『북한의 이해』는 9개 강좌에 1099명으로 평균 한 분반에 122명이 수강했다.

동의대는 1998년 1학기에 『북한사회의 이해』가 80명, 『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에 104명,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가 95명으로 전체 3개 과목에 수강생은 279명이며 평균 1강좌에 93명이었다. 2학기는 『북한사회의 이해』가 95명, 『북한의 정치와 사회』가 95명,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가 70명으로, 전체 3개 과목에 수강생은 260명이며 평균 1강좌에 87명이 수강했다.

3.2.6 폐강 및 평가기준

부산대는 1학기에 30명, 2학기는 폐강 인원을 50명으로 수강편람에 공고했는데, 2학기는 최종 30명 선으로 확정되었다. 평가기준은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부경대는 1학기에 30명, 2학기에는 15명 선을 폐강기준으로 삼고 있고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경성대는 1·2학기 모두 30명을 폐강기준으로 삼고 있고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동의대는 1·2학기 모두 30명을 폐강 기준으로 삼고 있고 상한선을 95명으로 하고 있다. 성적은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상대평가의 기준은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다. 부산대학점 A, B학점이 전체 수강학생 수의 5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별한 사항은 부산대의 경우 1998년 2학기부 재 수강 학점을 기존의 D+학점 이하에서 C+이하로 하향 조정된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부산지역 주요대학의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제도적인 실태

학교	개설강좌명	개설학기	개설강좌수 (수강생수)	학점	평가 기준	필수,선택, 자유선택	주관기관	폐강 인원수
부산대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민족 동질성회복 북한사회의 이해	1학기 1학기 2학기	3(206) 1(266) 5(275)	각각 2학점	상대	교양선택	윤리교육과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윤리교육과	30명
부경대	민족과 통일 북한의 이해	1-2 학기	3(101)4(117) 7(333)6(309)	각각 3학점	상대	교양선택	정치행정학부	1학기30 명,2학 기15명
경성대	북한문학의 이해 북한의 이해	1학기 2학기	1(58) 9(1099)	각각 2학점	상대	교양선택	국어국문학과 국민윤리교육과	30명
동의대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 아시아평화와 남북통일 북한사회의 이해 북한의 정치와 사회	1-2 1학기 1-2 2학기	1(95)1(70) 1(104) 1(80) 1(95) 1(95)	각각 2학점	상대	자유선택 자유선택 교양선택 자유선택	국민윤리학과 정치행정학부 국민윤리학과 정치행정학부	30명
동아대	해당 강좌 없음							
신라대	해당 강좌 없음							

※ 동의대학교 2학기의 수강인원수는 아직 최종집계가 발표되지않아서 담당교수의 출석부를 보고 확인한 인원수임.

※ 계절학기의 개설강좌는 제외하였다.

4.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분석

4.1 설문조사 개요

4.1.1 설문조사 방법

1) 설문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는 1998년 1학기 현재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수강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현재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설태를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학통일교육의 발전적인 방향과 내용 및 창조적인 수업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내용

①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의 당위성 ㉢대학생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원

② 대학 통일 교육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공강좌의 수강과 수강경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선택 동기 ㉥대학의 교양강좌에서 통일 교육 관련 과목의 개설 필요성 ㉦강좌 수강 후 실질적인 도움 정도 ㉧통일교육관련 강좌 수강 시 느낀 애로점 ㉨통일관의 변화 ㉩추천 여부 ㉪교양 필수개설에 대한 찬반 ㉫교양필수 개설과 주관처

3) 설문조사 방법

① 모집단

1998년 1학기 본 연구대상 학교로 선정된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동의대 등 4개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은 총 977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4-1> 설문조사 대상대학교 현황

대상지역	설문조사 대상 대학교	
	대학교명	통일관련교양강좌 수강학생 현황(명)
부산지역	경성대학교	58
	동의대학교	279
	부경대학교	434
	부산대학교	206
계	4	977명

② 조사기간

1998년 6월 7일 ~ 6월 17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③ 표본크기

4개 대학별로 통일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350부 내외를 배포하여 각 대학별로 43~138명씩 설문지를 회수하여 총 339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표 4-2> 설문조사의 표본

번호	대학교명	피설문자 인원(명)
1	경성대학교	43
2	동의대학교	97
3	부경대학교	61
4	부산대학교	138
계	4	339

④ 표집방법

각 대학교별로 교양강좌과목 중 통일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⑤ 조사방법

각 대학교 별로 수업시간 중에 설문면접조사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⑥ 자료처리 및 분석

회수된 설문자료를 코딩(coding)하여 퍼스널 컴퓨터에서 통계분석을 의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SPSS(Statis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를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과 성별, 학년 별, 전공별 배경 변수와 교차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교차분석은 $P < 0.05$ 의 유의도가 있는 것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5.43\%$ 이다

4.1.2 피설문조사자 특성

1) 성별

본 설문조사에 응한 총 339명의 설문응답자 가운데 남학생은 190명(유효빈도 비율 : 56.0%), 여학생은 149명(유효빈도비율 : 44.0%)이었다.

2) 학년

통일 관련 교양강좌가 대학 저학년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어 1,2 학년의 비중이 71.9%로 높았다. 본 설문조사에 응한 총 339명의 설문응답자 가운데 1학년 142명(33.6%), 2학년 130명(38.3%), 3학년 21명(6.2%), 4학년 46명(13.6%)이었다.

3) 전공 분야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과, 예체능 계열로 분류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응한 총 339명의 설문응답자중 가운데 인문계열전공은 114명(33.6%), 사회과학계열은 77명(22.7%), 자연과학계열은 37명(10.9%), 공과계열은 100명(29.5%), 예체능계열 11명(3.2%)이었다.

<표 4-3> 피설문자의 특성(표본구성 현황)

	분 류	응답자수(명)	유효빈도(%)	합계(명)	비 고
성 별	남	190	56.0	339	총설문응답자는 339명임.
	여	149	44.0		
학 년	1학년	142	41.9	339	
	2학년	130	38.3		
	3학년	21	6.2		
	4학년	46	13.6		
전공분야	인문계열	114	33.6	339	
	사회과학계열	77	22.7		
	자연과학계열	37	10.9		
	공과계열	100	29.5		
	예체능계열	11	3.2		

4.2 부산지역 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수강생의 인식 설문 조사 결과

4.2.1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1) 일상생활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일상생활에서 통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설문 1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많다’ 47명(13.9%), ‘약간 있다’ 188명(55.5%) 으로 나타나 69.4%의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별로 없다’ 98명(28.9%), ‘전혀 없다’는 6명(1.8%)이었다. 교차분석결과를 보면, 성별·학년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전공별로 보면 사회과학계열(15.6%), 자연과학계열(16.2%), 공과계열(19.0%)의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4> 일상생활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유의도
성 별	남	20.0	53.7	23.7	2.6	$\chi^2=17.878$ p=0.000
	여	6.0	57.7	35.6	0.7	
학 년	1학년	7.7	57.0	33.8	1.4	$\chi^2=16.239$ p=0.062
	2학년	21.5	49.2	26.2	2.1	
	3학년	9.5	66.7	23.8	0.0	
	4학년	13.0	63.0	23.9	0.0	
전공분야	인문	7.9	54.4	35.1	2.6	$\chi^2=17.217$ p=0.142
	사회과학	15.6	57.1	26.0	1.3	
	자연과학	16.2	56.8	21.6	5.4	
	공과	19.0	57.0	24.0	0.0	
	예체능	9.1	36.4	54.5	0.0	
전 체		13.9	55.5	28.9	1.8	N=339

2) 통일의 당위성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설문 2번 문항)라는 질문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97명(58.1%),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27명(37.5%),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명(3.2%),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명(1.2%)이 각각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당위성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학년별 차이는 두드

리지지 않았으며 전공별로는 사회과학계열의 학생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다른 전공군에 비해 높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68.8%) 반면 예체능계열의 학생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매우 낮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18.2%).

<표 4-5> 통일의 당위성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 본적이 없다	유의도
성별	남	58.9	36.8	3.7	0.5	$\chi^2=1.919$ $p=0.589$
	여	57.0	38.3	2.7	2.0	
학년	1학년	56.3	40.1	2.8	0.7	$\chi^2=5.492$ $p=0.789$
	2학년	60.0	33.1	4.6	2.3	
	3학년	61.9	38.1	0.0	0.0	
	4학년	56.5	41.3	2.2	0.0	
전공분야	인문	56.1	42.1	1.8	0.0	$\chi^2=33.733$ $p=0.001$
	사회과학	68.8	28.6	2.6	0.0	
	자연과학	56.8	35.1	0.0	8.1	
	공과	57.0	36.0	6.0	1.0	
	예체능	18.2	72.7	9.1	0.0	
전체		58.1	37.5	3.2	1.2	N=339

3) 대학 입학 이후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원

대학에 와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설문 3번 문항)라는 질문에 ‘언론매체’ 196명(57.8%), ‘책’ 33명(9.7%), ‘수업’ 91명(26.8%), ‘친구들과의 대화’ 10명(2.9%), ‘기타’ 9명(2.7%)으로 나타났다. 이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에 대한 의존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수업으로부터의 정보가 책, 친구들과의 대화, 기타 등의 문항보다 높았다. 책에 대한 의존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남학생: 11.1%, 여학생: 8.1%) 1학년이 책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13.4%)과 전공 분야별로 책에 대한 의존률은 사회과학계열(15.6%)과 예체능계열의 학생들(18.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기타에는 대학 방송국이나 대학 신문사와 같은 서클 활동과 학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습득한다는 소수의 응답도 있었다. 또한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해 서도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응답, 선교단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4-6> 대학 입학 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원

		언론매체	책	수업	친구들과의 대화	기타	유의도
성별	남	57.4	11.1	26.8	2.6	2.1	$\chi^2=1.427$ $p=0.840$
	여	58.4	8.1	26.8	3.4	3.4	
학년	1학년	49.3	13.4	27.5	5.6	4.2	$\chi^2=17.185$ $p=0.143$
	2학년	64.6	6.9	26.2	0.8	1.5	
	3학년	76.2	4.8	19.0	0.0	0.0	
	4학년	56.5	8.7	30.4	2.2	2.2	
전공분야	인문	63.2	7.9	21.9	4.4	2.6	$\chi^2=16.997$ $p=0.386$
	사회과학	54.5	15.6	23.4	3.9	2.6	
	자연과학	70.3	5.4	24.3	0.0	0.0	
	공과	50.0	8.0	36.0	2.0	4.0	
	예체능	54.5	18.2	27.3	0.0	0.0	
전체		57.8	9.7	26.8	2.9	2.7	N=339

4.2.2 대학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1)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공강좌 수강 경험

북한 및 통일 관련 전공강좌를 들을 적이 있습니까?(설문 4번 문항)라는 질문에 '있다' 72명(21.2%), '없다' 267명(78.8%)으로 각각 응답하여 전공강좌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다수였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강좌 수강 경험이 높으며 (남학생: 27.4%, 여학생: 13.4%) 학년별로는 4학년 학생들이 수강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전공 강좌를 접할 기회가 많은 인문·사회과학계열에 비해 오히려 자연과학·공과·예체능계열의 전공경험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전공강좌 수강 경험

		있다	없다	유의도
성별	남	27.4	72.6	$\chi^2=9.709$ $p=0.002$
	여	13.4	86.6	
학년	1학년	12.0	88.0	$\chi^2=30.104$ $p=0.000$
	2학년	21.5	78.5	
	3학년	19.0	81.0	
	4학년	50.0	50.0	
전공분야	인문	14.0	86.0	$\chi^2=9.935$ $p=0.042$
	사회과학	18.2	81.8	
	자연과학	24.3	75.7	
	공과	31.0	69.9	
	예체능	18.2	81.8	
전체		21.2	78.8	N=339

3)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선택 동기

통일교육 관련 교양강좌를 선택하게 된 주된 동기를 우선 순위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우선순위 1, 2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질문(설문 5번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첫 번째 순위의 선택동기로는 ‘선배들의 권유’ 110명(32.4%), ‘강좌 주제 및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92명(27.1%), 시간표상의 여건 때문에 97명(28.6%), 담당교수의 명성을 듣고 37명(10.9%), 기타 3명(0.9%)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들에게는 선배들의 권유가 상당 부분의 동기를 차지했으며(51.0%) 남학생들에 비해 자발적인 동기 부여가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들의 선배들의 조언에 대한 의존이 상당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7.7%) 3학년들은 통일 관련 강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2.4%) 전공별로는 인문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이 타계열인 자연과학계열, 공과계열, 예체능계열 보다 선배들의 권유에 의한 동기 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문·사회과학계열: 49.1%, 40.3%, 자연과학·공과·예체능계열: 16.2%, 17.0%, 0.0%) 이상과 같은 설문 6번 문항의 결과를 통해 볼때 통일 관련 강좌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대체로 복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를 살펴보면 강좌의 제목에 이끌리 수강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정치·경제적인 관심보다는 북한 문학과 예술과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수강한다는 응답, 올바른 통일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라는 의식적인 수강 선택도 있었다.

<표 4-8>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첫번째 순위의 선택 동기

		선배들의 권유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표상의 여건 때문에	담당교수의 명성을 듣고	기타	유의도
성별	남	17.9	32.6	35.3	12.6	0.3	$\chi^2=17.878$ $p=0.000$
	여	51.0	20.1	20.1	8.7	0.0	
학년	1학년	57.7	12.7	18.3	9.9	1.4	$\chi^2=17.878$ $p=0.000$
	2학년	19.2	37.7	30.8	12.3	0.0	
	3학년	0.0	52.4	42.9	4.8	0.0	
	4학년	6.5	30.4	47.8	13.0	2.2	
전공분야	인문	49.1	18.4	20.2	10.5	1.8	$\chi^2=17.878$ $p=0.000$
	사회과학	40.3	28.6	23.4	7.8	0.0	
	자연과학	16.2	37.8	35.1	10.8	0.0	
	공과	17.0	30.0	40.0	12.0	1.0	
	예체능	0.0	45.5	27.3	27.3	0.0	
전체		32.4	27.1	28.6	10.9	0.9	N=339

통일교육 관련 교양강좌를 선택하게 된 주된 동기를 우선 순위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우선 순위 1, 2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질문(설문 6번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두번째 순위의 선택동기로는 ‘선배들의 권유’ 56명(16.5%),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95명(28.0%), 시간표상의 여건 때문에 105명(31.0%), 담당교수의 명성을 듣고 68명(20.1%), 기타 15명(4.4%)으로 나타났다.

<표 4-8-1>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두번째 순위의 선택 동기

		선배들의 권유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표상의 여건 때문에	담당교수의 명성을 듣고	기타	유의도
성별	남	18.4	31.1	35.3	10.5	4.7	$\chi^2=9.935$ $p=0.042$
	여	14.1	24.2	25.5	32.2	4.0	
학년	1학년	15.5	20.4	28.9	32.4	2.8	$\chi^2=9.935$ $p=0.042$
	2학년	11.5	35.4	34.6	13.1	5.4	
	3학년	38.1	28.6	19.0	4.8	9.5	
	4학년	23.9	30.4	32.6	8.7	4.3	
전공분야	인문	13.2	26.3	26.3	29.8	4.4	$\chi^2=9.935$ $p=0.042$
	사회과학	19.5	23.4	22.1	29.9	5.2	
	자연과학	8.1	40.5	43.2	2.7	5.4	
	공과	22.0	30.0	35.0	9.0	4.0	
	예체능	9.1	18.2	63.6	9.1	0.0	
전체		16.5	28.0	31.0	20.1	4.4	N=339

4)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개설 필요성

대학의 교양강좌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한 과목(예: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북한사회의 이해 등)의 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설문 6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186명(54.9%), ‘개설돼도 좋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118명(34.8%), ‘개설 할 필요가 없다’ 7명(2.1%), ‘현행대로가 좋다’ 22명(6.5%), ‘모르겠다’ 6명(1.8%)으로 나타났다. 성별·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의 개설 필요성이 타전공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9>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개설 필요성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개설할 필요가 없다	현행대로가 좋다	모르겠다	유의도
성별	남	54.9	33.7	3.2	6.8	1.6	$\chi^2=2.831$ $p=0.586$
	여	55.0	36.2	0.7	6.0	2.0	
학년	1학년	55.6	31.0	1.4	9.9	2.1	$\chi^2=32.434$ $p=0.001$
	2학년	56.9	37.7	2.3	3.	0.0	
	3학년	28.6	42.9	4.8	9.5	14.3	
	4학년	58.7	34.8	2.2	4.3	0.0	
전공분야	인문	56.1	29.8	2.6	7.9	3.5	$\chi^2=11.190$ $p=0.798$
	사회과학	53.2	40.3	1.3	3.9	1.3	
	자연과학	56.8	35.1	2.7	5.4	0.0	
	공과	57.0	33.0	2.0	7.0	1.0	
전체		54.9	34.8	2.1	6.5	1.8	N=339

5)통일교육관련 강좌 수강후의 기여도

통일교육관련 강좌를 듣고 난 후 북한 및 통일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설문 7번 문항) '많은 도움이 되었다' 104명(30.7%), '조금 도움이 되었다' 203명(59.9%),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28명(8.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명(1.2%)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교육관련 강좌 수강 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0>통일교육관련 강좌 수강후의 기여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의도
성별	남	34.2	54.7	8.9	2.1	$\chi^2=7.053$ $p=0.070$
	여	26.2	66.4	7.4	0.0	
학년	1학년	28.2	62.7	6.3	2.8	$\chi^2=9.3960$ $p=0.402$
	2학년	29.2	60.8	10.0	0.0	
	3학년	38.1	52.4	9.5	0.0	
	4학년	39.1	52.2	8.7	0.0	
전공분야	인문	31.6	58.8	7.9	1.8	$\chi^2=12.588$ $p=0.400$
	사회과학	36.4	51.9	11.7	0.0	
	자연과학	16.2	75.7	8.1	0.0	
	공과	33.0	59.0	6.0	2.0	
전체		30.7	59.9	8.3	1.2	N=339

6)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수강시 애로점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설문 8번 문항) '교재' 53명(15.6%), '교수의 수업방식' 24명(7.1%), '시청각 교육' 62명(18.3%), '시설 등 교육환경' 43명(12.7%), '정보(자료)의 부족' 157명(46.3%)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정보(자료)의 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배경변수별 특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1>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수강 시 애로점

		교재	교수의 수업방식	시청각 교육	시설등 교육환경	정보(자료) 부족	유의도
성별	남	15.8	9.5	20.5	13.7	40.5	$\chi^2=8.155$ $p=0.086$
	여	15.4	4.0	15.4	11.4	53.7	
학년	1학년	12.0	12.0	12.0	13.4	50.7	$\chi^2=33.498$ $p=0.001$
	2학년	19.2	3.8	26.9	13.8	36.2	
	3학년	28.6	0.0	0.0	4.8	66.7	
	4학년	10.9	4.3	21.7	10.9	52.2	
전공분야	인문	11.4	8.8	15.8	11.4	52.6	$\chi^2=18.911$ $p=0.273$
	사회과학	22.1	9.1	11.7	15.6	41.6	
	자연과학	13.5	0.0	24.3	18.9	43.2	
	공과	16.0	7.0	22.0	9.0	46.0	
	예체능	18.2	0.0	36.4	18.2	27.3	
전체		15.6	7.1	18.3	12.7	46.3	N=339

7) 수강전후의 통일관의 변화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듣기 전과 들은 후의 통일관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설문 9번 문항) 라는 질문에 '변화가 없었다(예: 통일은 꼭 필요하다→통일은 꼭 필요하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66명(49.0%), '통일은 꼭 필요하다→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9명(11.5%), '통일은 꼭 필요하다→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명(2.9%),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통일은 꼭 필요하다' 89명(26.3%), '현 상태를 유지

히는 것이 바람직하다→통일은 꼭 필요하다' 23명(6.8%), '기타' 12명(3.5%) 라고 나타났다.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 중에서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의 응답에는 통일보다는 남·북한 상호 개혁에 의한 점진적인 교류의 확대에 비중을 두는 응답, 통일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뀌었다는 응답,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측면은 불변이나 그 이유, 방법에 대한 생각은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다. 교차분석결과에서는 배경변수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설문 1번 문항의 통일의 당위성과 연계하여 통일관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12> 수강전후의 통일관의 변화

		변화가 없었다	꼭 필요→만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꼭 필요→ 현상유지가 바람직	만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꼭 필요	현상유지가 바람직 →꼭 필요	기타	유의도
성별	남	51.1	14.2	5.3	16.3	8.4	4.7	$\chi^2=30.695$ $p=0.000$
	여	46.3	8.1	0.0	38.9	4.7	2.0	
학년	1학년	50.7	9.9	1.4	32.4	2.8	2.8	$\chi^2=24.512$ $p=0.057$
	2학년	50.8	10.8	2.3	23.8	8.5	3.8	
	3학년	42.9	14.3	4.8	19.0	19.0	0.0	
	4학년	41.3	17.4	8.7	17.4	8.7	6.5	
전공분야	인문	49.1	10.5	1.8	33.3	3.5	1.8	$\chi^2=44.940$ $p=0.001$
	사회과학	49.4	5.2	0.0	35.1	3.9	6.5	
	자연과학	51.4	18.9	0.0	10.8	16.2	2.7	
	공과	49.0	14.0	8.0	16.0	10.0	3.0	
	예체능	36.4	18.2	0.0	36.4	0.0	9.1	
전체		49.0	11.5	2.9	26.3	6.8	3.5	N=339

8)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타인에 대한 추천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다른 동료나 후배들이 들도록 추천할 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설문 10번 문항)라는 질문에는 '매우 좋다' 77명(22.7%), '그렇다' 156명(46.0%), '보통이다' 100명(29.5%), '아니다' 3명(0.9%), '전혀 아니다' 3명(0.9%)라고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로는 타인에 대한 추천의사는 1·2학년의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의 추천의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13>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타인에 대한 추천

		매우좋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유의도
성별	남	21.6	46.3	28.9	1.6	1.6	$\chi^2=5.003$ $p=0.287$
	여	24.2	45.6	30.2	0.0	0.0	
학년	1학년	23.2	43.7	30.3	0.7	2.1	$\chi^2=20.399$ $p=0.060$
	2학년	26.2	40.8	33.1	0.0	0.0	
	3학년	9.5	71.4	14.3	4.8	0.0	
	4학년	17.4	56.5	23.9	2.2	0.0	
전공분야	인문	20.2	48.2	29.8	0.9	0.9	$\chi^2=17.445$ $p=0.357$
	사회과학	26.0	50.6	22.1	1.3	0.0	
	자연과학	13.5	43.2	43.2	0.0	0.0	
	공과	28.0	43.0	26.0	1.0	2.0	
	예체능	9.1	27.3	63.6	0.0	0.0	
전체		22.7	46.0	29.5	0.9	0.9	N=339

9)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교양필수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설문 11번 문항) '적극 찬성한다' 75명(22.1%), '대체로 찬성한다' 205명(60.5%), '대체로 반대한다' 19명(5.6%) '적극 반대한다' 4명(1.2%), '잘 모르겠다' 36명(10.6%)으로 나타났으며 배경 변수별 특성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4-14> 통일 교육의 교양 필수 개설에 대한 견해

		적극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적극반대한다	잘모르겠다	유의도
성별	남	21.6	61.6	4.7	2.1	10.0	$\chi^2=4.020$ $p=0.403$
	여	22.8	59.1	6.7	0.0	11.4	
학년	1학년	19.7	60.6	7.7	1.4	10.6	$\chi^2=8.511$ $p=0.744$
	2학년	22.3	59.2	4.6	1.5	12.3	
	3학년	38.1	47.6	4.8	0.0	9.5	
	4학년	21.7	69.6	2.2	0.0	6.5	
전공분야	인문	28.9	50.9	7.9	1.8	10.5	$\chi^2=27.255$ $p=0.039$
	사회과학	20.8	68.8	2.6	1.3	6.5	
	자연과학	10.8	73.0	5.4	0.0	10.8	
	공과	21.0	62.0	6.0	1.0	10.0	
	예체능	9.1	45.5	0.0	0.0	45.5	
체		22.1	60.5	5.6	1.2	10.6	N=339

10) 통일교육의 교양필수 개설시 개설 주관기관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교양필수로 개설하는 것에 찬성하신다면 어디에서 주관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설문 12번 문항)라는 질문에 ‘아느 과에서 개설하든 상관없다’ 77명(22.7%), ‘정치외교학과’ 161명(47.5%), ‘윤리교육과(국민윤리학과)’ 30명(8.8%) ‘철학과’ 9명(2.7%), ‘교양부’ 49명(14.5%), ‘기타’ 13명 3.8% 로 나타났다. 성별·학년별 변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공분야별로 볼 때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계열의 학생들이 공과·예체능계열의 학생들보다 정치외교학과를 개설 주관기관로 높게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의 응답에는 ‘법학과’, ‘한문학과’, ‘역사학과’가 있었다

<표 4-15> 통일교육의 교양필수 개설시 주관기관

		아느과에서 개설하든 상관없다	정치외교학과	윤리교육과	철학과	교양부	기타	유의도
성별	남	28.4	40.5	7.4	3.2	17.4	3.2	$\chi^2=15.156$ $p=0.610$
	여	15.4	56.4	10.7	2.0	10.7	4.7	
학년	1학년	16.9	52.8	8.5	4.2	11.3	6.3	$\chi^2=19.300$ $p=0.200$
	2학년	27.7	40.8	11.5	2.3	15.4	2.3	
	3학년	19.0	52.4	4.8	0.0	19.0	4.8	
	4학년	28.3	47.8	4.3	0.0	19.6	0.0	
전공분야	인문	18.4	51.8	9.6	1.8	12.3	6.1	$\chi^2=43.985$ $p=0.002$
	사회과학	14.3	54.5	10.4	5.2	13.0	2.6	
	자연과학	16.2	56.8	0.0	0.0	27.0	0.0	
	공과	35.0	36.0	7.0	3.0	15.0	4.0	
	예체능	36.4	27.3	36.4	0.0	0.0	0.0	
전체		22.7	47.5	8.8	2.7	14.5	3.8	N=339

5.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담당교수들의 인식 조사 분석

5.1 설문조사의 개요

5.1.1 설문조사 방법

1) 설문조사 목적

이 설문조사는 대학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담당교수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갖는 애로점 등 그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점을 찾는 데 있다.

2) 설문조사 내용

①부산지역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 강좌의 실태 및 발전적 개선을 위한 담당 교수의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령 ㉡성별 ㉢전공(세부전공 포함) ㉣직급 ㉤강의경력 ㉥통일교육관련 강의에 수반된 애로점 ㉦통일교육관련 수업의 주된 방식(수업방식이 주로 강의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유 포함) ㉧가장 효과적인 교양 통일교육의 수업방식 ㉨강의교재 및 자료의 활용 ㉩통일교육과 관련한 입법화의 언론 보도 ㉪통일대비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입법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양필수안에 대한 견해 ㉬대학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 ㉭통일관련 수업과 관련한 수업사례

3) 설문조사 방법

①모집단

1998년 1·2학기 본 연구의 대상대학인 부경대, 부산대, 경성대, 동의대 등 4개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강좌중 하나 이상의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모두 총 17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5-1> 통일관련 교양강좌 담당교수 수(1998년 1·2학기)

대상지역	설문조사 대상 대학교	
	대학교명	담당교수 수
부산지역	경성대학교	1학기; 1명, 2학기; 6명 총7명
	동의대학교	1학기; 3명, 2학기; 3명 총6명
	부경대학교	1학기; 4명, 2학기; 5명 총9명
	부산대학교	1학기; 3명, 2학기; 4명 총7명
계	4	총 29명

※ 전체 29명 가운데 1-2학기에 모두 강좌를 맡은 사람과 3개 학교 모두 출강자1명, 2개학교 출강자 1명이다. 이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모집단은 17명이다.

②조사기간

1998년 8월 24일 ~ 9 월 10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다.

③표본크기

4개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강좌를 1개의 강좌라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 17명 전원을 표본으로 삼았는데, 이중 2명이 개인사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15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표 5-2> 설문조사의 표본

번호	대학교명	파설문자 인원(명)
1	경성대학교	4
2	동의대학교	5
3	부경대학교	3
4	부산대학교	3
계	4	15(명)

④표집방법

위에서 제시한 4개 대학의 교양강좌 중 통일관련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⑤조사방법

각 강좌의 담당교수별로 대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⑥자료처리 및 분석

회수된 설문자료를 코딩(coding)하여 퍼스널 컴퓨터에서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SPSS(Statis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를 활용하여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5.2 대학 통일교육관련 담당교수의 설문조사 결과

5.2.1 담당 교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1) 성 별

교수님의 성별은 어떠합니까?(설문 1번 문항) 라는 문항은 아래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표 5-3> 담당교수의 성별

	인원(명)	백분율(%)
남	15	100.0
여	0	0
계	15	100.0

2) 연 령

교수님의 연령은 어떠합니까?(설문 2번 문항)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30대가 60%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26.7%와 13.3%를 차지했다.

<표 5-4> 담당교수의 연령

	인원(명)	백분율(%)
20대	0	0.0
30대	9	60.0
40대	4	26.7
50대 이상	2	13.3
계	15	100.0

3) 전 공

교수님의 전공은 어떠합니까?(설문 3번 문항)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정치학을 전공한 담당교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외의 전공분야로는 국민윤리학, 문학이 각각 1명이 있었다.

<표 5-5> 담당교수의 전공

	인 원(명)	백분율(%)
정치학	13	86.7
경제학	0	0
철학	0	0
국민윤리학	1	6.7
기타	1	6.7
계	15	100.0

3-1) 세부 전공

교수님의 세부 전공은 어떠합니까?(설문 3-1번 문항)라는 질문에 정치학을 전공한 담당 교수의 세부전공은 정치이론전공, 정치사상전공, 한국정치전공, 중국정치전공, 러시아지역정치전공, 북한정치전공, 유럽정치전공, 지방정치전공으로 나타났고 다른 세부전공 분야로는 사회윤리, 현대문학을 전공한 담당교수가 있었다. 담당교수의 세부 전공과 통일교육과의 전공 일치도를 확인하면 북한정치과 한국정치 및 북한문학 등과 같이 비교적 전공이 일치하는 교수 수는 5사람이고, 공산권연구를 비롯한 지역연구자가 3명, 그 외에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전공이 일치하는 교수가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직 급

교수님의 현재 직급은 어떠합니까?(설문 4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는 대부분 시간강사(명예교수 포함)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번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15명 중 2명만이 조교수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시간강사였다. 이점은 통일교육에 시간강사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전임강사 이상이 통일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의 부족과 교양강좌를 회피하는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연

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표 5-6> 담당교수의 직급

	인원(명)	백분율(%)
정교수	0	0
부교수	0	0
조교수	2	13.3
전임강사	0	0
시간강사(명예교수, 겸임교수 포함)	13	86.7
계	15	100.0

5) 강의경력

교수님의 강의경력은 어떠합니까?(설문 5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강의경력은 1~2년에서부터 7년 이상까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5-7> 담당교수의 강의경력

	인원(명)	백분율(%)
1~2년	3	20.0
3~4년	4	26.7
5~6년	4	26.7
7년 이상	4	26.7
계	15	100.0

5.2.2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실태 및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

1) 통일교육관련 강의 중 갖는 애로점

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강의를 하시면서 갖는 가장 큰 애로점 2가지만 순위별로 숫자를 기입하여 주십시오.(설문 6번 문항)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적절한 교재의 부족'을 첫번째 애로점으로 '입체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비디오, CD, OHP시설 등)'을 두번째 애로점으로 응답한 결과가 많았다. 아울러 '학생들의 무관심'과 '학점에만 의

존하는 태도' 또한 강의중 갖는 예로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원 과다' 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며 기타에는 '통합적인 자료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 5-8> 통일교육관련 강의 중 갖는 예로점(첫번째 순위)

	인원(명)	백분율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4	26.7
적절한 교재의 부족	6	40.0
학생들의 인원 과다	1	6.7
입체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비디오,CD,OHP시설)	3	20.0
학점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의 태도	0	0.0
기타	1	6.7
계	15	100.0

<표 5-8-1> 통일교육관련 강의중 갖는 예로점(두번째 순위)

	인원(명)	백분율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0	0.0
적절한 교재의 부족	2	13.3
학생들당 인원 과다	3	20.0
입체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비디오,CD,OHP시설)	6	40.0
학점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의 태도	4	26.7
기타	0	0.0
계	15	100.0

2) 담당교수의 주된 강의방식

교수님의 통일관련 수업의 주된 강의방식은 어떻습니까?(설문 7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이중 '강의식+질의 응답식'이 가장 주된 강의방식으로 선호되었다. '강의식+토론식', '강의식+조별토론식'에 대한 소수의 응답도 있었다.

<표 5-9> 담당 교수의 주된 강의방식

	인원(명)	백분율(%)
강의식	1	6.7
강의식+질의응답식	10	66.7
강의식+토론식	3	20.0
강의식+조별토론식	1	6.7
완전 세미나 및 토론식	0	0
강의식+시청각	0	0
기 타	0	0
계	15	100.0

담당 교수의 주된 강의방식에 대한 문항에 대한 부가적인 문항으로 만약 강의식을 주로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설문 7-1번 문항)라는 질문에 '수강인원이 많아서' 와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의 두 유형의 응답이 나타났다.

<표5-9-1> 강의식을 주로 하는 이유

	인원(명)	백분율(%)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0	0
수강인원이 많아서	3	20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3	20
학생들이 강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0	0
기타	0	0
계	6	100.0

3) 가장 효과적인 교양 통일교육의 수업방식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강의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교양 통일교육의 수업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봅니까?(설문 8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시청각+토론식', '강의식+질의 응답식', '강의식+조별 토론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0> 가장 효과적인 교양 통일교육의 수업방식

	인원(명)	백분율(%)
강의식	0	0
조별토의식	0	0
강의식+질의응답식	4	26.7
시청각+토론식	8	53.3
강의식+조별토론식	3	20.0
기타	0	0
계	15	100.0

4) 강의 교재 및 자료의 활용

강의교재 및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설문 9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대체로 주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부교재 및 참고 문헌을 소개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주교재가 없어서 강의주제별로 몇 개의 교재를 혼합해서 강의한다', '주로 담당교수가 강의교재를 편집해서 사용한다', '주교재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행한다' 라는 응답들이 있었다.

<표 5-11> 강의교재 및 자료의 활용

	인원(명)	백분율(%)
주교재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행한다	1	6.7
대체로 주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부교재 및 참고 문헌을 소개한다	9	60.0
적절한 주교재가 없어서 강의주제별로 몇 개의 교재를 혼합해서 강의한다	3	20.0
주로 담당교수가 강의교재를 편집해서 사용한다	2	13.3
강의교재 없이 교수의 강의와 판서에 의존한다	0	0
기 타	0	0
계	15	100.0

5) 통일교육과 관련한 입법화에 대한 언론보도

최근 통일대비교육지원법 등 통일교육과 관련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자료나 언론을 통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설문 10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언론보도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상당수가 있었다.

<표 5-12> 통일교육과 관련한 입법화에 대한 언론보도

	인원(명)	백분율(%)
있 다	10	66.7
없 다	5	33.3
계	15	100.0

6) 통일대비교육의 입법화

통일대비 교육을 제도화하는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설문 11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찬성한다'는 응답과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

<표 5-13> 통일대비교육의 입법화

	인원(명)	백분율(%)
찬성한다	7	46.7
반대한다	0	0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8	53.3
관심이 없다	0	0
기타	0	0
계	15	100.0

7) 대학 통일교육의 교양필수안에 대한 견해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양필수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설문 12번 문항)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

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찬성한다’라는 응답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표 5-14> 대학통일교육의 교양필수안에 대한 견해

	인원(명)	백분율(%)
적극 찬성한다	5	33.3
찬성한다	8	53.3
보통이다	2	13.3
반대한다	0	0
적극 반대한다	0	0
계	15	100.0

6.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수업모델²⁶⁾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수업모델은 본 연구자가 지난 1992년부터 통일교육을 강의하면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지면화한다. 연구자는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부산대에서 계속 담당해 왔는데 1학기에는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2학기에는 『북한사회의 이해』를 맡아 왔다. 1학기의 강좌는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해 왔고, 2학기의 강좌는 북한사회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자료에 충실하면서도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진행해 왔다. 본 장에서는 1998년 1학기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강좌를 기준으로 실험적인 수업모델을 제시한다.

6.1 기본적인 방향

6.1.1 대학 교양강좌의 위상

대학 교육은 크게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대별된다. 미국에서 “일반 교양이란, 직

26) 연구자는 1998년도 1학기에 시도된 대학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내용을 생활속의 통일이야기라는 큰 테마를 중심으로 지면해달라는 부산대학교 신문사의 요청에 의해 1998년도 2학기 『부대신문』에 10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했다. 1998년 9월 30일 현재 5회분이 게재되었다.

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찬성한다’라는 응답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표 5-14> 대학통일교육의 교양필수안에 대한 견해

	인원(명)	백분율(%)
적극 찬성한다	5	33.3
찬성한다	8	53.3
보통이다	2	13.3
반대한다	0	0
적극 반대한다	0	0
계	15	100.0

6.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수업모델²⁶⁾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수업모델은 본 연구자가 지난 1992년부터 통일교육을 강의하면서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지면화한다. 연구자는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부산대에서 계속 담당해 왔는데 1학기에는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2학기에는 『북한사회의 이해』를 맡아 왔다. 1학기의 강좌는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해 왔고, 2학기의 강좌는 북한사회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자료에 충실하면서도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진행해 왔다. 본 장에서는 1998년 1학기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강좌를 기준으로 실험적인 수업모델을 제시한다.

6.1 기본적인 방향

6.1.1 대학 교양강좌의 위상

대학 교육은 크게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대별된다. 미국에서 “일반 교양이란, 직

26) 연구자는 1998년도 1학기에 시도된 대학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내용을 생활속의 통일이야기라는 큰 테마를 중심으로 지면해달라는 부산대학교 신문사의 요청에 의해 1998년도 2학기 『부대신문』에 10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했다. 1998년 9월 30일 현재 5회분이 게재되었다.

업 교육과는 달리 개인을 전인적으로 개발함을 의미한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세련되게 하고 감정의 반응을 연마하고, 사물의 본질을 현대의 최고의 지식에 비추어 이해하는 힘을 육성하는 것이다.”²⁷⁾ 우리 나라의 교양교육도 대체로 위의 의미와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듯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교양교육보다는 전문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세계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 교양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²⁸⁾ 우리의 경우는 미국과는 전인적인 인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즉, 우리나라는 일천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민주화의 공고화의 과제, 분단의 해결로서의 통일의 과제, 세계화의 흐름에 적절한 대응 등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양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첫째, 창조적인 인간을 지향하는 교육이고, 둘째, 당대의 시대적인 과제를 보다 체감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이며, 셋째, 전통적인 요소와 세계적인 요소를 융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의 형성이다.

6.1.2 대학 통일교육의 3차원의 강의

대학의 교양교육이 창조적이고, 탄력적이며, 당시대의 과제에 보다 체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본 연구자는 교양교육의 하나인 통일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차원의 강의법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차원의 강의란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도록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는 강의며, 2차원의 강의란 1차원적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과학적인 세련된 시각을 갖게 하며, 3차원의 강의란 한 개인 및 집단이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요구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의 강의를 말한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에 초점을 둔 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교육은 1-2-3차원의 강의를 상호결합되어야만 진실로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 통일교육에 대

27) H. Rosovsky, *the University: An Owners Manual*, 1991. p. 100. 이광주, 「대중산업 사회에서의 전문학과 교양교육」, 『인문사회과학논총』 제3권 제1호(인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p. 21 재인용.

28) 이종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교양교육의 위상」,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와 정치와 교육』(한국정치학회, 1997).

한 필요성이 갈수록 희박하고 통일에 대한 신세대들의 무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3차원의 강의법은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하겠다.

6.1.3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 입장

대학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나는 중·고등학교인식의 국정교과서적인 인식을 벗어날 수 있는 보다 개방되고 다양한 시각을 갖게하는 인식의 전환(Turning Point)에 바탕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과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보다 사실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2가지 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자는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민족주의 입장'이다. 근대적인 삶의 기본적인 범주는 민족국가였다. 그런 점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의 과제는 인간다운 삶의 근대적인

둘째, '삶의 체험'의 입장이다. '나'가 중심이 된 통일, 지식중심적인 접근에서 지식과 함께 정서, 감성이 결합된 수업이 되도록 중점을 두었다.

셋째, '생존의 논리'의 입장이다. 세계화 시대 한민족의 생존이 분단과 직결되어 있다.

이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필자의 기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런 입장에 따라서 필자는 1학기 『민족분단과 통일문제』는 인식의 전환에, 2학기의 『북한사회의 이해』는 보다 다양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계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6.2 실험적인 수업의 주요내용과 실제 :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6.2.1 수업의 기초적인 사항

- 1) 명칭 :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 2) 강의 개요 : 이 시대 우리민족의 최대과제인 통일은 우리들 자신이 통일을 보는

인식의 전환문제와 실질적인 현실대응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식의 전환과 현실대응능력은 상호 결합된 관계이지만 21세기의 지성인은 우선 이제까지 사회 및 사물을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민족분단과 통일문제』는 탈냉전, 포스트모더니즘, 전지구화, 분단, IMF의 복합체인 나와 우리 사회에 대한 認識의 轉換(A Turning Point:轉機)에 초점을 두며, 다음의 3가지를 갖게 한다. 1.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세계를 이해한다. 2. 지성인으로서의 자기 위상 정립과 책임으로서의 민족분단과 통일문제를 파악하게 한다. 3. 나만의 시각이 아닌 너의 시각을 존중하는 다원적인 대화가 살아숨쉴 수 있는 대학다운 강의를 만끽한다. 이리하여 민족분단과 통일문제의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세련된 시각과 인간다운 삶의 건설을 위한 교양인의 자질을 갖게 한다.

3) 강의의 전제 : 나의 주체성, 성인의 성숙성, 대학의 열림성.

4) 대상 : 부산대학교 전학과 전학생 대상(주로 1-2학년)

5) 학점(시간) : 2학점 2시간

6) 수업방식 : 강의식 + 질의응답 + 조별토론식 + 시청각실

조별 토론은 학기 초에 7-8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이라는 명칭으로 1시간의 전체적인 강의 후, 1시간을 이용해서 각 조별로 진행자와 서기를 선정해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토론 2일 후 담당교사에게 지면화해서 제출한다. 시청각 수업은 1시간 시청각 수업을 하고 난 뒤 1시간은 시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그리고 담당교수는 각 조별로 무작위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토론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한다. 특히 1998년 1학기에는 매시간 서정적이면서도 의미성이 담긴 대중가요를 한곡씩 들려주고 학생들의 느낌을 간단하게 듣고 본 수업으로 들어갔다.

6.2.2 주별 주요내용

1주 : 과목에 대한 소개 : 우리시대 통일의 의미와 중요성

2주 : 인간다운 삶의 사회과학적 의미 :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해명
: 전통-근대-탈근대의 개념을 중심으로

3주 : 대중가요와 통일 : 대중가요에 담긴 사회상

4주 : 소설과 통일 :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5주 : 시와 통일 : 천상병, 김남주, 이연주 시인의 시세계로 본 통일

6주 : 예술과 통일 : 미셸 푸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7주 : 영화와 통일 :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잎』

8주 : 중간고사

9주 : 사랑과 통일--김중술, 『신사랑의 의미』

10주 : 통일국가를 가다-독일

11주 : 통일국가를 가다-베트남

12주 : 통일국가를 가다-에멘

13주 : 세계화와 IMF시대의 통일논의

14주 : 동질성 회복, 동질성 확보, 동질성 창조의 비교: 남북공존의 길

15주 : 살아있는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종합토론 및 강의 평가

6.2.3 실험적인 수업모델의 실제

1) 주제의 선정 : 사랑과 통일

2) 교재 및 자료 : 김중술, 『신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노래 테이프 및 카세트, 마이크 시설.

3) 수업 방법: 강의식 + 질의응답식 + 조별토론식

4) 수업의 진행과 내용

(1) 학생들에게 사랑이 갖는 고귀함과 사랑의 이름으로 지질러진 잘못된 예를 제시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한다.

(2) 「백만송이 장미」를 들려 준다. 그 가사내용을 학생들에게 불러주고 따라 적게 한다. 그리고는 이 노래가 갖는 메시지를 파악하게 한다.

“먼 옛날 어느별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 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별나라로

갈수 있다네.-----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미워하는 미워하는 -----.”

인간존재의 의미는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고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김종술 교수의 『신사랑의 의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다.

① 사랑이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하나의 능력이다. 따라서 사랑도 학습된 능력이다.

② 사랑이란 상대방의 생활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며, 상대방으로부터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는 욕구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의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상태, 즉 지식이라는 내용을 설명한다.

③ 사랑의 3요소로서 친밀감, 열정, 책임을 『사랑의 삼각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세 요소의 크기가 같은 크기일 때 완전한 사랑이라는 점과 세 요인이 많을 수록 삼각형은 더 크지고, 사랑은 더 크다는 결론의 요점을 소개한다.

④ 기타 사랑에 관계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끝으로 성공적인 사랑의 조건, 즉 첫째, 가능한 정확하게 자신이 선호하는 사랑의 양식과 상대방이 선호하는 사랑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각자 상대방 사랑의 양식에 대한 이해와 인정과 존중, 셋째, 지금까지 자신이 해 오던 사랑의 양식과 상대방의 사랑양식을 조화시켜 변화시키려는 능력과 의지다.

⑤ 학생들이 평소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면서 사랑은 --- 때 문에 사랑한다가 아닌 --- 애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⑥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족의 통일문제를 사랑의 의미, 사랑의 삼각이론, 그리고 성공적인 사랑의 조건과 연관시켜 담당교수가 질의응답으로 진행시킨다.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⑦ 교수의 설명과 질의응답 후 이상의 내용 중 사랑과 통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각 조별로 토론한다. 특히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가 남북한 관계개선에 갖는 효용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하고, 향후 사랑의 관점에서 남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국가, 사회, 시민단체, 대학생, 개인들의 수준으로 분류해서 제시하도록 학생들에게 주문한다.

⑧ 사랑과 통일에 대한 토론의 결과보고서를 교수가 검토하고 차기 수업 초에 각 조의 토론결과를 그 특징별로 요약해서 전체학생들에게 소개한다.

7.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2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첫째는 부산 지역적인 차원에서 대학 통일교육을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과제이고, 둘째는 실제로 연구자 자신이 지난 5년동안 대학 통일교육의 경험에 근거한 실험적인 수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부산 주요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분석의 결과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① 지난 1990년 대학 교양강좌에서 『국민윤리』강좌가 사라진 이후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는 교양선택 및 자유선택의 범주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과목은 『북한어해』 및 『북한사회의 이해』강좌였다. ② 개설 강좌수가 학교별, 학기별로 많은 불균형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학교는 1-2학기애 각각 3학점의 비중으로 개설되고 있는 반면, 많은 대학은 1-2학기 중 한 학기만 개설되든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심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③ 통일관련 교양강좌는 전부가 교양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행해지고 있고, 조사대상의 6학교 중 2학교는 아예 통일관련 교양강좌가 한 강좌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④ 통일교육의 주관기관은 (국민)윤리교육 및 국민윤리학과가 있는 경우는 해당학과에서, 없는 경우는 정치행정학부 및 정치외교학과에서 주관하고 있었다.

둘째, 수강학생들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①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② 통일관련 정보는 주로 언론매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을 통해서 인한다는 응답지는 27%를 차지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③ 통일관련 교양강좌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보면, 선배들의 권유-평소의 관심-시간표상의 여건-담당교수의 명

⑧ 사랑과 통일에 대한 토론의 결과보고서를 교수가 검토하고 차기 수업 초에 각 조의 토론결과를 그 특징별로 요약해서 전체학생들에게 소개한다.

7.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2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첫째는 부산 지역적인 차원에서 대학 통일교육을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과제이고, 둘째는 실제로 연구자 자신이 지난 5년동안 대학 통일교육의 경험에 근거한 실험적인 수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부산 주요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분석의 결과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① 지난 1990년 대학 교양강좌에서 『국민윤리』강좌가 사라진 이후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는 교양선택 및 자유선택의 범주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과목은 『북한어해』 및 『북한사회의 이해』강좌였다. ② 개설 강좌수가 학교별, 학기별로 많은 불균형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학교는 1-2학기애 각각 3학점의 비중으로 개설되고 있는 반면, 많은 대학은 1-2학기 중 한 학기만 개설되든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심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③ 통일관련 교양강좌는 전부가 교양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행해지고 있고, 조사대상의 6학교 중 2학교는 아예 통일관련 교양강좌가 한 강좌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④ 통일교육의 주관기관은 (국민)윤리교육 및 국민윤리학과가 있는 경우는 해당학과에서, 없는 경우는 정치행정학부 및 정치외교학과에서 주관하고 있었다.

둘째, 수강학생들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①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② 통일관련 정보는 주로 언론매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을 통해서 인한다는 응답지는 27%를 차지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재점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③ 통일관련 교양강좌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보면, 선배들의 권유-평소의 관심-시간표상의 여건-담당교수의 명

성 순으로 선배들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경향은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타전공영역보다는 인문·사회계열이 더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④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개설여부에 대해서는 약 9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교양필수로 하는 안에 대해서도 약 80% 이상이 찬성했다. 이런 현상은 약 70%의 수강생이 통일교육관련 강좌를 타인에게 권유하겠다는 반응으로 연결되었다. ⑤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이해에 약 90% 정도의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수업의 애로점으로는 교재와 교수의 수업방식을 가장 높게 지적했다. ⑥ 통일교육관련 수업을 듣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가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 높았다.

셋째,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담당교수들의 실태와 발전적인 개선점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담당교수들 전부 남자였고 15명 중 13명이 시간강사였으며, 연령상으로는 30대(60%)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전공별로는 정치학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② 담당교수의 전공은 87%가 정치학이었으며 세부전공은 다양한 분포를 보여 통일 및 북한관련 전문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③ 통일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점은 적절한 교재와 자료의 부족과 입체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을 제시했다. ④ 주된 강의방식은 강의식+질의응답식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바람직한 강의 방식으로는 시청각+조별토론식을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통일교육관련 입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그 제도의 근본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응답하여 그 기본취지는 찬성하고 있으나 이전의 반공교육과 같은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⑥ 통일교육관련 과목의 교양필수로의 전환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인이 제시한 실험적인 수업모델의 근본 입장은 신세대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생동감 있고 체험적이며 창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 통일교육은 교양강좌로서 전인적인 교육의 내용을 가져야 하고, 그 방법은 3차원의 강의를 수용하며, 통일교육을 보는 기본 입장은 민족주의 시각, 삶의 체험, 생존의 논리라는 3가지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연구자가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주별 강의계획서를 주요내용을 중심

으로 제시하고 『사랑과 통일』 주제를 발췌해서 지면화시켰던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결론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기한다.

첫째, 대학 통일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교수의 자질과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정보·자료의 부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전문가는 시일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지만, 적어도 자료의 개방을 비롯해서 통일교육 자료의 체계성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담당교수의 자질문제나 자료의 개방, 체계적인 공급은 지적되어왔다. 필자는 통일교육 담당교수 및 학생들의 자료이용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또다른 분단상황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광화문 우체국 『북한자료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북한영화도 상영되고 즉석에서 토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자료이용 뿐만 아니라 영화상영의 경우도 그 절차와 자료구입의 애로 등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학 통일교육관련 지원사업을 대학 현장의 통일교육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본다.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나 통일문제학술세미나, 학생학술토론회 지원 등 통일부의 사업의 취지가 보다 살아나게 하려면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 등과 연계시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셋째,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요청된다.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나 담당교수들의 한결같은 요구 중의 하나가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의 근본취지 등이 담당교수나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90년대 신세대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통일교육의 수업방법이 계속해서 개발돼야한다는 점이다. 대학의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애로점 중의 하나도 바로 정보 및 자료의 부족과 함께 시청각 교육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었다. 이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법은 강의식+시청각+조별토론식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청각 교육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통일교육이 요청된다.

다섯째, 전국적인 차원 및 지역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관련 담당교수들이 교육현장에서 갖는 애로점이나 각 개인들이 통일교육의 수업모델들을 공개하고, 건전한 상호비

판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향후 통일교육은 현실성과 창조성, 미래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은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통일의 지혜를 도출하는 구조를 구축해야하고, 통일교육관련 제도화에는 학계 통일교육관련 담당교수들의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소위 신세대 대학생들에 대한 비판의 우려가 많지만 통일교육에 한정시켜 평가한다면 통일문제에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놓칠 수 없다. 통일이 우리가 싫고 좋음의 대상이 아니듯이 신세대에 대한 기성세대 및 정부의 지원과 격려, 올바른 교육은 시대가 젊어지고 갈 의무인 것이다. 신세대의 용기와 지혜 없이 21세기 통일된 조국은 상상하기 어렵다.

【부록 : 설문조사지】

부산지역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강좌 수강생들의 인식 설문조사

이제 통일은 준비가 아니라 현실이고 당위가 아닌 우리시대에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통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과 교육은 더욱 절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설문조사는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체감적이고 현실적인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현장감 있고 창조적인 통일교육의 수업모델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설문조사는 통일원의 '98년 북한 및 통일문제 신진학자 연구과제 응모에 채택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본 설문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의견은 무기명으로 전산입력처리 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6월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 홍 수

※다음 질문에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1가지만 선택하여 안에 표하세요.

♣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1. 일상생활에서 통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2.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③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별 관심이 없다).

3. 대학에 와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 ① 언론 매체(신문, 방송) ② 책 ③ 수입
④ 친구들과의 대화 ⑤ 기타()

♣ 대학 통일 교육에 관련한 사항

4. 북한 및 통일관련 전공강좌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은 꼭 필요하다.

(5)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은 꼭 필요하다.

(6) 기타 ()

10. 통일교육 관련 교양강좌를 다른 동료나 후배들이 듣도록 추천할 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1.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교양필수로 개설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① 적극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관심이 없다)

12.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교양필수로 개설하는 것에 찬성하신다면 어디에서 주관할 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① 어느 과에서 개설하든 상관없다 ② 정치외교학과

③ 윤리교육과(국민윤리학과) ④ 철학과 ⑤ 교양부

⑥ 기타()

♣ 다음은 설문응답자에 대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 해당란에 ○표하세요)

1. 성별은 어떠합니까? 남 여

2. 학년은 어떠합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 전공분야는 어떠합니까?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과계열 예체능계열

♡ ♡ ♡ 끝까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산지역 대학의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실태 및
발전적 개선을 위한 담당교수의 설문조사

90년대 탈냉전 이후 통일은 준비나 당위가 아니라 실천이고 우리시대에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통일문제가 복잡하고 현실적인 과제가 될수록 대학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대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통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 통일관련 교양강좌의 실태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본 설문조사는 통일교육에 대한 보다 체감적이고 현실적인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통일교육 관련 교수님들의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현장감 있고 창조적인 통일교육의 수업모델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설문조사는 통일원의 '98년 북한 및 통일문제 신진학자 연구과제 응모에 채택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교수님의 진솔한 의견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며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8년 9월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 홍 수

※ 해당 번호의 안에 V를 해 주십시오(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교수님의 성별은 어떠합니까? 남 여

2. 교수님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교수님의 전공은 어떠합니까 ?

① 정치학 ② 경제학 ③ 철학 ④ 국민윤리학 ⑤ 기타()

3-1. 교수님의 세부 전공은 어떠합니까?

4. 교수님의 현재 직급은 어떠합니까 ?

- ① 정교수 ② 부교수 ③ 조교수
 ④ 전임강사 ⑤ 시간강사(명예교수, 겸임교수 포함)

5. 교수님의 통일교육관련 강의경력은 어떠합니까 ?

- ① 1-2년 ② 3-4년 ③ 5-6년 ④ 7년 이상

6. 대학의 통일교육관련 강의를 하시면서 갖는 가장 큰 애로점 2가지만 순위별로 숫자를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② 적절한 교재의 부족 ③ 학생들의 인원
 과다 ④ 입체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교육환경(비디오, CD, OHP시설 등)
 ⑤ 학점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의 태도 ⑥ 기타()

7. 교수님이 통일관련 수업의 주된 강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 ① 강의식 ② 강의식 + 질의응답식 ③ 강의식 + 토론식 ④ 강의식 +
 조별 토론식 ⑤ 완전 세미나 및 토론식 ⑥ 강의식 + 시청각 ⑦ 기 타()

7-1. 만약 강의식을 주로 하신다면 그 이유는?

- 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② 수강인원이 많아서 ③ 교육환경의 열악
 ④ 학생들이 강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⑤ 기 타 ()

8.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강의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교양 통일교육의 수업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 ① 강의식 ② 조별토의식 ③ 강의식+질의응답식 ④ 시청각 +토론식
 ⑤ 강의식+조별토론식 ⑥ 기 타 ()

15. 대학 통일관련 교양강의와 관련하여 위의 설문조사에서 빠진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와 강의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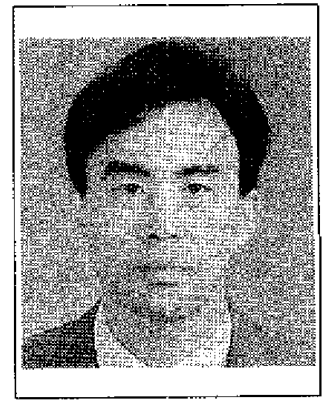
참고문헌

-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당대, 1996.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1.2』, 한울, 1994.
- 김중술, 『신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노동일, 『정치학방법론-이론·통계·SPSS-』, 법문사, 1996.
- 문용린·김성봉·유군상,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88.
- 윤건영 외, 『통일대비 교육 교과과정 및 내용 개발』, 통일원, 1995.
- 윤상철,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과정』, 서울대출판부, 1997.
- 이돈희 외, 『학교 통일교육 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5.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 1998.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5
- 주봉호, 『북한정치론』, 동우, 1998.
- 최 성, 『북한정치사』, 풀빛, 1997.
- 최 성, 『북한학개론』, 풀빛, 1997.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1997.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답100』, 통일부, 1998.
- 통일연수원, 『통일문답』, 통일연수원, 1995.
-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1995.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88.
- 경성대학교, 『강의시간표』 (1998학년도 제1·2학기), 1998.
- 동아대학교, 『강의시간표』 (1998학년도 제1·2학기), 1998.
- 동의대학교, 『강의시간표』 (1998학년도 제1·2학기), 1998.
- 부경대학교, 『강의편람』 (1998학년도 제1·2학기), 1998.
- 부산대학교, 『수강편람』 (1998학년도 제1·2학기), 1998.

- 신라대학교, 『수강편람』 (1998학년도 제1·2학기), 1998.
- 고용권,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현대이념연구』 제12집,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1997.
- 김국현,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교육의 영역 및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 김대균, 「가치교육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통일교육·홍보(V)』, 통일원, 1997.
- 김영수,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동아시아연구논총』 제5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4.
- 김향원,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동아시아연구논총』 제6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5.
- 김홍명·안종철·이두휴, 「세계화시대의 대학생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38호, 한국국민윤리학회, 1998.4.
-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제60집-통일시대의 철학-, 199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독일 경험의 적용, 통일 대비 교육의 새 모델화 정책대안」, 민주평통 200호 기념 정책포럼 논문, 1995.
- 박용현,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실천과제』, 통일원, 1997.
- 손기용, 「통일 이후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 방안-정치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집,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 손기용,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기본방안」,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와 교육』, 한국정치학회, 1997.
- 오인택, 「통일교육의 방향」, 이영선 편, 『통일준비』, 오름, 1997.
- 이광주, 「대중산업 사회에서의 전문학과 교양교육」, 『인문사회과학논총』 제3권 제1호, 인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 이영선, 「통일교육법 제정에 따른 통일교육체제의 개선방향」, 『통일대비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7.
- 이영희, 「통일의 도덕성」, 『당대비평』, 1998년 봄호.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연세대학교

- 통일연구원, 1997.
- 이우영, 「통일대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 방향과 실천과제』, 통일원, 1997.
- 이종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교양교육의 위상」,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와 교육』, 한국정치학회, 1997.
- 정세구, 「제7차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주최 초청강연회 자료집, 1998.3.
- 정영수, 「통일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 연구』 창간호, 한국교육학회, 창간호, 1993.
- 천형균·김우영,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현대이념연구』 제12집,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1997.
- 최은수, 「민주시민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민주화와 정치발전』, 한국정치발전연구원, 1998.
- 추병완, 「통일대비 학교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통일교육·홍보(V)』, 통일원, 1997.
- 한만길, 「‘개방적’ 정치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과제」,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와 교육』, 한국정치학회, 1997.
- 한만길, 「대학생의 통일관과 통일 교육의 방향」, 『통일논총』 제15집,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7.
- 한만길, 「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 『통일 대비 교육의 방향과 정책 과제』,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제2회 통일교육 세미나자료집, 1996.
- 한준상, 「통일을 위한 남북한 교육의 과제」, 이영선 편, 『북한의 현실과 통일 과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3.
- 김홍수, 『부대신문』: 통일담론의 2가지 방향(1998. 8. 24), 시와 통일(8. 31), 사랑과 통일(9. 7), 대중가요로 떠나는 통일기행(9. 21), 부산국제영화제와 통일(9. 28).

統一 以後의 國民統合을 위한 人性教育 方案 研究



金 國 鉉(교원대)

목 차

<요약문>	71
1. 서론	73
2. 남북한 주민의 인성형성요인과 인성 특성	77
3. 통일 이후 인성갈등과 민주적 인성	91
4.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방안	99
5. 결론 및 정책 제언	123
※참고문헌	125

【요약문】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근본질서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적대적 관계에 속해 있던 남북한 주민들간의 일종의 문화적응과정으로서 사상, 신념, 인성을 가진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제도적 통합은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초하여야만 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사회문화적 분열은 정치제도적 통합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의 핵심적 과제는 인성의 동질화 또는 인성통합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성을 비교하여, 인성적 이질성에 의해 초래될 사회갈등을 예상하고, 극복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도덕교육의 우선적 과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인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에 기반이 되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과제로 요약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성을 민주적 인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제이다.

인성은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회화의 산물인 개인의 성향이다. 그러므로 인성은 정치경제적 요인, 역사문화적 요인, 이념가치지향적 요인, 그리고 교육 요인에 의해 상이성을 띠게 된다. 특히, 분단 이후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교류의 단절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상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남북한 주민들의 상이한 인성은 통일 이후 삶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상이한 인성특성을 고려할 때 정직, 관용, 책임의 덕목을 내면화한 인성을 소유한 국민육성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남북한 주민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인성을 결여하고 있고, 정직이 관용의 기반이 되고, 관용이 정직성을 강화하고, 책임이 관용의 기반이 된다는 철학적 이유에서 세 가지 인성은 통일 한국의 국민통합에 필수적인 자질이다. 이러한 인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불신감이 팽배하고 갈등이 유발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통일 이후 전개된다면 국민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전에 비교사회적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성특성을 파악하고, 통일 이후 효과적인 국민통합과 통일한국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키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

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은 남북한 상호간의 협력과 조정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남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성교육방안을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로 구분하고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2장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 문화·역사적 요인, 이념·가치지향적 요인, 사회화정책 및 교육 요인이 남북한 주민의 인성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 주민이 소유한 인성을 비교하고,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 및 통일한국의 발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 남북한 주민 인성의 강약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성갈등을 신민적-시민적 인성의 갈등, 타율적-자율적 인성의 갈등, 표면적-내면적 인성의 갈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갈등유형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주적 인성으로 정직성, 관용성, 책임성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 근거로 사회현실적 요구와 실제적 인성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통일 이후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위해 정직, 관용, 책임의 민주적 인성을 함양시키는 교육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종교)단체, 언론기관의 교육방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수·학습전략과 각 부문별 인성교육 실천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이루어지는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의 인성교육이 연계성을 띠고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북한 주민의 인성을 형성시킨 요인 및 남북한 주민의 인성을 비교함으로써 통일 이후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형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통일 이후 국민통합에서 핵심이 되며 통일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한 행위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며, 민주사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민주적 가치 및 덕목, 함양되어야 할 민주적 인성특성의 구체화에 기여하며,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의 역할 및 책무를 제시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시민교육기능과 여론형성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민족에게 통일은 1945년 남북분단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심각하게 이질화된 민족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족공동체의 근본질서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초래한다. 긍정적인 결과는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터전과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결과는 정치·경제적 혼란, 중첩적인 갈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 그리고 이념, 제도, 가치지향의 이질성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통합에서의 장애등이다.

통일은 대립되는 남북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에 속해 있던 남북한 주민들간의 일종의 문화적응과정으로서 사상, 신념, 인성을 가진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제도적 통합은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초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문화적 분열은 정치제도적 통합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적인 가치, 태도, 행위에 의해 초래될 갈등을 예상하고 극복 방안을 탐색해보는 것이 교육자들의 우선적 과제가 된다.

통일은 이중적인 과제의 해결과정이다. 하나는 통일 이전에 남한 주민의 통일대비역량을 제고시키는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의 과제로서, 분단 이후로 심화되어 온 이질성으로 인해 초래될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통일 한국의 미래상인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에 기반이 되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과제로 요약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성을 민주적 인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제이다.

인성은 개인의 가치관, 태도, 성향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회화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인성은 정치경제적 요인, 역사문화적 요인, 이념가치지향적 요인, 그리고 사회화정책 요인에 의해 상이성을 띠게 된다. 특히, 분단 이후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교류의 단절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상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남북한 주민들의 상이한 인성은 통일 이후 삶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상이한 인성특성을 고려할 때 정직, 관용, 책임의 덕목을 내면화한 인성을 소유한 국민육성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남북한 주민이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이 되는 이러한 민주적 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와 정적이 관용의 기반이 되고, 관용이 정직성을 강화하고, 책임이 관용의 기반이 된다는 철학적 이유에서 세 가지 인성은 통일한국의 국민통합에 필수적인 자질이다. 이러한 인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불신감이 팽배하고 갈등이 유발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이 통일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다면 국민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한국에 초래될 다양한 갈등을 고려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지향, 태도, 기능에서 동질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안성에 기초한 국민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민족국가의 국민들을 합일된 상태로 이끄는 국민통합이 진정한 통일의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통일의 기반은 국민통합이고, 국민통합의 핵심은 상이한 가치관, 태도, 행위를 포괄하는 인성의 통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통일 이전에 비교사회적 분석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성 특성을 파악하고, 통일 이후 효과적인 국민통합과 통일한국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키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은 남북한 상호간의 협력과 조정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남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성교육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통일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남북한 주민의 인성특성 및 국민통합에 영향에 주목하여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드물다. 남북한의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실정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남북한 주민의 상이한 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밝혀, 통일 이후에 초래될 수 있는 주민간 인성갈등과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래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서론
2. 남북한 주민의 인성형성 요인과 인성특성
 - 2.1 인성 개념 및 형성 요인
 - 2.2 남북한 주민의 인성 비교
 - 2.3 국민통합과 남북한 주민 인성
3. 통일 이후 인성갈등과 민주적 인성
 - 3.1 신민적-시민적 인성갈등과 관용
 - 3.2 타율적-자율적 인성갈등과 책임
 - 3.3 표면적-내면적 인성갈등과 정직
 - 3.4 민주적 인성과 국민통합
4.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 방안
 - 4.1 가정의 인성교육 방안
 - 4.2 학교의 인성교육 방안
 - 4.3 언론의 인성교육 방안
 - 4.4 민간단체의 인성교육 방안
5. 결론

2장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 문화·역사적 요인, 이념·가치지향적 요인, 사회화정책 및 교육 요인이 남북한 주민의 인성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 주민이 소유한 인성을 비교하고,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 및 통일한국의 발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 남북한 주민 인성의 강약점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성갈등을 신민적-시민적 인성의 갈등, 타율적-자율적 인성의 갈등, 표면적-내면적 인성의 갈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각각의 갈등유형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주적 인성으로 정직성, 관용성, 책임성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 근거로 사회현실적 요구와 실제적 인성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4장에서는 통일 이후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위해 정직, 관용, 책임의 민주적 인성을 함양시키는 교육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종교)단체, 언론기관의 교육방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수·학습전략과 각 부문별 인성교육 실천지침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남북한 주민의 인성에 관한 문헌, 인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일 이후의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다교과적이고 학제적인 방향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덕과, 사회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남북한 사회의 변화에 관한 문헌 분석, 남북한 교육체제에 관한 연구,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 행위양식, 인성에 관한 연구, 북한 자료 및 소설분석 연구 등을 활용하여 민주적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제시한다.

1.4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남북한 주민의 인성을 형성시킨 요인 및 남북한 주민의 인성을 비교함으로써 통일 이후 효과적인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형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통일 이후 국민통합에서 핵심이 되며 통일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한 행위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현재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민주적 가치 및 덕목, 함양되어야 할 민주적 인성특성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의 역할

및 책무를 제시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시민교육기능과 여론형성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2. 남북한 주민의 인성 형성요인과 특성

한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성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제도보다 국민들이 소유한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인성과 덕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국민은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이해하고 그것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유지와 발전은 인성의 이질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거나 공통적 특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성차가 큰 상황, 그리고 이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남북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상호교류와 주민들간의 접촉기회의 단절은 남북한 체제의 구조적 이질성뿐만 아니라 민족구성원의 인성적 이질성을 심화시켜왔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적 이질성은 현재 통일의 달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인성교육은 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과제 중 가장 어렵고,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¹⁾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진단과 처방일 것이다. 진단작업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형성요인과 인성특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인성의 동질성 제고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방안을 처방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민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의 자기정체성의 기반인 가치들을 존중하면서 '우리'의식에 기초한 통일한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인간 통합의 작업이다.²⁾

1) 박용현, "통일에 대비한 인성교육."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바른교육·큰사람 만들기 제4회 포럼 『통일의 전망과 인성교육』, 1996. 10, p.12.

2) 박영호, 『統一 以後 國民統合方案 研究』, 민족통일연구원, 1994, p.103; 전성우, "통일 독일의 사회통

및 책무를 제시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시민교육기능과 여론형성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2. 남북한 주민의 인성 형성요인과 특성

한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성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제도보다 국민들이 소유한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인성과 덕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국민은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이해하고 그것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국가의 유지와 발전은 인성의 이질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거나 공통적 특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성차가 큰 상황, 그리고 이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남북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상호교류와 주민들간의 접촉기회의 단절은 남북한 체제의 구조적 이질성뿐만 아니라 민족구성원의 인성적 이질성을 심화시켜왔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적 이질성은 현재 통일의 달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저해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인성교육은 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과제 중 가장 어렵고,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¹⁾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진단과 처방일 것이다. 진단작업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형성요인과 인성특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리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인성의 동질성 제고와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방안을 처방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민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의 자기정체성의 기반인 가치들을 존중하면서 '우리'의식에 기초한 통일한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인간 통합의 작업이다.²⁾

1) 박용현, "통일에 대비한 인성교육."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바른교육·큰사람 만들기 제4회 포럼 『통일의 전망과 인성교육』, 1996. 10, p.12.

2) 박영호, 『統一以後 國民統合方案 研究』, 민족통일연구원, 1994, p.103; 전성우, "통일 독일의 사회통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적 이질성을 발전적으로 극복하여 국민통합을 달성하려는 인성교육은 통일 이후 예상되는 급격한 가치변동, 가치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창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특히 인성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은 통일 이후의 공동체 삶에 필요한 민주시민성의 형성과 통일로 인해 초래될 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2.1 인성의 개념과 남북한 주민의 인성형성요인

2.1.1 인성의 개념 및 형성요인

인성(character)이라는 말은 일상적 대화에서 성격(personality)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성과 성격을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인성은 성격과는 달리 한 개인의 가치관과 그것의 기초를 이루는 도덕성의 수준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무엇보다도 사람됨을 의미한다. 선함, 덕, 그리고 도덕적 성숙의 각인인 일련의 내적 자질을 지칭한다. 성격은 인간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동기적(動機的) 성향으로서 생물적 충동과 사회적·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성격은 한 개인의 특이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짓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감정적·의욕적(affective-conative) 특성, 태도, 정조(sentiments), 콤플렉스와 무의식적 기제, 관심과 이상을 지칭한다.

위의 정의에 기초할 때, 성격은 가치중립적 개념이고 인성은 도덕적 가치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성격은 인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의된다.³⁾

본 연구에서는 인성과 성격개념을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성격을인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해하고, 인성을 가치관, 태도, 인식성향을 포괄하는 광의로 사용한다. 통일 이후 국민통합의 핵심적 과제는 도덕성에 기초한 민주적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성격교육이라는 말보다 본 연구의 의도에 부합된다.

합,”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사회통합-비교사회론적 접근』, 1997. pp.38-40.

3) David Fontana, *Teaching and Personality*(Oxford: Basil Blackwell, 1977), pp.3-4; 박선영, “인격의 구조와 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 세상, 1998), p.16.

존중, 책임감, 동정심, 자기규율, 충성, 용기, 관용 또는 다양성 존중, 정직 등은 인성 특성으로서 가장 흔히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인성 특성들은 일관성있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 덕으로 내면화된다. 민주적 인성 특성이 한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습관화되어 구조화된 통합적 인성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리코나(Thomas Lickona)는 인성을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이나 자질들을 제시한다. 그러한 자질들은 조작적 가치(operational values), 즉 행위에서의 가치들로 구성되며 민주시민성의 기반을 형성한다.⁴⁾

인성의 인지적 측면은 합리적인 도덕적 사고능력과 도덕적 추론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식, 기술, 이해로 구성되며 도덕적인 성숙과 민주적 시민성을 위해 요구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도덕적 차원을 인식하는 것,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도덕적 가치가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 역할체택하기(role-taking), 사려깊은 의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자각 등의 도덕적 자질을 포함한다.

인성의 정의적 측면에 속하는 특성들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을 가교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자존적인 것과 타인지향적인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양심, 자아존중, 우정, 선에 대한 사랑, 극기, 자신의 도덕적 실수를 인정하고 고차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겸손, 공감적 이해, 정중함, 정의 등의 자질을 포함한다.

인성의 행위적 측면은 도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의사와 말을 경청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협동하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도덕적 습관 등의 자질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질들이 개인이 갖추어졌을 때 도덕적 판단, 도덕 감정, 그리고 도덕적 행위는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덕스러운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성은 적극적인 도덕적 개입의 가능성을 지닌 성향과 습관인 일관된 도덕적 탁월성의 소유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측면을 포괄한다. 일관성, 통합성, 학습성, 자율성, 독자성, 합리성, 객관성, 가치관과 도덕성이라는 속성들을 포괄한다.⁵⁾ 따라서 인성의 함양은 적절한 습관의 형성과 이성의 계발을 수반한

4) Thomas Lickona, "The Return of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al Leadership*, Vol.51, No.3, 1993, p.7; Kelvin Ryan and Thomas Lickona, "Character development," Kelvin Ryan and Thomas Lickona ed., *Character development in schools and beyond*(Washington, D.C.: The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1992, pp.15-25.

5) 이계학, 『人格教育論』(서울: 성원사, 1991), pp.21-29.

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성은 도덕적 덕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욕구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구성된다.⁶⁾

2.1.2 인성형성요인

일반적으로 인성은 유전과 환경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정의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심리학에서는 인성형성요인으로서 유전과 환경 요인이외에 훈련(자기훈련)과 의식성을 강조한다.⁷⁾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인성은 사회구조적 특성과 사회화나 의도적 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종속변인인 반면 이미 형성된 인성은 사회구조적 특성과 어느정도 무관하게 지속되면서 구성원 개인의 인성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작용한다.⁸⁾

남북한 사회는 분단 이후 상이한 사회특성을 띠면서 상호 대립적인 인간형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설정해 왔다. 통일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 주민은 민족상잔을 통한 분단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증오와 학대의 외상적(traumatic)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적 이질성은 상호적대감과 불신감에 기초하여 분단의 장기화, 이질적 사회화에 의해 육성된 분단이후출생 인구수의 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왔다.

1946년 이후 출생자인 분단이후출생 인구수의 꾸준한 증가는 민족 이질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동질성을 간직한 세대의 감소와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된 전후세대의 증가를 의미함으로써 인성적 이질화의 심화가 예측된다.

분단이후출생 인구수는 1997년 현재 남한이 38,203천명으로 총인구 45,991천명 대비 83.1%, 북한은 20,776천명으로 총인구 23,855천명 대비 87.1%, 남북한 전체로는 58,979천명으로 총인구 69,846천명 대비 84.4%를 나타내고 있다. 분단이후출생 인구의 총인구 대비율을 살펴보면, 남한은 1965년 52.9%에서 1997년 83.1%를 나타내어 32년간 분단이

6) Thomas Lickona, "Eleven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25, No.1, 1996, pp.94-95; Robert D. Heslip, *Moral Education for Americans*(Wersport: Praeger Publisher, 1995), pp.38-40; Betty A. Sichel, *Moral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Community, and Ideal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2), p.82; Kelvin Ryan. "Mining the Values in the Curriculum," *Educational Leadership*, November 1993, p.16.

7) 도홍렬,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 비교,"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7, pp.5-7.

8) 박용현, "통일에 대비한 인성교육," p.13.

후출생 인구수 비중이 30.2% 높아졌다. 북한의 경우 1965년 52.0%에서 1997년 87.1%로 32년간 25.1% 높아졌다.⁹⁾

이상에서 분단 이후 세대가 약 7천만 남북한 총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중요한 것은 분단 이후에 출생한 세대는 상이한 사회화에 의해 개인주의적 인성과 집단주의 인성이라는 이질적 인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세대가 사회체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 이후 출생인구수의 증가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상이한 인성에 기인한 대립과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통일실현과 국민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대립적인 인성은 통일한국의 국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제공하고 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질적 인성은 같은 생활환경 하에서도 상이한 가치, 태도, 행위를 가진다는 점을 함축한다. 상이한 인성의 소유자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통일이후의 상황이라면 통일은 분단상황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¹⁰⁾ 분단국들의 통합사례는 통일은 통일방식과는 무관하게 통일의 후유증을 상당 기간 불가피하게 수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 지역 주민들간에 인성의 이질성에 기인한 상호 배타적 행동이 나타나는 등 국민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동독주민들은 집단주의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양식을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성과주의에 입각한 개인주의로 변화시키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¹¹⁾

통일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은 상호교류의 단절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 인성형성요인과 인성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한국의 공동체적 국민의식을 확립하는 교육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에 우선하는 기본과업이다.

2.1.3 남한 주민의 인성형성요인

한국 사회는 현재 압축성장이라는 발전의 신화에 매달려 애써 외면해 온 구조적 모

9)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7, 12, p.9.

10) 이영선 외,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식동질화의 과제,” 『성곡논총』 제26집 하권, 1995, p.17.

11) 황병덕 외,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북한연구』, 1994. 가을호, pp.95-97.

순이 표출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원인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제구조에 있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남한 주민들의 비도덕적, 이기적, 쾌락주의적 인성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성을 소유하게 원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한 주민들은 2공화국을 제외하고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권위주의정권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 주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의식, 정직성, 관용성을 형성할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한은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 이래 압축성장(condensed growth)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정신적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규범확립을 동반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한 주민들은 이중적인 윤리성과 이중적 윤리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권위주의지배와 급속한 불균형적 경제성장의 결과 남한 사회에는 냉소주의, 법규범에 대한 불신, 공정성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력감과 무임승차적 사고방식이 형성되었다. 즉, 한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가 타인들에게 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해 주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¹²⁾

셋째, 정치경제적인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이루어져 온 교육도 자율성을 갖지 못한 체 정치체제와 정치변동에 종속적인 성격을 띠어왔으며,¹³⁾ 학교에서 이루어져 온 주지주의 교육은 사회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도외시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인 시민적 덕에 기초한 민주적 인성함양은 실패를 반복해 왔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개인적 성장과 가치교육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의 보루로서 학교교육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가정 그 본원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에서의 민주

12) 손봉호, "한국사회의 가치관 :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가치관의 변동과 도덕성 회복』, 1996, pp.115.-151.

13) 이종렬, "정치교육 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상황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15집, 1991, pp.261-291 참조.

적 인성형성의 실패는 남한 사회에 문화적 기억상실증(cultural amnesia)을 초래하였다.

넷째, 민주적 인성함양의 주요한 행위자인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도덕교육의 주류는 도덕적 행위능력보다는 자율적인 도덕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강조해 왔다. 그 결과 남한 주민들에게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만연,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성 상실, 비도덕적 행동의 외부귀인(external attribution)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 책임회피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개인의 무력감을 조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 주민들이 물질주의, 준법정신의 결여, 연고주의를 한국사회의 병폐로 인식하지만 그 원인은 타인에게로 돌리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¹⁴⁾

그리고, 이중적 윤리규범과 이중적인 윤리적 삶의 구조 문제이다. 남한 사회규범은 전통윤리와 서구윤리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도덕 교과서에 생활영역별로 제시되고 있는 덕목들도 전통윤리와 서구윤리를 두 축으로 전통에 기초한 가치, 서구의 민주주의적 가치,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치들을 포괄하고 있다.¹⁵⁾ 가치의 측면에서 마치 '경쟁하는 규범적 원리들의 시장'과 같은 상황에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의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을 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도덕과의 과제는 통일에 대비하여 민주적 인성과 민주적 덕을 분명히 규정하고 분단 이후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환경하에서 생활해 오면서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의 인성차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공통적인 기본적 가치와 도덕원리없이 어떤 사회나 국가도 존속하거나 번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도덕교육의 과업은 통일지향적이고, 통일 이후 국민통합에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성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

14)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한국사회: 오늘과 내일- 21세기의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 연구』, 1993, p.28, p.41.

15) 조난심, “인성교육과 도덕교과서,” 『철학과 현실』, 1995, 겨울, pp.80-81.

16) Betty A. Sichel, *Value Education for An Age of Crisis*(Washington. D. 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p.12

2.1.4 북한주민의 인성형성요인

북한 주민의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북한의 교육이다. 북한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이념 실현의 도구로서 주체사상, 북한의 사회적 성격, 체제유지, 사회주의 실현에 요구되는 공산주의적 인성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둔다. 북한교육의 목적은 김일성이 1971년 전국교원대회에서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행한 연설¹⁷⁾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공산주의사상을 넣어주며 공산주의건설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어 그들로 하여금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계급적 차이가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는 데 복부하여야 한다.

즉, 북한의 교육은 자아실현과 사회발전보다는 북한주민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¹⁸⁾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교육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교육교양, 지주, 자본가계급, 착취제도에 대한 증오심 고취, 노동애호정신 고취,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 교육교양, 집단주의사상 교육교양, 교원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주요 내용으로 주입한다. 그리고 계획적 사회화, 시범적 사회화, 집단적 사회화, 연속적 사회화, 실천적 사회화, 동조 속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화를 기본원리로 활용한다.¹⁹⁾

북한의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제시되는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내용과 주제가 포함된다. 긍정적 가치는 공식적으로 지시된 가치를 지지하고 옹립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가치는 배반되는 가치를 반대하고 타도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긍정적 가치와 주제에는 주체사상, 혁명전통, 집단주의,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적 도덕성 확립, 애국심 고취, 사회주의 국가의 애호 등이며, 부정적 가치에는 반미, 반일, 반한,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반개인주의, 반부르조아사상등이 포함된다.²⁰⁾

17) 김일성,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동경: 구월서방, 1975), p.419.

18)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411.

19) 고영복, “북한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조사연구-사회문화』, 1978, pp.189-190.

20) 도홍렬, op. cit., p.53.

결국,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심리학에 기초하여 훈련(자기훈련)과 의식화를 인성형성의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의 원리와 경쟁의 학습원리를 어느 사회보다 철저하게 생활의 전영역에 걸쳐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사회는 공식적 욕구수준지향, 지적 배타성, 자아구조의 폐쇄적 통합성,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 권위주의적 성격, 공격성, 미래를 위한 자기희생이라는 집단주의적 사회특성을 띤다.²¹⁾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북한 주민들의 인성은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의식화와 훈련, 그리고 사회적 성격의 산물로서 호전적이고, 경쟁적이며, 家臣主義, 권위주의, 집단주의, 배타주의(적대감), 가족적 온정주의, 수동성, 이중성을 포괄하는 臣民型 人性이다.²²⁾

엄격하고 체계적인 북한교육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집단주의적 인성이 변화되는 현상이 발견되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상교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서 김일성교시 학습의 기피현상, 각종 조직생활에 대한 외면현상, 사회적 불만과 일탈행동은 오래 전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언론에서도 사회주의 실현에 장애로 인식되는 현상과 무책임성, 타율성을 비판적하지 못한 태도로 비판하고 있다.

김정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김일성 사망 이후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유훈에 기반을 두고 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중심으로 사상교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기술도 김정일 우상화를 더욱 강조하고, 김정일 과목, 공산주의 도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 교육은 외부사상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체사상원리교양, 당정책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개인주의와 부르주아자유주의 비판에 근거한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교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²³⁾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적 인성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정치사상교화가 강화되

21) 고영복, *op. cit.*, pp.190-191.

22) 유종해, “남북한 청소년·학생의 가치관 형성·교육제도를 통해 본 관찰,” 『북한』, 1975, 11월, p.91;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23)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동경: 구월서방, 1991), p.7;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노동당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1). pp.36-37 참조.

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가 비교적 높고 김정일정권이 붕괴된다 해도 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 동안은 김정일 중심의 북한 내부의 체제단속과 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혁명적 정치변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북한 주민의 가치의식의 변화와 일탈행위의 확산이 물질주의적 실용주의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전 주민의 변화가 아니라 80년대 이후 북한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세대갈등의 표출일 수 있다는 점에서²⁴⁾ 기대하기 힘들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북한 교육은 집단주의를 통해 지도자와 조직에 대해 순종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주민의 인성을 수동적이며 맹종적인 인성으로 형성시켰다. 그 결과 북한 주민의 인성은 자발성, 책임성, 관용성, 역동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인성은 사회적으로 다양성과 관용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을 저해한다.²⁵⁾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2.2 남북한 주민의 인성 비교

남북한 주민의 인성을 비교하는 작업에는 남한과 북한의 실제적, 최빈적 인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접근과 남한과 북한이 각각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 인성의 상이점을 규명하는 이론적 접근 두 가지가 활용될 수 있다.²⁶⁾ 이러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최빈적 인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업이다. 이것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진정한 통합에 긍정적인 인성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고 부정적 인성을 긍정적인 인성으로 변화시키는 교육과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인성을 무시하고 남한 주민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것을 합축하지는 않는다. 이장호는 남북한의 일반적 공식 이념체계에 따른 주민의 가치의식을 기존의 문헌 내용을 요약하여 비교하였다. 이념적 가치체계를 비교할 때, 남한은 시장경제적 가치관을

24) 한용원, 『북한학』 (서울: 오름, 1998), p.291;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106-111; 김재용, 『북한문화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pp.263-271.

25) 한만길, “북한 김정일의 교육정책과 현실, 그리고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제4회 통일대배 교육 포럼, 1997, pp.24-25.

26) 이영선 외, *op. cit.*, p.18.

지향하며 개인주의, 진취성, 경쟁적, 자율성을 내용으로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하며 집단주의, 수동성, 협동성, 단결성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가치의식을 비교할 때, 남한은 개방성, 개인적 권리, 합리성, 사교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북한은 독자성(폐쇄성), 조직전체의 이익, 충실성, 열정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²⁷⁾

도홍렬은, 북한 주민의 인성은 생활 전역에 걸친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훈련과 의식화의 결과로 맹목적 공격성, 호전성, 충동성과 피암시성(被暗示性), 관료의식과 관료주의, 과잉 동조성과 불안의식, 맹종성과 피동성이 동시에 내재된 이중적 인성을 그 특징으로 가진다고 지적한다. 북한 주민의 인성은 인성통합과 행동의 기준이 내면적 가치와의 관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재적 권력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의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성은 극히 불연속적이고 외부적 자극에 의한 변용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²⁸⁾

정기선의 연구에 의하면,²⁹⁾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의 성격특성에 대해 인내심이 강하다, 명령이나 권위에 순종적이다, 조직에 잘 적응한다는 세 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고정관념의 정도는 성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출신지별로 다르지만, 현재 남한 사람의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한내의 타지역간의 평가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 응답자 중 80%이상이 근면성실하고, 순박하고, 사고가 획일적이고, 의심이 많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성격특성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은 오랫동안 과잉 조직화된 사회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채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성격특성들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반항적, 도적적, 비판적, 기회주의적, 이기적, 적당주의 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 국민통합에 순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7) 이장호,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제3회 통일대비교육 포럼 발표 논문, 1997, p.11.

28) 도홍렬, *op. cit.*, pp.81-94.

29) 정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2집, 1998 여름호, pp.434-446.

물론, 북한 사람의 인성특성으로 사고의 획일성, 창의적이지 못함, 융통성이 없음 등의 특성이 지적되지만, 이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귀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귀인이 사회구조로부터 개인의 인성적 요소로 고착화되어 인지되기 전에 이를 변화시키려는 사회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북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인성교육과정에서 개발하여 실천해야 한다.

서제진은 북한 소설과 귀순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북한 주민의 의식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은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사적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갈등이 일반화된 구조적인 사회변화의 지표로서 파악된다. 북한 주민의 가치의식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신민형 인성이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주의, 물질주의적 실용주의, 체제일탈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이다.³⁰⁾ 이는 이중적 인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회규범적 가치체계로부터 크게 이탈된 정도의 가치의식이라기 보다는 규범적 가치체계의 하위가치이거나 공식적 규범가치와 결코 상호배타적인 성격의 것으로 간주되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회에 공식적 가치체계와 사적 가치의식이 병존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간의 상대적 차이이다.³¹⁾

박용현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유형을 다음의 항목으로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³²⁾ 다양성-균질성, 사회적 인정욕-공식적 인정욕, 미래지향성-현재지향성, 자율성-타율적 동조성, 자유주의-권위주의 성향, 상호무관심-상호불신성, 이기적 개인주의-자기희생적 집단주의, 개인적 경쟁성-집단적 경쟁성, 북한에 대한 열시성향-남한에 대한 적개심이다. 제시된 남한주민의 인성 유형은 대부분 긍정적인 특성들이며, 북한주민의 인성 유형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상호불신, 집단성, 무책임성 등 많은 특성이 남북한 주민에게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할 때, 남북한 주민들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개인주의적인

30) 서제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31) 이장호, *op. cit.*, p.14.

32) 박용현, "통일에 대비한 인성교육," p.14.

인성과 집단주의적 신민형 인성이다.³³⁾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이러한 인성 유형을 민주적 인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주민들의 무책임성, 불관용성, 부정직성을 민주적 인성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2.3 국민통합과 남북한 주민 인성

통일한국의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 인성은 민주적 인성이다. 민주적 인성은 궁극적으로 도덕적 인성에 기초한다. 도덕적 인성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제시하는 도덕적 견해의 도덕적 방어 가능성, 이타적 본성, 사고와 행동에서의 도덕적인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³⁴⁾ 그리고 영속적이고 지배적인 관심사는 도덕적인 삶의 원천인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도덕적 자율인에게 옳은 행위는 자율적인 윤리적 원칙에 일치하는 양심의 결정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한 행위는 논리적 내포성과 일관성을 가지며, 옳은 이유 때문에 행해진다. 그러므로 도덕적 자율인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믿고 행할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견해와 행위가 방어 가능한 이유를 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도덕적 견해의 정당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도덕적 인격자 속에는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람과 도덕적으로 비자율적인 사람이 존재한다. 자율적인 도덕적 인격자는 확립된 도덕적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반면에 비자율적인 도덕적 인격자는 훌륭하지만 확립되어 있지 않은 도덕적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율적이고 선한 인격자는 도덕적인 성숙을 보여준다. 훌륭한 인성을 소유했지만 비자율적 사람은 이해보다는 권위에 의존한다.

도덕적 인성은 확장적 사고, 도덕적 판단능력,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만이 아니라 일상적 관계, 일상적 거래,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형성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일상적 인간관계와 작업과정에서 도덕성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도덕적 분위기에 공헌한다. 그리고 그 근원은 도덕

33)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남, 1995); 동영준, “남북한 청소년의 특성 비교,” 『교육월보』, 1995. 6.

34) Laurence Thomas, *Living Morally: A Psychology of Moral Character*(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9), pp.3-26.

적 행위자의 인성에서 발견되는 것이다.³⁵⁾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인성에 기초한 민주적 인성은 개인적 측면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통일실현과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직, 관용, 책임에 기초한 도덕적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한 주민 인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북한주민의 인성은 臣民型 人性으로 家臣主義, 권위주의, 집단주의, 배타주의, 가족적 온정주의, 수동성, 이중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사적 자율화의 전개, 식량난, 대외개방의 영향으로 현실을 중시하는 경향이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의 인성에서 사적영역에서 개인주의적 인성이 발견되기는 하지만,³⁶⁾ 남한 주민의 개인주의적 인성과 비교할 때 북한 주민의 인성은 여전히 신민형 인성으로 특징지워진다.

북한 주민의 신민형 인성은 순박하고 순종적이며, 단결력이 있고, 근면하고, 협동적, 공동체주의적이라는 인성특성을 띤다. 이러한 인성이 획일성, 배타성, 폐쇄성, 의존성과 타율성, 무책임성이 제거되고 민주사회에 적합한 원리로 변용되어 긍정적 잠재력이 개발된다면 국민통합에 효과적인 인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단의식은 김정일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집단과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심어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³⁷⁾ 북한 주민의 인성은 긍정적으로 발현된다면 통일한국이 내부적, 외부적 도전에 직면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인성일 수 있다.

남한 주민의 인성은 시민형 인성에 가까우며 자발성과 창의성, 불신의식과 냉소주의, 파벌주의, 형식주의, 시민성을 포괄한다. 그 중 파벌성과 이기적인 인성은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어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인성의 자율성은 통일 한국의 사회갈등을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다.

남북한 주민의 인성을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한의 개인

35) Betty A. Sichel, *Moral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Community, and Ideal*, p.26.

36) 서계진, "북한 학생의 가치관 변화와 교육적 시사," 한국교육개발원 제2회 통일대비교육 포럼 발표 논문, 1996, p.2.

37) 한승조 외, 『남북한의 인성·사상교육』 (서울: 집문당, 1998), p.189.

주의적 인성과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적 인성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대립적 요소와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한 주민의 자율성, 적극성은 소극성, 수동성파, 그리고 경쟁적 특성, 이기성은 협동성과 상호 보완적이다. 이기심과 복종심은 상충적인 요소로 남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 부정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자질 중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고 부정적인 특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인성을 발견하여 공동체의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주민의 인성교육은 민주적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인 정직, 관용, 책임의 인성함양을 중심으로 남한 주민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인성자질을 함양하고, 북한 주민 들은 민주적 인성을 적극적으로 동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³⁸⁾

3. 통일이후 인성갈등과 민주적 인성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는 시민들의 도덕적 행위와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한 민주적 공동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민주적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시민적 덕을 함양할 때에 번창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민주적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제반 제도와 질차는 바람직한 인성을 소유한 시민에 의해 이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민주적으로 활용하고 민주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민주적 인성을 소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적 인성 교육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가치와 덕을 계발하고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민주적 공동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악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적 인성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동체의 윤리적 결정 및 행위에 영향을 주는 조직화된 가치와 덕이다.

38)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IV장; 한만길,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1997, pp.171-178.

주의적 인성과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적 인성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대립적 요소와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한 주민의 자율성, 적극성은 소극성, 수동성파, 그리고 경쟁적 특성, 이기성은 협동성과 상호 보완적이다. 이기심과 복종심은 상충적인 요소로 남북한 주민의 의식 속에 부정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자질 중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고 부정적인 특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인성을 발견하여 공동체의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주민의 인성교육은 민주적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인 정직, 관용, 책임의 인성함양을 중심으로 남한 주민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인성자질을 함양하고, 북한 주민 들은 민주적 인성을 적극적으로 동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³⁸⁾

3. 통일이후 인성갈등과 민주적 인성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는 시민들의 도덕적 행위와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한 민주적 공동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민주적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시민적 덕을 함양할 때에 번창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민주적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제반 제도와 질차는 바람직한 인성을 소유한 시민에 의해 이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민주적으로 활용하고 민주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민주적 인성을 소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적 인성 교육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가치와 덕을 계발하고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민주적 공동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악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적 인성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동체의 윤리적 결정 및 행위에 영향을 주는 조직화된 가치와 덕이다.

38)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IV장; 한만길,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1997, pp.171-178.

통일한국의 인성교육은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이 정직, 관용, 책임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 근거는 남북한 주민의 상이한 인성에 가인하는 정치, 경제사회, 문화적인 세 갈등의 해소라는 현실적 이유와 정직, 책임, 관용이 민주주의를 지탱시키는 근본적인 인성으로서 상호연관적인 관계를 가지는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이라는 철학적인 이유에서이다.³⁹⁾ 정직은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형성에 기초로서 타협과 관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반이다. 관용은 관용을 위해 자신의 이익, 고통, 성급함을 극복할 수 있을 때에만, 즉 책임을 질 경우에만 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은 관용의 기반이 된다. 정직과 관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책임이행은 무시되고 책임은 외부귀인(external attribution) 된다.

3.1 신민적-시민적 인성 갈등과 관용

관용의 문제는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관용은 공동체의 진리를 파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과 다른 가치관, 태도, 습관,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반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비난받을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못하게 할 수 있을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용은 자신의 능력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용은 타인을 위한 것일때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관용을 위해 자신의 이익, 고통을 극복하는 책임을 이행할 때 덕이 된다. 관용은 관용을 베풀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베풀줄 아는 것이어야 한다.⁴⁰⁾

통일한국의 민주적 공동체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것과 상이한 원칙과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용의 안성을 함양시키는 관용교육은 다른 문화, 종족, 이념, 사상, 행위 등에 대해 반대하지만 반대, 억압, 제거, 차별 등의 부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일이다.⁴¹⁾

통일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데 우선적 과제는 남북관계가 그간 얼마나 불관용적이었는가를 반성하고 남북한 주민들간의 상호적대감과 공포감을 제거하고 각각의 체제와

39) 拙稿, "통일을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연구』, 제5호, 1998, pp.125-127 참조.

40) 조한경 역, 『미덕에 관한 철학적 에세이』 (서울: 까치, 1997), pp.212-214.

41) 김용환, 『관용과 열린사회』 (서울: 1997, 철학과 현실사), p.134.

이념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가치, 태도, 행위를 관용하는 인성을 함양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한 가지 목표는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제외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 가지는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관용의 인성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은 6. 25의 후유증으로 남한 주민들은 적색혐오증을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적색혐오증과 적개심은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행동을 저하시키고 감상적 정서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편, 남북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불관용적이고 비타협적인 사회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는 1980년대 이후 사적 자율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문화로 인해 다양성과 관용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남한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행으로 다원화가 진행되어왔으나 여전히 상이한 가치관, 태도, 행동을 포용할 관용성이 결여되어 있다.⁴²⁾ 남한 사회에 깊숙히 자리잡은 불관용성과 이기성은 남한주민들의 비타협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인성을 가지도록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다원주의 사회의 확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관용성은 역할채택(role-taking)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협의 기초가 되며 이기성과 반대되는 특성이다.

일본 도요대(東洋大) 심리학과와 나가자토(中里) 교수팀이 한, 미, 일, 중, 터키, 폴란드, 키프로스 이상 7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기심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긴급상황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는 일본 청소년 다음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 다수는 젊은 세대를 이기적 특성을 지닌 세대로 보며, 젊은 세대 스스로도 이기적인 성향을 인정하고 있다.⁴³⁾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일한국의 사회가 관용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준다.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와 계급투쟁의식을 삶의 전과정을 통해 철저히 주입받아왔다. 공동생활과 공동소유, 공동사고와 공동활동의 가치를 주입받고 집단생활에 익숙하

42)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 上』, 1994, p.72.

43)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1994), pp63-66; 중앙일보, 1998, 8, 25.

도록 훈련받아왔다. 그 결과 북한 주민의 인성은 극히 획일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고 다른 대상집단을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며 외부인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데 관용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의 가치관, 태도, 인성에 대한 반감이나 거리감을 느끼고, 극단적으로는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회피함으로써 사회적응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남한 주민들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기적 행태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결국 남북한 주민간의 불관용성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후유증과 갈등의 극복을 위해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된다. 통일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통일 이후의 동서독 주민간의 심리적 갈등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폭력적 표출등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우리 민족에게 큰 교훈이 된다.

독일은 1972년 12월 1일의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1989년 11월 9일 통일이 실현되기 전까지 17년동안 상호교류와 협력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구동독, 구서독 주민들간에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심리적 불관용이 존재했다. 동서독 주민들 대다수는 서로의 이질성을 통일 이후에야 알았다. 통일 이후 구동독 주민들은 서독주민들에 대한 열등의식과 심리적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심리적 지각은 외국인에 대한 극우적이고 폭력적인 혐오감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관용은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인성 특성이다. 그리고 지구촌화된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미래 지향적인 보편적 인성 특성이기도 하다.

3.2 타율적-자율적 인성 갈등과 책임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체제에서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자율적인 시민으로서 생활해야 한다. 책임이란 개인의 지위, 기능, 행위 등의 본질에 의해 그에게 부과된 의무의 범위를 말한다. 즉, 역할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특정 역할에서 파생되는 권한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과 관련된다.

북한 주민에게서 책임성이 부족한 것은 지적되는 이유는 집단주의교육, 정치적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경제적 집단주의, 체제내부의 성분차별과 특혜 등의 원인 때문이다.

먼저,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을 토대로 장기간의 조직적인 집단주의교육을 받아왔다. 조직에 의해 지속적으로 통제되는 삶의 양식은 북한 주민들의 사고를 경직시키고 타율성을 조장하는 환경적 요인이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이행에 매우 취약하다.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 책임성은 조직교육을 통해 형성되거나 조건반사적인 방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과 책임의 훈련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생활에 대한 강조는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법이 타율적 제재로 인식되며, 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감시와 처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법에 소극적 경향도 없지 않다.⁴⁴⁾

다음으로, 북한 주민의 무책임성과 타율성은 북한 내부의 계층구분에 기초한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을 받는 동요계층과 적대계층 주민의 학습된 무력감에 의해 조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무책임성은 핵심계층 주민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무책임성을 내면화할 정도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한 예로 대학입학시 출신성분이 성적보다 우선시되며, 전사자 유가족, 김일성의 접견자 자식, 노력 영웅 자식, 접견자의 친척 친우까지도 대학에서 혜택을 받는다.⁴⁵⁾ 따라서 핵심계층 자녀들은 부모에 의존하는 무책임성을,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자녀들은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성실성을 상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무책임성은 인민대중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배제되어 온 결과이다. 권력의 중앙집권화, 엄격한 정보통제로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에 기반을 두는 민주적 공동체의 생활원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회피하고 과거체제에 대한 향수에 젖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한 주민들이 책임성이 강하다는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남한 주민들의 책임성은 소속된 집단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성실성일 뿐 전체집단에 대한 책임성은 약하

44) 박용현, “북한의 정치교화정책과 청소년의 가치관,” 『북한학보』 제4집, 1980, p.12.

45) 한국교육개발원, 『내가 받은 북한 교육』, 1994, pp.176-180 참조.

다. 특히, 남한 주민들 중 젊은 세대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어려움에 직면하여 문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 무책임성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⁴⁶⁾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에 개인주의와 자율적 의사결정에 익숙한 남한 주민들과 집단주의적 사고와 구조순응적인 행동양식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간에는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적 인성 교육은 자율성, 주도력, 창의력에 입각한 교수·학습전략을 활용하여 개인의 책임성을 고양시키는 교육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⁴⁷⁾

3.3 표면적-내면적 인성 갈등과 정직

정직은 위선, 이중성 등 모든 형태의 거짓에 반대된다. 타인과 관계되는 성실성과는 달리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거짓말을 하지 않는 행동과 정신으로 보여주는 성실성이다. 그러므로 정직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능한 최대의 진실과 참이 교류하게 하며, 기만과 속임수를 최소화시킨다.⁴⁸⁾ 그러므로 정직은 개인, 집단, 그리고 국가간 관계에서 신뢰적인 관계형성의 기반이 된다. 부정직은 신뢰의 상실과 관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직은 개인, 집단, 사회 전체의 가치를 결정하는 덕목이며 인성이다.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이나 소집단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 타인과의 협력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상호간 이익갈등의 가능성이 조성되고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조차도 어렵게 될 수 있다. 민주적 공동체의 시민들은 도덕적 대화인 토론의 과정을 거친 타협을 통해 이익균형을 찾을 수 있지만 신뢰의 상실은 그 기반을 붕괴시킨다. 그리고 관용은 공동의 이익과 목표달성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려는 시민들의 의지와 다른 집단과 연합하려는 지도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⁴⁹⁾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과정에는 정치적 신화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의 혼재상황을 수

46) 한국사회학회 편, *op. cit.*, pp.66-68.

47)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37-45.

48) 조한정 역, *op. cit.*, pp.257-261.

49) Gabriel A. Almond & G. Bingham Powell,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78), pp.37-39.

반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형성된 이중적 의식구조는 사회주의 사회에 거짓말과 허위를 일상화시킨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과 허위가 생존수단이 된다.⁵⁰⁾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 사회의 실상은 이를 잘 입증해 준다.

북한 사회는 최근 사회변동과 사회 일탈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대외개방정책의 여파, 경제적인 측면의 사적 자율화의 점진적 진행, 심각한 식량난에 접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이중적인 가치, 태도,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체제에 순종적인 표면적인 성을 보이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배금사상, 부패확산, 밀무역, 뇌물수수, 횡령, 암시장의 형성, 정치사상교양에 대한 거부감, 학생들의 권닝의 일반화등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는 구조적 제약하에서 부정직과 불신의식이 내면적 인성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뇌물은 사회전반에 만연하는 일탈행위가 되었다. 북한에서는 뇌물이 인간의 도리가 될 정도로 모든 계층, 모든 분야에서 생활화되고 있다.⁵¹⁾ 따라서 정당한 방법보다는 뇌물에 의존하게 되고 불신감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도 예외가 아니며 부패규모는 북한보다 더욱 크다. 남한 주민은 제2공화국을 제외한 6공화국까지의 오랜 권위주의지배의 영향으로 형성된 권위주의문화, 사회전반의 부패구조, 정경유착의 고리, 뇌물이 만연된 사회구조하에서 생활하면서 정직성을 상실하고 이기적인 인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남한 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면 손해본다,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⁵²⁾

남북한 공통적으로 공동체의 기반인 정직성이 상실되고 집단적 불신증과 집단적 피해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뇌물과 부패구조가 만연된 사회에서 개인은 동조압력의 영향을 받고 뇌물을 받는 자신의 행동을 외부귀인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회피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죄책감은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동조는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⁵³⁾ 그 결과 정직성과 책임성이라는 덕목

50) 서재진, "북한 학생의 가치관 변화와 교육적 시사," pp.3-4.

51) 서재진, "통일한국의 사회문제 및 사회갈등," 김수곤 외, 『통일 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p.72-74.

52)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op. cit., p.128.

53) 차재호,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전망," 한국심리학회,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

은 무시되고 만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인성교육은 민주적 민족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정직한 인성을 소유한 시민육성을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3.4 민주적 인성과 국민통합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과정은 상대방의 인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질성의 확인이 주민갈등 및 적대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공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공동체생활에서 적대적인 사상과 이념의 융합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 개인간, 집단간에 예상되는 대립과 갈등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단주의적 인성과 개인주의적 인성간의 대립일 것이다. 이러한 인성대립은 남북한 인성교육의 목적, 교육의 본질적 가치, 강조되는 가치, 인성형성과 훈련 방법의 상이성에 근거한다. 통일과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과제를 준비하면서 한국은 국민에게 민주적 가치관과 인성특성을 함양시킴으로써 이질적 인성을 조화시키고 통일과정에서 인성의 강약점을 잘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현·김지영의 연구에서,⁵⁴⁾ 귀순자들이 남북한 청소년의 성격을 평가한 결과는 앞으로 민주적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귀순자들은 남한 청소년들의 단점으로 이기적이다, 남을 잘 속인다. 솔직하지 못하다, 책임감이 강하지 못하다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 청소년들의 단점으로 위선적이다, 자기의 의견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자기 주장이 약하다, 과격하다 등의 특성을 지적했다.

북한 청소년들의 강한 책임감은 집단에 대한 높은 헌신성, 집단생활과 다양한 사회적 책임 수행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 부여된 책임에 대한 성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기반이 취약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사회풍토하에서 살아 온 남한 청소년들은 이기적이고 의존적이며 낮은 책임성을 보인다.

적 화합」,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논문집, pp.2-3.

54) 최현·김지영, "청소년의 성격 형성 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p.186.

남북한 주민에게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인성, 즉 부정직, 불관용, 무책임성은 통일 이후 국민통합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 관용, 책임이라는 민주적 인성을 함양 시킴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을 통합시키는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에서의 교육방안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에서 상호보완하고 화합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동시에 부정적 특성을 제거하고 긍정적 잠재력을 계발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한국의 예상되는 갈등, 통일한국에서 요구되는 인성,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비교 이해, 남북한 주민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제거, 남북한 주민의 민주적 인성의 함양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방안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 한국의 남북한 주민이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장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역사적 분단에 기인한 상이한 인성을 상호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먼저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민주적 공동체의 실현에 필수적 토대가 되어 온 정직, 관용, 책임의 덕목을 내면화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음으로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에서의 인성교육의 방안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것들은 복합적이고 상호연계적인 특성을 띠어야 한다.

4.1 가정의 인성교육방안

가정은 인성이 형성되는 최초의 장소이며 인성형성의 중요한 결정인자이다.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가정교육은 자녀의 인성형성에 지속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성의 지배적 경향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결정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반복되는 학습경험은 습관화되어 아동의 행동에 일관성과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인간관

남북한 주민에게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인성, 즉 부정직, 불관용, 무책임성은 통일 이후 국민통합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 관용, 책임이라는 민주적 인성을 함양 시킴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을 통합시키는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에서의 교육방안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성에서 상호보완하고 화합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동시에 부정적 특성을 제거하고 긍정적 잠재력을 계발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 통일한국의 예상되는 갈등, 통일한국에서 요구되는 인성,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비교 이해, 남북한 주민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제거, 남북한 주민의 민주적 인성의 함양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방안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의 인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 한국의 남북한 주민이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장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역사적 분단에 기인한 상이한 인성을 상호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은 먼저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민주적 공동체의 실현에 필수적 토대가 되어 온 정직, 관용, 책임의 덕목을 내면화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음으로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에서의 인성교육의 방안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것들은 복합적이고 상호연계적인 특성을 띠어야 한다.

4.1 가정의 인성교육방안

가정은 인성이 형성되는 최초의 장소이며 인성형성의 중요한 결정인자이다.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가정교육은 자녀의 인성형성에 지속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성의 지배적 경향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결정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반복되는 학습경험은 습관화되어 아동의 행동에 일관성과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인간관

게는 애정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적 인성은 삶의 과정을 통해 제대로 학습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인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행위자이다.

한국의 전통가정교육은 인성을 중시하는 문화전통을 간직하고 바람직한 인성형성에 기초를 두고 본보기를 제시하는 수범(垂範)의 방법, 체험의 방법, 지행합일의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⁵⁵⁾ 그러나, 현재 남한의 가정교육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인간만을 길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도 학교교육의 보조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이유는 민주적 인성형성이라는 가정교육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고 인성형성의 방법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일뿐 정직, 관용, 책임의 내면화와 실천에 대한 가정교육의 경향은 찾아 보기가 힘들다. 민주적 인성 교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교육은 언어적 통제양식에 의존하거나 자녀들에 대한 훈육이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교육의 특성상, 가정에서의 도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은 가정교육을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북한은 아동을 부모로부터 일찍 분리시켜 탈가족화된 인위적 환경에서 사상교화를 행한다. 탈가족화현상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을 정치적 입장에서 독점하게 되는 데, 근본 목적은 아동의 인성이 고착되기 전에 집단 속에서 공산주의적 인성을 형성하기 위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공산주의적 덕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동은 유치원에서 공산주의 인성을 형성하게 되고 철저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⁵⁶⁾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가정에서는 민주적 인성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통일 이후 전개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남북한 주민들간에 예상되는 갈등을 고려할 때 인성형성의 출발점인 가정에서 민주적 인성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은 막중하다. ‘작은

55) 김광웅, “전통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이세학 외, 『세 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7, pp.109-119.

56) 황성모,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북한청소년의 의식구조,” 『북한학보』 제4집, 1980; 고영복, op. cit., pp.226-227.

사회'인 가정에서 부모는 통일한국의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관용성, 책임성, 정직성을 자녀들에게 함양시킬 책임을 우선적으로 가진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동일시를 통해 부모의 도덕적 특성을 습득하며, 부모의 훈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해 간다. 명확한 기준에 의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는 도덕적 판단력, 정직, 책임, 관용을 배운다. 특히, 그간 축소되어져 온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정직하고 관용적이고 책임감있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친척이나 이웃, 친구들과 인관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가족구조는 압축성장과 더불어 급속히 핵가족화되어 왔다. 조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가족의 사회통제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 안정에 대한 회구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부모의 인성형성역할이 재고되어야 한다.

조부모의 교육적 기능은 부모의 교육적 기능과 다를바 없다. 조부모는 부모보다도 손자녀의 모든 것을 수용하며 손자녀는 이러한 조부모에게 신뢰감을 형성한다. 조부모의 교육적 기능은, 아동이 가족구성원들의 상보적 역할에 의해 균형잡힌 인성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이루게 조장하며, 일찍부터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성인의 가치기준에 대한 이른 발달로 높은 사회성, 협동과 경쟁을 조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⁵⁷⁾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주적 태도와 가정에서의 정치적 대화는 깊은 관련이 있다. 가정에서 정치적 대화를 자주 듣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동료에 대한 신뢰가 높고, 관용성이 높으며, 비판적 태도가 발달한다. 신뢰, 관용, 비판의 태도는 가정에서의 정치적 대화의 증가와 강한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정치적 대화를 많이 나누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일수록 민주적 태도가 크게 성장한다.⁵⁸⁾ 이러한 점에서 가정에서는 정직, 관용, 책임이라는 민주적 인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정치적 대

57) 최경순, "조부모의 교육적 기능," *이계학 외, op. cit.*, pp.223-224.

58) 어수영,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서울: 법문사, 1991), pp.136-143.

화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정치적 대화를 많이 듣게 해야 한다.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수범(垂範)은 자녀의 정신 속에 내면화되어 인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부모와 조부모는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찾아보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가정에서의 도덕교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성격 이야기의 제구성을 통한 유아의 도덕성 증진을 위한 연구,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창작동화집 발간 등이 전부이다. 그리고 주로 아동에게 선하고 착한 것을 들려주는 일방적 교육방법에 기초하고 있다.⁵⁹⁾ 따라서 민주적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교육은 대화, 토론, 영상 프로그램 시청, 양서읽기, 실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실천지침

1. 부모와 조부모는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2. 부모와 조부모는 정직, 관용, 책임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누고 그러한 대화에 자녀들을 자주 참여시킨다.
3. 민주적 인성형성에 도움이 되는 토론 프로그램, 영화, 책자, 일화를 골라 자녀와 함께 시청하고 현실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늘린다.
4. 부모와 조부모는 가족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실행하게끔 훈육한다.
5. 부모와 조부모는 자녀들이 부정직하거나 무책임한 언행을 행할 때 엄격한 훈계와 통제를 가한다.
6. 이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함양하기 위해 대화와 교육용 비디오를 통해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과 성적 비행 예방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
7. 재활용품 분류작업, 아파트단지 청소, 주택가 골목 청소 등의 집단활동에 자녀와 함께 참여한다.
8. 고아원, 양로원 등의 복지단체 방문을 통해 자신과 다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59) 문용린, “부모를 위한 가정에서의 도덕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제50집, 1995, p.52.

4.2 학교의 인성교육방안

인성교육은 도덕적 삶의 기초가 되는 도덕적 인성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민주주의체제에서 도덕적 인성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적 인성을 의미한다. 그간의 인성교육의 부재 또는 실패는 학교의 도덕교육이 민주적 인성에 대한 가르침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민주주의체제에서 도덕적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들과의 관계를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한다.⁶⁰⁾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은 시민적 지식과 기술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또한 민주주의가 번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성향, 즉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민주적으로 사용할 긍정적 성향으로서의 덕을 가져야만 한다.⁶¹⁾ 그러므로 시민적 덕을 함양하려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공적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개인적 이익에 대한 감정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 시민적 덕을 행사하도록 도와주고, 공적 의무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행위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헌신, 봉사, 자제, 극기 등의 도덕적 덕, 사회통합과 도덕적 환경을 포함하는 공동선을 위한 공동 책임이 요구된다. 공동의 책임이란 사회 구성들의 개인적 덕을 함양시키는 것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⁶²⁾

통일 이후 제기될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민성(national character)을 도덕적 인성으로 확립시켜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실제적, 최빈형(最頻型) 인성을 민주적 인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민적 덕은 사적인 개인보다는 시민이 되도록 해주고 시민으로서 민주적 공동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는 자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덕은 자유, 평등, 민

60) David Carr, *Educating Virtues-An essay on the philosophical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and education*(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5), pp.8-9

61) Patricia White, *Civic Virtues and Public Schooling: Educating Citizens for a Democratic Society*(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6), pp.1-2.

62) Philip Selznick, "Thinking about Community: Ten Thesis," *Society*, Vol.32, No.5, Jul/Aug 1995, p.37.

주주의, 질서의 발달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⁶³⁾ 여기에는 시민적 헌신과 시민적 성향이 포함된다. 시민적 덕은 행위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요구, 태도를 인식하고 고려하면서 공동선을 위해 행동하려는 시민적 성향과 의지를 형성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시민적 성향은 민주적 체계의 공동선과 건전한 기능에 도움이 되는 시민의 마음의 습관과 태도를 의미한다. 시민적 헌신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와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시민적 덕을 소유한 덕스러운 시민은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제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타인을 권리와 의무에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한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그들의 정당한 몫 이상을 주는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시민적 덕의 가르침을 통해 통일한국의 이상이 실현되고, 바람직한 통일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초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4.2.1 인성교육과 도덕교육

현대 도덕교육의 주류는 가치명료화, 그리고 딜레마 토론을 통한 도덕적 추론 능력의 개발을 강조하는 콜버그의 도덕교육이론이다. 이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덕과 행동을 도덕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은 반자유주의적이며 교화(indoctrination)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덕에 기초한 인성교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즉,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의 제시나 기본적인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주저해 왔다. 덕은 존재하지만 덕스러운 행동을 배우는 데 필수적 조건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수방법을 통해서도 덕은 주입될 수 없다는 입장에 선다.

위의 두 접근에서 도덕교육의 기본적 목적은 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도덕적 사고 및 도덕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어서 학습자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행위나 인성 특성에의 안내보다는 도덕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탐구의 기술 제고, 그것들을 규범적 의사결정의 맥락에 실제적으로 적용케 해봄으로써 그러한 기술들(skills)을 확립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일관된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강조된다.⁶⁴⁾

63) Shelley Burt, "The Politics of Virtue Today: A Critique and Proposa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7, No.2, June 1993, p.360

그러나 학생들에게 덕을 가르치는 것을 교화나 학생들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박탈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에는 위험한 혼란만 존재한다.⁶⁵⁾ 덕은 사회발전에 근본적인 성향과 자질이며, 이를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교육과 도덕교사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콜버그는 도덕적 추론에 초점을 두었다. 도덕적 추론은 훌륭한 인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피터스(R. S. Peters)는 콜버그의 이론이 덕을 도덕성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도덕적 인성의 형성에서 습관의 행하는 역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점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했다.

인성교육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덕의 윤리학(Virtue Ethics) 전통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매킨타이어(A. MacIntyre), 핀코프스(E. Pincoffs) 등은 도덕적 판단능력, 구체적 상황에서의 옳은 행동을 강조하는 원리의 도덕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인성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덕의 윤리학에서 강조되는 것은 선한 사람(good person)으로서 덕스러운 인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다. 덕의 윤리학은 인성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옳은 행위(right conduct)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 역할은 좋은 인성을 표현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성교육은 도덕판단을 위한 이론적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적 판단능력을 제고시키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주지주의 도덕교육보다는 주어진 사회에서 장려되면 좋을 것으로 공인되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도덕교육에 대한 접근이다.⁶⁶⁾ 이러한 경향은 내용(content)보다는 형식(form)에 초점이 두어진 도덕교육에 대한 반론으로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의 진정한 통합에 기초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도덕교육은 내용과 형식의 통합적 접근과는 달리 도덕적 판단능력의 증진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능력, 도덕적 문제해결능력의 제고

64) Robert T. Sandin, *The Rehabilitation of Virtue: Foundations of Moral Education*(New York, Prager, 1992), pp.8-9.

65) David Carr, *op. cit.*, pp.6-7

66) 손봉호, “인성교육 : 필요, 성격, 방법,” 『철학과 현실』, 1995, 겨울, pp.67-69.

에는 기여하였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도덕적 성향의 개발과 행동의 습관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윤리이론에 대한 지식과 도덕적 판단능력은 학생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윤리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간의 관계는 필연적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도덕교육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회문제들과 도덕적 위기에 대응하여 규범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가르쳐지는 규범과 가치들을 학생들이 실제 삶의 과정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⁶⁷⁾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덕교육은 남북한 주민들간의 가치관 통합에 기여하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지향해야 한다.⁶⁸⁾ 따라서 덕에 기초한 인성교육을 통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인격자를 육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덕스러운 행동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습관적으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덕을 가르쳐야 한다. 덕을 가르친다는 말은 덕을 함양시키는 것으로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이 민주적 인성을 형성시키는 작업이다.⁶⁹⁾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언론, 민간단체간의 협력적 관계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인성교육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주요 행위자는 학교교육이다.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성이 필요하며, 민주시민은 훌륭한 판단, 정직, 공감, 배려, 관용, 자기규율, 도덕적 용기, 책임등의 도덕적 자질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는 민주적 인성함양을 위한 유리한 장소라는 점이다. 셋째, 민주적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도덕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⁷⁰⁾

67) 김인회,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사회변화와 윤리』 (서울: 법문사, 1990), pp.157-158.

68) 유균상,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p.224.

69) 최병태, 『덕과 규범-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1996), pp.231-232.

70) *Ibid.*, pp.93-94.

인성교육은 보다 정직하고 관용적이고 책임성이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적 덕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계발하고자 하는 도덕적 덕은 정직, 관용, 책임, 신뢰, 타협 등의 시민적 덕을 포함하고, 자제, 우정, 지적 훈련과 같은 도덕적 인성의 다른 덕을 포괄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덕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구분된다. 자적인 덕은 교수에 의해 획득되고, 도덕적인 덕은 습관에 의해 획득된다. 도덕적인 덕의 올바르고 유일한 획득 방법은 행동에 의한 학습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습관화란 같은 기계론적인 해석의 입장에서 보듯이 행동의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판적 평가의 과정을 의미한다.⁷¹⁾

민주주의사회의 도덕교육은 국민들의 도덕성에 기초한 민주시민성을 발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훌륭한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지적 능력, 의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참여적 행위능력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학생들의 협력적 관계와 상호존중의 발달,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발달-도덕적 생각, 감정, 행위의 발달, 그리고 교실과 학교에서 공정성, 참여, 배려에 기초한 도덕적 공동체의 발달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해 자아존중, 사회적 관점의 획득, 옳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추론, 신뢰, 책임감, 친절 등의 도덕적 가치, 사회적 기술, 협동하는 습관 등의 자질들을 학생들이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⁷²⁾ 그 결과로서 국민들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품성의 기초인 도덕적 인성을 함양하게 된다.

4.2.2 인성교육의 교수·학습전략

민주적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의 성공여부는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에 달려 있다. 민주적 인성은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능력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특성 또는 자질의 함양에 적합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목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통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다른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이한 관점과 태도를 포용하는 인성, 통일 이후의 개인적, 사회적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성, 사

71) 최병태, *op. cit.*, p.245.

72) Thomas Lickona, "Four Strategies for Fostering Character Development in Children," *Phi Delta Kappan*, May 1988, p.420.

회적 약속인 법률을 준수하고 정직한 인간관계를 통해 상호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교수·학습전략은 참여적이고 학생중심적이며 실천적인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둔 통합적인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유형(learning style)과의 적합성, 학습내용과의 적합성, 학생의 도덕적 통합성의 지지,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⁷³⁾ 그리고 직접적 교수전략과 간접적 교수전략간의 균형을 취하면서 학생들의 가치, 기술, 태도, 참여를 조화롭게 발달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덕교사는 민주적 인성의 모델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의 정의적 측면의 발달을 촉진하고, 실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덕을 습관적으로 행동하게끔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민주적 인성의 다면적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전략으로는 홀(Robert T. Hall)이 제시하는 도덕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전략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홀은바람직한 도덕교육은 전통적 접근법과 현대적 접근법간에 창의적 긴장을 이루면서 통합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내용으로서의 도덕성과 형식으로서의 도덕성, 도덕적 행동의 조화로운 발달이라는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념전략(concept strategy), 인식전략(awareness strategy), 토론전략(debate strategy), 합리적 전략(rational strategy), 게임 전략(game strategy) 다섯 가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⁷⁴⁾

개념전략은 개인적, 사회적 가치들의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한 탐구기법이다. 인식전략은 자신과 타인들을 의사결정자로서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가치우선성(value priority)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절차이다. 토론전략은 자신의 견해를 결성하고, 그 결정을 방어하는 경험을 얻기위한 사례연구기법이다. 인식전략, 합리적 전략, 토론전략은 모두 도덕적 쟁점이나 다른 가치쟁점들을 숙고하는 데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전략으로서 가치 덕목 중심의 교육을 위해 적합하다.⁷⁵⁾ 게임전략은 도덕적 결정이

73) B. David Brooks and Mark E. Kann, "What Makes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Work," *Educational Leadership*, November 1993, pp.19-21; Robert D. Heslip, *op. cit.*, pp.102-103.

74) Robert T. Hall, *Moral Education: A Handbook for Teachers: insight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helping adolescent to become more caring, thoughtful, and responsible persons*(Minneapolis: Winston Press, 1979), pp.5-19.

75) Alan L. Lockwood, "A Letter to Character Educators," *Educational Leadership*, 1993, November, p.74; 박용현, 『민주화 세계화와 교육과제』(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p.272-285.

요구되는 사회적 관계능력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작용게임과 역할놀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상호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정직성, 책임성, 관용성 함양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가지는 한계는 학교에서 북한 출신 귀순자들과의 대화 및 공동생활 프로그램, 이질적 집단과의 상호공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1) 개념전략

언어는 단순히 의미전달의 객관적인 매체가 아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가치관, 의식구조, 이념을 함축한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 민주적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핵심적인 가치개념을 학습해야 한다. 남한 교과서와는 달리 남한의 도덕·사회과 교과서에 해당하는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개념이나 원리를 소개하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내용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사회에서의 학습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탐구력을 증진시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체제의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과서 기술이 매우 반복적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⁷⁶⁾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핵심적 가치를 표현하는 기본적 덕 개념에 주목하게 하고, 덕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언어개념에 기초한 개념전략이 효과적이다.

개념전략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개념 이해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이해 및 의사결정, 주어진 상황에서 행해질 도덕적 행위의 전제가 된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발생한 정치적 갈등이나 정치적 쟁점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들은 민주시민의 의사결정과 도덕적 행동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준거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민주주의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도모하는 개념전략을 중요한 교수·학습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들은 관점에 따라

76) 유균상, *op. cit.*, pp.54-55.

다양하지만, 버츠(R. Freeman Butts)가 제시한 민주시민의 도덕적 덕목 모형은 유용하다.⁷⁷⁾ 버츠가 제시한 덕목은 정의, 평등, 권위, 참여, 공익에 대한 복종, 자유, 다양성, 사생활존중, 적절한 절차, 인권 등 12가지 도덕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통합성을 촉진하는 가치와 바람직한 다원성을 촉진하는 가치를 포괄한다. 정직, 관용, 책임과 유기적 관련성을 지닌 이상의 가치 또는 덕목은 통일에 대비하여, 그리고 통일한국의 인성교육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들이 포함된 다음 몇 가지 진술들을 고려해보자.

-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분할할 수 없고, 상호의존적이다(1993년 세계인권회의 결의문 제3항).
- 모든 사람은 각각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Jeremy Bentham).
-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뇌물이나 이중투표(double voting)와 같은 부정행위를 행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협한다.
- 개인의 정보의 자유는 국방이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들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해석권은 사법부에 귀속된다.

위에서 예시한 진술들에는 인권(human rights), 평등(equality), 공정성(fairness), 공익(public good), 자유(freedom)라는 도덕적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서술이나 교과서, 방송이나 신문기사, 친구들과의 토론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어떤 사실이나 쟁점들(issues)을 진술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이 어떤 사실이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추론할 때,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거나 행위로 옮길 때, 타인의 가치나 견해를 확인할 때, 그리고 개념들과 관련된 쟁점들과 쟁점들 속에 포함된 상충하는 가치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결국, 사실에 대한 진술이나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개념

77) R. Freeman Butts, "Curriculum for the Educated Citizen," *Educational Leadership*, 1980, October, pp.6-8; *The Mora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 Goals for the Civic Education in the Republic's Third Century*(Center for Civic Education, 1988).

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도덕적 인식-판단-행위 고리의 출발점으로서 도덕성 발달과 민주시민의식의 발달을 위한 기반형성을 하는 작업이다.

개념전략은 설명: 수업에서 활용할 개념의 선택- 확인: 개념의 명료화 - 모델링: 개념의 확대와 도표화라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최종적으로 개념전략 워크시트(worksheet)의 작성으로 종결된다. 먼저, 가치가 예시되면, 다음은 상충하는 가치와 유사한 가치를 나열해보고, 예시된 가치를 지지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이점(benefits)들과 그 반대의 결과들을 제한점으로 나열한 것을 도표화하는 과정이다.

다음은 개념전략 워크시트 구성의 한 예이다. 이를 도표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의를 예시 가치로 들어보자.

- | | |
|-----------------------------|--|
| 1. 가치의 예시(examples) | : 정직 |
| 2. 상충가치(conflicting values) | : 사기, 거짓말, 불신 |
| 3. 유사가치(similar values) | : 신뢰, 타협, 관용, 책임, 양심 |
| 4. 이점(benefits) | : 정부에 대한 신뢰감 형성, 타협의 성사, 연합의 성사 |
| 5. 제한점(limitation) | : 적절한 이기심의 경시, 인정이 메마름, 뇌물, 암시장, 부패구조, 무책임 |

이와 같은 개념전략 워크시트를 구성해봄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관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들을 이해하고, 대화 속에서 그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사들은 상충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는 정치적 갈등들과 쟁점들을 토론거리로 제시함으로써 그 속에서 정직, 관용, 책임의 가치개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인식전략

인식전략은 가치명료화이론이 적용된 것으로서, 학생 각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타인의 가치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궁극적으로

로 가치가 나와 주변의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발달시키는 활동이다. 가치명료화 접근이 도덕적 행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의 지적처럼, 인식전략의 활용이 도덕적 행동의 의미있는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⁷⁸⁾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발달이 인식전략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다. 인식전략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타인들의 자유와 행복의 권리에 대한 존경심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식전략은 먼저 자신의 가치, 활동, 결정들에 대한 서열매기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지적 불균형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실과 당위간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동기를 제공하려고 의도한다.

서열매기기는 자신과 가치 및 선호에 대한 분석과 결합되는 데,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학생들에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중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호하는 순서대로 1부터 6까지 번호를 적으시오.)

- 순종
- 관용
- 정직
- 책임
- 법률준수
- 인간적인 인간관계

당신이 ----- 을 1번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친구나 선생님은 무엇을 1번으로 선택했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했을까요?

당신의 생활속에서 -----은 당신의 생활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서열매기기 활동 이후 서열매기기 활동을 확대하여 자신의 가치선호목록을 타인의 것과 비교하는 활동, 가치선호목록에 대한 상호 인터뷰, 동일한 질문지에 대한 자신과

78) James S. Leming, "In Search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al Leadership*, 1993 November, pp.64-65; Alan L. Lockwood, *op. cit.*, p.73.

타인의 가치선호 목록간의 일치·불일치 조사, 소집단 형성을 통한 소집단 내 가치선호 목록 만들기, 타인의 가치선호를 예측해 보기등을 통해 타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이러한 활동이 끝난 후 토론활동을 통해 타인의 가치와 선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토론활동 속에서 타인의 가치와 의견에 주목하고, 무엇을 말해야할지 생각하고, 타인들에게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감정이입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토론전략

토론전략은 사례연구(case-study) 활동이다. 주어진 사례문제나 학생 스스로 구성해 본 가치갈등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도덕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토론과정에서 일어나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경험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제고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토론전략은 쟁점 제시 - 생각하고 의견을 형성할 시간 - 토론을 위한 소집단 형성 - 처음 집단으로 모인 후 토론 - 토론 종료라는 과정을 거친다. 토론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고 의사결정을 내려봄으로써 자율적인 도덕적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주어진 사례문제에 대해 내린 여러가지 결정들의 결과들을 검증질문들을 통해 검증해 보는 토론의 마무리 과정이다. 검증질문에는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거나 의견을 명료화하도록 하는 명료화 질문,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치초점 질문, 사례문제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갈등 질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역할채택 질문, 자신의 결정이 보편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보편화 질문이 포함된다.⁷⁹⁾

관용의 인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토론 주제들이 예시될 수 있다.

-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생각이면 대중 앞에서 그것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소수가 그것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 다수에 의해 한 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 소수가 그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이 허용되

79) *Ibid.*, p.30.

어서는 안된다

- 인생관이나 종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올바른 진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과 타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편을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직의 인성을 위해서는 다음 주제들이 예시될 수 있다.

- 관공서에서 급히 문서를 처리를 해야하는 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먼저 온 사람들보다 빨리 문서를 처리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 회사경영을 위해서 국세청 공무원에게 세금을 널만큼의 돈을 뇌물로 주고 세금감면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타인을 헐바해보는 것은 타인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일이다.
- 승진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업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논문을 자신의 것처럼 바꾸어 자신이 속한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책임의 인성을 위해서는 다음 주제들이 예시될 수 있다.

- 회사에서 업무시간 중 졸릴 경우, 상사가 일찍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는 목욕탕에 가서 1-2시간 자고 오는 것이 회사를 위해 더욱 유의할 수 있다.
- 방과 후 청소 당번인데 다른 약속과 겹칠 경우 선생님의 감독이 없다면 친구들과 몰래 학교를 빠져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토론문제 예시

부산에 사는 김영석은 자신의 어머니의 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해 회사에 이틀간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큰 병원에 도착하였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전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인지 접수대에는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다. 간신히 접수를 마치고

이비인후과쪽으로 가보았는 데, 그 곳에도 이미 많은 사람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빨리 치료를 마치고 오랜만에 연로한 어머니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 드리고 싶었다. 궁리 끝에 이전에 친척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먼 인척이 그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그는 그 의사에게 연락을 했고 덕분에 빨리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자신들보다 먼저 진료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예약 환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4) 합리적 전략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행위에 의해 운영된다. 현명한 선택은 주어진 대안들과 그것의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신중하게 숙고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의 기술을 실행해 보게 된다.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기회에 직면하여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개념과 사실에 대한 지식, 가치판단능력, 그리고 의사결정능력이 필요하다.⁸⁰⁾

합리적 전략은 사례연구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발달시키고자 한다. 이 전략은 사례문제 제시 - 사례문제에서 취해질 수 있는 행위의 대안들의 목록작성 - 목록 중 세 네가지의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대안들 각각의 결과를 동료들에게 기술하기 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 전략은 토론전략과 마찬가지로 학급토론을 위한 사례문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토론전략이 사례문제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방어하는 기술, 즉 의사결정능력의 제고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이 전략은 제시된 사례문제에서 취해질 수 있는 대안적 행위들에 대한 탐색과 그 결과들에 대한 예측능력의 발달에 초점을 둔다.⁸¹⁾

합리적 전략의 핵심문제는 주어진 정치적 쟁점 사례에서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는가, 그 대안들 중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what... if..)라는 질문과 그 대안의 결과는 어떠한가?(then...)라는 질문을 통해 의사결정능력과 도덕적 추론능력의 발달이다.

80) Carolyn Pereira, "Educating for Citizenship in the Elementary Grades," *Phi Delta Kappan*, 1988, February, p.430.

81) Robert T. Hall, *op. cit.*, pp.42-46.

5) 게임전략

게임전략은 게임, 역할놀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의사결정능력과 도덕적 동기와 행위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전략의 이러한 수단들은 첫째, 학생들을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 참여자의 역할에 서게한다. 둘째, 학생들이 감정이입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셋째,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취할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준다. 넷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상호작용능력을 제고시켜준다.⁸²⁾

게임전략을 활용하려는 교사는 전략에 활용되는 게임이 학생들을 의사결정자의 입장에 서게하는 것인가, 행위의 대안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것인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게임전략은 그 성격상 참여적 의사결정능력의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여적 의사결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적 추론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용하도록 도와준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적극적 시민이 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훈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4.2.3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인성교육은 일상적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인성함양을 도덕교육의 근본 목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을 위한 도덕교사의 임부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삶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인성을 함양시키는 것이다.⁸³⁾

인성교육은 기본적인 도덕적 성향들과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인간의 가치로운 삶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기여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의 분명한 척도는 학생들이 명백히 그러한 자질들을 소유하기를 열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에게 열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도덕교사는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교사의 도덕적인, 교육적인 권위는 도덕적 삶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교수·학습전략의 효과적 사용에 근원을 두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교사 자신이 타인

82) *Ibid.*, pp.77-78.

83) David Carr, *op. cit.*, p.6.

에 대한 고결하고 원리화된 태도와 행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태도와 행위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 배려, 관용, 정직, 책임등의 태도와 성향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도덕적 인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길 열망하는 사람만이 인성교육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종교단체, 동료집단, 학교교육으로부터 덕에 대한 그들의 첫 경험을 획득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덕을 획득하는 것은 중요한 타인을 모델로서 설정하고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교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덕을 가르치는 공식적 수업과 훈계를 통해 가치를 전수하기도 하지만, 도덕적 행위자의 표본이 됨으로써 가치를 전수하기도 한다. 겸손, 용기, 공감적 이해, 공정성, 개방성, 판단력, 상상력과 같은 자질을 소유한 도덕교사는 의미있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직, 관용, 책임감, 정의감, 배려와 같은 인성의 소유한 도덕교사는 도덕적 행위자나 표본의 역할을 한다.⁸⁴⁾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격적 모델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도덕적 촉진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인격적 특성을 가진 모델이 되는 교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바람직한 인성적 특성을 채택할 기회가 학생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공정, 배려, 관용, 정직, 용기 등의 인성 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민주사회에서의 참여를 위한 정직하고, 정의롭고, 관용적인 시민으로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덕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 과정에서는 윤리적 사고와 판단능력의 발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조되어 온 것은 콜버그의 도덕이론과 딜레마 토론 기술이었다. 도덕적 의사결정에의 원리적 접근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원리와 추론적 분석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도덕적 상상력과 교사 자신의 인성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해 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숙고하고 도덕적 상상력을 충분히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⁸⁵⁾

84) Elizabeth Campell, "Connecting the Ethics of Teaching and Moral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48, No.4, Sep.-Oct. 1997, p.256.

이러한 점에서 도덕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 과정에서는 미래의 도덕교사들이 자신들이 학생들의 인성형성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도덕적 인성의 소유자의 모델로서 학생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덕의 윤리학에 근거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교원양성 과정에서는 교사 자신이 통일 이후 갈등의 원인이 될 이질적인 가치관, 태도, 행위를 극복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통일 이후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전부터 교원양성과정 및 연수체제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⁸⁶⁾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지침

1. 북한의 문학, 영화, 예술 작품의 접촉 기회 확대
2. 북한 출신 월남자들과의 대화프로그램 확대-학교 전학생이나,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 중집단으로 나누어 여러차례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3. 심성수련회를 통한 공감, 공동체 훈련의 기회 확대
4. 도덕교과에서 정직, 관용, 책임의 인성함양을 촉진할 수 있는 영화작품감상과 토론을 통한 인성함양기회 확대
5. 신문활용교육(NIE) 교육을 통한 북한관련 정보획득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 기회 확대
6.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위해서는 대학 축제시 북한 출신 귀순자들과의 만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4.3 언론의 인성교육방안

언론은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통일을 준비하는 합리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시키고,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과정에서 언론은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인 통합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에 언론의 역할이

85) Jean A. Luckowski, "A Virtue-Centered Approach to Ethics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48, No.4, Sep.-Oct. 1997, pp.265-266 참조.

86) 박재윤,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1)」, 한국교육개발원, 1992, pp.73-74.

기대되는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언론은 사회에 새로운 관습과 생활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시키는 사회화(재사회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개혁의 작용제로서 언론은 국민들이 새로운 생활방식에 무리없이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⁸⁷⁾ 통일 이후 언론은 일반국민들에게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정치교육, 사회문화적 통합교육, 인성교육을 담당할 가장 영향력있는 행위자이다.

둘째, 남한 주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접촉에 할애하는 것이 언론매체이며, 그 중 텔레비전은 ‘여가의 식민화’라고 불릴 정도로 여가시간을 지배하는 매체이라는 점이다. 추광영의 ‘국민생활시간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⁸⁸⁾ 1981년부터 1995년까지의 매체접촉의 시계열적 변화에 있어서 남한 주민들의 텔레비전 접촉량은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매일 4시간 15분 이상씩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 수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 남한 주민들의 텔레비전 접촉 시간량의 증가는 라디오, 신문에의 접촉시간 감소를 수반하지만, 텔레비전이 모든 가족이 함께 접촉할 수 있는 매체이며, 시청하는 과정 또는 이후에 가족간의 토론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교육적 효과가 크리라고 기대된다. 셋째, 남한 주민들이 북한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유일한 정보원이 언론이라는 점이다. 박성희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북한에 관한 인지도가 낮고, 북한 관련 정보를 매우 불신하고 있지만, 북한 관련 정보의 취득원으로서 언론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1995년 현재 청소년들의 언론 의존도는 1992년 조사결과 65.0%에서 9.6% 높아진 75% 정도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북한 지식을 언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의 북한 인식은 언론이라는 객체화된 제도에 의존하며, 언론의 보도와 해설에 크게 의존한다.⁸⁹⁾ 현실적으로 남한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북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는 인식-정보-태도-행동의 커뮤니케이션의 고리에서 남한 주민들의 북한 인식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

87) Wilbur Schramm, *Mass Media and National development*, 김일철, 조명한 역, 『메스미디어와 국가발전』 (서울: 을유, 1988), pp.194-195.

88) 추광영, “Social Change as Reflected in People’s Use of Time in Korea Since 1981,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33, 1996.

89) 박성희,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 조사 연구,” 『교육월보』, 1995. 6.

서 통일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통합기능은 막중하다.

그러나, 다음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한다. 남한의 방송사는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통일의 길' 프로그램을 통해, 신문사는 주간단위로 북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과 북한관련 기사는 체제우위적이고 반공주의적 보도성향, 정치관련 기사에의 치중, 정확성과 신뢰성 결여, 상업적이고 지면 매우기식의 보도리는 인상, 직접적 취재 보도가 아니라는 한계로 낮은 시청율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⁹⁰⁾ 남한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정부당국과 같이 유연성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경직적이거나 분단고착 지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오락과 충격을 제공하는 정보제공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언론의 이러한 태도는 일사적 연민과 위기감의 조장, 남북관계의 경색,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의 오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언론이 통일문화를 조성하는 올바른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른 분야처럼 현재 남북한간의 방송교류를 통한 신뢰성회복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언론을 설복과 해설의 방법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강력한 무기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교양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방송개발원의 북한 텔레비전 분석결과 평일 5시간 30분의 방송 중 저녁 6-8시, 9-10시 주요 시간대는 김정일 일가 칭송 프로그램으로 주로 채워지며, 선동적 형식의 장르가 전체 편성의 35%를 차지하며, 뉴스 오락 프로그램에도 김정일 우상화 내용이 빈번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⁹¹⁾

이러한 점에서 남한 언론만이라도 통일과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현실 생활상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가치관, 태도, 행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남한 주민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들과의 공동체 삶을 준비하는 데 기초가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과 과 기사에 대한 무관심을⁹²⁾ 해소하기 위해서는

90) 이우영,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69-73; 한중광, "통일·안보문제와 미디어의 역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보고서 「통일·안보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1997. 6, pp.37-38; 김우룡, "남북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편, 「한반도통일과 방송의 역할」, 1993, pp.128-130.

91) 조선일보, 1998, 9, 18.

사실성과 흥미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언론의 인성교육 실천지침

1. 북한에 관한 정보를 던져주는 식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 인성형성에 관련된 다양한 생활실상들을 퀴즈식으로 풀어나가는 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가치관, 태도, 행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
2. 북한주민의 인성을 잘 나타내는 북한 영화를 상업주의적이거나 흥미위주가 아니라 통일지향적인 관점에서 방영한다.

4.4 민간단체의 인성교육방안

민간단체는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대변하면서, 회원이 대다수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민간단체는 이러한 본성상 기반이 공고해서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이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운영됨으로써 관료조직의 역기능성을 극복하는 효율성을 가진다.⁹²⁾

민간단체는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를 포괄하는 데 1996년 현재 허가법인 34개, 신고단체 16개로 50개 단체가 존재한다. 통일관련 민간단체들은 연구조사활동과 출판,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한 여론형성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이념적 성향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운동에서 차이를 나타내지만,⁹⁴⁾ 실제 활동면에서는 각 단체의 이념과 전략상의 전문성을 찾기 힘들다. 그리고 대중생활의 일상생활을 파고드는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사회문화적 통합 프로그램의 실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⁹⁵⁾

민간단체는 통일과 통일 이후에 정부의 교육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와 시기에 능동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행함

92) 정희옥,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pp.43-46.

93)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시민운동단체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1993. 9, p.2.

94) 조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43-44.

95) 김현옥, "사회·문화적 통합의 측면에서 본 민간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아태평화재단 정책연구서리즈 98-3, 1998. 6, pp.11-12.

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민간단체는 특히 비정치적인 남북교류와 가치관, 태도, 행동, 규범 등을 통일지향적으로 성숙시키는 통일문화형성을 통해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 신뢰감을 조성하고 국민정체성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적 인성교육을 위해서 민간단체는 강연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을 벗어나 시민 참여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사회문화적 통합을 도모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면서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체인 민간단체의 본질적 기능이다.

학술단체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인성에 관한 자료교환과 전통적 인성교육 방안의 교환점을 중심으로 남북 학자들간의 공동학술대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남북공동의 인성교육에 관한 자료는 여타 민간단체들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어야만 다양한 방향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통일성이 주어질 것이다. 특히, 가정, 학교, 사회, 여타 민간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교수방법, 교수내용의 체계적 정립에 관한 학술토론을 더욱 활성화하고,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문화예술단체는 북한문화에 대한 적극적 대국민 홍보와 함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해주는 사회문화통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영화속에서의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이해 프로그램, 북한 문학작품 속에서의 가치관 발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있게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조직성, 사상적 통합성, 재정적 기반으로 인해 통일대비 인성교육의 적극적인 추진은 큰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갤럽이 1998년 6월 8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인구의 46.9%인 1천 4백 93만여명이며, 종교별로는 개신교 20.3%, 불교 18.3% , 천주교 7.4%순으로 나타났다.⁹⁶⁾ 종교단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종교적 가치관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 그리고 각 종교기관에서의 집회나 간증회를 통해 북한 출신 귀순자의 북한 생활전반에 대한 강연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는 국내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남한

96) 조선일보, 1998, 6, 9.

내부의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적 이질성 극복의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낯선 사람이나 집단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개발, 탈북 출신 귀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생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정,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언론, 사회단체가 연계성을 가지고 민주적 인성형성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통일한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인 정신적 기초가 형성되고, 그 결과 통일한국은 보다 관용적이고 신뢰감이 넘치고, 책임성이 확립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인성함양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역할의 회복, 한국사회에 팽배한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노력,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의식개혁과 제도적 차원의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창의력과 굳은 의지일 것이다.

정책 제언

1. 통일부 자료실에서 북한영화를 상영하는 것보다는 가칭 '북한 영화제'를 개최하여 남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킨다.
2. 예비군, 민방위교육, 재소자교육에서 연사의 강연을 통한 북한 및 통일교육 보다는 북한 출신 귀순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대학교육에서 북한 관련 강좌를 필수로 수강하게 하고, 이 강좌가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내부의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적 이질성 극복의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낯선 사람이나 집단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개발, 탈북 출신 귀순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생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정, 학교에서의 도덕교육, 언론, 사회단체가 연계성을 가지고 민주적 인성형성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통일한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회적인 정신적 기초가 형성되고, 그 결과 통일한국은 보다 관용적이고 신뢰감이 넘치고, 책임성이 확립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인성함양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역할의 회복, 한국사회에 팽배한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노력,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의식개혁과 제도적 차원의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창의력과 굳은 의지일 것이다.

정책 제언

1. 통일부 자료실에서 북한영화를 상영하는 것보다는 가칭 '북한 영화제'를 개최하여 남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킨다.
2. 예비군, 민방위교육, 재소자교육에서 연사의 강연을 통한 북한 및 통일교육 보다는 북한 출신 귀순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대학교육에서 북한 관련 강좌를 필수로 수강하게 하고, 이 강좌가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4.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들에게 보다 폭 넓게 북한 자료에 대한 연구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통일 이후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논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통일·안보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1997.
- 고영복. “북한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북한조사 연구-사회문화』. 1978.
- 김국현. “한국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36호, 1997. 6.
- _____.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37호, 1997. 12.
- _____.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교육의 영역 및 과제.”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호, 1997.
- _____. “통일을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연구』 제5호, 1998.
- _____. “한국의 위기극복과 인격교육의 방향.”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38호, 1997(근간).
- 김도태·이경화. “통일교육 개선방향: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연구』. 1997.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우사, 1990.
- 김득황. 『한국고대도덕의 연구』. 서울: 대지문화사, 1984.
- 김영국. “통일독일의 정치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6호. 1997.
- 김용환. 『관용과 열린사회』.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동경: 구월서방, 1975.
- 김정일. 『인민대중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1.
- _____.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동경:구월서방,

1991.

도홍렬.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과정 비교』.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77.

동영준. “남북한 청소년의 특성 비교.” 『교육월보』. 1995. 6.

리영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문용린. “통일교육의 방향과 주요내용.” 통일원. 『대학 통일·북한문제 학술논문집』.

1995.

_____. “부모를 위한 가정에서의 도덕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제 50집. 1995.

박성희. “청소년의 통일 의식 조사 연구.” 『교육월보』. 1995. 6.

박영선. “인격의 구조와 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아름다운 세상, 1998.

박영호.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적 갈등양태와 해소방안.” 제4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4.

_____. 『統一 以後 國民統合方案 研究』. 민족통일연구원, 1994.

박용현. “북한의 정치교화정책과 청소년의 가치관.” 『북한학보』 제4집, 1980.

_____. “통일에 대비한 인성교육.” 고려대학교 바른교육·큰사람만들기 제4회 포럼 발표 논문. 1996, 10.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시민운동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1993.

_____. 『한국사회: 오늘과 내일-21세기의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연구』. 1993.

서제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_____. 외.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민족통일연구원. 1993

_____. 『또 하나의 북한 사회-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_____. “북한 학생의 가치관 변화와 교육적 시사.” 한국교육개발원 제2회 통일대비 교육 포럼. 1996.

_____. “통일한국의 사회문제 및 사회갈등.” 김수곤 외. 『통일 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 손봉호. “인성교육 : 필요, 성격, 방법.” 『철학과 현실』. 1995, 겨울
- _____. “한국사회의 가치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가치관의 변동과 도덕성 회복』. 1996.
- 송명자. “정직성의 본질과 정직성 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1호, 1995 여름.
- 유관상.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유종해. “남북한 청소년·학생의 가치관형성 - 교육제도를 통해 본 관찰.” 『북한』, 1975, 11.
-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 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上)』. 1994.
- 이계학. 『人格教育論』. 서울: 성원사, 1991.
- _____. 『새 시대의 가정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이우영.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장호. “남북한 주민의 의식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제3회 통일대비 교육 포럼 발표 논문. 1997.
- 전경옥. “통일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민족통일연구원. 『바람직한 통일문화』. 1997.
- 전성우.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사회통합-비교사회론적 접근』. 1997.
- 정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2집. 1998.
- 정세구 외 역. 『인격교육과 덕교육』. 서울: 배영사, 1995.
- 정희옥.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조난심. “인성교육과 도덕교과서.” 『철학과 현실』. 1995, 겨울.
- 조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조한경 역. 『미덕에 관한 철학적 에세이』. 서울: 까치, 1997.
-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 최병태. 『덕과 규범』. 서울: 교육과학사, 1996.
- 최현섭. “민족의 사회문화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시민교육.” 한국사회과학회. 『사회와 교육』 제14집, 1990.
- 추광영. “Social Change as Reflected in People’s Use of Time in Korea Since 1981.”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33. 1996.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7. 12.
- 한국교육개발원. 『내가 받은 북한 교육』. 199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1995.
-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1994.
- 한국심리학회.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논문집.
- 한국언론학회. 『한반도 통일과 방송의 역할』.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1991.
- 한국청소년개발원. 『독일통일과 청소년』. 1994.
- 한국청소년개발원.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1997.
- 한만길. “북한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내용의 체계화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제연구』. 1997.
- _____. “북한 김정일의 교육 정책과 현실, 그리고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제4회 통일교육 포럼. 1997.
- _____.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1997.
- 한배호·어수영. “한국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 1996.
- 한승조 외. 『남북한의 인성·사상교육』. 서울: 집문당, 1998.
- 한용원. 『북한학』. 서울: 오름, 1998.
- 황병덕. “독일의 정치교육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외.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북한연구』. 1994. 가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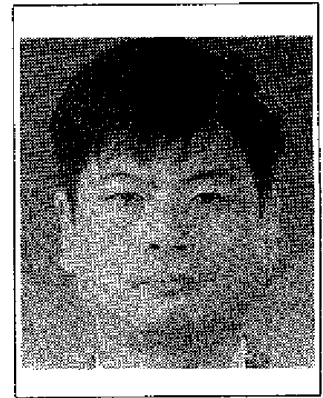
- 황성모.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북한청소년의 의식구조." 『북한학보』 제4집, 1980.
- Almond, Gabriel A. & G. Bingham Powell.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78.
- Banks, James A.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1997.
- Brave, Mary & Dieter Misgeld. "Human Rights Education: an issue for Moral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23, No. 3, 1994.
- Brooks, B. David & Mark E. Kann. "What Makes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Work?." *Educational Leadership*. November 1993.
- Burt, Shelly. "The Politics of Virtue Today: A Critique and Proposa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7, No.2, June 1993.
- Campbell, Elizabeth. "Connecting the Ethics of Teaching and Moral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48, No.4, Sep.-Oct. 1997.
- Carr, David. *Educating Virtues-An essay on the philosophical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and educ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5.
- Heslip, Robert D. *Moral Education for Americans*. Wersport: Praeger Publisher, 1995.
- Kirschenbaum, Howard. *100 Ways to Enhance Values and Moralit in Schools and Youth Settings*.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1995.
- Lickona, Thomas "The Return of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al Leadership*. Vol.51, No.3, November 1993.
- _____. "Eleven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25, No.1, 1996.
- _____. *Educating for Character :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Books, 1991.
- Luckowski, Jean A. "A Virtue-Centered Approach to Ethics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48, No.4, Sep.-Oct. 1997.
- Martin, Mike W. *Everyday Morality-An Introduction to Applied Ethics*. Belmont: California: Wadworth Publishing Company, 1995.
- Nie, Norman H. et al..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 of Chicago Press, 1996.
- Popov, Linda Kavelin. *The family virtues guide : simple ways to bring out the best in our*

- children and ourselves*. New York: Penguin books, 1997.
- Ryan, Kelvin. "Mining the Values in the Curriculum." *Educational Leadership*. November 1993.
- _____ and Thomas Lickona ed. *Character development in schools and beyond*. Washington, D.C.: The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1992.
- Sandin, Robert D. *The Rehabilitation of Virtue: Foundations of Moral Education*. New York: Praeger, 1992.
- Selznick, Philip. "Thinking about Community: Ten Thesis." *Society*. Vol.32, No.5, July/Aug 1995.
- Sichel, Betty A. *Moral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Community, and Ideal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8.
- Sichel, Betty A. *Value Education for An Age of Crisis*.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 Thomas, Laurence. *Living Morally: A Psychology of Moral Characte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9.
- White, Patricia. *Civic Virtues and Public Schooling: Educating Citizens for a Democratic Socie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6.
- Williams, Mary M.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What Student Think." *Educational Leadership*. November 1993.

2 기타간행물

- 조선일보. 1998. 6, 9, 9, 18.
- 중앙일보. 1998, 8, 25

統一 以後 社會科 教育目標로서의 市民性 概念의 再定立 및 具體化 方案



金 景 模(경상대)

목 차

<요약문>	133
1. 서론	135
2.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개념	137
3.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탐색	149
4. 사례분석과 구체화 방안의 시론적 제시	156
5. 요약 및 결론	171
※참고문헌	173

【요약문】

통일은 더 이상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목적에 닥친 구체적인 현실이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비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일 대비 논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남북한의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을 대비한 기초적인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사회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에 앞서 개념화되어야 할 시민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새로운 시민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내재적인 목표영역인 지식, 기능 및 가치태도의 세 가지 영역을 기본골격으로 통일이후의 적용시기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각 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요소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시민성의 강조점으로서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민의 양성에 두었으며 장기로 갈수록 사회과의 세 가지 기능 중 사회과학교육 및 반성적, 탐구적 성격을 한민족공동체와 지구촌적 맥락에서 강조하였다.

두 번째의 연구문제인 구체화 방안(사회과의 운용방안)의 도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과 형성기의 미국의 1916년 모형과 우리나라의 교수요목기 그리고 구동독 및 통일독일의 공민과 및 사회과 그리고 정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관하였다. 그 결과 가능하면 체제 통일의 초기에는 정체감의 형성을 위해 심리적 저항감이 없는 지리, 역사 중심의 내용을 근간으로 실생활 중심의, 이해보다는 적용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이 시기의 사회과의 교과적 역할을 감안, 중핵교과 운영방식과 통합사회과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상의 새로운 시민성의 재정립과 사례분석에 의한 새로운 사회과의 구체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교육과정 측면과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특히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의의의 내재화 및 개인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 해결방법 그리고 가치교육에 대한 재검토와 구체화 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수업모형의 모색과 관련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관용교육모형'을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측면으로 나누어 개관하

었다.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방법으로서 남북한의 이질적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제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체제의 통합에서부터 현대사회의 다원화라는 본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 했을 때 다문화교육의 일반론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사회에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목전으로 다가온 구체적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도 목적 그 자체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통일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성찰의 결과가 통일을 대비한 여러 영역의 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는 정치경제 중심의 영역 편중적인 성격을 띄었고 사회문화 및 교육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일이나 이 또한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통일대비 논의는 보다 궁극적인 통일의 목적에 대한 성찰 아래 통일 이후 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심리적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지속적이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통일 이후의 문제점 중 통일비용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바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남북한 주민간의 의식적 측면에서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정치경제체제의 단일화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수단으로, 우리 민족 전체에게 개개인의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진정한 '통합감'(sense of integrity)의 형성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통일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의식을 남북한 주민 모두가 실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편,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태도를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과정(counter-socialization: 批判的 社會化)에서 일정수준의 통합감을 공유하는 것을 社會化 過程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적 측면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기제(social mechanism)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학교교육이며 특히 社會科는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의 함양이라는 교과목적에 비추어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통일 이후 남북간 주민간의 이질감 극복을 통한 통합의식의 제고를 위한 방안은 학교 사회과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민성(citizenship)이라는 사회과 교육목표의 새로운 개념 정립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남북간 주민간의 民族 同質感의 회복은 통일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통일 이후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남북간 청소년간의 이질성 극복과 統一 韓國人의 形成이라는 문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회과는 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정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는 사회과의 내재적인 특성상 다른 어떤 교과에 비하여 이 같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이 바른 방향과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과 교육의 보편적인 목표 요소인 '市民性' 개념의 의미와 내용이 통일한국이라는 변화된 환경과,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실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해결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市民性 概念에 대한 批判的 考察과 이를 근거로 한 市民性 概念의 再定立과 그것에 기초한 구체화 방안, 즉 사회과의 운용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1.2 연구문제와 구조

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우리사회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에 대처하고 특히 남북한 주민간의 통합감 제고를 위한 방안을 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과의 일반적 목표로 제시되는 시민성 혹은 시민의 자질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요소와 그 구체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도출을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사회과 교육의 일반적 목표인 시민성 혹은 시민의 자질 개념에 대한 현상적인 논의를 기존의 우리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사회과의 이론적 교육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통일한국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교육적 인간상 혹은 시민의 자질

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민성 혹은 시민의 자질의 새로운 목표요소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試論的인 形態의 具體化 方案을 導出하기 위해 사례연구의 일환으로서 소위 새로운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이 필요했던 과도기적 상황의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등의 사회과 교육의 형성과정 및 운용방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과라는 교과가 없는 점(구 동독 지역에서의 과도기적 운영을 제외한다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社會科적 성격에 실제적으로 부합되는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

市民性, 市民의 資質 혹은 公民의 資質은 사회과 교육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교육목표이자 가장 일반적인 교육목표이며, 또한 사회과 교육을 통해 양성하려는 教育的 人間像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성 개념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多意的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사회적 요구라는 미명 아래 특정 정치집단이나 계층에 의해 왜곡되어져 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사회과 교육을 통해 제시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시민성 개념을 이제까지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이론적 모형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일 한국인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내용요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1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성 개념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도입된 새로운 교과목으로서의 사회과는 이제까지 모두 6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각급 학교에 적용중인 것은 제 6차 교육과정이며 조만간에 200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제 7차 교육과정은 시안의 확정에서 교과서의 집필작업이 진행중이다. 이하에서는 교수요목시기부터 제 6차 교육과정기에 걸친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그리

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민성 혹은 시민의 자질의 새로운 목표요소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試論的인 形態의 具體化 方案을 導出하기 위해 사례연구의 일환으로서 소위 새로운 국민형성(nation building)이 필요했던 과도기적 상황의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등의 사회과 교육의 형성과정 및 운용방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과라는 교과가 없는 점(구 동독 지역에서의 과도기적 운영을 제외한다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社會科적 성격에 실제적으로 부합되는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

市民性, 市民의 資質 혹은 公民의 資質은 사회과 교육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교육목표이자 가장 일반적인 교육목표이며, 또한 사회과 교육을 통해 양성하려는 教育的 人間像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성 개념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多意的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사회적 요구라는 미명 아래 특정 정치집단이나 계층에 의해 왜곡되어져 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사회과 교육을 통해 제시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시민성 개념을 이제까지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이론적 모형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일 한국인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내용요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1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시민성 개념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도입된 새로운 교과목으로서의 사회과는 이제까지 모두 6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각급 학교에 적용중인 것은 제 6차 교육과정이며 조만간에 200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제 7차 교육과정은 시안의 확정에서 교과서의 집필작업이 진행중이다. 이하에서는 교수요목시기부터 제 6차 교육과정기에 걸친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그리

고 운영상의 강조점을 간단히 요약하는 가운데 각 시기에 강조된 시민의 자질이 무엇이었는지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단 교수요목시기에 관한 부분은 사회과의 통합이란 주제와 함께 제 4장의 사례분석에서 더욱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어서 내용적으로 다소 중복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2.1.1 사회과의 성립과 교수요목기

1945년 광복후 미군정청은 한국교육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9월 17일 ‘일반명령 제4호’에 의해 중고등학교에서 공민, 역사, 지리 등의 사회과 관련 교과편제를 마련하였다. 이때, 공민은 일제시대의 수신과와 공민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러한 교과편제를 바탕으로 군정청 편수실의 편수사들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의 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1946년 9월 1일 미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조직된 교육심의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운 민주적 교과목 편제가 마련되었으며, 이때 기존의 공민, 지리, 역사, 직업을 총괄하여 편제한 ‘사회생활과’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편제과정에서는 각 영역의 분리 의견도 있었으나 미국의 덴버(Denver)시의 것을 참고로 교육과정의 유형상 종합형을 택하였다. 그 후 1947년 말에 사회생활과의 교수요목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특히 공민영역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신생국민으로서 또는 제생국민으로서 새로운 민족문화 건설을 앞두고 공민으로서 정당한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여, 향토개발의 의무와 자치정신을 배양키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반 공민생활의 기초를 습득케 한다.”

교육과정의 요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가정, 지방, 국가에서의 공동생활과 책임(1학년), 민주정치와 의무(2학년), 직업과 경제 및 생활 개선(3학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가 사회의 기반과 사상(1학년), 자유경제와 사회개선(2학년), 도덕과 사회(3학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내용 구성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신생한국의 건설과 공동체적 시민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었다.

2.1.2 제 1차 개정기(1955-)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에 의해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교수요목 제정 심의

회 규정을 제정하고 1955년 8월 1일에 각급 학교 ‘교과과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사회과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었다.

우선 중학교의 경우에는 민주국가사회의 공민으로서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기능, 태도를 개발함에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의 교수학습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으며, 이것이 유능하고 충성된 대한민국 국민의 양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교육의 목표를 이해, 기능, 태도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진술하고, 민주국가에 대한 기본지식과 집단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이란 측면의 기능과 태도가 크게 강조되었다. 이는 진술된 23개의 목표 가운데서 13개가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에 관련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육의 내용은 1학년의 공동생활 부분은 교수요목기의 내용과 비슷하나 2학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생활을, 3학년에서는 민주주의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립된 세계’란 장을 두고 있어서 6.25 이후의 냉전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의 공민을 이어받아 기능과 생활에서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념의 이해와 원리에 좀더 치중하고 있다. 민주주의 생활원리와 도의교육의 강조는 목표와 내용구성의 양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단원마다 설문식 단원명을 구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활동에서는 교사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각 학년별로는 1학년은 정치와 사회부분을, 2학년은 경제와 사회부분을 3학년은 문화와 도덕 및 사상 부분을 다루고 있다.

2.1.3 제 2차 개정기

1963년 문교부는 1955년 교과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교육과정령’을 제정, 공포한다. 이 당시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계열과 범위(scope and sequence)의 개념을 교육과정 구성에 도입하였다는 점, 생활경험을 중시하였다는 점, 교과별 및 학년 목표를 제시하고 지도상의 유의점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교육의 핵심인 사회과의 교육과정도 변화하게 되었는데 중

학교의 경우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배격과 민주주의 원칙 및 기능의 강조, 국제친선과 평화 등이 목표로서 강조되고 3학년에서 인간과 사회생활, 민주정치, 경제생활, 문화와 사회문제, 국제관계 등의 단원을 두어 시민교육을 하게 하였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는 지식체계보다는 기능과 태도를 강조한 것과 다양한 학습방법의 사용과 생활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통필수인 '일반사회'와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원리, 국민생활의 향상, 조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등이 목표에서 강조되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비판, 개인과 국가, 국민 경제생활, 국토건설, 사회문제, 민족문화의 향상 등이 단원으로 자리잡았다.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경험을 중시하고 특히 학습의 국가 사회적 기여를 크게 강조하였다.

이 시기 교육과정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선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토의 건설을 강조하고 학습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산업화와 경제건설이라는 국가적 요청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과 교육을 보는 이론적 시각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경험과 생활을 강조한 것은 교육학자인 존 듀이(Dewey)의 실용주의적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이 구성에서 기본개념의 수가 중·고등학교 공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교육사조가 실제의 교육내용 구성에서 반영되었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2.1.4 제 3차 개정기(1973-)

1973년과 1974년에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별로 개정된 사회과의 교육과정은 196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시기는 10월 유신의 시기와 겹치게 되며, 정부의 요청과 의도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교육과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교육과정 상의 목표와 내용 및 지도상의 유의점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영역의 원리적 이해가 강조되고 국가의 자주독립과 사회발전에의 기여가 강조되었다. 내용은 민주주의와 정치, 국민생활과 법, 경제생활, 경제개발, 현대사회와 우리의 생활, 인류사회의 여러문제, 우리의 사명 등으로

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나뉘어져, 민주주의의 토착화, 법질서의 존중, 경제의 이해와 경제발전의 이바지[정치경제], 민족문화의 창달, 근대화와 사회문제의 이해(사회문화) 등이 목표로서 강조되었다. 이를 구체화한 교육과정 요소는, [정치경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우리나라 민주정치, 우리나라 헌법, 국민과 법률생활, 국민경제의 성장과 순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문화]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의 진로, 우리의 사회와 문화, 개인과 경제생활, 사회변동과 근대화, 국가의 발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서는 다양한 학습방법과 생활의 연계는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학생 스스로의 문제발견과 처리라는 점의 강조는 이 시기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성이다. 이는 탐구중심,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국적있는 교육이 강조되고 ‘우리의 사명’,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중흥’,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의 진로’ 등이 강조되었음은 당시 교육과정에 국가 혹은 특정 정치집단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시기 교육과정의 또다른 특징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개발 시대의 사회상의 반영이자 사회적 요청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1.5 제 4차 개정기(1981 -)

제 5공화국 초기의 교육개혁과 인간중심 교육과정 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기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문적 성장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성장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기에 국민정신교육이 강조된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의 제 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탐구를 강조하고 자신과 국가에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을 진술하고 있는 것은 제 3차 개정시의 특징과 비슷하다. 내용의 구성 역시 3차 개정기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공민의 영역이 1학년과 3학년에 흩어져 다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종합화와 통합의 강조가 제시되었음에도 이외의 의미있는 근거를 찾아 보기 힘들다. 그

려나 교육목표 진술과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이란 항목에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서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중학교와 비슷한 목표를 지니면서 사회 I, II로 나누어져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 I은 공통필수 과목으로서 여기에는 올바른 사회생활, 개인과 사회생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국민생활과 법, 경제생활, 현대사회와 국민복지 등의 6개 단원으로 구성되었고, 사회II는 사회현상의 과학적 인식, 인간과 문화, 국가와 정치, 우리나라의 헌법, 국민경제의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1.6 제 5차 개정기(1987-)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사회과는 기본성격이나 내용구성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자료수집 및 문제해결의 강조,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및 민주사회의 시민적 태도 등을 강조한 것 등도 4차 개정기의 목표와 거의 비슷하다.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도 중학교는 인간생활과 사회현상(1학년), 국민생활과 정치, 국민생활과 법, 인간과 경제생활, 인간과 사회문화생활(2학년),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국민경제와 국민생활, 우리나라의 경제, 현대사회의 성격과 우리사회의 문화, 발전하는 우리나라와 미래사회(3학년) 등으로 구성되어 4차와 대동소이하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나뉘어져 [정치경제]는 필수공통으로, [사회문화]는 인문계에서 이수되었다. [정치경제]는 정치현상의 인식, 민주주의와 정치, 국가와 정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가계,기업 및 시장, 국민경제의 구조와 순환, 국제경제와 경제발전, 우리나라의 경제 등으로 구성되었고, [사회문화]는 사회현상과 사회과학, 개인과 사회생활, 문화의 특성과 변동, 사회와 법규범, 현대사회와 복지생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목표진술과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의사결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점이며 이는 사회탐구를 강조하는 사회과의 이론적인 흐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고등학교[정치경제]의 목표에서 합리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고 평

가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진술하고 있는 것이나, 중학교에서 문제의 파악과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강조한 것 등은 이를 잘 드러내 주는 사항들이다.

2.1.7 제 6차 개정기(1992-)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순서로 1992년 6월, 9월, 10월에 각각 확정 고시되어 현재 적용중인 제 6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로 사회과의 목표인 시민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과정 1』, 1992) 즉, 초등학교의 경우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우리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길러, 개인과 사회, 국가 및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회의 여러 현상을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 개인과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의 여러 분야의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익혀,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며 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시민성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내용의 구성에서도 중·고등학교 공히 단순한 지식 나열적 교과서에서 벗어나려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크게 노력한 점이 보인다. 실제, 1995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사회 1이나 현재 개발중인 공통사회의 교과서에서는 탐구의 절차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예로 중학교 사회의 경우 탐구활동 사례가 교과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과거에 비해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가치태도의 측면이 교과내용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 역시 그 이전의 교육과정 내용과는 다른 점이다. 예컨대 [공통사회]에서 경제의 윤리와 정의의 문제를 내용으로 취급하고 [경제]에서 각 경제주체의 시민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영달, 1995, 교육과정, 1986)

6차 개정기에 이르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서 시기별로 강조되었던 시민성

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다시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신생국민으로서 또는 재생국민으로서 새로운 민족문화 건설을 앞두고 공민으로서 정당한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여, 향토개발의 의무와 자치정신을 배양키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반 공민생활의 기초를 습득케 한다.
- * 민주국가사회의 공민으로서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기능, 태도를 개발함에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의 교수학습
- * 민주국가에 대한 기본지식과 집단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이란 측면의 기능과 태도,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자질
- * 공산주의에 대한 배격과 민주주의 원칙 및 기능의 강조, 국제친선과 평화 등이 목표로서 강조
- * 국토의 건설과 학습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
-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영역의 원리적 이해, 국가의 자주독립과 사회발전에의 기여
- * 민주주의의 토착화, 법질서의 존중, 경제의 이해와 경제발전의 이바지, 민족문화의 창달, 근대화와 사회문제의 이해
- * 학문의 성장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성장도 강조
- *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자료수집 및 문제해결의 강조,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및 민주사회의 시민적 태도
- * 합리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을 강조

이 같이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과에서 강조된 시민성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생국가의 건설과 경제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생활경험과 실제적 지식, 친사회적인 가치태도 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최근에 들어올수록 특정 집단이나 정부의 중점 시책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요구가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이 되기 보다는 보다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춘 구성요소들이 지식, 기능 및 가치태도 영역으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으며 합리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강조는 시민성의 개념 중 시민 개인적 측면의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을 구조화하여 보면 시민성 개념은 수단과 목표로 나누

어저 시민의 자질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社會科學的 知識의 體系的 理解와 그것에 기초한 우리 社會 問題의 理解 및 問題解決能力을 적시하면서 그 도달점으로서의 민주시민을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로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6차 개정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때로는 적절한 수단의 제시없이 당위적인 수준에서 시민성의 구체적인 상을 미리 설정하고 이의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가치태도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의사결정력의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전단계로서 사회과학적 지식과 이론의 체계적인 학습을 너무 강조한 까닭에 현장에의 적용과정에서 실제로 목표진술에서 요구한 우리문제의 이해와 해결과정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입시위주 교육을 위시해서 교사의 자질, 그리고 '문제'를 교육 내용화하는데 대한 현장과 학부모의 부정적 시각 등이 더욱 더 큰 영향 요인임도 무시할 수 없다.

요컨대 사회과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시민성의 내용이 담긴 사회과 교육목표 혹은 강조점들은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가 컸고, 당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요구와 시민개인의 성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시기별 정치권력 담당자들의 자의적 의도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그러한 면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역설로 최근의 사회과 교육목표에서는 우리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적인 전망이 오히려 사상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누구나 당연시하는 통일이후 사회에 대비한 시민의 자질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우리의 사회과는 단지 '많이 다르고, 따라서 우리 보다 못해 보이는 북한사회를 확인하고' 그러나 적극적인 통일에의 고려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자멸에 따른 자연스런 통일에의 기대'를 심어 주는데 기여했을 지 모르지만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적극적으로 갖추하고자 했던 점은 찾아 보기 힘들다. 물론 남한사회라는 제한된 상황에서의 문제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날 수 없는 여건에서 '당장의 문제'가 아닌 통일을 대비한 시민의 자질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교육의 중핵교과로서의 사회과의 위치와 성격을 다시 한 번 고려한다면 통일문제에 대한 보다 점진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가 앞으로의 사회과 교육목표의 설정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당분간

유보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2000년부터 적용될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에서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학교급별 사회과 교육목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자세', 중학교에서의 '공동생활에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사회공동문제 해결에의 참여'와 같이 참여 혹은 사회적 행동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을 뿐 이 같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통일한국에서의 시민적 자질에 대한 고려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병모, 1998, p.11)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구체화하려 시도하는 통일이후 시민성 개념의 제정립이라는 연구주제는 명실 공히 우리 사회과의 목표 속에 통일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특히 최근들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표준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하여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사회과 교육모형에서의 시민성 개념

사회과 교육모형은 사회과의 목표와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상의 특징에 따라 대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바 市民性 傳達模型, 社會科學 模型, 反省的 探究 模型, 個人發達 模型 및 社會批判 模型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모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앞서의 세 가지 모형에서 전제된 시민성 혹은 시민의 자질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인 바 이는 이들 세 모형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과 교육현상을 가장 잘 개념화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Barr, Barth and Shermis, 1978) 이들 모형들은 그 전제와 문제의식이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사회과 교육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이상적인 시민상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사회교육적 처방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2.2.1 시민성 전달모형(Citizenship Transmission Model)과 시민성

시민성 전달모형은 사회과 교육의 내용적 목표로서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내재화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는 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기본적 불변 가치가 잘 전달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할 가치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평등, 동정(compassion)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추상적 가치의 전달은 물론 특정 사회가 가진 특수한 가치, 예컨대 유교적 가치, 프로테스탄트의 가치 등도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의 전달을 위해 다소의 사실 왜곡을 용인하는 측면도 있으며, 방법상의 측면에서 학생 중심의 가치탐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가치는 일정정도 불변하며 이 가치 자체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시민성 전달모형의 문제의식과 주장에 따르면 시민은 특정사회가 받아들이는 가치 혹은 영속적인 가치를 생활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시민 스스로가 그러한 가치를 설정하거나 심지어는 거부할 자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있다. 요컨대 시민성 전달모형에서 상정한 시민의 자질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내재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가치는 사회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음을 전제한다.

2.2.2. 사회과학모형(Social Science Model)과 시민성

사회과학모형은 시민의 자질로서 사회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이들은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지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진다고 전제한다. 그리하여 사회과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어야 하며 이 같은 과학적 사고는 일상적인 사고 예컨대, 직감이나 경험 혹은 부분적인 사전의식에 의존한 사고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컨대 사회과학 모형에서 이상적으로 파악한 시민상이란 주위의 여러 사회현상을 사회과학자들의 탐구방식에 따라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육과정은 개별 사회과학의 구조 즉 개별 사회과학의 기본개념과 그 개념이 적용된 바의 탐구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제시되고 적용된 사회과학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단으로 지향하려는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목표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적합성을 보여주기가 매우 곤혹스런 모형이기도 하다.

2.2.3 반성적 탐구모형(Reflective Thinking or Inquiry Model)과 시민성

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는 반성적 탐구모형의 전형은 듀이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듀이는 문제해결은 상황의존적이라는 점과 사람들은 각각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해결의 과정에 속해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시행착오적 방법과 반성적 혹은 과학적 방법이 있는데 일반인은 대부분의 문제해결 상황에서 전자의 방식에 의존하는 반면, 후자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특정한 결과와 결과를 일으키는 요인사이의 관계를 실험적 방식에 의해 밝혀 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자들의 반성적 문제해결과정은 문제의 인식, 잠정적 가설의 형성, 현 사태의 조사, 가설의 정련, 가설 검증의 다섯 단계로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듀이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의 핵심은 문제해결과정에 과학적 절차를 적용해 봄을 의미하고 이와 함께 문제해결과정에는 필히 가치평가가 개입되게 됨으로써 기존의 가치에 대한 해석과 변화의 과정이 개입됨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듀이의 반성적 탐구모형은 시민의 자질로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문제의 해결과정은 과학적 탐구의 적용에 의한 관련 지식의 이해와 가치의 해석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이론적 모형은 그 자체로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용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의 사회과적 활동은 이들 세 가지 모형이 혼합된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비교적 이념화된 세 가지의 사회과 교육모형의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의 시민성 혹은 시민의 자질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의 내재화와 생활에서의 실천, 사회문제 혹은 사회현상의 이해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한 사회과학적 지식의 구조적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사례에서의 문제해결 혹은 의사결정력 등이다. 따라서 사회과적 목표의 내용요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 같은 일반적 요소가 주요한 분류영역적 의의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한 시민적 자질의 내용들은 사회과의 내재적인 특징으로서 사회과의 존재의의를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탐색

앞에서 구체적인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 분석과 사회과 교육모형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사회과 교육을 통한 시민의 자질이 크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의 내재화와 생활에서의 실천, 사회문제 혹은 사회현상의 이해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한 사회과학적 지식의 구조적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사례에서의 문제해결 혹은 의사결정력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민성 자질과 관련한 이 같은 일반적 목표영역은 사회과란 교과가 성립되어 현장에 적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기능적 특성을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일 이후의 시민성 개념의 설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도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는 준거로서 뿐만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종합화한 결과를 제시하는 체계화의 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1절에서 통일 이후 기대되는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혹은 시민성의 내용요소와 관련한 기본적 논의를 분석하고 2절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기존의 사회과적 목표영역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민성의 내용요소를 체계화 할 것이다.

3.1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내용요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

통일 이후 요구되는 새로운 시민의 자질에 대해 단편적으로 논의된 것은 많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 혹은 시민교육의 범주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논의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하에서는 이 중 세 사람의 대표적인 논의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시대의 새로운 사회과 교육의 정립이라는 주제하에서 손봉호 교수는 시민성 개념의 본질을 민주시민적 자질로 파악하고 이제까지의 분단된 현실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적 자질의 형성을 위한 교육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인간의 자유, 평등, 존엄성에 대한 존중 등의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대한 확신, 민주주의적 기본가치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혹은 통합적 인격(다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용성),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의 형성,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는 태도의 형성, 공정하게 제정된 법이나 규칙을 지키려는 태도의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성 개념의 일반적 내용요소를 민주시민의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손봉호, 1990)

통일 이후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제시를 위해 가장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박용현 교수는 1994년의 기초연구에 이어 1997년의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모색에서는 통일이후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통일대비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 교육목표와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내용에서 통일한국에서의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앞서의 조영달 교수의 견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표준교육과정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공동체적 시민성의 함양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시민성의 구성요소로서는 공동체적 정체성, 합리적 의사소통, 자기결정적 이익추구 등을 들고 있다. (박용현 외, 1994, p.190)

또한 박용현 교수 1997년의 글에서 민족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민족의 통합과 번영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상위목표로서 正體性的의 確立, 人間의 尊嚴性과 自我實現의 價値 具現, 多元性的의 尊重, 共同善과 正義實現 그리고 人類愛와 世界平和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정체성의 확립은 민족주의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의 공통적인 일차적 목표이자 우리의 경우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정체성의 확립은 동질성 확립이라는 의미로서 통일전후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자주성과 주체성을 형성하는 바탕이 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개방화, 정보화, 세계화의 조류에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표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통일을 대비한 민주시민 교육의 과제를 통일촉진 교육의 과제와 통합교육의 과제로 나누고 통일촉진 교육의 과제에서는 새로운 시민성의 요소와 관련하여 통일에의 현실적, 합리적 접근방식에 의해, 겸손, 존중, 정직, 예절, 신의, 사려 등의 기본 도덕성, 자율성, 관용성, 융통성, 개방성, 합리성의 존중, 근면, 성실, 진취, 탐구, 창의 등의 실용성 그리고 북한 주민의 가치의식 성향의 이해 등을 언급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과제부분에서는 개인적 가치와와 사회적 가치간의 조화, 갈등과 문제의 민주적 해결능력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통일 직후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할 목표로서 공동체적 정체성과 민

주적 의사결정력을 들고 있는 조영달 교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기본지식, 지적 기능, 민주적 가치습득과 태도형성, 민주사회에의 참여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기본지식의 영역에서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지역과 국가 및 세계의 물질적 및 사회적 제 관계에 대한 지식과, 정치경제적인 지식,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지녀야 한다.

둘 째, 지적 기능 영역에서는 현명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회적 탐구 기능과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행동기능을 익혀야 한다. 이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 종합하며 바람직한 대안을 탐색하는 지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집단구성원으로서 집단에 협력하는 기능 등이 포함된다.

세 째, 민주적 가치습득과 태도 영역에서는 인간의 존엄, 책임을 전제한 자유,正義,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합리적 이익추구의 자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반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 가치탐구의 태도 역시 강조되어야 할 정의적 영역의 내용요소이다.

네 째, 민주사회에의 참여 영역에서는 시민적 참여기회의 확대와 이를 통한 시민성의 훈련-학습 등이 제시되고 있다.(조영달, 1995, pp.29-30)

이와 함께 그는 통일 직후 민주시민교육(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차원을 포괄하는)의 목표를 공동체적 시민성의 함양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립과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의 배양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영달 교수의 통일교육모형은 통일직후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사회과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사결정 모형을 새로운 통일시민교육모형의 내용구성과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에 적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이를 간단히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모형의 의의와 관련하여 우선 통일 직후 민주시민교육 모형으로서 제시된 민족공동체 시민적 의사결정 모형은 민족공동체적 정체성과 합리적 이익추구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모형으로서 이는 통일 직후 한국사회의 최대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는 남북한 주민과 사회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학제와 사회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집단적 동일시에 능하며, 자기중심적 의사결정에 취약한 반면, 한국민의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 판단능력과 개인적 이익추구에 능하다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우 좁은 선택의 폭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보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 온 반면, 한국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자기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민의 경우에는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의 요구를 공동체시민적 의사결정 모형이 적절히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교육모형의 구체적인 교육목표로서는 민주시민적 의사결정력의 함양과 공동체적 정체성의 함양 그리고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의 제고를 들고 있는바 이 같은 목표들은 관련된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온 것들이다. 이 중 민주적 의사결정력이란 자신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있고 현명한 지적 판단에 이르는 능력의 배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가치판단과정과 이를 전제한 의사결정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치판단과정은 선호하는 가치를 선택해 보고 이를 다른 여타의 사태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명료화하고 공언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의사결정과정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다양한 대안의 탐색단계 그리고 행동선택과 실천의 단계로 진행된다. 한편 공동체적 정체성의 함양이란 목표는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직접적인 목표로서 남북한 합의의 헌법이나 한민족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준거로, 민족화와 민주화를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 목표인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은 기본적으로 사회전체의 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각 집단의 이해를 고려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추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의사소통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앞서의 두 목표에 대한 기본요건을 형성하고 있기도 한다.

이어 그는 이러한 공동체시민적 의사결정 모형의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와 교수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교육과정 요소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지식과 지적 기능

및 민주적 가치습득과 태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의 방법에서는 최근에 사회과 교육에서 논의된 바의 의사결정 모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절차 혹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요소에서는 사회과 하위영역 별로 매우 구체적인 내용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표1>로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1 공동체시민적 의사결정모형의 교육과정 요소 >

기본 지식	자격 기능	민주적 가치습득과 태도	민주적 참여
(경제) 기회비용과 선택, 시장과 가격, 비교우위, 국제관계, 조세와 정부	(사회적 탐구기능) 사실과 가치의 구분, 주장의 논리적 오류의 발견, 현상이나 주장 속에 숨어 있는 전제나 가정의 발견,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연역 및 귀납적 사고	인간의 존엄 책임을 전제한 자유, 정의(justice) 노동과 생산수 단의 전적인 사유의식에서의 탈피, 민족공동체의식, 상호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이익추구	풍부한 참여기 회와 훈련기회 의 제공, (가상극이나 시뮬레이션의 활용)
(정치) 정치제도와 투표, 여론, 권력 분립	(문제해결기능) 문제해결 목표의 명확화 행동대안의 고안 대안의 평가기준 선정 결과 예측		
(사회) 사회제도, 갈등과 경쟁, 협력	(집단기능) 지도자 역할 익히기 의견의 차이점과 공통점 발견하기 결정된 집단의 방향은 도와주기 집단에서 올바르게 영향력을 행사 하기		
(법) 법과 질서			

3.2 비판적 종합

이제 통일 이후 요구되는 시민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가안적인 형태이나마 이를 제시할 단계이다.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에 앞서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그것을 담은 그릇의 모양을 일정정도 잡아 놓은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의 논의가 사회과 교육을 통한 통일한국의 시민성 함양을 염두에 둔 것이

므로 새로운 시민성의 요소는 사회과 교육의 전통적인 북표영역인 지식, 기능 및 가치 태도 영역 구분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통일이후의 시대가 21세기와 맞물려 있는 점과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민성의 요소는 통일직후의 단기적 상황에서의 이질감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점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틀에서 보면 앞서의 절에서 분석한 새로운 시민성의 내용제시와 관련하여 손봉호 교수는 가치태도적인 측면과 통일직후의 단기적 측면보다는 통일된 우리사회의 지향점을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사회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새로운 시민성 요소의 제시라기 보다는 우리가 맞이할 통일한국이 이제까지 당위적으로 제시되고 적용된 바 있는 민주시민사회를 실제적으로 가능케 하는 환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민주시민사회가 본래적으로 의도한 기본가치를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열린 마음 혹은 통합적 인격의 형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현대사회의 가치 상대화에 따른 다원성을 고려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한사회에의 직접적인 적용을 넘어 남북간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시민성의 요소로서도 파악되고 있다.

한편, 박용현 교수는 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합교육의 과제로서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간의 조화, 갈등과 문제의 민주적 해결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이것은 과제라기 보다는 우리 논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의 새로운 시민성의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통일대비 표준교육과정의 주요한 내용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공동체적 정체성, 합리적 의사소통력, 자기결정적 이익추구 또한 앞서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복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민성의 구성요소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대비 표준교육과정의 구상과정에서 이를 통일촉진교육과 통합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일이후의 장기적 전망보다는 통일을 전후한 단기적 적용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손봉호 교수와는 달리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로서 공동체적 시민사회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다. 다만 새롭게 제시된 시민성의 요소들이 비교적 교육적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보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방향에 다가선 것이기는 하나 이 절의 서두에서 제시된 사회과의 일반적 목표

영역과 관련짓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영달 교수의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박용헌 교수가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에서 이미 수용한 통일 이후 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 공동체적 정체성과 민주적 의사결정능력 및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이같은 목표의 강조점은 통일한국의 시대가 전개될 21세기 우리의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으로 그가 상정하고 있는 ‘공동체적 자유주의 사회’의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시민의식의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이를 서로 다른 논문에서 통일 이후의 지향해야 할 사회상에 대한 논의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이러한 종합이 다소 자의적일 수도 있으나 내용분석의 결과로 미루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요컨대 그는 공동체적 자유주의 사회라는 우리사회의 장기적 전망과 지향점을 명백하고 이를 통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내용요소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이며 일반성을 의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강조점의 제시방식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사회과 교육의 일반목표영역인 (기본)지식, (지적)기능(실제의 내용은 지적인데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및 (민주적)가치태도와 실천을 그 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논의 형식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그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장기적인 우리사회의 지향점과 이러한 전망의 구체화를 공동체 시민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서 구체화하면서 예시적인 교육과정 요소와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통일직후의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되어 있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장기전망, 예컨대 지식사회의 도래나 世界化(Glocalization)될 시기에 맞이하게 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관짓고 있지 않는 점에서 보다 질적인 종합화가 요구되며 이것이 본 연구에서 시도하려는 바이다. 이 같은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시민성의 개념을 <표2>로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통일 이후 시민성 개념의 구성요소>

개념 영역\시기	통일한국의 사회적 지향 : 자유민주적 공동체 사회	
	단기적 강조점 (민족의 정체성 확립)	장기적 강조점 (통일시민의 양성)
지식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생활 백락적 이해력 * 자아 및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력 * 민주적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력 *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력 * 지역의 상호작용관계에 대한 이해력
기능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 집단적 의사결정 능력 * 이타적 공감력 * 갈등과 문제의 민주적 해결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탐구기능 * 협동적인 집단기능 * 지속적인 학습조직의 형성과 개선 기능
가치, 태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가치태도의 습득 * 관용, 타인에 대한 고려 * 민족공동운명체 의식의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성의 가치와 통합성의 가치 조화 * 민주적 기본가치의 존중 * 공정, 합리, 관용, 참여의 시민성 제고

4. 사례분석과 구체화 방안의 시론적 제시

통일한국의 시대에 적합한 시민성 개념의 정립을 바탕으로 한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철학 및 사회학적인 접근방식으로서 통일한국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인간상을 선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통일한국이 요구하는 시민의 자질을 내용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사회에 대한 잠정적이며 가설적인 전망의 결과와 교육철학적 논의를 종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당위적인 통일시대의 교육적 인간상을 그려보는데 매우 유의한 반면, 논자의 가치

<표2 통일 이후 시민성 개념의 구성요소>

개념 영역\시기	통일한국의 사회적 지향 : 자유민주적 공동체 사회	
	단기적 강조점 (민족의 정체성 확립)	장기적 강조점 (통일시민의 양성)
지식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생활 백락적 이해력 * 자아 및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력 * 민주적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력 *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력 * 지역의 상호작용관계에 대한 이해력
기능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 집단적 의사결정 능력 * 이타적 공감력 * 갈등과 문제의 민주적 해결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탐구기능 * 협동적인 집단기능 * 지속적인 학습조직의 형성과 개선 기능
가치, 태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가치태도의 습득 * 관용, 타인에 대한 고려 * 민족공동운명체 의식의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성의 가치와 통합성의 가치 조화 * 민주적 기본가치의 존중 * 공정, 합리, 관용, 참여의 시민성 제고

4. 사례분석과 구체화 방안의 시론적 제시

통일한국의 시대에 적합한 시민성 개념의 정립을 바탕으로 한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철학 및 사회학적인 접근방식으로서 통일한국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인간상을 선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통일한국이 요구하는 시민의 자질을 내용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사회에 대한 잠정적이며 가설적인 전망의 결과와 교육철학적 논의를 종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당위적인 통일시대의 교육적 인간상을 그려보는데 매우 유의한 반면, 논자의 가치

관에 따라 전혀 별개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두번째 접근방식은 역사적인 방법으로서 이 같은 주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역사적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앞에서 제시된 통일한국의 시민성을 학교 사회과 교육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들어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통일이나 사회의 통합을 계기로 사회과를 통한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정립이 이루어진 것은 그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20세기 초의 미국이나 2차대전 이후의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의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해방이후 남북 분단 시기 사이에 교육을 통해 구체화되었던 '한국인화(Koreanization)'와,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미국시민화(Americanization)', 그리고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육의 역할에 관련된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번째의 접근방식은 특히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정립보다는 그 구체화 방안의 적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고려점들을 도출하는데 더욱 유용하리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두번째의 접근방식과 관련된 사례를 특히 우리나라 및 미국이 사회과 형성기 그리고 독일의 통일을 전후한 공민과, 사회과 및 정치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분석하는 가운데 그 실제적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4.1 사례분석

학교 교과로서의 사회과는 전혀 미국적인 교과이다. 사회과적 성격을 가진 교과는 많으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시민교육 및 사회과학교육을 단일 교과의 틀내에서 다루는 종합교과로서의 사회과(social studies)는 미국에서 생겨나서 2차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정을 거쳤던 아시아 국가, 즉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지에서 공식적인 학교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의 사회과는 미국에서의 형성배경 처럼 각 나라에 적합한 국민양성(nation-building)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

4.1.1. 미국 사회과의 1916年 모형

미국에서 사회과가 탄생한 배후에는 20세기를 전후하여 미국으로 이민해 온 수 많은 이주민들을 미국시민화(Americanization)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와 지리를 중심으로 통합된 사회과교육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910년대였다. 그 이전까지는 역사와 지리, 정치, 법률, 경제 등이 각각 독립된 교과목으로 교수되어 오다가 1910년에 이르러 ‘미국시민의 형성’이라는 목표하에 역사와 지리를 통합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주요한 이유는 유럽에서 매년 수백만씩 이민해 온 이민자들을 미국화하고 미국의 남부에서 공업화된 북부를 향해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에게 도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교육협회 및 미국역사협회 등이 주동이 되어 역사와 지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과를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사회과이다. 지리, 역사중심의 이 시기의 사회과를 ‘1916년 모형’이라고 한다. 이 모형은 1950년대까지 계속되었는데 학년 및 학교급별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학년에서는 가족, 2학년에서는 이웃, 3학년에서는 지역사회, 4,5,6학년에서는 지리와 역사, 7학년에서는 지리, 8학년에서는 미국사, 9학년에서는 공민, 10학년에서는 세계사, 11학년에서는 미국사 그리고 12학년에서는 민주주의의 여러문제를 가르쳤다.

이상과 같은 사회과의 1916년 모형은 이 이후 시기의 미국사회의 변화를 수용해 가면서 학교교과로서 정착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실제의 생활 또는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보통교육적 지향을 사회과가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는 각 교과가 어떤 교육적 목표를 가지는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고대사가 빠졌고 미국사가 늘어났으며, 지리부분에서는 자연지리보다는 문화지리가 강조되었으며 공민 부분에서는 건강, 재산, 여가, 교통, 협동 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사회의 자본주의적 성장과 그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과가 필요한 교과목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1920년대 말의 대공황

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 예컨대 재벌의 시장독점, 정부의 부패, 여성 참정권 문제, 노동조합 등의 문제들은 미국사회의 발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를 떠나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社會的 自我(social self)를 形成하는 것이었다. 사회과 교육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회과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으로 운영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차경수,1982,pp.7-9)

4.1.2 우리나라 사회과의 형성과 통합문제

4.1.2.1 우리나라 사회과의 형성과정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자 미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 가득차 있는 초, 중등학교 교육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하여 일제의 잔재인 군국주의적 색채를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미국정부는 이데올로기의 근본적 변혁을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교육을 생각함에 따라 한국 교육의 재편기에서 사회과의 신설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교육과정’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교수요목의 작성과 교과서의 편찬에 참고로 할 만한 자료는 거의가 일본자료 뿐이어서, 군정청 문교부는 일제의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 교육 창달을 위해 미국 여러 주의 교과서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사회과 도입 그 자체를 두는데 있어 관계 편수관과 일반 교육자들간의 찬반 양론이 분분했었다.

이러한 갈등은 비슷한 시기에 미군정하에 들어간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종래의 공민,지리,역사를 통합하는데는 찬성하면서도 사회과라는 명칭에는 반대가 있었다. 사회과의 도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중등수준에서 더 심했으며, 이에 대한 절충으로서 관계 위원회는 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통합사회과를 두는 것이 적절하며, 일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계속적인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과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과 도입 그 자체에 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의 학적 체계와 실천에 대한 논의이었다. 찬성론자들은 이제까지의 획일적 지식의 주입이라는 일제

의 교육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창달을 위해서는 사회과(social studies)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사회과란 교과목은 미국 학제의 무비판적인 도입이며, 학문의 체계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관련 대학교수들은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과 사회과의 통합교과적 특성에 맞는 교과서의 미비를 들어 반대하였다. 그리고 사회과의 개념에 대한 현상의 상황은 ‘당황과 곤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최종적으로 결론짓기를 초등학교는 통합하고 중학교는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한 정신만은 통합교과인 사회과로 하기로 절충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민주적인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은 교육심의회에 의해서 제정되어 모든 교육내용이 이를 중심으로 구성되게 되었고, 이때 ‘사회생활과’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도입된 사회과는 민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한 교과로서 성립하였는데, 사회과는 독립된 교과목의 하나이면서도 전과목을 융합,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 과목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4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교과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과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바뀐 데 있다. 사회과는 종래의 각각 독립된 과목이었던 역사, 지리, 공민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만든 것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 특히 민주시민의 육성에 그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과는 내용조직의 측면에서 기존의 세 과목을 단순히 합한 것이 아니라 아동들에게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해 통합되고 재구성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단원 내용의 구성에서 ‘생활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회생활과의 통합적 접근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중학교에서는 실질 수업의 내용이나 계열에 있어서 각양 각색이었고, 공민, 역사, 지리과목이 독립된 교과처럼 분립되어 있었다.

4.1.2.2 교수요목의 검토

군정청 문교부는 신설된 사회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강습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생활과 교수요목 작성을 착

수하게 하여 1946년 12월 7일에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을 제정, 공포 하였다.

이 시기에 제정, 공포된 국민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은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8년 과정을 6년과정으로 단축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당시 편수국장 고문이었던 앤더슨이 콜로라도 주 출신이었으며, 그 주의 Denver시가 사회생활과를 시범적으로 채택하여 선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사회과의 도입의 우리측 주도자였던 이상선이 편찬한 '사회생활과의 이론과 실제'가 콜로라도주의 사회생활과 요강을 참고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이때 작성된 초등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은 이후의 중등 사회생활과의 교수요목에 준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사회생활과의 교수요목은 '사회생활과의 교수목적', '교수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교수목적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와 사회생활과의 관련성 인식 및 시민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서 통합적 접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수방침으로는 1. 단체생활에 필요한 정신, 태도, 기술, 습관을 양성함 2. 단체생활의 모든 관계를 이해하게 하며 책임감을 기쁨 3.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함 4. 우리나라의 역사와 제도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함 5. 우리나라에 적당한 민주주의적 생활방법에 관한 지식을 함양함 6. 실천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체득케 함 등의 여섯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표와 교수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단체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 및 민주적인 생활방법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기 사회과는 학생들의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궁극에는 성실, 유능한 국민이 되게 함을 목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과의 생활과 체험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회과를 받아들인 우리 쪽의 적극적 대응의 결과라기 보다는 이 시기에 소개된 미국의 사회과가 시민성 함양을 위해 통합적 접근을 띠고 있었고, 해방 후 건국기라는 사회과 도입의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신설된 사회과를 통하여 국가 사회의 책임있고 선량한 시민적 자질을 운영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우선시 되어 초기의 사회과는 학문적 계통보다는 현실적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진석, 1998년 논문을 참조)

4.1.3 統獨後 독일의 정치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개념의 정립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역사적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더욱이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통독의 사례는 우리의 통일관련 논의의 출발점이자 논의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통일을 전후한 독일에서의 정치교육과 관련된 논의의 내용과 전망된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적용상의 문제를 가름해 보는 본 논문의 주제에 비추어 볼 때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구동독 지역에서의 정치교육과 통독 이후의 정치교육의 과제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이들은 정치교육의 맥락에서 독일의 민족 또는 통일교육에 관한 논의를 재구성하고 통독 이후의 새로운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정치교육의 과제를 탐색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허영식,1996)

4.1.3.1 구 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의 변화

맹교(indoctrination)의 전형적인 예로서의 구동독의 公民科는 그 학습목표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기존 권력과 지배구조에 대한 신앙심에 정향을 두게 하는데 두었으며 이것은 일반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교양교육과 그 성격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교수방법 혹은 수업방법이라 지칭된 방법론에 의해서 청소년들은 이데올로기를 습득하는 객체로만 간주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단일한 이데올로기적인 입장들을 갖게 되고 또한 교사의 견해와 일치하도록 강요받았다. 결국 지식과 능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기 실현과 정치적인 주체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臣民을 생산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위한 구 동독의 교사 양성 및 그들의 계속 교육에 있어서도 언제나 ‘과학성과 당파성의 통일’, ‘학문과 정치의 통일’ 원칙 등이 강조되었으며, 이 원칙은 교사를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주입과 판단을 담당하는 맹교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향과 교사의 교수학습상의 특징이 곧바로 이 같은 체제이데올로기가 전면적으로 전혀 여과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체제를 긍정하게끔 유도하는 정치교육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식도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구소련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구동독의 경우에도 잠재적인 비판 혹은 저항

(resistance)이 알게 모르게 누적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여 구동독의 공민과는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社會科(Gesellschaftkunde)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서독의 그것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당국은 1989년 후반의 정치적인 대전환 이후에 학교 교육분야에서 몇 가지의 주요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첫 번째는 교련과목의 폐지와 기존 공민과 및 역사 교육과정의 중지였다. 대신에 들어선 사회과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심성을 북돋우고, 학생들에게 대화 능력과 관용을 가르치고 또한 학생들의 관심, 경험 그리고 요구와 흥미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예컨대 학생들의 자기 실현과 사회 및 정치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기회를 학생들 자신이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4.1.3.2 통독 이후 독일 정치교육

‘준비된 통일’로까지 지칭되던 독일의 통일이 있음에도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질적 체제의 통합이란 매우 지난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개인적인 의식들을 의도된 방향으로, 그것도 가능하면 자율적인 환경에서 지향케 하고자 하는 통일 이후의 독일의 정치교육이 떠안고 있는 문제점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케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일 이후 독일에서 적용중인 정치교육의 과정과 강조점 그리고 과제를 舊東獨 정치교육의 청산, 민주적인 갈등 문화의 정착, 일상생활과 정치의 연결, 공동의 집단 정체성 확립, 민족적 연대의식의 수립과 확대 그리고 헌법적 애국주의의 정착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구동독 정치교육의 청산에서 주목할 것은 구동독의 체제 이데올로기라는 내용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인 것의 후퇴, 당위적인 명령의 우세, 초자아적인 정향(집단 혹은 사회의 우선시), 의무의 강조,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으로 특징 지워지는 구동독 정치교육의 방법 내지는 형식적인 측면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동독 정치교육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과제는 학교수업에서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주성 그리고 그들의 협동적인 활동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經驗 指向的인 接近方式이나 行動 혹은 實踐 指向的인 接近方式에서 발전

시킨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는 정반대의 가치체계를 학습케 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은 또 하나의 맹교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민주적인 갈등문화의 정착문화이다. 오랫동안 합의교육 혹은 모범 및 동일시 교수법(modeling)에 익숙해 있는 구동독지역의 학생들에게 있어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 있어서의 의견의 차이와 갈등 및 대결상황은 매우 익숙치 않은 것이어서 그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가치의 다양성과 존중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특징이므로 민주적인 갈등 혹은 논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법과 계기들이 학습활동을 통해 주어 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적인 갈등 문화의 정착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동독 지역의 주민에게 있어 또 통독정부에 의한 새로운 정치교육 또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또 다른 맹교일 수 있다. 그리고 이쩌면 가치나 의식적인 측면은 변화된 실생활의 적용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교육은 그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더 生活 實踐的인 傾向에서 출발해야 하고 설득력 있는 參與的 學習形態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실제적 정치교육을 위해서는 '이익' 또는 '이해관계' 혹은 인지수준에 적합한 '관심'과의 밀접한 연계속에서 내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집단정체성의 확립과 공동체적 연대감의 재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내용들의 선정되어야 하며 방법적 측면에서 '統合'과 '同化'의 개념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통합이란 통일을 이루면서도 상이한 점들을 보존하는, 상이한 체제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며, 동화란 다른 한 쪽이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쪽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구분에 비추어 보면 정치교육을 통해 지향해야 할 정체성과 연대감의 형성은 상이한 상태에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인정을 가능케 하는 상호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된 독일의 국민전체가 이전의 소속체제와 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고양된 체제로서의 독일에 대한 정치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내재화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의 근본 가치와 경기규칙에 정향을 두고서 이에 입각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으로서의 헌법적 애국주의가 보다 상위의 일반적 준거로서 정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4.2 시론적인 구체화 방안의 제시

4.2.1 사례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앞서의 사례분석에 의해 사회과란 교과목은 체제 통합의 과정에서 특정 사회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시민의 양성을 위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사회과의 1916년 모형과 미 군정하의 우리의 교수요목 그리고 통독 전후의 구동독 지역에서의 사회과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독일의 사례는 상황과 문제의식의 유사성으로 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화 방안의 제시와 관련하여 시사받을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이들 사회과적 모형들이 단기적으로 중시하였던 것은 정체성의 확립과 강화였고 이를 위해 사회과의 내용으로서는 지리와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의 과정에서는 이질성의 확인과 강조보다는 비교적 탈가치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이며 ‘지금 여기’를 벗어난 내용적 수단을 통해 우리가 원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 편성이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과거의 역사와 지리에 여기에 적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시사점은 내용조직의 원리와 중점으로서 사회문제를 제제로 한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상컨대 통일이후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理解와 適應일 것이나 북한주민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적응의 문제가 더 중시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민성 개념을 구체화할 사회과의 내용은 실제적 생활과 실천 및 경험을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째, 절차와 내용의 측면에서 독일 사례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정치교육이 내용과 방법 면에서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강조점으로 민주적인 갈등 문화의 정착, 공동의 집단 정체성 확립, 민족적 연대의식의 수립과 확대 등이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일상생활과 정치의 연결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체성의 내용과 준거로서의 ‘그 무엇’에 대한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제 사회과의 성격과 기능에 비추어 그 활동을 개념화하면 社會科學教育, 消極的 社會化 教育, 積極的 社會化 教育 그리고 市民實踐 教育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능 중 통일 이후의 단기적 상황에서의 사회과는 상대적으로 통일 이후 사회의 기본가치 습득을 강조하는 소극적 사회화 기능, 그리고 이를 실제의 생활과 조직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시민실천 교육 기능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과는 다른 교과와의 긴밀한 관련 속에 중핵교과(core subject-matter)로서의 운영과 방식에 대한 제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2 시론적인 구체화 방안

앞서의 사례분석에 터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토대로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구체화를 위한 시론적인 방안을 사회과 교육의 절차적 모형의 내용 중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목표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민성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이고 평가부분은 본 연구주제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지엽적인 성격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4.2.2.1 교육과정

내용의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역사와 지리의 강조이다. 현재의 사회과 운용방식은 내용상 역사와 지리는 상대적으로 저학년에서 그리고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고학년과 상급학교급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 배열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개념 발달의 순서가 공간개념, 시간개념 그리고 사회적 개념 순으로 발달되어 간다는 인지심리학적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와 지리의 강조는 상대적으로 학년별 사회과의 내용 중에서 공히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고, '일반사회적 영역'의 이해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역사, 지리적 사례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질적인 상대방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우선 '공통적인 것'으로부터의 접근을 의미하며 정체성의 회복과정에서 문제사될 '사회심리적 저항감'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접근방식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보다 실제적이고 생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구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

의 원리를 보다 중시하자는 의미인데 이는 단기적으로 사회과를 통한 교육활동은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이해’ 보다는 ‘실제 사회생활에의 적용과 참여’가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로 이를 위해 기존의 ‘탈교과적 통합교육과정의 설정 방법’과 ‘중핵교육과정의 운용방법’에 대한 재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의 새로운 시민상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구분되었듯이 이러한 사회과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적용상의 단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그 첫째 단계에서는 북한학생들의 對南韓 認識의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용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체제하에서의 맹목적인 체제지향성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서로의 실상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서로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개성, 다양성, 자율성과 같은 인간의 심층의식 그리고 사회발전에 대한 기대형성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의식의 내재화 단계로 접근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이후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역사, 지리 등의 공통적이면서 저항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생활적인 사례를 제재로 북한학생들의 적용과 인식전환의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선정되고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 지리의 영역부터 남북한 표준과정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소위 ‘일반사회 영역’의 경우,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역사, 지리를 제재로 한 통합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2.2 교수학습방법

앞서의 교육과정 논의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지만 통일이후 새로운 시민성의 내용에 근거한 사회과 교수학습방법은 사회과의 세 가지 목표 영역인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 영역 중 상대적으로 기능과 가치/태도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식의 경우에는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제적 지식, 현실적 사례를 이용한 지식교육의 방식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치/태도의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방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치교육의 방법으로서 주입과 전달 그리고 모델링 및 수용 그리고 가치

탐구 등의 방법이 있다. 주입에서 수용까지의 사회의 기본가치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소극적 사회화의 한 부분이라면 가치탐구의 방법은 학생의 입장에서 ‘따지고 거르는’ ‘反省的 過程’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사회화(counter-socialization)를 위한 가치교육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이들은 각각 통일이후 사회과에서의 시기별 강조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민족정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단기에는 소극적 사회화를 위한 가치교육방법이 그리고 장기적인 의미의 한민족공동체 의식의 내재화과정에서는 적극적 사회화를 위한 가치교육의 적용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의 참여와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論爭的 教授學習 模型 혹은 法理模型 등에 대한 재조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용적으로는 타안에 대한 고려 및 관용 등에 대한 내용 등이 가치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관용교육모형은 그 적용의 범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적용과 확장을 위해 이중 교육과정안과 학교내 교육을 통한 실천 전략을 간단하게 이를 정리, 소개하고자 한다.

UN의 유네스코 위원회는 1995년을 ‘관용의 해’로 지정하고, 이 취지에 따라 관용의 의미, 관용의 교육방법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관용의 의미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적 절차가 존중됨으로써 평화가 달성된 상태를 관용상황이라고 설정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촉진시키는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관용상황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용과 관련된 기본가치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인데 인권의 경우 이상적 상태는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다양성 그리고 정치적 다원주의가 인정되고 적극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문화간의 협력, 종교간의 대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인권의 보장, 공정한 자원분배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적 차별과 각종 편견 등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관용적 상황의 기본가치는 공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달성되는데 이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거나 방해되고 공적 정보가 검열되거나 조작 등이 있다. 반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공정하고 개방된 정치토론을 위시해서 대의제와 참여적인 의사결정과 대중에게 자유롭게 알리는 책임있는 정보매체가 정착여부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 기본가치인 평화의 이상적 상태는 예의 바른 토론과 적절한 갈등 그리고 협동적인 사회관계가 지켜지는 상황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협상, 교육, 비폭력적 갈등해결 방법의 내재화와 제도화 등이 있고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용적 상태를 우리의 논의에 적용했을 경우, 남북한의 이질성이 극복된 상황을 의미한다면 관용의 기본가치인 인권은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수용을, 민주주의란 수용 이후의 관계를 규정지을 수 있는 제도화된 규칙과 환경으로서, 그리고 평화는 그것을 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활동의 과정과 수단을 의미하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재해석이 가능하다면 각각의 기본가치의 이상적 상태는 포괄적인 교육목표로서 그리고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은 구체적인 방법과 활동을 조직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 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위에서 언급된 바의 이상적인 관용상태를 만들기 위해 재해석된 내용을 학습의 기본요소인 지식, 가치 및 태도 그리고 기능 영역별로 나누고 각 영역 별의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관용교육의 목표 상세화>

기본 가치	지 식	기 능	평가의 기준
인간의 존엄성 (인권)	다양한 인간적, 개인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사회적 쟁점들을 판단함에 있어 인권을 기본준거로 적용하는 것	간문화적(intercultural or multicultural) 과업의 수행 수준/ 실제적인 사례의 적용력
사회정의 (민주주의)	다양한 민주적 통치과정과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	비판적 사고력/ 사실과 주장과의 구별/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숙달	제시된 상황의 이해력/문제와 가능한 해결대안의 제시력/ 정치적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제시
협동적 비폭력성(평화)	인간적인 차이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에 대한 이해	토론과 논쟁/문제해결력(갈등의 조정능력)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택한 하나에 대한 증거 위주의 토론력/ 갈등조정 혹은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모의적 적용력

위에서 제시된 내용은 구체적인 학습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은 돋보이나 여전히 추상적인데다 다소 인지적인 점에 편중되어 있어 감정어임이나 공감력 등의 정의적 요소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점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용교육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으로서 제시된 것으로서는 가능하면 관용교육은 학교내부의 공식적 교육과 더불어 학교 전체의 분위기와 나아가 학교 이외의 상황들이 실제의 활동에서 친관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콜버그가 제시한 가치태도교육 방법으로서의 정의공동체 모형은 수업을 통한 토론활동과 함께 환경적으로 학교자체가 민주화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 수업활동과 환경과의 괴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학교내외적인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질성의 극복을 위한 관용교육은 명시적인 방법보다는 암묵적인 방법으로 심리적 저항감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간단하게 지적한 대로 관용교육은 '당위적'으로 '관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물론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요인으로서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수학습이 필요함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내 교육을 통한 관용교육의 내용구성 방법과 수업방식에 대해 유네스코 안이 제시한 것들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내용 구성방법으로는 전교과 분산식과 통합교육과정의 운용 방법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교과 분산식은 기존 교과의 독립성은 인정하되 관용에 대한 교육을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은 전교과에 첨가적으로 끌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학교교육활동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방법이지만 관용교육의 본래적 통합성에 비추어 보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관용은 타자에 대한 이해없이는 불가능한데 이러한 이해대상으로서의 개인, 집단, 문화 그리고 국가를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또한 관용적 태도를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는데 의사결정과정은 다양한 사실적 지식과 가치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용교육은 학제간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교육과정을 구안하여 세심한 고려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능 영역에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 수준의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등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단기적으로는 가치의 다원화에 따른 사회구성원간의 갈등과 좌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수업의 사태로 가지고 와서 해결해 보는 활동의 계기가 많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념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선 최근의 사회과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協同學習 構造에 의한 意思決定授業 模型이나 市民實踐 模型(citizen action model)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 영역을 통틀어 多文化教育(multicultural education)의 의의와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요약 및 결론

통일은 더 이상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목적에 닮친 구체적인 현실이다. 이전 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일 대비 논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남북한의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을 대비한 기초적인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에 앞서 개념화되어야 할 시민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새로운 시민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내재적인 목표영역인 지식, 기능 및 가치태도의 세 가지 영역을 기본골격으로 통일이후의 적용시기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각 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요소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시민성의 강조점으로서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민의 양성에 두었으며 장기로 갈수록 사회과의 세 가지 기능 중 사회과학교육 및 반성적 탐구적 성격을 한민족공동체와 지구촌적 맥락에서 강조하였다.

두 번째의 연구문제인 구체화 방안의 도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과 형성기의 미국의 1916년 모형과 우리나라의 교수요목기 그리고 구동독 및 통일독일의 공민과 및 사회과

다음으로 기능 영역에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 수준의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등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단기적으로는 가치의 다원화에 따른 사회구성원간의 갈등과 좌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수업의 사태로 가지고 와서 해결해 보는 활동의 계기가 많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념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선 최근의 사회과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協同學習 構造에 의한 意思決定授業 模型이나 市民實踐 模型(citizen action model)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 영역을 통틀어 多文化教育(multicultural education)의 의의와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요약 및 결론

통일은 더 이상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목적에 닮친 구체적인 현실이다. 이전 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일 대비 논의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남북한의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을 대비한 기초적인 연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에 앞서 개념화되어야 할 시민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새로운 시민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내재적인 목표영역인 지식, 기능 및 가치태도의 세 가지 영역을 기본골격으로 통일이후의 적용시기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각 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요소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시민성의 강조점으로서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민의 양성에 두었으며 장기로 갈수록 사회과의 세 가지 기능 중 사회과학교육 및 반성적 탐구적 성격을 한민족공동체와 지구촌적 맥락에서 강조하였다.

두 번째의 연구문제인 구체화 방안의 도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과 형성기의 미국의 1916년 모형과 우리나라의 교수요목기 그리고 구동독 및 통일독일의 공민과 및 사회과

그리고 정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관하였다. 그 결과 가능하면 체제 통일의 초기에는 정체감의 형성을 위해 심리적 저항감이 없는 지리, 역사 중심의 내용을 근간으로 실생활 중심의, 이해보다는 적응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이 시기의 사회과의 교과적 역할을 감안, 중학교과 운영방식과 통합사회과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새로운 시민성의 제정립과 사례분석에 의한 새로운 사회과의 구체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교육과정 측면과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특히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의의의 내재화 및 개인 및 집단적 수준의 갈등 해결방법 그리고 가치교육에 대한 재검토화와 구체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모형의 모색과 관련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관용교육모형'을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측면으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방법으로서 남북한의 이질적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제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체제의 통합에서부터 현대사회의 다원화라는 본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 했을 때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반론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사회에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 김명기(1995), “통일교육 접근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주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 김민하(1996), “통일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확립”(기조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 김재덕(1990), “환경변화와 통일교육의 체계화 문제”, 사회와 교육 제 14집. pp.5-10.
- 김주성(1996),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주제발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주최 제 11차 공청회.
- 민병천(1997),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주제발표),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주최 통일정책 대토론회 『민족동질화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 민주평통(1996), “중고교생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주제발표), 민주평통 주최 1/4분기 통일정책 포럼.
- 박용헌(199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
- 박용헌 외(1994), 남북통일 대비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박용헌(1997),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안모색”, 통일대비 시민교육 남북한 비교 대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설 자유민주연구소.
- 손봉호(1990), “민족통일과 민주시민교육”, 사회과 교육 제 14집. pp. 1-4.
- 이진석(1998), “사회과 도입과정에서 통합의 의미와 전개”, 사회와 교육, 제 26집, pp.167-184.
- 유현석(1997), “통일한국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윤덕희(1995), “시민사회적 통일문화 이념의 체계화 연구”, 민족통일원 편 『통일과 북한사회문화(상)』, 서울:민족통일연구원.
- 이민수 외(1997), 『바람직한 통일문화』, 민족통일연구원.

- 이서행(1994),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방향”(주제발표), 통일원 주최 세미나 『통일 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
- 이인규(1998), 한국교육의 시민 개념 구체화를 위한 탐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경섭(1994), “북한의 잠재적 시민사회:2차 의식, 2차 경제, 2차 사회”, 『현상과 인식』 제 18권 4호.
- 정문성,김동일(1998), 열린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정재구 역(1989), 『민주시민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조영달(1995), “통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와 교육 제 20집. pp.23-50.
- 조영달(1995), “한국 시민교육의 성립과 전개”, 사회와 교육, 제 21집. pp.323-340.
- 조영달(1997), “한국사회공동체의 과제와 지향: 공정, 합리, 창의, 관용의 시민의식과 선진한국의 건설”, 21세기 한국사회와 새로운 시민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과 교육학회 1997년도 학술토론회 발표논문.
- 조영제(1998),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 덕목으로서의 관용과 그 시민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병모(1998), “제7차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제 7차 중등교육과정의 교과별 적용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교육연구소. pp.5-34.
- 차경수 외(1982), 사회과 교육(I),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통일원(1994), 『독일통일백서』.
- 한만길(1996),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의 실태와 접근방향”(주제발표),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전문가 워크숍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남북한 사회 통합』.
- 허영식(1996), “독일의 통일과 정치교육”, 사회와 교육 제 22집. 한국사회과 교육학회. pp.253-278.

Banks,J.A.(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4th ed) New York and London: Longman.

Banks,J.A., James Lynch(eds.)(1986), Multicultural Education In Western Society. Holt,

Rinehart and Winston.

Branson, M.Stimmann(1991), The Education of Citizenship In A Market Economy and Its Relationship to A Free Society, A paper deliver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stern Democracy and Eastern Europ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Cole,R.H(1975), The Koreanization of Elementary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 1948-1974. Doctoral Dissertation to Arizona State University.

Engle,S.H. and Anna S. Ochoa(1988),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 decision making in the social studies, New York and London : Teachers College Press.

Heater, Derek(~1990),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 Longman.

Newmann,F.M.(1975), Education for Citizen Action - challenge for secondary curriculum -, McCutchan Publishing Corporation.

Szebenyi, Peter(1991), Research On Social Studies In Eastern Europe, In Handbook of Reasearch On Social Studies Teaching and Learning, James P.Shaver(ed.) NewYork: Mcmillan Publishing Company. Turner B.S. and Peter Hamilton eds. (1994), Citizenship : Critical Concepts(Vol.1, Vol.2),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요약문】

최근 몇몇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심을 표명하고,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먼저 고려하고, 남한과는 다른 문화적 수준을 갖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하다” 또는 “존스럽다, 미개하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정, 1997). 이와 같이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형적 이미지(stereotype)를 갖고 있다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된 후 서로간의 원만한 융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줄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 보았다.

또한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에 대한 “개인적 적합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가질 수도 있으며,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개인적 참여”가 가시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회의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교류가 원활 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개인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는 몇 가지 홍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통일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남한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펼쳐게 될 홍보의 방향은 첫째, 북한 사회를 바로 보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시각에서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북한의 실상이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상호 객관적 인식을 밑도 있게 삼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공적인 메시지나 체제 대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남북간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관계를 다룰 때도, 그러한 보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동포라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홍보 전략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이 감정과 욕구를 지닌 인간적인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북한은

어린이조차도 동심을 느낄 수 없는 꾸며진 모습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있고, 북한 사람들은 가족들도 서로 고발하고 감시하는 비인간적인 존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 대해 남한 주민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닌 동포라는 것을 지각하고 친근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알게 해주는 것이 남한 젊은이들에게 친근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북한의 젊은이들의 이성교제 하는 모습이나 애정의 표현 방식 등 일상적인 모습이나 활동, 취미 생활을 알려준다거나 친구간에 대화의 주제 등 정서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친근감을 형성하면서 북한 주민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외부집단(Outgroup)이라는 인식이나 부정적인 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경제 수준 차이로 인해 그들의 생활상이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수준이 낮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주어진 홍보 메시지가 우리와 다른 점이나 뒤떨어지는 점보다는 남한의 일상과 비슷한 점을 강조한다면 같은 민족이라는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남북간의 누적된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점차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적인 동질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는 장으로는 대중 매체, 특히 방송을 통해 효과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친근한 드라마 프로그램 등의 형식(format)을 이용하여 북한의 모습이나, 북한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의 일상에서 남한의 생활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심어주는 것도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귀순한 인물을 등장시켜하여 남한의 일상적인 삶에 적응하는 모습을 그린다는 등의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생활상의 소개를 통해 북한에 대한 무지를 줄여주고, 일상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 북한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선고의 대상으로 지각했

던 것이 사회의 규범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사람들이나 우리나라 모두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교육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중 매체를 통해 북한주민의 삶과 생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도 남북간 문화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열린 음악회'와 '가요무대'같이 탈 이데올로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의 대중 음악을 소개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외의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동질감의 회복을 꾀할 수 있는데, 최근 SBS 방송에서 방영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나, 북한에서 행해지는 전통 춤 등의 소개를 통해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정서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 볼 수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또한 남북간의 공유하는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역사적 유산을 소개하는 '역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프로그램도 기획된다면, 같은 역사를 가진 북한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바람직한 홍보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남북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방송 정책이 수립된다면,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 주민들은 바람직한 문화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 발간되는 문학 작품을 소개하여, 진솔한 모습이나 섬세한 감정이 묘사된 모습을 통해 작품에 반영된 북한인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 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대중적인 홍보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넷째, 개인적 의미를 가진 통일이라는 방향에서의 홍보 전략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통일이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우리 민족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이고,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통일이 나 자신의 중요한 문제이고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홍보 전략은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통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들에게 남북간의 단절이 우리 민족의 발전의 저해 요소임을 알리고, 단절이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 관련한 정보를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그 결과, 젊은이들이

통일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이 취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통일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냉소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존의 냉전 논리나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식의 정보제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통일이나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통일에 대한 홍보는 단순히 정부의 통일 정책 홍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통일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되든, 과도기적 혼란 상황에 관한 정보가 되든, 국민들이 상황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가져야만, 보다 원만한 통일의 과정을 이끌어 갈 것이고, 개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나 국가적 유익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통일을 달성하고 북한과의 융화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는 것에서부터, 통일 준비를 위한 홍보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일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과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의견을 가질수록 남한의 젊은이를 비롯한 일반 대중은 통일을 통한 “변화”를 원치 않을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통일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통일을 이복하고자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차원에서의 전략의 일환으로 개인 참여의 기회, 개인이 통일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남북한 지방자치 단체간의 자매결연 및 문화 행사와 관련한 각종 행사 등을 남한지역은 물론, 북한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을 이용해 민속놀이나 고장의 풍습에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남북한의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청장년 층을 중심으로 한 동호인 클럽들의 북한지역 설치 및 교류방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개인적으로 북한사람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확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협조와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와 남한 가정 연결하거나 하루 금식운동을 통해 북한 어린이 돕기와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도 북한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제시한 전략의 일부는 포커스 그룹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북한인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들의 일상을 홍보함으로써, 남한 대학생들이 그들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론

1.1 연구목적

남북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 속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지만, 결국 이러한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통일 주체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단절되고 이질적인 삶을 영위했던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후에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최근 몇몇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심을 표명하고, 응답자의 40%정도가 통일은 되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1993년 민족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의 젊은이들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먼저 고려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상이나 사고방식 등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으며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알팍한 관심이나 호기심 정도를 보이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혜정, 1997, 민성길, 전우택, 1997).

또한 남한과는 다른 문화적 수준을 갖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하다” 또는 “촌스럽다, 미개하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정, 1997). 이와 같이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형적 이미지(stereotype)를 갖고 있다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된 후 서로간의 원만한 융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을 형성하게 된다면,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 후, 새로운 형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남한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줄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면 어떤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일까?

본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첫째,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형적 이미지를 줄이는 방향의 홍보 전략의 방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 영역으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적 의미의 통일’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고찰 및 현황 조사 등을 병행한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은 앞으로 통일 과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20세 전후의 젊은 세대이므로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초반이후 감소하였다고 하나 (조혜정, 1997), 대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로부터 통일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의의 가능성이 비교적 다른 사회적 집단에 비해 열려있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1.2 연구 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형적 이미지(Stereotype)를 줄이는 홍보 전략에 대한 제안은 사회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정형적 이미지에 관련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 젊은이의 북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상황에서서의 대중 매체 프로그램 편성, 기획 등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한 홍보 전략과 실행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중요성을 논의했다. 북한 사람에 대한 정형적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한 메시지 전략은 소규모의 대학생 포커스 그룹을 통하여 그 홍보 전략의 효율성, 수용자 태도 등의 관심 변수들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통일의 개인적 의미와 통일 달성을 향한 개인의 참여라는 측면을 부각한 홍보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이 선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효능성(political efficacy)이란 개념을 소개하고 통일에 있어서 정치적 효능성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개인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통일 정책의 각 분야에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이나 교류 현황을 살펴보았고, 최근 개인 또는 민간 단체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던 통일 관련 행사들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현실적 검토를 거쳐 다양한 측면에서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개인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연구내용

먼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통일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태도, 신념 등에 관한 부분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사회 조사들을 참고로 했으며 500인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 또는 문화적 영역에 대한 남한 젊은이들의 인식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은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이다. 남한 젊은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북한인에 대한 친근감 형성’을 제시했다. 사회심리학자 자이언스(Zajonc, 1980)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집단이나 대상에 대하여 “친근감(Familiarity)”을 조성하면 그 익숙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선호도를 나타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 바 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조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북한 주민의 인간적인 면, 또는 그들의 일상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생활상이 우리가 납득하고 익숙한 상황설정에서 소개될 때 친근감의 조성이 원만하게 이뤄지리라고 본다. 또한 친근감을 형성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집단(Outgroup)이라는 인식이나 부정적인 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북한주민의 생활상이나 문화적 사건들을 보고 남한 젊은이들이 느끼게 되는 문화적 우월감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이질적인 느낌을 맹목적으로 제거하도록 계도하기보다는 남한인의 생활 속에서 보다 친근하게 그들의 생활상을 접할 수 있도록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친근한 드라마 프로그램 등에서 북한에서 귀순한 인물을 설정하여 남한의 일상적인 삶에 적응하는 모습을 그린다는 등의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1990년대에 들어서 흑인의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흑인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흑인들만의 독특한 가족관계나 사고방식을 다룬 드라마 등이 많이 제작되었고,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들은 백, 흑인 융화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백인들에게 자신들의 눈에는 미개하고 무지하게 보이는 흑인들에 대한 “내성 (tolerance)”를 기르는 것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임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빈번히 방송해오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채널을 통하여 북한주민의 삶과 생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소개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규범화 (social norm)” 되는 것도 중요하리

라고 본다.

세 번째로 전개될 논의의 대상은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업에 관련된 개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홍보 전략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바탕은 “정치적 효능성”(political efficacy)이란 개념에서 비롯되는 데, 이 개념은 일찍이, 흔히 투표나, 선거에의 참여 등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이 개념의 핵심은 어떤 개인이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적인 정치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Hinkle et al, 1996). 이러한 개인참여의 효능성 개념을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적 과업에 적용을 시켜보는 것에 대한 고찰과 그 유효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의 기본 전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에 대한 “개인적 적합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가질 수도 있으며,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개인적 참여”가 가시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회의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통일이 어떤 특수 집단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그저 방관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통일이라고 하는 과업 또는 정치적 과정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개인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 내용에 연계하여 실제 통일에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의 개인 참여 채널 등에 대한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기존의 대국민 홍보정책이나 전략, 구체적으로 북한 관련 대중 매체 메시지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분석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통일 관련 방송 현황이나 정책 등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통일 관련 방송이나 대중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고찰과 통일관련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홍보 전략을 포커스 그룹의 토론을 거쳐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데, 평가의 기준이 되는 변수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개인적 노력에 대한 의지 또는 의도, 통일 후에 맞게될 어려움 등에 대한 평가 등이다.

2. 통일에 관련한 현 상황의 분석

2.1 남한 젊은이들의 인식과 태도

“제 생각엔 IMF 상황에서 많은 준비도 없고, 교류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통일이 되면 혼란스럽기만 할 것 같아요. 언어, 사상,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 문제를 떠맡게 되는 식일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우리 나라로선 다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21, 대학생)

통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한 한 젊은이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이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현재의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1995년에 시행되었던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약 63% 정도였다 (민족통일연구원, 1995). 중부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는 통일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국청년문화연구원, 1993). 그러나 약 26%정도의 응답자가 남북한 국민의 통일 의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함을 보여주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성세대에 비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과 정치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민족 의식과 통일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조혜정, 1997). 10대의 경우, 통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이제 분단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실임을 수용하고 통일보다는 현상유지 - 분단 - 가 자신들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체제라는 인식으로까지 연결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인택, 1997).

1993년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50%가 남북한 국민이 피를 나눈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약 40% 가량 차지하였다. 남북통일의 방안으로 응답자의 약 40%는 민간 외교 부문을 통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였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교육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된 통일 방안도 민간 외교 통일이었다.

통일의 방식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약 87%이었고, 그러한 의견은 연령층에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들의 인식에 따르면, 통일은 차츰차츰 순서를 밟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학생들이 84%로 압도적이었다. 또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내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56.1%, 경제적 안정과 번영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한 학생은 21%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던 1993년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를 국민들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각하는 남한에서의 급선무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해 점진 온건론과 신중론이 대학 사회의 주류적인 흐름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남북한 통일의 주체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국민 모두”여야 한다는 의견(약 82%)을 나타냈고, 국민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강했다. 한편, 통일 주체가 정부나 정치 정당이여야 한다는 생각은 약 9%정도로 낮은 경향을 보였고, 대학 재학생 층이 통일의 주체를 국민 전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다 (84%).

통일의 주체를 자신들로 인지하는 자주적인 경향과 달리, 젊은이들이 인식하는 통일 장애 요인을 살펴보면 김일성, 김정일 북한체제 (당시는, 김일성 사망 이전이었음), 미, 소, 중, 일 주변국들의 현상 고착화 정책, 주한 미군 등의 외부적인 상황이나 영향을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한 체제 이질화 현상, 남북한 주민의 상호불신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 다른 설문조사(양성철, 1993)에서는 조사대상 대학생의 40%정도가 북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관을 살펴보면(양성철, 1993), 대학생들은 남북한 이질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상의 응답자들은 북한인들과 우리가 동일 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했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30% 이상이 북한의 어린이나 인민을 무섭거나 불쌍하게 여긴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정체성의 점진적 쇠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남북한 주민을 바차 다른 민족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어 남북주민이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대학생들도 전체 조사자의 절반에 해당하

는 51.1% 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 응답자의 76%가 통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반해, 통일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이 인상적이다.

북한 실상의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양성철, 1993) 대학생들이 북한 실상을 잘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종교에 대해 자유가 없다는 응답자(21.3%)와 주체사상이 북한의 종교라고 보는 대학생이 24.8%로써 거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종교 부재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의 강제노동 실상의 인지도 57.7% 이고, 남북한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북한이 남한보다 낮다는 인지하는 응답자가 74.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피상적이거나 북한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밖에 북한체제, 핵 개발 문제, 체제붕괴 가능성에 대한 응답도 훨씬 북한 현실과 사실에 가까운 답변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앞에서 소개한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의 수준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생활 환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에서의 문화 활동이나 문화의 내용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연구되었거나 조사된 바가 없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이슈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남한젊은이들의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는 체제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고, 지금까지 학교 교육이나 반공 홍보 등을 통해 남과 북의 대립적인 위치를 강조하는 정보에 치중하여 노출되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2.2 북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 분석

1970년 이후 남북한 사이에 숭한 방송교류 제의가 오고갔고, 정부를 포함한 관련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

지 방송교류와 관련하여 남북간에 현실화되었던 사안들도 대부분 일회적이었으며 연속성이 없었고, 정부 주도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동희, 1996).

이와 같이 성과가 없었던 방송교류의 현실에는 남북한은 나뉠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문화방송에서 발간한 연구에 따르면(유동희, 1996), 남한측의 배경에는 적색공포증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고, 남북통합에 대한 일반적 무관심 또는 심리적 저항이 우리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방송교류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집단 우월 의식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동, 서독의 통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통일 비용을 둘러싼 논쟁도 남한측을 둘러싼 문제 요인들로 파악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도, 권력층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저항 분위기가 존재하고, 누적된 집단 적개심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콤플렉스와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공포 등으로 남북한의 방송교류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들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과 태도에 관한 연구(이창현, 1993)에 따르면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남한의 수용자에게 제공된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방송의 개방을 통해, 남북한간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관련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생각해 볼 이슈는 남북의 창이나 통일전망대와 같은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기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은 북한의 뉴스 보도, 기록 영화, 선전 소개, 문화 예술 행사 공연 실황, 남한의 논쟁 및 좌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청자들은 두 프로그램이 반공적인 내용이 많고 내용이 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한국방송개발원, 1993). 또한 대학생도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이 재관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반공적인 내용이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70%이상이었다.

이러한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질감을 조장한다면, 남한의 방송국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이나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를 일깨워준다. 이러한 이슈는 이미 KBS 자체적으로도 북한 사회의 전체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의 창」의 위상을 새롭게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S, 1998).

또한 국내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방송개발원의 1993년 연구에서도 북한 관련 방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540명의 서울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에서, 먼저 시청 빈도를 살펴보면, 「남북의 창」과 「통일전망대」를 본다고 응답한 일반인의 경우, 36.5%가 1개월에 1-2번 정도 시청하고 있으며 21.6%가 2-3개월에 한번정도 보고있고, 11.1%가 일년에 2-3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주 본다는 사람은 불과 8.2%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의 고정적인 시청자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도 22.5%나 되었다.

대학생의 경우 「한번도 시청하지 않았다」가 14.3%, 「일년에 2-3번」이 28.6%, 「2-3개월에 한번 정도를 시청한다」가 22.9% 등으로 나타나 일반인보다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큰 불만족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 집단이 가진 독특한 북한사회에 대한 가치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시청동기로는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다양한 북한 소식을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청이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개인적인 관심이나 흥미 때문에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일반인들은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남북의 창이나 통일 전망대를 시청한다고 대답한 경향과는 상이하게 대학생들은 두 프로그램이 오히려 남북한간 이질감을 강화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지 고취라는 측면에서 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두 프로그램은 통일 지향적 의지를 강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통일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에

달했으며, 대학생의 경우 북한의 긍정적인 면이 많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송 시청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나 자신감을 심어 주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들은 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측면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인 시청자들과 비슷하게 영향을 받지만, 대학생들은 남북 간 이질감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정기 교수는(1998)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국내 방송뉴스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상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KBS, MBC, SBS의 주요 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여 대북 방송 언어의 부정적 심볼(symbols)의 실례를 보여주었는데, ‘철통(철책 또는 영공) 경계 이상 없다’, ‘지하 핵 시설 건설’, ‘핵실험 파문 확산’등에서와 같은 기사 등에서 기사의 보도 원칙과 관련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 내용에 담긴 내재적 의미를 통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는 보도나 북한 체제의 역기능에 관한 보도 ‘외교관 망명’, ‘북 식량난 불안 귀순’, ‘북한에 군사 쿠데타 소문 나돌아’, ‘북한 고위관리 홍콩에 망명 요청’ 등의 기사를 통하여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보도가 이루어졌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는 궁극적으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암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특히 식량위기 이후의 보도마저도, 인도적 차원의 구호를 위한 보도가 아닌 남한의 우월성 강조 혹은 북한사회의 붕괴를 예상하는 듯한 보도가 지배적임을 보여 주었다. 김정기 교수는 북한의 체제가 존재하고 있고 붕괴의 징조를 예측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는 것은 선정성과 이데올로기성이 결합한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조장할 수 있는 방송 보도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언론인들의 맹목적 반공 성향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방송 언론인의 맹목적 반공 성향구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일정한 방향으로 여과되어지는 한 북한에 관한 방송 언어는 반공적인 상정을 양산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심볼이 방송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면 거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효과로는 ‘반북’이라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더욱 증폭시키고, 사회적으로 반공 이념을 고착시킴으로써 대북한 관계를 경색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전문가, 언론인, 학자 57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비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한 연구(방송개발원, 1995) 결과에 따르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방송 목표를 세우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고 방송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방송의 역할에 있어 자제해야 할 프로그램과 남북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화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먼저, 방송해서는 안될 프로그램으로 대북 비방, 조롱 혹은 남한의 우월성을 다룬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남북의 창과 통일 전망대와 같은 프로그램도 방송을 자제해야 할 프로그램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대답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대학생들 뿐 아니라 방송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이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사회의 이해를 돕는 역할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상대방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반면 방송해서는 안될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방송전문가들은 또한 대부분의 코미디 프로그램과 수입 문화를 무분별하게 모방해서 방영하고 있는 쇼프로그램, 타락, 부패, 상류사회를 무절제하게 다루는 프로그램 등, 남북간의 이질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방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북한을 풍자하는 코미디나 이데올로기를 부각하여, 북한의 지도 계층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나 반공정신을 표방하는 프로그램 등은 방송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로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북한 방송 개방도 새 정부의 100대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단계적으로 북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새 정부 100대 정책과제, 1998). 이러한 가운데 명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피상적이지 않고, 깊이 있고 내용이 있는, 방송 교류와 통일 지향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송 정책을 기대해 본다.

3.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3.1 북한인에 대한 정형적 이미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후 반공론에 입각한 통일 교육은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 우리의 경제 상황이 북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자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 교육으로 다소 방향의 전환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젊은이들은 초등학교 시절 반공 표어를 짓고 반공 포스터를 그리며 반공, 송공, 때에 따라서는 멸공 정신을 초기 사회화의 규범으로 성장한 세대이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남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존의 반공 교육은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과 남한에 대한 전체적인 긍정”이라는 이분적이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특징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파괴적인 적대의식을 고취시켰다 (오인택, 1997).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남한의 급격한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북한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대중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면서 남한 주민들의 우월함을 확인하며 자라왔다. 1980년 후반이후 북한의 실정을 알리는 “남북의 창”이나 “통일 전망대”등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사회의 단편적인 생활상을 접하게 되었다. 본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되었던 프로그램이지만, 오히려, 남한의 경제적,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송개발원, 1995; 김정기, 1998).

김정기 교수는 언론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화장한 아이들을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북한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왜곡의 예를 보여주었다. 텔레비전 출연이나 공연을 할 때에는 화장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배 엘리트계층이 북한에 대해 특정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있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체제, 사회, 북한 주민들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나 접촉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남한의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부르고 그들 머리에는 “뺨”이라도 달린 “도깨비”임을 연상하며 막연한 적개심이나 두려움

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다가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나 대중 매체 보도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보도를 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 사람들이 “촌스럽다”거나 문화적으로 “미개한 수준”을 지닌 사람들로 지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형적 이미지(stereotype)를 갖고 있다면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북한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외부그룹 (Outgroup)”으로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정형화된 이미지는 서로에 대한 지식이나 직접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일반화된 편견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Rajecki, 1990).

또한 북한을 다른 민족이나 외국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인식과 같은 이질감을 형성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위기적인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그 구성원들의 반응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서독의 통일 후, 서독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경제적으로 통일 비용을 서독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자, 젊은이들 사이에 신나치(Neo-Nazism)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한 운동이 확산되면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로 그들의 불만이 발산되고,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또한 일단 어떤 집단을 외부그룹으로 인식하게 되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구성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적대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Taylor & Moghaddam, 1987).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한 정형적 이미지는 우리의 인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북한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정형적 이미지와 일관된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형적 이미지에서 벗어난 정보는 듣거나 보더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인지적 착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Tan & Suarchavarat, 1988). 예를 들면, 북한 사람들 사이의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모습이나,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애정 관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다 해도 남한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존재하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외부-내부 그룹과 같은 차별적인 의식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민족'이고 같은 말과 글을 쓰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 왔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남북간 이질화의 심화는 남북한 주민들을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서로간의 원만한 융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된다.

3.2 친근감 형성을 통한 동질성 회복

그렇다면, 우리는 남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감이나 부정적인 정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사회심리학자 자이언스(Zajonc)는 1968년 개인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집단이나 대상에 대해 친근감을 형성하면 그 집단이나 대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평가를 내린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친근감 형성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효과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피실험자들에게 그들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얼굴들을 수 차례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그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은 사진을 통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자이언스에 따르면, 감정적인 친밀감이나 친근감이 형성되면, 그런 감정이 다른 어떤 인지적인 요인들보다 선행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후속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실험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발견한 예로는 구루쉬(Grush)와 그의 동료들이(1978) 정치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현재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서 대중에게 지명도가 있거나, 부정적 이유나 불의를 빚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악명 높은' 후보들이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선거 후보보다 더 많이 당선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유는 매스컴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한 여러 번의 노출 기회가 있었던 유명인사들은 일반인들에게 친근감 또는 익숙한 감정을 형성했고, 그러한 감정을 바탕으로 그들에 대한 다른 부정적인 정보의 영향을 물리치고, 선

거에 당선되는 등의 호의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 친근감 또는 익숙한 느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떠한 대상에 대해 “친근감(Familiarity)”이 조성되면 새로운 이슈나 정보를 받아들여도 그 대상에 대해 형성한 기존의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졌다 (Vinokur & Burnstein, 1978). 따라서 한 대상에 대해 먼저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이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다른 인지적 활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주민에 대해 친근감 형성을 통해 남한 사람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고자 하는 홍보 전문가에게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미 남한 젊은이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은 북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측면이 있는가하면, 또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메시지의 반복적인 노출과 홍보를 통해, 남한 젊은이들이 새롭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견고하게 그들의 머리 속에 인식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북한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의 홍보 메시지가 필요한 것일까? 오인택 교수는 그의 통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1997)에서 통일 준비 교육은 거창한 주제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갈등하며 공존하기, 상대의 고유한 인격을 나의 인격과 동등하게 인정하기, 서로 다른 점 인정하기, 물지배적이고 개방적으로 대화하며 토론하기 등의 가치들이 제대로 교육된다면, 성공적인 통일 준비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의 교육과 아울러 북한 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조성은 ‘인간적인 측면’ 또는 서로의 삶의 과정을 인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과거에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인간성이 배제된 듯한 획일화된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모습에서조차 동심을 느끼기 어렵고, 그들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작위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들의 맑은 동심, 남한의 어린이에게서 볼 수 있는 웃음 등을 보여준다면,

그들에 대해 기존에 남한 사람들이 느끼던 이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홍보 전략을 반영한 메시지에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면,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을 하는 모습을 알게 해주는 것이 남한 젊은이들에게 친근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들의 생활상이 우리가 납득하고 익숙한 상황설정에서 소개될 때 친근감의 조성이 원만하게 이뤄지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우리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북한의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라든지 취미생활을 알려준다거나 여성들 사이에 옷차림에 대한 유행 등의 관한 정보는 그들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면서 북한 주민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외부집단(Outgroup)이라는 인식이나 부정적인 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경제 수준 차이로 인해 그들의 생활상이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수준이 낮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주어진 홍보 메시지가 우리와 다른 점이나 뒤떨어지는 점보다는 남한의 일상과 비슷한 점을 강조한다면 같은 민족이라는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현재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여행을 통해 직접적인 접촉이나 경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홍보의 채널은 대중 매체다. 대중 매체 의존 이론(media dependency theory) 따르면, 사회의 확대에 따라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대중 매체의 보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도기사의 방향성에 따라 개인의 어떤 사건에 대한 지각, 판단 등이 좌우된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는 지난 91년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 지구촌 전세계의 사람들은 오로지 CNN의 보도를 통해서 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걸프전 상황을 이해했던 것이다. 북한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방송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다. 여태까지 북한의 생활상을 알리기 위해 방송되었던 소수의 북한 관련 방송들은 우리가 북한 주변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소개된 내용들이 북한의 정치, 사회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들의 뉴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선전의 성격이 강한 정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친근감 형성’이 홍보나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목표라면, 우리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생활상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친근한 드라마 프로그램 등의 형식(format)을 이용하여 북한의 모습이나, 북한 도시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의 일상에서 남한의 생활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심어주는 것도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귀순한 인물을 설정하여 남한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그린다는 등의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존의 북한 사람들이나 생활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받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균형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상의 소개를 통해 북한에 대한 무지를 줄여주고, 일상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같은 체제 안에 있고 같은 정치적 사상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흑인과 백인간의 갈등이나 대립의 이슈는 남북한의 단절과는 여러모로 다른 상황일 수도 있으나,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에 대해 외부집단 편견(outgroup bias)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남북간의 이질감이나 편견을 해소하는 데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경험이 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백인들은 흑인에 대한 ‘외부집단 편견(outgroup bias)’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편견은 사회 전반에서 차별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자 흑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폭동이나 시위 등의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었다.

백인과 흑인사이의 편견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존속하면서 전체적인 사회발전에 비생산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계속되자, 1990년대에 들어서 흑인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이해를 형성하기 위하여 흑인들의 가족관계나 사고방식을 다룬 드라마 등이 많이 제작되었다.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무조건적 우월주의나 적대감을 줄이기 위해, 같은 나라에 속한 운명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비슷한 감정과 습관을 가진 존재로서, 흑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가족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트콤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였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 인격적인 존재이며, 서로 다른 집단에 소속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흑인과 백인이 원만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이나 일화를 보여주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백, 흑인 융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보 분야에서

도 흑인과 백인이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임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빈번히 방송해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술한 대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려면, 그들에 대한 정보에 반복적으로 남한 젊은이들이 노출 되어야하고, 남한 젊은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착적인 이미지를 타파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정권의 변화나 구체적인 통일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통일의 주체인 남, 북한 주민들의 원만한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북한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고 신고의 대상으로 지각했던 것이 사회의 규범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인이나 우리나라 모두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교육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중 매체를 통해 북한주민의 삶과 생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에서 다루는 북한 관련 보도나 방송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최근의 정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Henderson-King & Nisbett, 1996; Power, Murphy, & Coover, 1996), 흑인 한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듣거나 보게 되면, 그 하나의 사건이 흑인 전체 집단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다른 흑인을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흑인이 다른 사람에게(인종에 관계없이) 사회적 관계에서 화를 심하게 내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백인들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흑인에 대해서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흑인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들, 즉 백인에 대해 더 강한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백인이 흑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 정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발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도 우리들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더 우려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또는 반공적인 보도나 방송을 통해, 남한 사람들의 내부집단에 대한 편견 (ingroup bias)이 - 남한 사람들끼리의 집단 의식 -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남한 사람들간의 강한 집단의식은 남북한 화해나 동질감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통일이 되어도 남북간 융화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3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과 개인의 참여

3.3.1 남북한 교류의 개인, 민간단체 수준의 참여 현황

개인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을 논하기 전에 현재 남북한 현실에서 과연 남한 사람들은 남, 북한의 교류에 얼마나 개인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등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가 얼마나 가능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부의 집계(남북교류협력동향, 1998)에 따르면, 북한 주민접촉 신청은 매해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 이산가족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89년-98년 5월 현재) 통일부를 통하여 3900여건의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신청이 있었고 그 중 1100여 건의 성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민간 교류의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제적 교류로써, 2600여건의 경제교류 신청이 있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1300여건이 성사되었다. 이는 오히려 이산 가족 교류보다 상대적으로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학술, 문화, 체육, 예술, 관광 등의 각 분야는 50건에서 100건 이내의 다소 소극적인 교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민간 단체나 개인 차원의 교류는 지난 10년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산가족이 1천만이라고 추정할 경우(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5) 1100여건의 성사에 실제 상봉에 참여한 1265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의 주선이 있기는 하였으나, 개인의 자격으로 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핏줄을 찾고 나누는 등의 교류가 지극히 미미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관련한 활동에 관한 한 개인의 참여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간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회나 인적교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한보다는 북한이 그러한 교류를 꺼리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남북간은 지난 91년 12월에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

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이미 쌍방관계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남북간 교역을 원칙적으로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장에서 남북교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의 국적선 입항을 거부하고 있어 남북 해운에는 남북한의 국적선이 아닌 제 3국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북간의 원만한 교류를 저해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민간 단체 차원의 교류 중 가장 두드러진 사업은 금강산 관광사업 개발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8월 북한측의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각각 50%씩 출자하여 북한 장전 지역에 금강산 관광개발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관광선을 운항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이러한 관광사업에 통일 그룹도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대 그룹과는 별개로 북한과 독립적인 계약을 맺는 등 활기를 띠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의 경제계는 이러한 사업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경제협력 사업을 다각화하여 남북한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과 인공위성 발사 사건 등으로 대북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의 연기 가능성, 관광 사업의 실행 지연 등이 시사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는 민간 단체의 주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돕는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25일에는 기아에 허티어는 북한 동포를 위한 '국제급식의 날'을 정하여 하루 굶기 행사를 펼쳤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와 사회 단체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24시간 동안 굶으면서 북한 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것이었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가한 이 행사를 통하여 남한 국민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도 1일 단식 행사에 참여를 통해 북한 사람들을 돕고, 같은 동포로서 자신이 북한의 다른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참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행사로써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대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또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등 78개의 종교, 시민, 사회 단체는 남북 어린이 돕기 백만인 걷기 대회(1998, 9,6) 등을 개최했었고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

기도 했다. 최근에는 민간단체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현정회, 대중교, 단군학회 등의 민간단체들이 개천절을 기념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갖자고 북한에 제의하며(1998, 9, 16), 남과 북에서 'IMF위기의 원인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주제의 학술 회의를 비롯하여 강화도 마니산 천제, 문화 잔치 등의 문화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준비 회담을 열자고 제의하는 등의 교류를 꾀하고 있으나, 북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불투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교류의 노력은 대부분 적은 규모이고, 소수 단체들이 모여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고 남한 국민 개개인에게 통일 의식을 고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3.2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

이와 같이 북한 사람들과의 제한적 교류만이 허락된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의 주체라고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북한 통일의 주체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국민 모두”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국민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강했다. 한편, 통일 주체가 정부나 정치정당이여야 한다는 생각은 약 9%정도로 낮은 경향을 보였고,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대학 재학생 층이 통일의 주체를 국민전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다.

국민 모두가 통일의 주체라는 의식은 통일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고, 통일 후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더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주체의식이 단순히 의식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들에게 있어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으로 연결하여 지각된다면, 통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관심과 참여가 민족 동질성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political efficacy)은 개인이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정치적 과정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결과에 반영되고 그러한 결과들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피스케(Fiske, 1987)에 의하면 그러한 자각이 없이는 한 개인의 정치적 참여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라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사건에 대해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이 없이는, 그러한 과정에 필요한 노력이나 참여는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효능성이란 개념은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 요인이나 저해 요소를 알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서 느끼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 의식(a sense of control)이기도 하다 (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88).

켈리와 켈리의(Kelly & Kelly, 1994) 연구에 의하면, 집단목표에 대해 동일시(identification)를 덜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치적 효능성이 집단적인 행동(collective action)에의 참여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통일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통일에 대한 의식이 약한 개인일수록, 자신의 행동이 통일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어야,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약한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도 통일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신들의 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면, 통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행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정치적 효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 대학생 층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효능성을 심어준다면, 통일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행동적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통일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그러한 정치적 행위는 소수의 지배계급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통일이라는 이슈에 대해 정치적 효능성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일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므로 그들의 참여 의식이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통일을 실현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개인에게 정치적 효능성을 고취시키는 홍보 전략은 실질

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홍보전략을 세우고자 할 때, 개인의 정치적 효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인 측면에 무관심을 나타내는 다수의 미국인의 투표 행동과 정치적 효능성에 관한 핑켈톤, 오스틴, 포트만(Pinkleton, Austin, & Fortman)의 연구(1998)에 따르면 개인이 정치적 냉소주의(political cynicism)에 빠지면 정치적 참여 - 투표행위 - 에 대한 관심을 잃고, 정치 체계에 대한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표현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핑켈톤과 그의 동료들은 대중 매체의 역할에 있어서 정치 상황이나 정치적 참여에 대한 피상적인 보도 또는 부정적인 정치 선전이나 정치광고 등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북한 관련 보도에 적용한다면, 선전적이고 결합기 식의 북한에 대한 보도가 결국은 통일에 대한 냉소주의나 무관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들이 정치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특히, TV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정치적 행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신문이나 시사지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많이 획득한 사람들도 대중 매체를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능성(a sense of efficacy)에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효능성을 느끼려면, 먼저 그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를 인지하고, 그 상황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인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부적절한 요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치적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남북간의 단절이 우리 민족의 발전의 저해 요소임을 알리고, 단절이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 관련한 정보를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그들이 통일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또는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이 취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고 남한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통일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냉소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존의 냉전 논리나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식의 정보제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통일이나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실상의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한만길, 1998), 대체적으로 북한은 살기 힘든 곳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이는 정도이다. 남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북한 주민을 ‘불쌍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또는 제한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 수준으로는 같은 민족으로 동일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미흡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이든지 개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개인의 효능성을 높이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상이나 주민 생활을 바로 이해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4. 대국민 홍보전략의 제안과 실효성

4.1 홍보 전략의 정책적 방향과 제안

통일을 위한 홍보의 기본적 전략은 지난 4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을 극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자유와 복지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준비하고 완성시키는 데 요구되는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황병덕 1997).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서로간에 이해와 화해의 기회를 가지며,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들이 통일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또는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이 취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고 남한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통일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냉소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존의 냉전 논리나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식의 정보제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통일이나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실상의 이해와 인식의 정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한만길, 1998), 대체적으로 북한은 살기 힘든 곳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이는 정도이다. 남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북한 주민을 ‘불쌍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또는 제한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 수준으로는 같은 민족으로 동일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미흡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이든지 개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개인의 효능성을 높이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상이나 주민 생활을 바로 이해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4. 대국민 홍보전략의 제안과 실효성

4.1 홍보 전략의 정책적 방향과 제안

통일을 위한 홍보의 기본적 전략은 지난 4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을 극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자유와 복지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준비하고 완성시키는 데 요구되는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황병덕 1997).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서로간에 이해와 화해의 기회를 가지며,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홍보의 방향은 첫째, 북한 사회를 바로 보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시각에서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북한의 실상이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국민간에 그 동안 쌓였던 민족적 이질감, 체제적 이질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통일에 대비한 방송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상호 객관적 인식을 밀도 있게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MBC, 1998). 반공적인 메시지나 체제 대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남북간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관계를 다룰 때도, 그러한 보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동포라는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탈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탈북자들도 남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 방송국이 북한에 들어가 찍은 북한 풍경과 주민들의 모습을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KBS, 1998). 이러한 주장은 남한 주민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 북한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다수의 탈북자들은 북한의 학교 교육에 대한 방송이나, 북한의 사상 교육과 주민의 의식 성향을 방송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남한 주민들이 북한의 일반 교육 및 사상 교육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사상을 알아 가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둘째, 남북간의 누적된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점차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적인 동질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는 장으로는 대중 매체, 특히 방송을 통해 효과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KBS 통일방송연구소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연구에(1998) 따르면,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문화를 추구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총 118명의 탈북자들은 남한의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가 좋아할 만한 텔레비전 방송으로 ‘용의 눈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대하드라마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역사 드

라마가 남북 주민에게 모두 적합한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김정기 교수도(1998) 탈 이데올로기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한 주민이 모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편성과 더불어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남한과 북한주민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남북간에 공유하는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역사적 유산을 소개하는 '역사 다큐멘터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북한주민에게 남한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KBS 전국 네트워크'와 같이 남한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제도 등을 소개하는 정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응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도 남북간 문화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열린 음악회'와 '가요무대'같이 탈 이데올로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의 대중 음악을 소개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외의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동질감의 회복을 꾀할 수 있는데, 최근 SBS 방송에서 방영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나, 북한에서 행해지는 전통 춤 등의 소개를 통해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정서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 볼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남북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방송 정책이 수립된다면,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 주민들은 바람직한 문화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홍보 전략 방향은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이 감정과 욕구를 지닌 인간적인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서도 소개된 바 있듯이, 남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북한은 어린이조차도 동심을 느낄 수 없는 꾸며진 모습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있고, 북한 사람들은 가족들도 서로 고발하고 감시하는 비인간적인 존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의 획일적인 모습이나 어부에서 우리와 같이 다양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 대해 남한 주민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한 시점에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닌 동포라는 것을 지각하고 친근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홍보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대중에게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은 역시 대중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유동희도(1996) 탈이데올로기적이면서 상대방의 생활 모습을 진솔하게 담은 보도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생활 드라마가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방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탈북자들도 남한사람에게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방송해야 한다는 응답(84.7%)이 가장 많았다(KBS, 1998). 일상 생활을 알리는 것이 탈북자들의 시각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힌 것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생활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이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다수의 탈북자들은 남북주민의 생활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꾸며야 한다는 의견을 94명(79.7%)이 제시했다. 비교를 통해서 서로의 생활상에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알아 가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발상에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방송관계자들의 숙고를 기대해 봄직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보여주는 인간적 관계 형성이나 감정적 교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북한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느끼거나 우월감을 가졌던 것을 해소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사실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같은 민족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의미를 가진 통일이라는 방향에서의 홍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통일이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우리 민족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이고,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통일이나 자신의 중요한 문제이고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라는 의식이 없고, 통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면, 통일의 과정이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효능성을 느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효능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에 관련된 행사나 사업에 자발적 참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한 홍보는 단순히 정부의 통일 정책 홍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

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통일이 국민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되든, 과도기적 혼란 상황에 관한 정보가 되든, 국민들이 상황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가져야만, 보다 원만한 통일의 과정을 이끌어 갈 것이고, 개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라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통해 우리민족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나 국가적 유익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통일을 달성하고 북한과의 융화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는 홍보에서부터, 통일 준비를 위한 홍보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일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과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의견을 가질수록 남한의 젊은이를 비롯한 일반 대중은 통일을 통한 “변화”를 원치 않을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통일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통일을 이룩하고자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행동적 차원에서의 전략의 일환으로 개인 참여의 기회, 개인이 통일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남북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남북한 지방자치 단체간의 자매결연 및 문화 행사와 관련한 각종 행사 등을 남한지역은 물론, 북한 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을 이용해 민속놀이나 고장의 풍습에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남북한의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청장년 층을 중심으로 한 동호인 클럽들의 북한지역 설치 및 교류방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개인적으로 북한사람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협조와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와 남한 가정 연결하거나 하루 금식운동을 통해 북한 어린이 돕기와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도 북한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 예술 교류도 활성화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 유산과 전통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통

해 서로에 대해 공통적인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동질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주체의식을 느낄 수 있고, 통일의 당위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2 포커스그룹의 운영 방법과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앞에서 제시된 홍보 전략을 반영한 메시지가 남한의 젊은이들에 어떻게 지각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전술한대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나 북한의 체제에 관한 정보보다는, 그들의 일상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그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대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효과는 메시지에 노출된 대학생들의 토론에서 기존의 북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북한 사람들과의 동질감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되었다.

포커스 그룹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제한된 주제에 대한 인식 또는 지각을 연구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토론”(Krueger, 1988)으로써 대개 5-6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 토론에 참가하고, 중재자(facilitator)가 토론을 이끌어간다. 이 중재자는 토론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느슨한 프로토콜(protocol)에 의해 토론을 유도한다. 관심의 대상에 적합한 서너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재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포커스 그룹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어떤 인식이나 태도를 보이는 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표현된 의견이나 생각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는 어떤 현상에 관한 토론 참여자의 의견이나 견해의 패턴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토론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북한의 일상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보여준 뒤, 메시지에서 묘사된 북한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떤 인식 또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4.2.1 포커스 그룹의 운영 방법

대학생 35명이 포커스 그룹을 통한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5-6명이 하나의 그룹

이 되어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이 묘사되어 있는 메시지를 읽은 후 포커스그룹의 중재자가 준비된 질문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각각의 포커스그룹은 대략 50분 정도 동안 주어진 메시지를 읽고 느낀 소감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였다. 그들이 읽은 내용은 민성길과 진우택의 연구 논문(1997)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는데 다만, 포커스 그룹에 참가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 신빙성을 심어주고, 그들이 진지한 태도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그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 생활을 묘사한 것이다.

북한 젊은이들은 전반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편이며, 새벽운동으로 철봉, 평행봉, 축구 등을 즐긴다. 학교에서는 사회주의 이론을 암송하고, 사회 행사에 동원되기도 하지만, 여가시간에는 자기들끼리 어울려 패거리를 만들어서 다니는 편이다.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철봉, 평행봉, 축구나 그 밖의 놀이를 하기도 한다. 대화의 화제는 대체로 TV를 본 이야기, 여자 이야기(누가 예쁘다 등), 그리고 동네사건 이야기, 남한 이야기 등을 한다고 한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남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성교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하지만, 그다지 기회가 많지 않다.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데이트를 즐기지만 밤에 따로 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평양에는 가로등이 있기는 하나, 깡패들이 반드시 희롱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여자들은 함께 모여 남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수다 떠는 시간이 많다. 누구를 좋아하느니, 그 사람의 행동이 오늘 어떠했느니 등의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책을 읽거나 모여서 노래하는 것을 즐긴다. 남한 책으로는 태백산맥, 장길산 등이 알려져 있고 노래는 이념적인 것보다는 생활이나 남녀 관계에 대한 것이 인기가 있다. 남한 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데, 북한 젊은이들은 그것이 남한 노래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정 생활에 있어, 대다수 핵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데, 가난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오히려 남한보다도 더 돈독하다고 탈북한 젊은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주로 큰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고 머리가 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개의 젊은이들은 집안,

조상, 가문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편이고 부모들도 그런 일에 대해 이야기 해 주는 일이 드물다고 한다. 제사는 1년에 1회 정도 할아버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치러진다고 한다.“

위의 메시지를 읽은 후, 토론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4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대학생들이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 생활과 그들의 생각 등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에 대해 친근감을 형성하게 되고 기존의 북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3가지 영역에서 질문이 주어졌고, 마지막으로, 북한인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다소나마 동질성을 회복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한 개인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통일에의 참여에 대한 질문을 마련하였다.

토론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1)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우리의 일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질문하고, 2) 일반적으로 북한인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가졌었는지를 물었으며, 3) 통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하였으며, 4) 통일에 대한 나의 의지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중재자의 역할을 최소한 한 상태에서 서로의 견해를 주고 받을 것을 권유했다.

4.2.2 결과 분석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토론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1)북한 젊은이들의 일상이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었고, 자유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읽어 가는 순간, 우리와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보의 진위를 다시 확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릴 때 반공 포스터를 그리던 것들이 아직도 머리에 박혀서 그런지 북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을 한다는 게 안 믿겨져요.”), (3) 북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 같다는 (“친구들과도 별로 안 놀고 사상 교육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성 교제도 하고 기존의 알던 것보다 개방적인 것 같아요.”) 내용이 가장 빈번하게 토론되었던 내용이었으며, 시대 흐름에 따라 북한도 변하는 것 같다 라든지 70년대의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자주 보고되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주어지자, 토론자들은 (1) 억압받고 김일성 찬양만 하는 모습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예전에 들었을 땐, 북한에 5호 담당제가 있어서 이웃과 가족을 서로 감시한다던데 이 글을 읽고 가족간에 서로 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는 ”책에서 보면, 김일성 초상화를 그리다가 얼굴을 밟아서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것처럼 북한의 체제가 그런 것이죠.“). 또한 (2)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토론자들은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1)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교류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 교류 없이 통일이 된다면 많이 어렵겠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한다면 오히려 유대감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2) 경제적인 이유나, 체제의 차이 때문에 통일후의 혼란이 걱정스럽다거나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아직은 통일이 시기상조입니다. IMF체제에서 나라가 어려운데 햇볕정책으로 금강산 개발하고, 그만큼 돈을 써서 북한이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북한은 호의적이지 않아요. 잠수함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가 양보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한 35명의 토론자들 중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비온적이나마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토론자들도 있었다 (“우리세대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저부터 꼭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통일에 대한 나의 의지나 참여 가능성에 대한 토론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론자들이 그러한 토론의 방향에 호응하여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먼저 나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가 있었다. 또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빈번히 등장했는데, 특히 청소년 교류기관등의 설치에 대한 의견과 관광 사업이나 북한 지역 개발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홍보나 통일 교육에 관한 제안도 있었는데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 너무 무지하니 더 알고 싶다는 의견과 북한인의 좋은 점을 자꾸 보여주어 친밀함을 느끼도록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 등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포커스 그룹을 통해 토론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먼저 북한의 생활상이나 주민들의 일상적인 정보를 통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성교제를 하거나 이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와 다른 것이 없다면, 공통점을 발견하며,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반응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가족관계 등의 인간적인 정보는 그들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메시지를 대하는 남한의 대학생들은 제공된 정보의 사실여부에 대해 빈번히 질문하였다.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나 북한 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관념에서 많이 차이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의 신빙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고,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깊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의 참여나 개인의 의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향이 어긋나게 된 것은 통일에 있어서 나의 참여라는 것에 대해 토론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토론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 정치인이나 정부가 어떻게 해야한다는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이 통일이라는 과정에서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도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논의나 의사결정들이 모두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이었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자극히 제한적인 상태였으므로, 한 개인의 참여 의지의 표출은 소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는 정도이지, 자신의 행동이나 참여가 통일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지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대다수가 통일의 주체가 국민 전부라고 응답했던 것은 어쩌면, 피상적으로 인식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되어야할 당위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각자가 자신을 진정한 통일 주체로써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대학생 집단은 여전히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 후의 혼란이나 경제적 고통 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IMF 경제 위기상황이란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에의 의지나 관심이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체제가 시작된 후에도,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홍보나 교육은 통일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체제대체제의 통일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화합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통일에 대한 호응,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한 대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태도 분석을 통하여, 부정적으로 고착된 이미지를 해소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그 방향은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존재이며,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비슷한 일상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통해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도 통일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도록, 통일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의 홍보는 일단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을 제안했다. 이에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회의적인 태도를 해소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통일이라는 민족 과업에 참여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홍보 전략을 소개하였다. 또한 기존의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중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홍보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홍보 전략의 제시를 통해서, 정부, 대중 매체, 통일 관련 민간 단체들이 통일 세대가 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통일 의식을 고양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김정일 체제가 시작된 후에도,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홍보나 교육은 통일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체제대체제의 통일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화합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통일에 대한 호응,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한 대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태도 분석을 통하여, 부정적으로 고착된 이미지를 해소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그 방향은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존재이며,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비슷한 일상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통해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도 통일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도록, 통일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의 홍보는 일단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을 제안했다. 이에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회의적인 태도를 해소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통일이라는 민족 과업에 참여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홍보 전략을 소개하였다. 또한 기존의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중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홍보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홍보 전략의 제시를 통해서, 정부, 대중 매체, 통일 관련 민간 단체들이 통일 세대가 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통일 의식을 고양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중.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방안. 송실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2
- 김정기. 정치적 심볼로서의 대북 방송언어: 그 문제와 처방을 위한 시론. 한국방송인
총연합회. 1998
- 남영진.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교류연계 방안.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5
- 대학 통일문제 연구소. 민족통일과 청년학생. 1990
- 민성길, 전우택.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 통일연구, Vol. 1, No. 1, 141-173, 1997
-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연구, 1995
- 박형숙. 남북한 방송교류의 과제와 전망. 한국언론연구원. 1992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사,
1997
- 송자, 이영선. 통일 사회로 가는 길. 서울: 오름 출판사, 1996
- 신영호.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법상의 문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소- 제10회 통일문제 심포지엄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1994
- 오인택. 통일 교육의 방향. 통일준비 서울: 오름 출판사, 1997
- 양성철. 대학생의 통일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평가”. 경희대학교 한국정치 연구소.
1993
- 유동희 남북방송교류의 전망과 통일방송의 기능. MBC 문화방송. 1996
- 이우영. 대학 통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연구, Vol. 1, No. 2, 53-76, 1997
- 이윤구. 남북한 청소년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이윤식. 남북한 교류·협력방안 확대방안. 송실대학교 통일문제 연구소. 1992
- 이창현. 북한 방송의 개방에 따른 경향 분석 및 KBS의 대응전략. KBS 통일방송연구
소. 1998.
- 조혜정. 남북통일의 문화적 차원: 북조선과 남한의 문화적 이질성 논의와 민족주의,
진보주의 담론.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오름 출판사, 1996
- 조혜정. 통일 공간과 문화: 비판적 재해석. 통일연구, Vol. 1, No. 1, 69-87, 1997

- 조혜정. 분단과 공존: 제3의 공간을 열어나가는 통일 교육을 지향하며, 1997.
-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 교류협력 동향. 제 83호 1998
- 통일원. 남북간 민간부분 접촉·대화문제. 1995
- 한국방송개발원. 북한방송의 개방에 대비한 정책과제와 대국민 영향력 분석 연구, 1993.
- 한국방송개발원, 통일 대비한 방송프로그램 연구, 1995
-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공사 남북한 연립주의적 방송교류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한 방송교류의 구조적 방안을 중심으로”. 1992
- 한국방송공사 통일방송연구소. 귀순, 탈북자들의 남북한 방송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보고서. 1998
- 한국청년문화연구원, 중부지역 청년층의 통일의식 조사. 1993
- 한단길. 남북한 학생의 통일의식과 교육의 과제.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의 과제. 제5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1998.
-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7

〈외국 문헌〉

- Cundy, D. (1990). Image formation, the low involvement viewer, and televised political advertising. *Political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7, 41-59.
- Grush, J., McKeough, K., & Ahlering, R. (1978). Extrapolating laboratory exposure research to actual political ele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257-270.
- Henderson-King, E., & Nisbett, R. (1996). Anti-Black prejudice as a function of exposure to the negative behavior of a single black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54-664.
- Hinkle, S., Fox-Cardamone, L., Haseleu, J., & Irwin, L.(1996). Grassroots political action as an intergroup phenomenon. *Journal of Social Issues*, 52, 39-52.
- Jussims, L., Coleman, L., Lerch, L. (1987). The nature of stereotypes. A comparison

- and integration of three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36-546.
- Kelly, C., & Kelly, J. (1994). Who gets involved in collective action?: Social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individual participation in trade unions. *Human Relations*, 47, 63-89.
- Power, G., Murphy, Sheila, & Coover, G.(1996). How stereotypes and counter-stereotypes influenc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credibility among ingroups and outgroup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3, 36-58.
- Rajecki, D. (1990). *Attitudes*. Sunderland, MA: Sinauer Associates Inc. Publishers
- Rosenstock, I., Strecher, V., Becker, M. (1988).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Quarterly*, 15, 175-183.
- Perloff, R. (1993). *The Dynamics of Persuas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Zimbardo, P., & Leippe, M (1991). *Resisting and embracing influence. The psychology of Attitude change and social influence*. McGraw-Hill: NY
- Krueger, R. (1988).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Tan, A., & Suarchavarat, K. (1988). American TV and social stereotypes of Americans in Thailand. *Journalism Quarterly*, 65, 648-654.
- Taylor, D., Moghaddam, F. (1987).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Praeger.
- Vinokur, A., & Burnstein, E. (1978). Depolarization of attitudes in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872-885.
- Zajonc, R.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 Zajonc, R. (1984). On the primacy of affect. *American Psychologist*, 39, 117-123.

새 統一 韓國의 영·유아 教育 研究



林明姬(동남보건대학)

목 차

<요약문>	225
1. 문제제기	229
2. 새 통일 한국 교육의 방향	233
3.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	247
4.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255
5.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과정	274
6. 결론	301
※ 참고문헌	305

【요약문】

세계화·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는 급박한 변화와 발전의 향로에 있다. 지난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분단 41년 만에 통일의 기쁨을 맞이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정치·사회·경제·교육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통일 후의 모습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연구자는 통일 후를 대비하여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의 방향을 연구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자는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의 연구 방향을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첫째, 새 통일 한국 교육의 방향.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유아 교육관, 셋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넷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과정이다.

사실상, 북한과 남한의 취학전 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의 유아교육과는 달리, 북한의 취학전 교육은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사회주의 교육사상과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고, 유아의 연령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일원화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은 정치사상교양과 보편적인 교육으로 구분하며, 집단주의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과의 상이함을 반영하여, 연구자는 네 가지 연구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교육의 미래 즉,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의 방향은 (1) 적응을 위한 교육, 변화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2) '성숙한 문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모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 (3) '인간 존중의 가치'를 정립시켜 줄 수 있는 가치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4) 사회의 평등화, 교육의 평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5) 교육의 전문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6) 세계적 수준의 학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7) 교육제도의 개방성·효율성·다양성을 이루어야 한다. (8)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9) 교육의 고유성·독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은 (1) 투철한 민주의식을 지닌 사람, (2)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 (3) 성숙한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 (4) 높은 심미적 안목을 지닌 사람, (5)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 (6) 주체적인 사람, (7)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8) 거국적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 등이다. 다음으로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관은 (1) 새 통일 한국의 인간상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다양한 유아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연령에 따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유아교육이 계획되어야 한다. (4) 유아의 능력,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다변하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기본 원칙은 (1)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일원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2)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취학전 1년 기간학제화 하여야 한다. (3)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취학전 1년 만 의무부상교육화 하여야 한다. (4)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제정부담에 있어 정부 주도의 국가 및 지방 부담, 민간인 주도의 자체 부담 등 제도를 다양화 하여야 한다. (5)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국가 순위 고사에 의한 교사의 신분보장제도(교육공무원회)를 도입하여야 한다. (6)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평등교육을 지향하며, 수혜자의 선택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새 통일 한국에 적합한 유아교육체제를 제시하면, (1) 연령 기준에 따른 역할 분담 체제로 운영한다. 즉, 0~만 3세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보육시설 체제로 운영하고, 만 4~5세까지는 교육부 주관의 유치원 체제로 운영한다. (2) 0~만 3세 교육은 연령 수준에 적합한 보육위주의 교육기능을 전담하고, 만 4~5세 교육은 연령에 적합한 교육위주의 보육기능을 전담 한다. (3) 0~만 3세의 교육은 현행 남한의 보육시설 체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단,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써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 (4) 만 4~5세의 교육은 유치원에서 관장하는데, 특히 만 5세는 의무무상교육 대상자이므로 많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일단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두고 초등학교내에 부설화시킨다. 이때 병설 유치원은 특성상 만 5세반만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 사립유치원을 법인화 해야 한다. 원장의 선택에 따라 법인화하지 않을 경우는 만 5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부리가 따르므로 이 경우 만 4세아 전담유치원으로 규정하여 만 4세아만 교육한다. 만 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게 되면 이 경우는 만 4세반과 만 5세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에서는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의 만 5세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즉, 만 5세 담임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 개·보수비를 비롯한 시설보강사업비등 만 5세아 교육에 합당한 보조금 항목을 책정하여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한다. (5)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교사에 한한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국가고시제도는 교사들의 질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이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과정은 연령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즉, 0~만 3세아는 보육시설중심의 영아보육과정, 만 4~만 5세아는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시 각각의 영아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보육 및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만 0세아(1~12개월)의 보육목표는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영역, 대물인지영역, 기본정서영역, 영양 영역 등이다. (2) 만 1세아(13~24개월)의 보육목표는 내재적 흥미의 자율적인 표출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운동영역, 신변처리영역, 기본언어영역, 표상영역, 건강영역 등이다. (3) 만 2세아(25~36개월)의 보육목표는 자기체험의 주도적 표현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운동영역, 기본생활영역, 개념학습영역, 언어영역, 정서영역, 안전영역 등이다. (4) 만 3세아(37~48개월)의 보육목표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신체영역, 기본생활영역, 언어영역, 수영역, 정서영역 등이다. (5) 만 4세아(49~60개월)의 교육목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으며, 교육영역은 신체건강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등이다. (6) 만 5세아(61~72개월)의 교육목표는 창의적 사고의 개발에 있으며, 교육영역은 신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등이다.

1. 문제제기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지난 1990년 10월 3일, 분단 41년 만에 통일의 기쁨을 맞이한 독일의 모습을 기대감과 함께 생생히 지켜본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과거 동-서독간의 41년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질감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독 지역은 동독 지역과의 막대한 경제적 투자로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 동독 지역에서는 교육제정·직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한 채 해결난국에 처해 있다. 이처럼 독일은 통일로 인해, 정치·사회·경제·교육의 양상이 급변하게 바뀌고 있다(이명환, 1996). 이에 우리도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통일 후의 모습을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상, 정치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물론 교육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영·유아기 교육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에 우리는 통일 후의 모습을 예측하여 그에 적합한 영·유아기 교육에 대해 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한 시대적 사안이라 하겠다.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언제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누구에 의한 것이든 반드시 이룩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모두는 격동기를 겪게 될 것이다. 즉, 정치의 통일, 경제의 통일, 사회의 통일, 교육의 통일 등이 이룩되는 과정에서 대혼란과 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 민족의 동질성에 입각한 교육을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상, 통일과정에서 가장 첨예화 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영·유아 교육이다. 범국가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새로운 통일된 교육문화를 창조해내야 한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초등학교는 일본, 가장 훌륭한 중등학교는 독일, 가장 훌륭한 대학은 미국이다.”라고 언급되어진 바 있다(정범모, 1996). 그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유아교육기관은 어느 나라인가? 이는 한국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새 통일 한국이어야 한다. 이에 새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영·유아 교육의 방향은 민족성 정립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통일 한국에 대비하여 새 통일 한국 고유의 영·유아 교육의 제반 측면을 연구하여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새롭게 모색해야 할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

기에 앞서,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교육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한 교육체제의 개편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하는 등의 교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새 통일 한국은 한 민족의 동질성에 입각한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 이에 동질성 추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이종각, 1997).

첫째, 교육분야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폐쇄적인 관계를 개방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교육에서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탈피하고 개방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분야에서의 남·북간의 협력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남·북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질성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동질성을 찾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교육체제를 각각 독자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동시에 통일이라는 민족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독자적으로 교육체제의 개편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남·북한 모두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로 자국의 교육체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체제의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남·북한은 각자의 통일대비 교육체제 개혁과 동시에, 통일된 이후에 남·북한 교육이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교육체제를 구상하여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북한의 교육체제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다 발전적인 새 통일 한국의 교육체제를 구상하여야 하겠다.

이제 연구자는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현재 유아교육 분야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기본 문제들을 정리·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서 혁명과 해방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며,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기술교육을 강조하지만, 그 전제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 즉,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의 양성을 교육의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듯 '인간개조'의 입장에서 사상교육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유아교육부터 시작된다. 현재 북한의 교육은 국가·사회의 책임이며, 따라서 집단주의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윤미량, 1996). 따라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우리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의 인간관, 교육관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이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인간은 개조 가능하다'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로 인식·해결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북한에서는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강조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인간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해석·해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피동적이고 무책임적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다(김태완, 1996). 따라서 이점 역시 우리가 바르게 숙지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남·북한의 교육현실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보육 및 유아교육현실을 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더 어린 나이에 사회 전선에 뛰어들게 제도화 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 교육 중 높은 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의무교육화 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학교체제는 장기간(11년) 동안 사회에서 교육제정의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실정이다. 특히 취학전 만 5세아 1년(북한의 경우 유치원 높은반 1년과 동일)의 경우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지 않다. 통일 후 현재 우리나라의 체제를 그대로 적용할 시 북한 지역 국민들은 개인의 교육비 부담에 큰 곤욕을 치루게 될 것이다(윤미량, 1996). 이는 통독 후 구동독 지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같다. 따라서 현재 양국가의 교육제정의 문제는 통일을 대비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숙고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넷째, 남·북한의 유아교육체제를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일관된 유아교육체제와 공교육화가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사회 주도적 교육체제로서, 일관되게 보육과 교육이 잘 연계되어 있고 더 나아가 후의 일반 교육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윤미량, 1996). 이런 교육체제 속에서는 생애에 걸친 교육이 영·유아기부터

가능함을 실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보편적 조기교육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영재성을 조기에 발굴해 낼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유아교육체제중 바람직한 면을 통일 후에도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것은 모두 없애고 남한의 것만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의 보육 및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보육 및 유아교육 제도는 우리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간 개조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재정 부담의 주체에서도 우리와는 다르다. 또한 보육·유아교육체제,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더 나아가 교원양성제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임제택, 1996). 물론 학제도 다르다. 이점 또한 우리는 깊이 숙지하여 통일에 대비해야 하겠다.

이상의 통일과 관련된 유아교육계의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아동의 발달적 특징과 심리적 특징을 기초로 한 이상적인 유아교육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새 통일 한국에 맞는 새로운 유아교육의 목적 및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김숙자, 1997 ; 이항재, 1997 ; 임명희, 1997 ; 최한수, 1997 ; 황정규, 1997). 둘째, 시대적·국가적 흐름에 맞는 유아교육과정의 구성 요소를 정립하여야 한다. 즉 새 통일 한국에 적합한 영·유아 교육과정을 한국적 시각에서 새롭게 가시화 하여야 한다(임명희, 1997 ; 최한수, 1997 ; 황혜익, 1997). 셋째, 통일 한국에서 요구하는 영·유아교육의 제도 구축(의무교육화 문제 등) 등을 다루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비한 유아교육의 이슈들을 토대로 본 연구자는 '새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새 통일 한국 교육의 미래
-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유아 교육관
- 셋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 넷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과정

2. 새 통일 한국 교육의 방향

2.1 가상 시나리오

본고에서는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의 제 측면들을 논하기에 앞서, 남북통일의 가상적 방향과 그에 따른 통일 한국의 가상적 모습을 우선적으로 예측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북한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으로 체제유지에 관한 방안 모색에 혼힘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외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원과 일부 지역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여타할 남북통일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김태완(1996)의 주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북한의 총체적 위기로 대남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져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을 시도할 수 있겠고, 그 반대로 북한의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자체 붕괴됨으로써 남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해 질 수 있겠다. 사실상 전자의 경우, 북한의 대남 도발은 전 세계적 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겠다.

둘째, 북한이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유 재산의 인정 등 경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경우, 사유재산 인정의 경제 정책의 변화로 북한은 총체적 위기감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역시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 내지는 역으로 남한주도의 통일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른 가능한 안으로써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의 양상은 남한 주도 혹은 남·북한 합의 통일에 있겠다.

셋째, 개방화·국제화·세계화 및 일부 개방에 의한 북한의 체제 변화로 남한을 인정하게 될 경우, 이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현재의 북한 체제에서 남한의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거의 가능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남한 주도의 통일이나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이 기대되어진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가능성이 높은 남북통일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되어 진다. 첫째는 남한 주도의 통일, 둘째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남·북통일의 방법 중 어느 쪽이든, 지금의 두 나라 체제를 각각 유지하면서 혹은 한 쪽만 유지하면서 새 통일한국의 모습을 이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우리는 한 민족의 동질성에 입각한 새 통일 한국을 건립해야만 한다.

남한과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와 체제 속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는 어느 한쪽으로의 유입으로 통일체제 구축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문제의 탐색 논리를 한민족의 동질성에 입각한 새 통일 한국의 건립에 두고, 통일 후의 새 통일한국 영·유아 교육의 방향을 제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2 미래교육의 방향

본 고에서는 통일에 대비하며, 날로 급진전해가는 세계 정세에 발맞추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새 통일 한국이 지행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는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의 방향 설정에 모태가 되어야 할, 통일을 대비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먼저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남·북한 교육의 제반 사항에 대한 비교와 남·북한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해 봄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2.1 남·북한 교육의 비교

연구자는 본 고에서 현행 북한 교육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 여러 각도에서 남·북한의 교육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 교육에 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북한 교육의 3대 바탕은 전체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으로서,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세」 제정·공포 이래로 북한의 교육은 사회발전과 혁명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교육이란 사상, 문화, 교양의 무기요, 교원이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이며, 따라서 교육기관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 수단 또는 주요 무기로 규정짓고 있다(이종자, 1997).

북한 교육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 중등전기 교육과 중등 후기교육을 결합시켜 선발 단계를 최소화 시켜놓고 있다는 점, 단선제 교육제도이지만, 부분적인 복선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북한의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는 거의 평양에 집중해 있다는 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4년제 단과대학은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이종각, 1997). 또한, 북한 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인데,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여성교육을 강조한 것 등 교육, 교양, 선전 사업을 극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교육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자유는 없으며, 더 나아가 교육의 내용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의 교육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체계 및 교육기관의 제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 교육은 남한에 비해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고 있다(이종각, 1997). 첫째, 교육체계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과 국가의 통제로 교육에 의한 정치사회화의 효과가 크며, 사회적 동원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의 무상지원에 의한 의무교육의 연한이 길다는 점이다. 셋째, 조기 및 성인교육의 발달로 교육의 기회가 학교 이전 및 학교 이후의 단계에 까지도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가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고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가 적으며, 대학이 전문화 내지 특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지적된 것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북한 교육을 논할 수 있겠으나, 본 고에서는 더 이상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대신, 남·북한 교육을 세가지 차원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비교해보면 상당부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이종각, 1997).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살펴보면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주체사상·집단주의·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중시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인간의 육성은 북한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고, 주체사상은 북한의 교육이 학생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육함으로써 나라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집단주의를 지향하며 북한의 교육원리로서 교육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남·북한 교육이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남한은 주지주의적 학습능력의 배양이

라는 교육의 이론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실제 생활에서의 응용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한다. 남한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과 책임, 개인의 능력과 직성을 중시하는 교육목적을 추구하는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 당과 혁명에 헌신하는 집단의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다소의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남·북한이 공히 지·덕·체의 전인적 인간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교육내용상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기초적인 생활규범·도덕적인 품성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겠다. 남·북한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교과목 편제, 결정 방식, 교육내용 등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한만길·최영표·황규호, 1994). 교과목의 편성에 있어서 남한은 대체적으로 통합형을 채택하는데 비해서, 북한은 전통적인 분과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남한은 저학년에서 통합형 교과를 채택하고 있다(이종각, 1997).

셋째, 남·북한 교육내용의 구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남·북한 교육내용 구성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교과목의 학문영역에서 추구하는 논리 구조와 이론을 강조하는데 비해서, 북한은 실제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남한은 학문중심의 주지주의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북한은 실천중심의 실용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종각, 1997).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차이점 중에서 이질적인 요소는 극복하고, 다양화 할 수 있는 요소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2.2.2 남·북한 교육의 문제점

연구자는 본 고에서 남한과 북한의 제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통일에 대비한 교육개혁 방향의 설정 근거로 삼고자 한다.

먼저 북한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북한 교육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이고, 내용이 왜곡되어 있으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숭배 강화교육이 많고, 철저한 국가독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가 교육을 독

침하고 정보를 차단·제한하는 것은 북한 교육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이며 취약점이 된다. 이밖에 북한의 교육체계가 정치체제의 목적에 봉사하는 구조로 편제되어 있어, 순수한 교육적 효과를 장기적으로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평등주의가 대학 이전 단계에만 제한되고 대학교육이 신분상의 특권계급에 의해 점유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이 구조화되고 있다. 또한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경쟁원리를 배제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 개발에 의한 인적 자원개발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한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이 질적 및 양적으로 열세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남한교육의 문제점을 다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남한은 교육역량에 있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남한은 국가재정에 의한 무상의무교육 연한이 북한보다 크게 뒤지고 사교육비의 부담이 높으며, 교육체계가 학교교육 중심으로 편제되어 취학전 조기교육이나 사회교육, 특수교육 등의 영역이 다소 부실하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부실하다. 또한 교육자치제의 원칙과 중앙집권형 교육체계의 상충에 의해 교육행정상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에 교육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편, 남한은 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발적인 교육열과 경쟁원리를 유도하여 개인의 발전을 모색하며 산업인력을 배양하며 대외개방형 교육정책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세계 교류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교육이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며 교육기회와 노동시장간의 불균형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한 교육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처럼 경제의 침체에 의해 교육기회와 노동시장간의 불일치가 지속되거나 증대하는 한, 한국 교육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할 것이다.

교육정책 자문회의(1992)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육은 크게 여덟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교육이념 및 목적의 괴리이다. 이는 시대적 요구와의 괴리, 개인의 교육적 요구와의 괴리, 교육현실과의 괴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교육내용 및 방법의 부적합성이다. 즉, 교육과정의 부적합 및 교수방법의 전근대성, 교육평가의 타당성 및 다양성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학생 부적응 행위의 사회문제

화이다. 즉, 학생의 소외와 비행의 증가, 재수생수의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의 부각, 만성적 학원 소요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넷째, 교원의 지위 및 의욕 저하이다. 교원의 업무량 과다 및 의욕 저하, 교원의 전문성 약화와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교직사회의 갈등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교육제도의 폐쇄성과 비효율성이다. 즉, 학교개별의 다양성 부족, 교내장학 활동의 부족 등 교육의 질 관리 체제 결여, 학교 경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부족, 학교운영의 획일성과 폐쇄성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교육시설 및 환경의 낙후성이다. 이는 과대 학교 및 과밀 학급, 도서실(관)의 도서, 실험실습 기자재 및 교구 부족, 학교의 위생, 복지시설 미비, 불건전한 대중매체의 범람 등 학교 주변의 비교육적 환경, 청소년 건진 문화 공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행·재정 지원체제의 미흡이다. 즉, 감독위주의 관료적 행정체제, 지원 행정 요원의 전문성 부족, 교육투자의 영세성 등이다. 여덟째, 교육지원 여건의 취약성이다. 즉,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 만연,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및 비교육적 사회환경 팽배, 학벌 위주의 고용관행 및 과도한 입급격차 등이다. 이외에 추가할 문제점으로 교육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실용성·국제성이 부족하고 문화적 단일성과 폐쇄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교육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구체적인 교육 실천문제에 까지 각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할지도 모르며, 또한 남·북한 관계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현 시점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소련연방의 붕괴 등 국제변화의 요인과 한반도 및 국내변화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은 날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교육의 문제점을 각자 보완하며 상대적 강점을 참조하여, 민족공동체의 논리로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현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2.3 통일에 대비한 교육개혁의 방향

통일에 대비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경주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먼저 미래의 교육개혁의 방향은 한 민족의 동질성에 입각한 새 통일 한국의 건립을 위해 남·북한 모두 통일에 대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세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방화·국제화·세계화의 방향으로 교육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통일에 대비한 교육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문제는 전세계적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겠다. 80년대내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세계적으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저마다 교육개혁을 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 교육의 위기」(1983), 「미국 2000년 교육전략」, 「2000년대의 지표-미국교육법」 미국교육법(1993년)과 일본의 '임시교육심의회' 설치(1985)와 '경쟁에 뒤지는 것은 현재에 지는 것이지만, 교육에 지는 것은 미래에 지는 것'이라는 슬로건의 교육개혁운동, 영국의 「2010년의 영국」, 노르웨이의 「노르웨이 2000」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교육개혁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유럽의 EU 회원국은 에라스무스 장막사업 등 통합을 향한 국가간의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85~1987년 교육개혁 심의회, 1989~1992년의 교육정책자문회의, 1994년부터 교육개혁위원회로 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그 결과 1997년 교육개혁안을 마련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미래사회는 지식과 기술이 폭증하고 그에 따라 사회의 지식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지식의 노후화가 빨라져 재교육과 재학습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어질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다양성, 직업의 다양화·다원화 등이 예견되며, 아울러 학문의 방향도 변화 무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은 미래 의식적인 교육으로 변화되어가야 하겠다. 즉, 미래사회에서 예견되어지는 변화에 대한 '예상적 준거'에 맞춰 교육의 방향과 그에 따른 교육의 적합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이상주, 1997). 또한 국내 산업기반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의 교육과 문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세계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

을 갖추어야 하겠다.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고 창조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며,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낙오자로 전락할지 모른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와 교육은 개방화·국제화·세계화의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한국교육의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개혁은 국가에서 전담할 일과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분담하여 진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육개혁은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 개혁이어서는 안된다. 셋째, 교육개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한 교육체제를 갖추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게 교육체제 자체내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올 제반 조건을 갖추도록 교육제도를 재구조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이상주, 1997). 넷째, 교육개혁은 모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의 변화를 촉구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개혁은 국민의 복지, 권리, 인격존중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교육개혁은 학문의 풍토를 개선시켜야 한다. 끝으로, 교육개혁은 통일 후의 남·북교육의 통합방안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교육체제의 상대적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통일의 목표는 단순한 지리학적 통일을 넘어 민족 대중홍의 개기를 마련해야 하며, 민족 대중홍의 개기는 21세기 국제사회로의 창조적 도전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한 민족의 동질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한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한간의 교육의 동질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에 남한의 교육개혁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계층·지역과 무관하게 평등화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 위주의 교육체제에서 조기교육이나 사회교육분야의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학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경쟁원리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가 개선되어야 중등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고, 또한 학력과 학벌위주의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시킬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제도를 확산·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문호를 개방함과 동시에 고급 산업기술인력을 개발하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두뇌집단의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에서는 대학교육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과 엘리트

양성을 위한 경쟁원리의 수용 및 그들을 흡수·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개혁이 북한에서 가능하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해방이후 국토가 양분되면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통일교육의 관점은 반공교육·승공 통일교육에 있었고, 이로써 북한을 적대시 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점차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동족애의 양면성을 부각시키는 도덕교육으로 변화되었다. 그후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화해 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한만길, 1994) 이러한 1990년대의 통일교육 방향은 초·중등 학교의 제 6차 교육과정과 유치원의 제 5차 유아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적극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새 통일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교육이념의 설정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념과 사상들이 미래의 새 통일 한국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이념 즉,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을 추천하는 바이다.

첫째, 통일된 한국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은 필수요건이라고 하겠다(문용린·박용헌, 1990). 사실상, 민주시민교육은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나 혹은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이념이라 하겠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구성원간의 결속을 돈독히 하고 갈등을 해결해줌으로써 내부의 화합과 단합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는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면 민족공동체가 튼튼해야 하고 동질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족공동체 교육은 이질화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하도록 작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공동체 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 적대감 해소와 신뢰감 형성, 민족의 자존과 주체성 함양, 공동체적 삶의 형성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낼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현재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상호 갈등과 적대감, 적개심을 해소하려면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평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된 한국 사회에서 평화를 정착시킬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와 주변국가에도 평화 정착을 정착화 시킬 수 있게 해준다(이삼열, 1992). 또한 평화교육은 공해문제, 전쟁, 핵문제, 자연파괴, 빈부격차, 계층·지역·종교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새 통일 한국의 발전을 현실화시켜 주는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할 것이다.

2.3 미래의 새 통일 한국 교육

다가올 새 통일 한국의 교육 방향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하겠다.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금 현재에서 볼 때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으나, 통일을 이룩한 다음 즉, 새 통일 한국이 건립된 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 또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연구자는 현재 남·북한의 교육 진반의 특징적인 측면과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참모습을 설계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은 적응을 위한 교육, 변화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다변화의 세기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이런 국제 변화 속에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세계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어떤 변화 요인에도 적응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다. 이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의 우리의 교육은 학문중심의 주지주의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상황속에서 그때 그때 적응·반응할 수 있는 역량을 새 통일 한국의 국민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새 통일 한국이 적응을 위한 교육, 변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은 특정한 가치의 수용보다는 가치판단력을 길러야 하고 특정한 가치 내용의 주입 보다는 가치판단 기준의 형성에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해와 가치가 서로 다른 여러 사회집단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구심적 힘의 원천의 역할을 교육이 맡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적합성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은 ‘성숙한 문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모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 21세기는 열린 사회로서 ‘성숙한 문화사회’를 요망한다. 새 통일 한국은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문화의 적합성, 정체성, 통합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성숙한 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정, 학교, 사회교육기관 등의 사회화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융통성있게 고쳐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교육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사회화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적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학교 중심의 교육제도를 평생교육체제로 개혁해야 한다(이상주, 1997).

문화적으로 성숙된 미래사회를 실현하려면 첫째,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산업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과 생활양식, 경제체제와 사회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열려 있는 사회, 열려 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의 지식과 정보, 상품과 문화를 능동적으로 교류하며 인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셋째, 다원주의 사회의 가치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주체적 가치판단력을 배양하고 사회집단간에 개방과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국민 각자가 가진 예술적 창조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모두가 풍부하고 수준 높은 예술문화와 전통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사회, 학교에 사회화 기능을 강화하고 그들을 상보적으로 연결시켜 평생교육체제를 수립함으로써 문화의 창조적 전승에 기여해야 한다(이상주, 1997).

셋째,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정립시켜 줄 수 있는 가치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고범서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중시해야 할 가치를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고, 그것을 가치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인간 존재의 측면에서 (1) 정신 (2) 지식 (3) 개인성 (4) 창의성, 인간관계의 포괄성 측면에서 (5) 공동체 의식 (6) 개방성, 시·공간적 포괄성 측면에서 (7) 장기적 안목, (8) 통합적 사고 등 이다. 사실상 미래지향적 가치교육은 여러 다양한 가치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 태도와 판단력의 습득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이상주, 1997).

또한, 이상주(1997)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존중의 가치 정립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든 가치의 정점에는 인간 존중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간중심의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법률,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을 고양하고 개인에게 자기 결정을 행사할 기회를 주며, 개인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새 통일 한국은 인간 존중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1) 가치교육에서 점차 쇠퇴해가는 도덕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재화를 도덕적으로 획득하고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경제 윤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2) 가치교육에서 송학주의의 전통적 가치관도 전승해 나가야 한다. 미래사회에 적응하려면 도덕성의 함양이나 안문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친 일반적 지식과 능력, 실제적 작업기능의 습득도 강조되어야 한다. 학문과 배움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 자체로서 가치로운 것이다. (3) 전통적 인간관계의 특징인 인정주의도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살려 나가야 한다. (4) 가치교육에서는 미래지향적 가치규범인 합리주의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합리주의와 일치한다 하겠다. 새 통일 한국은 이와 더불어 비합리적 요인을 초월할 수 있는 가치규범을 정립하여야 한다. (5) 가치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개인주의를 위한 가치규범을 정립하여야 한다. 개인주의적 가치규범을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기적 개인주의의 극복이다. 사실상, 새 통일 한국은 국·내외로부터의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을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기적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건전한 개인주의 의식과 강력한 공동체의식 뿐이다.

넷째,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은 사회의 평등화, 교육의 평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의 평등화는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국가발전 목표의 하나이다. 교육의 평등은 사회평등의 장을 여는 일차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평등한 사회체제 없이 교육의 평등은 실현불가능하다. 사실 평등한 취업의 기회나 정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평등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의 시작이요 종국이라 할 수 있겠다(이상주, 1997).

다섯째,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은 교육의 전문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교육의 전문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미래사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욱 복잡해짐으로써 일상적 체험이나 상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축소된다. 또한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속한 발달은 각 분야에서 활용하는 지식의 수준을 더욱 고도화시킬 것이다. 이는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지식과 지도 기술, 그리고 다양한 교수 공학적 측면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 결정과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은 사회의 제반 사항과 다양한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섯째, 새 통일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학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주(1997)에 의하면, 학제의 개혁 방향은, 모든 국민이 저마다 가진 잠재적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학제이어야 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학제이어야 하며, 한 개인이 학교, 가정, 직장,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교육적 경험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육의 통합성을 살릴 수 있는 학제이어야 하고, 여러 사회 집단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개인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제이어야 하며, 변천하는 사회의 직업구조에 맞는 각종 인력을 양성하고 각 개인이 그 개성에 따라 직업준비를 하는 데 적합한 학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교육시기와 기간, 교육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전학과 전과 등도 용이한 융통성 있는 학제이어야 하며, 세계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학제의 일반적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학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안한 새로운 학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제의 구성은 幼-5-3-4-4제로서, 그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간주하여 기간학제에 포함시킨다. 농촌과 소도시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한다. (2) 초등학교는 교육연한을 1년 단축하고 교육과정을 유치원과 중학교를 연계하여 제조정한다. (3)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어린이의 성숙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5세까지 낮출 수 있게 한다. (4)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 통합된 국민기초교육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8년제 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중학교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의무화 한다. (5) 고등학교는 1년 연

장하여 4년제로 하고 진로 준비교육과 인성함양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6) 고교 2학년 말에 진로 선별을 위한 예비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7) 실업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되, 그 기간은 3~4년으로 하며 2학년 말에 진로 선별을 위한 예비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8) 취학 또는 진학의 기회를 놓친 학령 초과자들을 위해서 각급학교 단계에서 보완교육의 성격을 가진 각종 직업학교를 설치하여 특별 학제로 발전시킨다. (9) 비진학, 미취업 고졸자를 위한 직업 적용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9) 월반제, 유급제를 제도적으로 허용한다.

일곱째, 새 통일 한국은 교육제도의 개방성·효율성·다양성을 이루어야 한다. 국가가 전담하여 추진할 과제와 민간 주도하여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교육 사업이 요구된다. 통일에 따른 무분별한 갑작스런 통합보다는 지방자치권을 부여하여 교육 사업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체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전의 남·북한 교육의 고유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계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학교 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조기교육, 영재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체계의 운영이 요구된다. 이로써 교육의 개방성,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새 통일 한국은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새 통일 한국에 적합한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의 가치를 논한 바 있다.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의 교육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무상의무교육의 체제 확립이 요구된다. 북한은 11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남한의 경우 의무교육화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취학전 만 1년의 경우 무상교육은 법제화 되어 있지만 의무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에 새 통일 한국에서는 최소 취학전 만 1년부터 중학교 졸업 연령(9년 내지는 10년간의 무상의무교육)까지 무상의무교육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내린 결론이라 하겠다.

이상의 9년 내지 10년간의 무상의무교육화와 함께, 새 통일 한국은 한시적 교육 보다는 평생교육을 통해 교육체계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체계의 안정화로 교육시설 및 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행·재정적 지원체제도 교육복지국가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선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겠다.

아홉째, 새 통일 한국은 교육의 고유성·독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에서 추구하는 학교교육은 기초적인 생활 규범 및 도덕적인 품성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여 놓고 있으며, 자·덕·체의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은 얼핏보아 남·북한에서 추구하는 인간존중 사상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주지의 사실이지만,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이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향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점을 새 통일 한국에서는 중요한 통합의 단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규정상의 혹은 외관상의 이러한 일치를 활용하여 통합된 교육을 달성하여야 하겠다. 즉,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한 민족의 고유성, 독자성을 반영하여 교육의 고유성, 독립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롭게 정립될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일관성있게 실천하고,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적합성을 유지하며, 교사의 사기를 양양하여, 교육의 유일함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

3.1 남·북한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 비교

3.1.1 북한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

북한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기초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발달한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 육성’에 있다. 여기서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이란 자본주의적 의식의 잔재를 완전히 불식한 것으로 노동, 재산, 종교, 개인주의 사회의식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의식을 가진 인간을 뜻한다(이종각, 1997).

199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 43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자·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헌법상으로 교육이념을 명시하여 놓고 있다. 북한의 일반적인 교육 목표는 전 인민의 혁명화,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 전 인민의 공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선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겠다.

아홉째, 새 통일 한국은 교육의 고유성·독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에서 추구하는 학교교육은 기초적인 생활 규범 및 도덕적인 품성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여 놓고 있으며, 자·덕·체의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은 얼핏보아 남·북한에서 추구하는 인간존중 사상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주지의 사실이지만,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이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향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점을 새 통일 한국에서는 중요한 통합의 단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규정상의 혹은 외관상의 이러한 일치를 활용하여 통합된 교육을 달성하여야 하겠다. 즉,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한 민족의 고유성, 독자성을 반영하여 교육의 고유성, 독립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롭게 정립될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일관성있게 실천하고,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적합성을 유지하며, 교사의 사기를 양양하여, 교육의 유일함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

3.1 남·북한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 비교

3.1.1 북한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

북한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기초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발달한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 육성’에 있다. 여기서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이란 자본주의적 의식의 잔재를 완전히 불식한 것으로 노동, 재산, 종교, 개인주의 사회의식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의식을 가진 인간을 뜻한다(이종각, 1997).

199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 43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자·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헌법상으로 교육이념을 명시하여 놓고 있다. 북한의 일반적인 교육 목표는 전 인민의 혁명화,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 전 인민의 공

산주의화이다. 북한의 교육은 이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주민들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유일사상으로 획일화 시키고 투쟁심을 고취시켜 ‘당과 수령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다(이종각, 1997).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노동을 사랑하며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둘째, 개인주의, 낡은 사상, 자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뿌리 뽑고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부장한 사람, 셋째,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는 사람등이다. 또한, 북한의 취학전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아동상은 첫째, 이리서부터 일하기를 좋아하는 바릇을 가진 어린이, 사회공동재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태도를 가진 어린이, 예절 바른 품성과 문화위생적 생활태도를 가진 어린이,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 그밖에 지적인 어린이 등이다(곽노의·최민수·김규수·유구종·최연철, 1998).

북한의 경우, 교육전반에 대한 강령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대제」에 의하며, 취학전 교육에 대한 총제적인 법은 「어린이 보육 교양법」에 의한다. 특히 1976년 4월 29일에 제정된 「어린이 보육 교양법」에는 취학전 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곽노의·최민수·김규수·유구종·최연철, 1998).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 위업의 계승자들이다(제1조), 조선민주주의의 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제5조), “……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보육 교양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인 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역사적 위업 수행에 이바지한다(제6조).”

이상과 같이 「어린이 보육 교양법」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요약·정리해보면, 공산주의 미래에 대한 사랑,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집단적 정서, 일하기 좋아하고 이리서부터 일하는 바릇 습득, 사회공동재산의 애호, 절약 등의 가치관 교양 교육을 강조하

고 있다. 사실상, 「어린이 보육 교양법」의 기본 목적과 의도는 부녀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고, 조기교육에 의한 집단주의 교육방식과 교육사상, 특히 김일성 유일사상을 효과적으로 주입하고, 내외적인 선전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최만수, 1996c ; 최민수, 1998).

3.1.2 남한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의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이상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을 소개하면,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둘째,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셋째,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넷째,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교육부, 1998).

황정규는 미래사회에 알맞은 인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다음과 같이 올바른 인간상으로 아홉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황정규, 1995). 첫째, 넓고 깊은 휴머니티, 둘째, 세계의식·공동체 의식의 개발, 셋째, 물질자원에 대한 결핍의 원리, 넷째, 정보의식과 조화의식의 균형적 개발, 다섯째, 정보능력과 정보의식의 개발, 여섯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일곱째,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여덟째 다원화·다양화의 가치 존중, 아홉째 전통과 새 것의 긴장된 조화 등이다. 또한 이영석(1995a)은 유아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인간상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타고난 자질, 소질, 개성, 적성 등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인간주의·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효를 실천하는 사람, 친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을 갖는 사람, 정보기술에 친숙한 사람, 세대간의 갭을 좁힐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 등이다.

한국의 유아교육은 0~8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뜻하며, 형식적·비형식적 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한국의 유아교육은 보호·수용적 기능, 교육적 기능, 학

습적 기능까지도 포함한다. 즉, 영아기(0~3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로 영아의 보호·수용을 위한 보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유아기(3~5세)에는 유아의 제발달영역의 통합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적 기능이 중시되며, 초등학교 저학년(6~8세)의 경우는 3R's의 교과학습기능이 강조된다(이영석, 1998).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은 그 개념 정립에 있어서 학자에 따라, 시대적 여건 따라, 철학적 관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함을 지적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다양한 유아교육의 개념을 현재 유아교육에서 요구되는 방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즉, 유아교육은 발달적 관점, 통합적 관점, 보호·교육적 관점, 연계적 관점에서 정의내리고자 한다.

유아교육은 “독자적, 통합적 개체로서 인간적 삶을 영위하면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조력하는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과정의 총체”로 정의내려 질 수 있다(이영석·박재환·김경중, 1985).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을 발달적, 통합적, 보호·교육적, 연계적 관점에서 정의내린다면, “유아교육이란, 유아의 연령 또는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 및 교육 활동, 제 발달 영역간의 통합적 교육과정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적·일관적으로 교육의 경험을 구성하는 일련의 전 과정이다”로 할 수 있겠다.

이밖에 한국의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교육을 과정지향적인 유아교육의 방향, 비형식·잠재적인 교육과정등을 가치있게 다루며, 상호작용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달적으로 적합하며, 아동 중심적이고 하며, 비구조화된 교구·교재를 주로 활용하며, 놀이중심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이영석, 1997a).

3.2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

미래의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과 영·유아교육관은 정통성과 민족성에 근거해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이전 우리는 한 민족의 정통성을 고수하면서 독자성과 단일민족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으로 우리 한민족은 양분되어 전혀 다른 사상을 지켜왔고, 이에 통일에 이른 것이다. 연구자는 새 통일 한국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과 영·유아교육관을 남한의 것을 바탕으로, 혹은 북한의 것을 바탕으로 서로 반대측의 것을 영입하는 식의 정립보다는 두 나라가 분단되기 이전인

한 민족으로 있을 당시의 과거로 돌아가 그 시점에서 새로운 인간상 및 영·유아교육관을 정립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온전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통일된 사상에서 출발하여 21세기 현실에 적합하게 신 인간상 및 신 영·유아교육관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접근방식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새 통일 한국의 인간상과 영·유아교육관을 새롭게 제안하는 바이다.

과거 우리 한민족이 추구한 인간상은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과 건국 신화의 실천적 인본주의적 인간관, 화랑도의 인본주의적 인간관, 동학의 인본주의적 인간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신용국, 1993 ; 문현상, 1996).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전통적 인간상은 인본주의적 인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유교의 인간관은 그 근본 바탕이 인(仁)에 있으며,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본성으로서의 예(禮)를 회복하는 수양적 의미와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仁)은 인간생활의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반드시 추구하고 지켜져야 할 덕목이며,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이처럼, 유교의 인간관은 인간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인간관이며, 동시에 인간을 자연, 특히 하늘에 귀이케 하여 자연에의 순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인간관은 그 근본 바탕이 자비(慈悲)에 있으며, 인간 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권과 존엄성이 동등하여 어느 생명이 다른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지상의 모든 생명은 다 함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불교의 인간관은 모든 인간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으며, 누구나 수양정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주의적 인간관이다. 즉, 모든 인간은 서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가 사랑을 베풀고 또 평등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교의 인간관은 자연상태로의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만들어 낸 세속적인 학문을 버리고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도(道)와 무위(無爲)에 이르는 것이며, 인간 본래의 소박한 근본으로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도교에서의 절대적인 도(道)는 자연이요, 인간은 결국 도(道), 즉 자연에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도교에서의 인간은 작위적이 아닌 인간을 이상으로 여긴다(신용국, 1993 ; 문현상, 1996). 이상의 세 가지 전통적 인간관을 정리하면,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자연주의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한국 고유사상인 인본주의적 인간관에 대해 살펴보면, 건

국신화의 실천적 인본주의적 인간관, 화랑도의 인본주의적 인간관, 동학의 인본주의적 인간관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건국신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인간관은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것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인간중심의 원리, 태양을 숭배하는 밝음의 원리,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원리 및 평등의 원리가 통합된 인간 존중의 사상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일 뿐만 아니라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의 이념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반이요, 윤리생활의 근본이 되고 있다. 화랑도의 인본주의적 인간관은 유·불·선 삼교의 근본사상 위에 세속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현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추구하며, 지위나 명예, 부나 권력에 규정되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적 평등의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본연으로서의 인간이 되는 것을 아름답게 여겼고, 자연을 존중하며 인간과 함께 자연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는 인간상을 갖고 있었다. 화랑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현세중심적이고 인간중심의 홍익인간 사상인 풍류사상과 외래사상인 유·불·선 삼교가 혼용된 민족사상이며,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 그리고 순박하고 후덕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덕을 실천윤리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이는 홍익인간의 실천윤리이며, 전인교육으로서의 종합적이고 조화적인 인격수양의 방법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동학의 인본주의적 인간관은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하늘의 도(道), 즉 천덕(天德)과 합치될 수 있도록 도덕을 수련하면 군자가 될 수 있는 존재로써, 그러한 인간존재는 본질적으로 한울님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보았다. 동학의 인내천(人內天) 사상에는 인간지상주의와 인간평등주의가 담겨져 있으며, 그 근본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인 경천애인(敬天愛人)과 홍익인간의 이념이 있다. 동학의 이러한 인간관은 모든 인간이 한울님은 아니지만 한울님과 같은 존재로 존경되었고, 인간은 절대 존경의 대상으로서 모든 것은 인간을 본위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인간관인 것이다(신용국, 1993 ; 문현상, 1996). 이상의 세 가지 한국 고유사상에 담긴 인간관을 정리하면, 인간존중사상, 자연적 평등주의, 그리고 인간지상주의 및 인간평등주의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연구자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사상에 담긴 인간존중의 인간중심사상과 인간평등사상에 근거한 인간관을 토대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할 인간관은 미래의 세 통일 한국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관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먼저, 이순형(1993)이 미래사회의 특징별로 구분한 인간상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된 민주사회, 번영된 통일 국가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투철한 민주의를 지닌 사람’이다. 투철한 민주의를 지닌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복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자주 자립의 주인정신,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 공동체의식과 그 발전에 헌신하는 태도, 참여의식 등이다.

둘째, 고도의 산업사회, 과학기술사회, 정보화사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복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미래지향성,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성과 독창성, 진취적인 개척정신, 성취지향성 등이다.

셋째, 풍요로운 복지사회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성숙한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이다. 성숙한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복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정직하고 성실함, 투철한 책임의식과 직업윤리, 타인에 대한 관용, 공익과 봉사, 사회정의에의 민감성, 검소한 소비생활 등이다.

넷째, 윤택한 삶을 창조하는 문화사회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높은 심미적 안목을 지닌 사람’이다. 높은 심미적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복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자연과 예술 사랑, 정서적 안정성 등이다.

다섯째, 국제화사회, 개방사회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 주체적인 사람’이다.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과 주체적인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가 복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국제적인 시야, 세계시민의식-호혜 평등 협력, 자아정체감, 강한 민족문화의식과 투철한 역사의식 등이다.

여섯째, 지구촌, 국제경쟁사회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우리가 복돋워야 할 행동특성은 건전한 민족주의 의식, 상호존중감, 평화주의, 공생사회 의식이다.

이상에서 연구자는 미래사회의 특징에 따른 인간상을 살펴보았다. 미래의 새 통일 한국은 사실상, 이순형(1993)이 지적한 미래사회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가 될 것이

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지적한 여섯 가지의 인간상이 장차 새 통일 한국에서 정립해야 할 인간상임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는 앞에서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인간존중의 인간중심사상과 인간평등주의 사상의 인간관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이에 연구자는 오인탁(1993)이 제시한 ‘거국의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인간상을 첨가하여 새 통일 한국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으로 다음의 여덟 가지를 지적하는 바이다. 투철한 민주의식을 지닌 사람,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 성숙한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 높은 심미적 안목을 지닌 사람,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 주체적인 사람,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거국적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 등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영석(1997a)은 미래의 유아교육과정의 방향으로 여섯 가지를 지적한 바 있는데, 첫째,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 둘째, 가치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 셋째, 개별화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 넷째, 타문화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 다섯째, 성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 여섯째, 통합교육과정 등이다. 또한 그는 미래 유아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놓은 바 있다. 즉, 미래의 유아교육의 방향은 첫째, 보다 체계적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의적인 교육의 충실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재아, 천재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 컴퓨터 교육을 실천가능화 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이영석, 1997a, 1997b).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앞서 제시한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미래의 새 통일 한국에서 지향해야 할 영·유아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따라서 유아교육에서도 새 통일 한국의 인간상을 단기적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새 통일 한국의 인간상을 추구하기 위해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유아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 통일 한국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겠다.

셋째, 연령에 따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유아교육이 계획되어야 한다. 유아의 발달적 측면 및 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달성되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 따라서 각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연령에 적합한, 그리고 교육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연령별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겠다.

넷째, 유아의 능력,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개별화 교육은 실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새 통일 한국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적정 수준(1:10 내외)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사실, 진정한 유아교육은 유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한 유아의 모든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개별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창의적 사고 능력, 영재성, 기타 잠재적 능력을 발견·촉진·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다변하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유아 수준에서 조기에 접해야 하는 많은 경험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정보시대에 적응적인 사람,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미래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4.1 남·북한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비교

4.1.1 북한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북한은 자칭 「교육의 나라」라 칭하고 있다. 교육과 직접 관련된 헌법 조항은 제 43조 ~ 제 49조, 제 73조 등인데 이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다양한 유아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새 통일 한국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겠다.

셋째, 연령에 따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유아교육이 계획되어야 한다. 유아의 발달적 측면 및 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달성되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 따라서 각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연령에 적합한, 그리고 교육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연령별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겠다.

넷째, 유아의 능력,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개별화 교육은 실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새 통일 한국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적정 수준(1:10 내외)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사실, 진정한 유아교육은 유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한 유아의 모든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개별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창의적 사고 능력, 영재성, 기타 잠재적 능력을 발견·촉진·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다변하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유아 수준에서 조기에 접해야 하는 많은 경험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정보시대에 적응적인 사람,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미래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4.1 남·북한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비교

4.1.1 북한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북한은 자칭 「교육의 나라」라 칭하고 있다. 교육과 직접 관련된 헌법 조항은 제 43조 ~ 제 49조, 제 73조 등인데 이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현대 과학 기술 발전 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 45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제 47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 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제 73조)

상기 소개된 헌법을 중심으로, 북한은 당장의 생산 노동에 임할 수 있는 특수 기술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자랑삼고 있는 교육제도는 11년제 의무교육제도인데, 이는 만 5세~만 16세의 모든 새 세대들에게 무료로 학교 전 교육과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제도이다.

연도별 의무교육의 실시 형태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의<표4-1>과 같다.

이제 연구자는 북한의 취학전 교육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학교교육체계는 2(유치원)-4(인민학교)-6(고등중학교)-4(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의 11년간 무상의무교육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북한의 어린이는 만 5세부터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11년 동안 국가의 혜택으로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표4-1> 연도별 의무교육 실시 형태

연 도	당과 정부에서 취한 조치
1956	전반적 초등의무교육 실시
1958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 실시
1961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1961. 9. 1)
1967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 부분적 개편 실시(1967. 4. 1)
1972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제 실시(1972. 9. 1) (평양시 대동문 인문학교가 효시) -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10년제 고중의무교육 : 20% 망라
1973	10년제 고중의무교육 : 60% 망라
1974	만 5살이 되는 어린이들이 1년제 의무교육에 10% 망라
	10년제 고중의무교육 : 91% 망라
1975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감

출처 : 이종각(1997), 교육사회학 신강, 서울 : 통문사.

1) 일원화된 취학전 교육

북한의 취학전 교육은 탁아소와 유치원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탁아소와 유치원은 각각 연령으로 구분되며, 이 두 기관은 「어린이 보육 교양법」이라는 단일 법규에 의해 운영된다.

- 탁아소(1개월~만 3세 : 4년간)
 - 1~6개월 (젓먹이 반)
 - 7~18개월 (젓떼기 반)
 - 19~36개월 (교양반)
 - 37~48개월 (유치원 준비반)

- 유치원(만 4세~만 5세 : 2년간)
 - 낮은반(취원의 자유보장, 단 비용은 국가·사회단체의 부담)
 - 높은반(취원의 의무화)

- * 운영형태(탁아소와 유치원 동일)
 - 전일제 유치원 (아침~저녁)
 - 주유치원 (월 아침~토 오후)
 - 월유치원 (매월 한번씩 데려감)

2) 취학전 교육의 담당부서

북한의 취학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다음의 <표4-2>와 같다.

<표4-2> 취학전 교육의 담당부서

기 관	담 당 부 서
유 치 원	(중앙) 보통교육부 유치원 인민학교지도국 (지방) 도·시·군 교육부서
탁 아 소	(중앙) 보건부 탁아소 지도국 (지방) 도·시·군 보건부서
농업부문의 유치원·탁아소	(중앙) 농업위원회 (지방)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 문음사.

3) 국가와 사회단체의 재정적 지원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12조에 명시된대로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4-3> 취학전 교육의 재정지원

구 분		재 정 지 원
중 앙	탁아소 유치원	중앙예산
시·도·군	탁아소 유치원	지방예산
농업부문의 협동농장의 탁아소·유치원		협동농장의 공동소비자금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 문음사.

4) 취학전 교육제도의 발전과정

북한의 취학전 교육제도의 법제화 과정을 탁아소와 유치원을 대조하여 비교·제시하면 다음의 <표4-4>와 같다.

참고적으로 1976년 이후 북한에서는 취학전 교육의 양적 확대가 완료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으나, 1995년의 대홍수로 상당부분 파괴되거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4-4> 중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4> 북한의 탁아소 및 유치원 제도의 발전 과정

연도	당과 정부의 조치 사항	
	탁아소	유치원
1947. 6. 13	최초의 탁아소 규칙 제정 (보건국령 제5호 탁아소 규칙)	
1947. 6. 28		최초의 유치원 규정(3년 과정의 유치원 교육체제)-취학전 교육 중시
1954. 9. 28		유치원 복구 및 증설(내각지시 제122호, '유치원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1956. 2. 21		교육성에 의한 '유치원에 관한 규정'(4년 과정의 유치원 교육체계 수립)
1956. 3. 9		유치원 사업개선 강화(내각 결정 제24호)
1956. 4. 1		간식공급(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
1959. 3. 2		수업료 전면 폐지(내각결정 제18호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데 대해서')
1959. 4. 1	무상교육 실시(국가와 사회단체의 비용 부담)	
1959. 4. 17	탁아소 규칙 개정 (보건성령 제21호 탁아소 규칙)	
1961. 6. 26		유치원 규정 개정(유치원의 성격과 사명 명시)(보통교육성령 제26호 '유치원에 관한 규정')
1972. 7. 1		유치원 의무교육실시: 2년과정의 유치원 교육체계. (당중앙위원회 제5기 4차 회의에서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 채택)
1973. 4. 9		유치원 1년(높은반) 의무교육화 법령.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 전 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연도	당과 정부의 조치 사항	
	탁아소	유치원
1975. 4. 10		11년제 의무교육 100% 완료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5차 회의 결정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 행총화에 대하여' 공포)
1976. 4. 29	「어린이 보육 교육법」 제정 (1976. 6. 1부터 실시됨)	
1977. 9. 5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 제정 · 공포	
1980. 10.	유치원과 탁아소의 질적 향상 노력 (과학적인 위생관리와 사회주의적 교양 교육)	
1985	‘인간개조이론’ 발간으로 교육내용에 표연적으로 김정일 등장	
1991	‘정일농사단 창설’로 김정일에 대한 내용 교과서에 수록	
1993	「어린이 보육 교양법」 세칙 개정 (정무원)	

(1) 탁아소

○ 1959년 4월 17일 ‘보건성령 제21호 탁아소 규칙’ 개정

→ 집단주의 이념 교육을 확정함으로써 집단생활을 강조

주요내용 :

- ① 탁아소는 생후 1개월로부터 만 3세의 유아를 양육한다.
- ② 각 유아반의 수는 17~18명으로 한다.
- ③ 간호원 · 보육원 · 보조원은 매 학급에 각 1명씩 배치한다.
- ④ 탁아소의 시설규모와 직원의 정원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유치원

○ 1956년 2월 21일, 4년 과정의 유치원 교육체제 수립

→ 4년과정 유치원 교육체제로 운영(3~6세)

{	초급반 2년
	중급반 1년
	고급반 1년

→ 3세부터 인민학교 입학전 6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집단교육 실시

‘학교전 교양요강’에 의거 - 교양교육 : 당과 수령께 충실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

학교입학 준비 교육 : 우리말, 셈하기, 도화·공작, 창가, 율동, 체조, 견학 및 산보, 각종 놀이 등을 통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초보적 지식, 기능의 숙련

→ 북한 유치원의 교육내용은 학교준비교육의 개념에서 출발

○ 1961년 6월 26일, ‘유치원에 관한 규정’ 개정(유치원의 성격과 사명 명시)

(제1조) 유치원은 취학전 어린이에게 공산주의 교양을 조선노동당의 정책교양, 혁명 전통교양과 결부시켜 점차 학교교육을 성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교양기관이라 규정한다.

(제4조) 유치원의 교양사업을 보통 교육성에서 제정한 유치원 교양요강에 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 한 교양반의 어린이의 수는 30명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교양반은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조직한다. 초급반 3~5세 미만, 중급반 5~6세 미만, 고급반 6세~인민학교 입학전 까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동일한 연령의 어린이 수가 한 개 반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식반을 구성한다.

(제7조) 유치원은 통학거리에 따라 그에 분원을 조직할 수 있다.

(제8조) 유치원에서의 어린이의 체류시간은 부인들의 노동시간에 적응하게 제정한다.

(제9조) 유치원에서의 어린이들의 졸업은 인민학교 신년도 개학 10일 전에 진행하고 입학은 인민학교 개요일과 동일하게 한다.

○ 1972년 7월 1일, 2년 과정의 유치원 교육체계 수립

→ 주요결정내용

- ① 유치원 1년간(만 5세)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② 5년제 중학과 2년제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6년제 고등중학교로 개편한다.
- ③ 3~4년제 고등기술학교를 3년제 고등 기술 전문학교로 개편한다.

④ 대학 인문계 4년, 이공계 5~6년제, 교원대학 2년제로 한다.

⑤ 인민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로 1년 인하한다

→ 유치원 1년간(높은반의 의무교육) { 1,360시간 교육
 내용 :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공산주의 도덕', '우리말', '셈세기', '노래', '도화공작'

() 1991년 '정일봉사단' 창설

→ 교양사업으로써, 세세대의 마음속에 김정일에 대한 흠모의 정을 심게 함으로써 유치원에서 배우는 정치사상 교양 교재는 물론 우리말, 셈세기 등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김정일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수록해 놓고 있다.

5) 탁아소 및 유치원의 운영

(1) 탁아소

() 일탁아소 : 7시~7:30까지 운영

주탁아소 { 1~6개월 (젖먹이 반)
 밤에는 어린이를 돌보는 전담 보육원이 보호

() 직원 : 원장, 보육원, 간호원, 서기, 회계, 요리사 및 세탁인

· 원장 { 행정업무(7시 30분 ~7시 30분)
 1일 최소한 2시간 어린이와 시간을 보냄
 : 청산리 방법을 따르는 것임 - 행정가들이 밑에 내려가서 돕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
 : 어린이들의 요구 or 필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음
 모든 직원에게 정치교육과정을 이행함.

· 보육원 { 원장의 일을 도움
 직접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

· 간호원 { 아동들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담당하는 역할
 대중을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위생문화를 향상시킴
 매일 2시간 정치교육에 참여

- 서기와 회계원
 - ┌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
 - ├ 정부의 규칙에 따라 정확한 예산 세움
 - └ 1일 3시간씩 정치교육에 참여
- 요리사와 세탁인
 - ┌ 개인위생 철저히 요청됨
 - └ 가끔 의사와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인들이 행하는 위생 실습에 참가

(2) 유치원

- 일 유치원의 일과운영 : 오전 6시 30분~4시 30분
- 준비물 - ·낮은반 : 공부가 주가 아니므로 준비물이 별로 없다.
 - 높은반 : 35cm×20cm×5cm 규격의 학습장 3권
 - 필통, 연필, 지우개, 색종이 두 묶음, 가위, 타올수건, 치약, 칫솔 등
- 8월 30일까지 입학식을 끝내고, 9월 1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된다.
- 유치원은 탁아소에 비하여 훨씬 규칙적이다.
- 수업시간은 교수안에 따라 진행되며, 1주일에 12시간(1일 2시간, 6일간 수업 운영한다.
 - 다양한 교과목을 계획에 따라 번갈아 수업한다.
- 높은반의 주요 과목은 교과서로 배운다.
- 3시 30분부터 30분간, 교양원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지며, 이때 교양원은 매일 계획을 세워 교양수업을 하게 된다.

4.1.2 남한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1998년 현재 남한의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는 남한의 유아교육의 관계 법규는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서 「초·중등교육법」은 유치원에 관한 법이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에 관한 법이다.

「초·중등교육법」 제 35조, 제36조, 제37조는 유치원의 목적, 입학 연령, 무상교육

에 관한 법조항이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35조(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6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 37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총 6장, 32개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의 유치원 규정과 비교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노동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조(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수는 제 4조 제 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1조(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21조의2(무상보육 특례) ① 제 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 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 ③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의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알 수 있듯이 1998년을 기점으로 취학전 1년 만 5세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이는 의무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 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 연구자는 남한의 유아교육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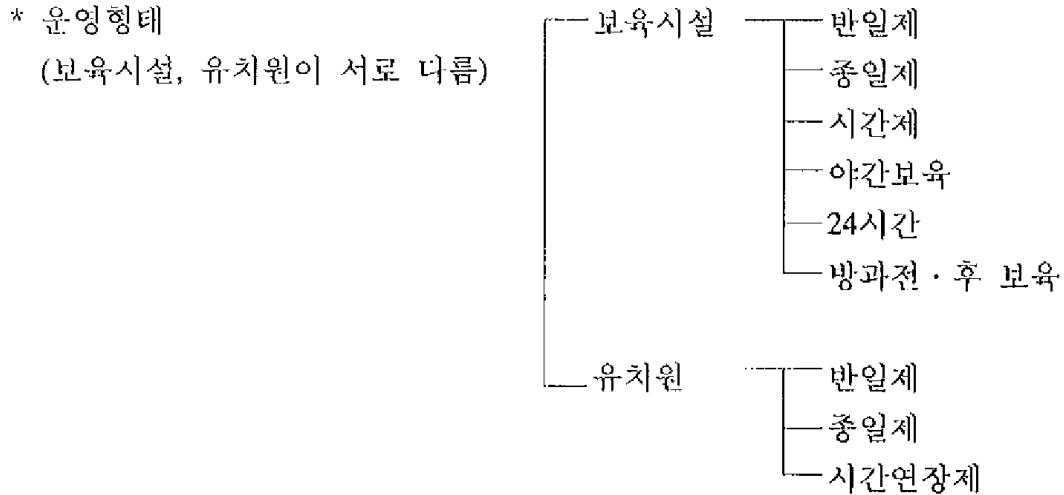
남한의 학교교육체계는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의한 유아교육기관은 기본학제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단지 취학전 1년 만 5세아를 위해 무상교육만 실시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을 뿐이다.

1) 유아교육체계의 이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

남한의 유아교육체계는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고에서는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1998)과 보육사업지침서(1997, 1998)를 토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 보육시설(0세 ~ 만 12세)
 - ┌ 2세 미만
 - ├ 2세
 - ├ 3세 이상
 - ├ 취학아동(방과후 아동보육)
 - └ 장애아동(전담시설 운영 혹은 통합반 운영)

- 유치원(만 3세 ~ 만 5세)
 - 3세반(영아반)
 - 4세반(유아반)
 - 5세반(유치반)



2)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담당부서

남한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는 다음의 <표5-1>과 같다.

<표5-1>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담당부서

기 관	관 계 부 서	담 당 부 서
유 치 원	교 육 부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청
보육시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시·군·구 가정복지과

3) 재정적 지원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재정적 지원 형태가 결정된다. 유치원의 국·공립 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의 재정 지원을 받으나 사립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다. 반면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은 국고 보조 및 지방비 보조를 받으며 민간 보육시설도 부분적인 운영지원을 국가 및 지방관계부서에서 보조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자체 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도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보육시설의 경우 국고 보조 및 지방비 보조를 받는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5-2>와 같다

<표5-2> 보육시설의 국고 보조 및 지방비 보조 항목

기 관	국고 보조 및 지방비 보조 항목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또는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설치비 · 간식비, 차량유지비, 자원봉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시설 운영비 · 시설 신·증·개축비, 개·보수비 등 시설기능 보강 사업비 ·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종사자 경력의 인정 등 인건비 추가 지원 ·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 · 기타 종사자 및 부모교육 지원, 각종 행사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1997). 보육사업지침. 서울 : 보건복지부.

4) 유아교육 정책의 발전 과정

남한의 유아교육 변천에 따른 법제화 과정을 1922년 이래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구분하여 비교·제시하면 다음의 <표5-3>과 같다.

<표5-3>중 보육시설의 주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6년 1월 16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보육시설 규모조정
 -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6인이상→21인이상
 -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5인이하→20인이하
- 종사자 기준중 의사(축탁), 사무원, 관리인 자율화
- 보육시설 설치 신청서류 간소화(사업계획서 등 4종 폐지)
- 종전의 시·군·구별 보육료 고시제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육료 자율화
- 보육교사 교육훈련제도 강화
 - 2급에서 1급 승진시, 보수교육(40시간) 의무화

· 보육교사 교육원에 부설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4.2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체제 및 제도

지금까지 본 고에서는 남·북한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비교하여 간략히 소개하면 남한과 북한의 학교제도는 양 체제의 사회적인 성격과 교육체제의 변천과정을 거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나름대로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최영표·한만길·홍영란, 1993).

먼저 학제의 기본구조를 보면, 남한은 6-3-3-4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2-4-6-4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2년 짧은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제도상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등 교육단계는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남한은 전기 3년, 후기 3년으로 구분하는데 비해서 북한은 전기 4년, 후기 2년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은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북한은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표5-3> 남한의 유아교육정책 발전 과정

연 도	보육 시설	유치원
1922. 2. 26		「유치원 규정」 공포 (조선 총독부령 제11호)
1946. 10. 16		보통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유치원 업무 담당(군정 법령 제64호)
1949. 12. 31		유아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교육법 법률 제118호) (4세~취학전 아동, 수업년한 1년 이상 유아교육 실시)
1950. 3. 10		제 1차 학제 개정(국립유치원 설치 계획 - 6.26전쟁으로 실행 못함)
1952	「후생시설운영요강」에 의거 부산시립 탁아소 설치	유아교육기반 법적근거 마련(유치원 설립인가 등)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638호)

연 도	보육 시설	유치원
1955. 2. 17		문화국 사회교육과에서 유치원 업무 담당(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1000호)
1961	「아동복지법」 제정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	
1962		유치원 시설 기준령 마련 (문교부령 제106호)
1963. 12. 16		보통교육국 교육행정과에서 유치원 업무 담당 (교육부 시행령 대통령령 제1737호)
1968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 요령」 공포(보건사회부 주관. 보육시설의 명칭을 탁아소→어린이집으로 개명)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액표 (문교부령 제188호)
1969. 2. 19		최초로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문교부령 제207호)
1976		최초로 공립유치원인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 설립
1977		전문대학 보육과 설치
1979. 3. 1		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개정) (문교부 고시 제424호)
1979. 3. 29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에서 유치원 업무 담당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9380호)
1981. 4. 13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	
1981. 12. 31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개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2. 12. 31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어린이집'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운영 (교육부:법 제정 및 장학지도, 보사부:보건의료, 내무부:시설운영 및 행정지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법률 제3635호)
1983. 2. 23		보통교육국 유아교육담당관실 설치. 시·도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배치 (대통령령 제 11057호)
1983. 6. 9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1141호)
1987. 6. 30		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문교부 고시 제87-9호)

연도	보육 시설	유치원
1981. 12. 31		제 3차 유치원 교육과정(개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2. 12. 31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어린이집’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운영 (교육부:법 제정 및 장학지도, 보사부:보건의료, 내무부:시설운영 및 행정지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법률 제3635호)
1983. 2. 23		보통교육국 유아교육담당관실 설치. 시·도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배차 (대통령령 제 11057호)
1983. 6. 9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1141호)
1987. 6. 30		제 4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문교부 고시 제87-9호)
1987. 12. 4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 도입	
1989. 9. 19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탁아사업 실시 근거 부활	
1990. 1. 15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제정	
1991. 1. 1		내무부 관장 새마을 유아원을 교육부로 이관(이관된 유아원은 1993년까지 유치원 또는 탁아소로 전환)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 (법률 제4328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 확대)	
1991. 8.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정·공포 (대통령령 제13444호)	
1991. 8. 8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정·공포 (보건사회부령 제876호)	
1991. 8. 26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폐지	
1991. 12. 31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법률 제4475호)

연도	보육 시설	유치원
1992. 3. 22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3601호)
1992. 9. 30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개정) (교육부 고시 제1992-15호)
1992. 10. 2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895호)	
1993. 12. 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015호)	
1994. 2. 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사회부령 제924호)	
1994. 12.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446호)	
1995. 5. 1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652호)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확대등)	
1996. 1.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6호)	
1996. 2.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920호)	
1997. 12. 13		「초·중등 교육법」 제정(법률 제 5438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교육 실시 법적근거 마련)
1997. 12.24	「영유아보육법」 개정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 실시 법적근거 마련)	
1998. 6. 30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개정) (교육부 고시 제1998-10호)

출처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서울:교육부.
 보건복지부(1997). 보육사업지침. 서울: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1998). 보육사업지침. 서울:보건복지부.
 이영석(1997a). 유아교육론. 서울:형설출판사.
 임재택(1995). 현대유아교육과정. 서울:양서원.

특히, 취학전 교육에 있어서, 남한은 1980년에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강조된 반면에 북한은 여성노동력의 활용, 아동에 대한 사회주의 교양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쟁 후 복구시기때 부터 일찍이 강조되었다. 취학전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 정책을 살펴보면, 남한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사를 중시하지만, 북한은 전적으로

국가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법적으로 취학전 교육을 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학전 1년의 교육을 11년 의무교육 연한 속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의무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교육체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조가에 사상교양을 강화하려는 정치사상 교육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제 연구자는 나름대로 새 통일 한국에서 추진해야 할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에 관해 '예견적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새 통일 한국의 교육방향'에서 제시한 바 있듯이 교육개혁심의회가 제안한 학제 즉, 幼-5-3-4-4제를 미래의 새 통일 한국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취학전 1년(만 5세아)~중등교육 수준까지는 국가수준에서 의무무상교육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幼-5-3-4-4제 이든지 幼-6-3-3-4제 이든지 간에 최소한 중학교(현재 남한의 학제에 근거)까지는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럼으로써 취학전 1년이 기간학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취학전 1년을 기간학제에 포함시킴을 전제하여 새 통일 한국의 유아기 교육제도에 관해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북한의 취학전 교육과 남한의 취학전 교육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하는 바이다.

첫째,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일원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취학전 1년이 기간학제화 되어야 한다.

셋째,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취학전 1년만 의무무상교육화 되어야 한다.

넷째,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재정부담에 있어 정부 주도의 국가 및 지방 부담, 민간인 주도의 자체 부담 등 제도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국가 순위 교사에 의한 교사의 신분보장제도(교육공무원회)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평등교육을 지향하며, 수혜자의 선택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체제 및 제도를

다음의 <그림5-1>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그림 5-1>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기준에 따른 역할 분담 체계로 운영한다. 즉, 0~만 3세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보육시설 체계로 운영하고, 만 4~5세까지는 교육부 주관의 유치원 체계로 운영한다(이영석, 1995b)

연령	교육공무원				관계부처
5			5세반	국·공립 병설 유치원 5세반	교육부
4	4세 전담 사립유치원	4세반	사립유치원 [법인회]		
3					보건복지부
2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1					

<그림5-1>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체계 구조

둘째, 0~만 3세 교육은 연령 수준에 적합한 보육위주의 교육기능을 전담하고, 만 4~5세 교육은 연령에 적합한 교육위주의 보육기능을 전담 한다.

셋째, 0~만 3세의 교육은 현행 남한의 보육시설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단,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써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넷째, 만 4~5세의 교육은 유치원에서 관장하는데, 특히 만 5세는 의무무상교육 대상자이므로 많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일단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두고

초등학교내에 부설화시킨다. 이때 병설 유치원은 특성상 만 5세반만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해야 한다. 원장의 선택에 따라 법인화하지 않을 경우는 만 5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무리가 따르므로 이 경우 만 4세아 전담유치원으로 규정하여 만 4세아만 교육한다. 만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게 되면 이 경우는 만 4세반과 만 5세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에서는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의 만 5세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즉, 만 5세 담임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 개·보수비를 비롯한 시설보강사업비 등 만 5세아 교육에 합당한 보조금 항목을 책정하여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한다.

끝으로,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교사에 한한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국가고시제도는 교사들의 질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이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5.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과정

5.1 남·북한의 영·유아교육과정 비교

5.1.1 북한의 영·유아교육과정

북한의 취학전 교육은 유치원 교육과 탁아소 교육으로 구분되어진다. 연구자는 북한의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으로 탁아소의 교육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의 영·유아 교육과정을 다룸에 있어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편집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 북한의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

북한의 유치원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적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내에 부설화시킨다. 이때 병설 유치원은 특성상 만 5세반만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해야 한다. 원장의 선택에 따라 법인화하지 않을 경우는 만 5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무리가 따르므로 이 경우 만 4세아 전담유치원으로 규정하여 만 4세아만 교육한다. 만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게 되면 이 경우는 만 4세반과 만 5세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에서는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의 만 5세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즉, 만 5세 담임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 개·보수비를 비롯한 시설보강사업비 등 만 5세아 교육에 합당한 보조금 항목을 책정하여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한다.

끝으로,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교사에 한한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국가고시제도는 교사들의 질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이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5.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과정

5.1 남·북한의 영·유아교육과정 비교

5.1.1 북한의 영·유아교육과정

북한의 취학전 교육은 유치원 교육과 탁아소 교육으로 구분되어진다. 연구자는 북한의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으로 탁아소의 교육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의 영·유아 교육과정을 다룸에 있어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편집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 북한의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

북한의 유치원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적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

(1)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제

북한의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 편제는 다음의 <표 5-1>과 같다.

(2)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수목표

북한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수목표는 국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 학문적 세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공산주의 혁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치사상 교양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그 다음으로 각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다루고 있다(최민수, 1996a ; 최민수, 1998).

<표5-1> 북한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제 및 비율(1996년 현재 추정자료)

영역구분	교과목명	유치원 2년간			낮은반				높은반			
		총 시수	교과목 별 비율	교육영역 별 비율	전반기 시수	후반기 시수	총 시수	교과목 별 비율	전반기 시수	후반기 시수	총 시수	교과목 별 비율
정치사상 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80	6.5%	13%	20	20	40	8.5%	20	20	40	5.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80	6.05%		20	20	40	8.5%	20	20	40	5.5%
지적교육	우리말(국어)	120	10%	23%					60	60	120	17%
	셈세기(산수)	80	6.5%		40	40	80	11%				
	관찰	80	6.5%		40	40	80	11%				
정서교육	노래와 춤	280	24%	31%	80	80	160	33%	60	60	120	17%
	그리기와 만들기(미술)	80	7%		40	40	80	11%				
체육교육	체육	160	13%	13%	40	40	80	17%	40	40	80	11%
기 타	놀이(유희)	240	20%	20%	80	80	160	33%	40	40	80	11%
계		1200	100%	100%	240	240	480	100%	360	360	720	100%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최민수(1996b).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203~228.

○ 정치사상 교양의 교수목표

첫째, 김일성의 영특성과 비범한 예지, 고매한 덕성, 불굴의 의지를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

둘째, 김정일의 비범한 예지, 고매한 덕성, 불굴의 의지를 따라 배우도록 하는 것

○ 지적 교육의 교수목표

첫째, 어린이들에게 혁명적 학습태도를 싹 틔워주는 것

둘째, 어린이들의 지적 능력을 발전시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는 것

셋째, 우리말 : 어휘의 뜻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

3000 단어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유치원 높은반)

넷째, 셈세기 : 수와 셈법에 대한 초보 지식을 주는 것

양과 공간, 시간, 기하도형의 이름, 수에 대한 표상 능력을 기르는 것

○ 정서 교육의 교수목표

첫째, 어린이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혁명적 낙관주의와 문화성을 높여주는 것

둘째, 노래와 춤 : 혁명적 노래를 정확히 부르고 가사를 유창하게 읊는 것

초보적인 악기가 내는 소리를 변별하는 음악적 청각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것

○ 체육교육의 교수목표

첫째, 신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

둘째, 인내성, 지구력, 왕성한 정력과 폐기를 길러줌으로써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형성시키는 것

셋째, 신체보호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생문화적 숙련과 습성을 배양하는 것

북한의 취학전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수목표는 교과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정치사상 교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해당 과목의 교수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정해진 목표점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결과 지향적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북한의 유치원 교육에서는 어린이를 통해 교수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따

라서 교양원은 주입식으로 가르치더라도 어린이가 꼭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교육은 교육의 경험과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결과 지향적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행동주의 이론의 영향이라 하겠다.

(3) 교육내용

○ 정치사상교양

정치사상교양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북한 취학전 교육에서는 도덕적 덕목을 주입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교수내용으로 삼고 있다(표5-2 참조).

○ 지적교육

북한 취학전 교육에서는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 다음으로 지적교육을 강조한다. 지적교육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적 학습기풍을 따라 배워 학습에 대한 흥미와 사랑, 학습의욕, 그리고 의지력 등을 키워 주어 혁명적 학습태도와 학습에 대한 혁명적 관점을 갖도록 함을 강조한다(표5-3 참조).

<표5-2> 정치사상교양의 내용구성(높은반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정치사상교양의 항목	내 용
영특성과 비범한 예지에 대한 찬양	성품과 예지
	비범성
	존경과 흠모 I
	존경과 흠모 II
탄생과 혁명 가정의 신화	만경대 탄생
	혁명적 가정배경
	부친의 가르침
	모친의 가르침
고매한 공산주의 도덕의 품성	예절
	집안일 돕기
	근검과 절약
	친구사랑
	효도
혁명·증오사상의 고취와 불굴의 의지	원수에 대한 증오
	원수 때려부수기
	원수와 맞서 싸우기
	혁명사상 고취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최민수(1996).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203~228.

<표5-3> 지적교육의 내용구성(높은반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명	내용
우리말(국어)	김부자에 대한 존경과 흠모
	학습태도와 글자의 기본 원리
	받침없는 한 단어
	받침있는 한 단어
	된소리나는 한 단어
	이름쓰기
셈세기(산수)	1~5까지의 숫자익히기 (모임만들기, 배열 및 대응조각 포함)
	5이하 수 더하기 달기
	6~10의 숫자 익히기
	열~서른까지 묶어세기
	10이하 수 더하기 달기
관찰	동·식물의 관찰
	장소와 사적지 견학
	시설·설비의 관찰
	자연의 변화 관찰
	기계의 관찰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최민수(1996).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203~228.

○ 정서교육

<표5-4> 정서교육의 내용구성(낮은반 상반학기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명	내용구분	내 용	
노래와 춤	노래	김일성 장군의 노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노래 우리나라 별하나 나하나	
	춤기초	고개쓰기 무릎 굽혔다가 펴기와 발뒤꿈치 내대기 건기 (1)(2) 어깨 놀리기 팔 놀리기 손목 놀리기 손뼉치기 모두 발뛰기 허리굽히기	
	일과춤	교양실에 들어갈 때의 춤 글쓰기 전과 글쓸 때의 춤 주의를 집중시킬 때의 춤 교양실에서 나갈 때의 춤 낮잠자기 전의 춤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춤	
	노래와 춤	보고 싶은 원수님 어머니 사진	
그리기와 만들기	그리기	기초동작	색가리기, 크레용 쥐기, 기본자세
		보고 그리기	그림보고 그리기 단순한 물건 보고 그리기 복잡한 물건 보고 그리기 본 모양 그리기
		감상하기	그림 감상하기
		상상화	생각하여 그리기
	만들기	종이작업	종이접기
		나뭇잎 구성	나뭇잎, 풀잎으로 모양 구성
		복합자료 구성	종이 뜯어 그림 구상하기 종이배어 붙이기 종이오려 만들기 두가지 자료로 만들기
		진흙구성	진흙으로 만들기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최민수(1996).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203~228.

북한 유치원의 하루 일과에서는 노래와 춤의 비중이 매우 높다. ‘노래와 춤’ 과목은 집단교육으로 실시하므로, 시간과 시간을 연결하거나 통제할 때 노래와 춤을 활용하고 있다. 노래와 춤을 지도하는 내용과 방법에서는 동심에 알맞은 노래나 춤보다는 김부자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위한 노래와 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체육교육

북한에서의 체육교육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여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국방 체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집단 체육활동을 통해 집단주의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장한 체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를 길러내는데 있다.

<표5-5> 체육교육의 내용구성(‘과외활동요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 용 구 분	내 용
보행과 육상	대열 운동
	달리기 놀이
	뛰기놀이
체조와 무용	맨손 체조
	평행 및 구르기 놀이
	체육 무용
기구운동	오르내리기 및 배달리기
	자전거 놀이
구기놀이	던지기 놀이
	공놀이
계절놀이	눈과 얼음위의 놀이
	불에서 하는 놀이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최민수(1996).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203~228.

체육교육의 특징은 유치원 교육부터 집단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 교육을 중요시하고, 상당한 정도는 호전적인 전쟁놀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놀이

<표5-6> 놀이의 내용구성('과외활동요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놀이 영역	내용 (제목)
언어놀이	어디에 놓을까요
	말찾기 놀이
	별꼬니 놀이
	누가 먼저 가나요
	우리 글자 곱게 새겨보아요
	시계 바늘로 글자 맞추기
	지금은 어느 때나요
	말 만들기 놀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수놀이	보물찾기 놀이
	시계놀이
	동무뭇기
	답찾기 놀이
	식세우기 놀이
	10점 고지 오르기
게임	진치기 놀이
	놀이감 돌리기
그리기와 만들기	총놀이
	띄우기 놀이
	배 띄우기 놀이
조작놀이	그림 맞추기 놀이
모래놀이	논밭 만들기

출처 : 최민수(1998).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최민수(1996).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203~228.

2) 북한의 탁아소 교육과정

북한 취학전 교육의 첫 단계는 탁아소에서 비롯된다. 탁아소는 내 연령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젓먹이반, 젓떼기반, 교양반, 유치원 준비반이다. 각 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내용은 유치원보다 그리 명확하지 않다. 이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젓먹이반(1~6개월)

- 정치 사상 교육을 하지 않는다.
- 준비물 : 손수건 5개, 기저귀 20개, 배개
- 2시간 간격으로 어머니가 젓먹이기(30분씩)

○ 젓떼기반(7~18개월)

- 죽 먹이기
- 2시간 간격으로 기저귀 갈기
- 건강상태 체크
- 보육원 1명이 15~20명의 영아 담당
- 보육원의 주요 임무 : 영아의 위생 관리

○ 교양반(19~36개월)

- 간단한 교양학습 - 기초적인 언어교육
 - 보행법(서는 연습, 앉는 연습)
 - 규율에 대한 순종심(보육원의 말에 복종하기)
 - 대소변 훈련
- 집단주의 정신 교육
- 본격적인 김일성 우상화 교양 교육 - “경에하는 수령 대원수님을 따라 배우는 어린 시절 이야기”
- 여러가지 학습 - 간단한 색 가려보기
 - 노래와 춤

○ 유치원 준비반(37~48개월)

- 유치원에 가기 위한 학습준비가 우선된다.
- 기초적인 학습
- 김부자에 대한 사상교양(더 복잡해짐) - 혁명가요 부르기

전쟁놀이

5.1.2 남한의 영·유아교육과정

남한의 영·유아교육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으로 구분되어지며, 수혜자의 요구에 따라 기관 선택이 자유로우며 유치원 교육은 만 3~5세를 위한 교육이며, 어린이집 보육은 방과후 아동보육을 포함해 0~만 12세 까지를 보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연구자는 본 고에서 유치원 제 5차 교육과정과 제 6차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의 보육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유치원 교육과정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며,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가진다. 일상 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궁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다.

(1)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

국가 수준의 남한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은 제 5차, 제 6차 모두 아래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 건강생활
- 사회생활
- 표현생활

- 언어생활
- 탐구생활

(2)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별 목표

1998년 6월 30일 고시된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별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8)

○ 건강생활

첫째, 다양한 신체 활동과 감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와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둘째, 신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기초 체력을 증진한다.

셋째,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익힘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가진다.

넷째,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정신을 기른다.

○ 사회생활

첫째, 예절바르게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며 아껴 쓰는 생활 습관을 가진다.

둘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기초로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른다.

셋째,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적응력을 기른다.

○ 표현생활

첫째, 자연과 사물의 예술적 요소들을 탐색함으로써 호기심을 기른다.

둘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다.

셋째, 자연과 사물 및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심미감을 기른다.

○ 언어생활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글자와 글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넷째,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는 태도를 가진다.

○ 탐구생활

첫째, 주변 생활과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탐구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둘째, 구체적인 사물의 조작을 통하여 논리·수학적 사고의 기초 능력을 기른다.

셋째,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3) 교육내용

본고에서는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별 교육내용을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 건강생활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감각·운동과 신체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을 통해 사물의 차이 식별하기 ·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활동하기 · 신체 기관에 대해 관심 가지고 활용하기 · 지각과 운동을 활용하여 활동하기 · 대근육 활동하기 · 소근육 활동하기 ·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놀이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하기 	감각 및 신체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 기관을 활용하기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기본 운동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운동하기 · 비이동 운동하기 · 조작 운동하기 ·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깨끗이 하기 · 주변 환경 깨끗이 하기 · 규칙적인 생활하기 · 적절히 휴식하기 · 옷을 바르게 입기 · 올바른 식생활하기 · 질병 예방하기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깨끗이 하기 · 주변을 깨끗이 하기 · 적절하게 옷 입기 · 바른 식생활 하기 · 적절히 휴식하기 · 질병 예방하기 · 즐겁게 생활하기
안전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잇감, 기구,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 교통 기관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 규칙 준수하기 · 사고, 위험한 상황 파악하기 · 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놀이하기 · 교통 안전 규칙 지키기 · 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 · 환경 오염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출처 : 인재탁(1995). 현대 유아교육과정. 서울 : 양서원.
 교육부(1993).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 과정. 서울 : 교육부.

○ 사회생활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기본 생활 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바르게 생활하기 · 질서를 지켜 행동하기 ·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기 	기본 생활 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바르게 생활하기 · 질서 지켜 생화하기 · 아껴서 생활하기
개인의 생각과 행동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자기 일을 계획하고 완수하기 · 상황에 알맞게 감정과 행동 조절하기 	개인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감정과 욕구 조절하기 · 자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가족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구조 알기 · 가족의 역할 알기 · 가정의 기능 알기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 가족과 협력하기
집단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알기 ·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기 · 집단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협동하여 문제 해결하기 	집단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 공공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기 · 두레의 소중함을 알고 협력하기
사회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에 관심 가지기 · 공공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기 · 직업에 관심 가지기 · 경제 생활에 관심 가지기 · 주변 환경 보전하기 · 우리 나라의 상징과 전통놀이 경험하기 · 북한에 대한 관심 가지기 ·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 가지기 	사회현상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에 관심 가지기 · 직업에 관심 가지기 · 경제 생활에 관심 가지기 · 환경 보전에 관심 가지기 · 우리 나라의 상징과 전통에 관심 가지기 · 통일에 관심 가지기 ·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에 관심 가지기 · 정보 자료에 관심 가지기

출처 : 임재택(1995). 현대 유아교육과정. 서울 : 양서원.
 교육부(1993).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 과정. 서울 : 교육부.

○ 표현생활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시작한 활동에 열중하여 성취감 가지기 · 자신의 감정을 직설하게 표현하기 · 생활 속에서 느낀 것을 전하고 나누기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기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탐색하기 · 형태 탐색하기 · 움직임 탐색하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소리 만들어 보기 · 노래부르기 · 리듬 악기 다루기 · 그림 그리기 · 만들기와 꾸미기 ·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조형 활동하기 · 신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동작으로 표현하기 ·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신체로 표현하기 · 극놀이를 표현하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가지 소리 만들기 · 노래부르기 · 리듬 악기 다루기 · 그림 그리기 · 만들기와 꾸미기 · 동작으로 표현하기 ·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 극 놀이로 표현하기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소리 듣기 · 다양한 종류의 음악 듣기 · 자연과 사물을 감상하기 · 다양한 조형 작품 감상하기 · 봄의 움직임을 보고 즐기기 · 다양한 종류의 춤 감상하기 · 극놀이 감상하기 · 전통 예술에 친숙해지기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감상하기 · 자연과 사물 및 조형 작품 감상하기 · 춤 감상하기 · 극놀이 감상하기 · 예술적 표현 존중하기 · 전통 예술에 친숙해지기

출처 : 위계택(1995). 현대 유아교육과정. 서울 : 양서원.
 교육부(1993).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 과정. 서울 : 교육부.

○ 언어생활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리듣기 · 일상 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 이해하기 ·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 듣고 따르기 · 동화와 동시 즐겨 듣기 · 바른 태도로 듣기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리 듣기 ·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 동화, 동요, 동시 듣기 ·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 일상 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 말하기 · 묻는 말에 대답하기 · 경험, 생각, 느낌 말하기 · 상황에 따라 말하기 · 바른 태도로 말하기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 낱말과 문장을 말하기 · 경험, 생각, 느낌 말하기 · 상황에 맞게 말하기 ·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에 관심 가지기 · 말과 글과의 관계 알기 · 글자로 놀이하기 · 읽어 주는 동화와 동시 즐기 · 책에 관심 가지기 · 쓰기 도구에 관심가지기 	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과 글의 관계 알기 · 글자에 관심 가지기 ·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책에 관심 가지기 · 읽어 주는 글을 이해하기

출처 : 임재택(1995). 현대 유아교육과정. 서울 : 양서원.
 교육부(1993).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 과정. 서울 : 교육부.

○ 탐구생활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과학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의 성질 탐색하기 · 물질의 변화 과정 관찰하기 · 물체의 움직임 관찰하기 · 우리 몸에 대해 관심 가지기 · 생물에 대해 관심 가지기 ·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 가지기 · 자연 현상 관찰하기 	과학적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몸에 대하여 알아보기 · 생물에 대하여 관심 가지기 · 자연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기 ·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 · 도구와 기계에 관심 가지기
논리·수학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 분류하기 · 사물의 순서 짓기 · 수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 · 일상 생활에서 수 활용하기 · 전체와 부분 경험하기 ·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 가지기 · 시간에 관한 기초 개념 가지기 · 공간에 관한 기초 개념 가지기 · 기본 도형 인식 및 구성하기 · 기초적인 통계에 관련된 경험 가지기 	수학적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하기와 순서 짓기 · 수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 ·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 · 시간에 대한 기초 개념 알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기 ·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
창의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한 상황에 관심 가지기 · 다양하게 사고하기 · 독특하게 사고하기 	창의적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기 · 다양하게 생각하기 · 독특하게 생각하기

출처 : 임재택(1995). 현대 유아교육과정. 서울 : 양서원.
 교육부(1993).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 과정. 서울 : 교육부.

2) 남한의 어린이집(보육시설) 교육과정

연구자는 본 고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보육내용)에 명시된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을 토대로 보육과정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보건복지부, 1997 ; 이영석, 1997).

(1) 보육과정의 일반목표

첫째,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 제공 및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킨다(교육기능).

둘째,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를 한다(영양기능).

셋째,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기능).

넷째,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한다(안전기능).

다섯째,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를 제고한다(부모에 대한 서비스기능).

여섯째,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역사회와의 교류기능).

(2) 보육내용

보육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하루의 보육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일간, 주간 및 월간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한다.

○ 교육

- 건강생활

기본적인 감각·운동기능과 신체조절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도록 한다.

- 사회생활

기본 생활습관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익히게 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일상생활에 필요

한 기본 예절교육 강화).

- 표현생활

영·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기르도록 한다.

- 언어생활

말과 글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신장하여 즐거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 탐구생활

주위의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영 양

첫째,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되며,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또는 영양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둘째, 1세 미만의 영유아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부모나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건 강

첫째,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종사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시 및 매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넷째, 보육시설 안의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부패되기 쉬

운 음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안 전

첫째,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부모 및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 부모교육

- 교육대상 : 학부모 및 지역 일반 주민
- 교육내용 :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 및 부모의 역할, 영·유아 보육 및 지도 요령, 가정보건, 영양, 생활예절, 생활법률 등
- 교재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 도서 등을 적극 구입 지원

- 부모상담 및 부모참여

- 가정의 육아상담·조언 실시
- 자모회 등을 통한 부모상호간의 육아방법 교류
- 보육 프로그램의 구성과정이나 운영과정에 부모참여 유도

- 기타 자연보호·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복지 도모

5.2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과정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과정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서도, 이데올로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과정은 이에 접하게 될 대상에게 가장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영아와 유아의 발달적, 심리적 측면에 적합하고, 영·유아들이 추구해야 할 인간존중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게 제시되어야 하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적합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미 앞장에서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체제를 제시한 바 있다. 즉, 보육시설과 유치원 체제로 양분되면서 연령기준에 따른 역할 분담 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각 연령별 교육목표와 목표영역을 제시하고 보육시설에서 요구되는 연령별 영아교육과정과 유치원에서 요구되는 연령별 유아교육과정을 내용중심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만 0세아(1~12개월)의 보육목표 :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

만 0세아(1~12개월)의 보육영역 : 감각영역

대물인지영역

기본정서영역

영양영역

○ 만 1세아(13~24개월)의 보육목표 : 내재적 흥미의 자율적인 표출

만 1세아(13~24개월)의 보육영역 : 감각·운동영역

신변처리영역

기본언어영역

표상영역

건강영역

○ 만 2세아(25~36개월)의 보육목표 : 자기체험의 주도적 표현

만 2세아(25~36개월)의 보육영역 : 감각·운동영역

기본생활영역

개념학습영역

언어영역

정서영역

안전영역

○ 만 3세아(37~48개월)의 보육목표 : 기본생활습관의 형성

만 3세아(37~48개월)의 보육영역 : 신체영역

기본생활영역

언어영역

수영역

정서영역

○ 만 4세아(49~60개월)의 교육목표 :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

만 4세아(49~60개월)의 교육영역 : 신체건강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 만 5세아(61~72개월)의 교육목표 : 창의적 사고의 개발

만 5세아(61~72개월)의 교육영역 : 신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1) 연령별 영아보육과정

(1) 만 0세아를 위한 영아보육과정의 보육내용

영역	보육내용
감각	감각기관 변별하기 감각기관 활용하기
대물인지	단순 모방하기 대상영속성 알기 대물 변별하기
기본정서	정서 느끼기 기본 정서 분화하기 정서 표현하기
영양	모유(분유)먹기 이유식하기 영양분 섭취하기

(2) 만 1세아를 위한 영아보육과정의 보육내용

영역	보육내용
감각·운동	감각기관 협응하기 협응하여 활동하기 대근육 활동하기
신변처리	대변훈련하기 스스로 하기
기본언어	소리 변별하기 소리 내어보기 한 단어로 의사표현하기
표상	사물의 특성 발견하기 다양한 정보 받아들이기 자연 모방하기
건강	질병 예방하기 규칙적인 식습관 기르기 건강한 의생활하기

(3) 만 2세아를 위한 영아보육과정의 보육내용

영역	하위영역	보육내용
감각·운동	감각발달	오감각의 기능 경험하기 오감각의 차이점 알기
	대근육발달	신체 움직이기 놀이기구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친구의 신체 움직이기
	소근육발달	물건 잡기 선 그리기 그림 그리기
기본생활	의생활	바르게 옷 입기 혼자서 옷 벗기 혼자서 신 벗기
	주생활	인사하기 규칙적으로 잠자기
	식생활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하기 즐겁게 식사하기 식사 예절 지키기

영역	하위영역	보육내용
개념학습	사물의 명칭	물건의 이름 알기 사물의 차이점 변별하기 사물의 개념 알기
	생물의 특성	우리의 몸 알기 생물에 관심 가지기 생물의 차이점 느껴보기
	자연현상	자연현상 관찰하기 차이점 변별하기
언어	듣기	여러 가지 소리 듣기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듣고 따라하기
	말하기	여러 가지 소리 만들어 보기 의사전달하기
정서	기본정서	여러 가지 감정 느껴보기 활동에 열중하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기
	정서표현	노래부르기 동작으로 표현하기 만들기
안전	규칙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기 정리정돈하기 안전 규칙 지키기
	예방	위험한 물건 안전하게 다루기 교구·교재 다루는 법 알기

(3) 만 3세아를 위한 영아보육과정의 보육내용

영역	하위영역	보육내용
신체	감각	시각, 청각 변별하기 후각, 미각 변별하기 촉각 변별하기
	기본운동능력	이동하기 대근육 활동하기 소근육 활동하기
	신체조절	자유롭게 신체 움직여보기 지시대로 신체 움직이기

영역	하위영역	보육내용
기본생활	예절	식사 예절 지키기 인사 예절 지키기 어른께 예절 지키기
	절제	자기 물건 아껴쓰기 친구 물건 아껴쓰기 어린이집 물건 아껴쓰기
	질서	정리정돈 잘하기 차레지카기 약속 지키기
언어	듣기	동화, 동요, 동시 듣기 바른 태도로 듣기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말하기	정확히 발음하기 생각, 느낌 말하기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읽기에 관심 갖기	글자에 관심 갖기 책에 관심 갖기 읽어주는 이야기에 관심 갖기
수	분류	차이점 알기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기 단순 분류하기
	서열	작은 순서대로 놓아보기 큰 순서대로 놓아보기 세 가지를 순서대로 놓기
	도형	도형의 모양 차이 알기 도형의 명칭 알기 주변에서 도형 찾기
점서	점서표현	만들기와 꾸미기 악기 다루기 신체로 표현하기
	감상	음악 감상하기 그림 감상하기 동시 감상하기

2) 연령별 유아교육과정

(1) 만 4세아를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영역	하위영역	교육내용
신체건강	감각운동기능	감각기능 감각운동의 협응
	신체조절	대근육 소근육 신체조정
	위생·영양·안전	위생 및 청결 영양 휴식 및 안전

영역	하위영역	교육내용
사회성발달	기본생활습관	예절 질서 및 규칙 질재
	개인생활	긍정적 자아 감정과 행동조절 실천적 행동
	가정생활	가족 이해 가족의 역할 가족 사랑
	사회생활	직업의 종류와 역할 우리나라 세계 여러나라 환경보호
정서발달	정서이해	성취감 자신의 정서 이해 타인의 정서 이해
	정서표현	신체표현 언어표현 작품표현
	감상	음악감상 미술감상 극놀이 감상
언어발달	듣기	발음 소리 변별 동화·동요·동시 듣기 듣기의 바른 태도
	말하기	어휘 및 문장의 이해 낱말과 문장 말하기 말하기의 바른 태도
	읽기·쓰기의 기초	글자의 기초 읽기의 기초 쓰기의 기초
인지발달	물리적 개념	물체의 속성 물질의 변화 생물과 무생물 자연현상
	표상적 개념	지표 상징 언어
	논리·수학적 개념	분류, 서열 측정, 도형 부분과 전체 수의 기초 시간의 기초

(2) 만 5세아를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영역	하위영역	교육내용
신체발달	감각발달	감각변별 감각 기능의 협응
	신체조절	신체 협응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건강	규칙적인 생활 바른 식습관 질병 예방 청결한 생활
	안전	교통 안전 생활 안전 사고 예방
인지발달	동화와 조절	사고의 확장 사고의 전환
	과학적 사고	기본 속성 파악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논리·수학적 사고	수의 보존 측정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그래프
언어발달	듣기	발음 의미구분 수용적 언어
	말하기	언어이해 언어표현 의사소통
	읽기·쓰기의 기초	말과 글의 관계 표현 언어 읽기의 기초 쓰기의 기초
사회성발달	기본사회생활	예절 및 질서 질서 생활 개인행동조절 친 사회적 행동
	가정생활	가족의 의미 공동생활
	집단생활	참이의식 직업 공중질서
	국가생활	애국심 지구촌 생활 환경보존
정서발달	감정조절	정서이해 정서수용
	정서표현	언어적 표현 예술적 표현
	감상	감상의 의미 음악감상 미술감상 전통 예술

6. 결 론

지금까지 연구자는 통일 교육과 관련하여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연구’라는 주제 하에 네 가지 연구문제 즉, 첫째, 새 통일 한국 교육의 방향,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유아 교육관, 셋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넷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과정 등에 관해 문헌고찰 및 이를 토대로한 연구자의 소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다. 논제를 기술하는 과정에 다소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본 주제를 다룰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의 탐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봄으로써, 간략하게나마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문제의 결과를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교육의 미래 즉, 새 통일 한국의 교육의 방향은 (1) 적응을 위한 교육, 변화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2) ‘성숙한 문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모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 (3) ‘인간 존중의 가치’를 정립시켜 줄 수 있는 가치 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4) 사회의 평등화, 교육의 평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5) 교육의 전문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6) 세계적 수준의 학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7) 교육제도의 개방성·효율성·다양성을 이루어야 한다. (8)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9) 교육의 고유성·독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둘째,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 영·유아교육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새 통일 한국의 인간관은 (1) 투철한 민주의를 지닌 사람, (2)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 (3) 성숙한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 (4) 높은 심미적 안목을 지닌 사람, (5)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 (6) 주체적인 사람, (7)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8) 거국적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 등이다. 다음으로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관은 (1) 새 통일 한국의 인간상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 다양한 유아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연령에 따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유아교육이 계획되어야 한다. (4) 유아의 능력,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다변하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기본 원칙은

(1)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일원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2)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취학전 1년을 기간학제화 하여야 한다. (3)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취학전 1년만 의무무상교육화 하여야 한다. (4)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재정부담에 있어 정부주도의 국가 및 지방 부담, 민간인 주도의 자체 부담 등 제도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5)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국가 순위 고사에 의한 교사의 신분보장제도(교육공무원회)를 도입하여야 한다. (6) 새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은 평등교육을 지향하며, 수혜자의 선택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새 통일 한국에 적합한 유아교육체제를 제시하면, (1) 연령 기준에 따른 역할 분담 체제로 운영한다. 즉, 0~만 3세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보육시설 체제로 운영하고, 만 4~5세까지는 교육부 주관의 유치원 체제로 운영한다. (2) 0~만 3세 교육은 연령 수준에 적합한 보육위주의 교육기능을 전담하고, 만 4~5세 교육은 연령에 적합한 교육위주의 보육기능을 전담 한다. (3) 0~만 3세의 교육은 현행 남한의 보육시설 체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단,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써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 (4) 만 4~5세의 교육은 유치원에서 관장하는데, 특히 만 5세는 의무무상교육 대상자이므로 많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일단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두고 초등학교내에 부설화시킨다. 이때 병설 유치원은 특성상 만 5세반만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해야 한다. 원장의 선택에 따라 법인화하지 않을 경우는 만 5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부리가 따르므로 이 경우 만4세아 전담유치원으로 규정하여 만 4세아만 교육한다. 만일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게 되면 이 경우는 만 4세반과 만 5세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에서는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의 만 5세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즉, 만 5세 담임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 개·보수비를 비롯한 시설보강사업비등 만 5세아 교육에 합당한 보조금 항목을 책정하여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지불한다. (5)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교사에 한한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국가고시 제도는 교사들의 질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이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과정은 연령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즉, 0~만 3세아는 보육시설중심의 영아보육과정, 만 4~만 5세아는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시 각각의 영아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보육 및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만 0세아(1~12개월)의 보육목표는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영역, 대물인지영역, 기본정서영역, 영양 영역 등이다. (2) 만 1세아(13~24개월)의 보육목표는 내재적 흥미의 자율적인 표출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운동영역, 신변처리영역, 기본언어영역, 표상영역, 건강영역 등이다. (3) 만 2세아(25~36개월)의 보육목표는 자기체험의 주도적 표현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감각·운동영역, 기본생활영역, 개념학습영역, 언어영역, 정서영역, 안전영역 등이다. (4) 만 3세아(37~48개월)의 보육목표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에 있으며, 보육영역은 신체영역, 기본생활영역, 언어영역, 수영영역, 정서영역 등이다. (5) 만 4세아(49~60개월)의 교육목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에 있으며, 교육영역은 신체건강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등이다. (6) 만 5세아(61~72개월)의 교육목표는 창의적 사고의 개발에 있으며, 교육영역은 신체발달영역, 인지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사회성발달영역, 정서발달영역 등이다.

끝으로 연구자는 본 주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첨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일 후의 새 통일 한국을 가상하여 통일 한국의 유아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본 것이다. 사실상 유아교육을 포함해서 통일을 대비한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통일 후를 가상하여 통일 후 교육의 나가갈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 점에서 연구자는 본 주제를 다루는데 많은 한계를 느꼈으며, 따라서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육체제 및 제도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평소 본 연구자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대안들을 주관적으로 제시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연구자의 바람은 본 논문과 같이, 통일 후의 한국의 교육 및 유아교육의 제 문제들을 이슈화하여, 그 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그 노력의 결실이 조속히 가시화 되었으면 한다. 이제 연구자는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 연구'란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남한에서 끊임없이 경주해야 할 유아교육계의 과제들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남한의 유아교육체제와 제도 등 법적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을 특성화·체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양성제도의 개혁을 통해 교사의 질적 향상을 고무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를 특성에 맞게 전문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정한 의미의 보육 및 유아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단체 및 정부의 투자로 보육 및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가 부단히 계획·진행되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육 및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유아교육현장에서 통일을 대비한 유아교육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일 후의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노의·최민수·김규수·유구종·최연철(1998). *비교유아교육론*. 서울 : 양서원.
- 교육부(1993).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서울 : 교육부.
- 교육정책자문회의(1992). *한국교육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방안*.
- 김숙자(1997).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방향 모색*. (출처).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유아교육학의 방향 모색(1997년도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125~147.
- 김태완(1996). *남·북한 보육 및 유아교육의 내용*.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 2 권, 53~72.
- 문용린·박용현(1990).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방안*. (출처) *교육정책 자문회의*.
- 문현상(1996). *인간관의 고찰*. 서울 : 동문사.
- 보건복지부(1997). *보육사업지침*. 서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1998). *보육사업지침*. 서울 : 보건복지부.
- 신용국(1993). *전통적 인간상*. *교육학연구*, Vol. 31, No. 4, 31~44.
- 오인택(1993).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토론*. *교육학연구*, Vol. 31, No. 4, 107~111.
- 윤기영·서규선·김자영·조경희·이미숙(1997). *유아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서울 : 창지사.
- 윤미량(1996). *남·북한 보육 및 유아교육의 체제 및 제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 2 권, 15~44.
- 이명환(1996). *통독의 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황과 실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 2 권, 135~166.
- 이삼열(1992).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 방법*.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 한길사.
- 이상금·이영석·이기숙·박찬옥(1993). *2000년대를 향한 유아교육 장·단기 발전 방안*. 서울 :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발전정책연구진.
- 이상주(1997). *미래를 위한 한국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순형(1993).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 *교육학연구*, Vol. 31, No. 4, 87~102.

- 이영석(1992). 유아교육과정. (출처) 보건사회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편, 보육시설시
설장 자격교육반 연수용 교재. 서울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51~200.
- 이영석(1995a). 미래유아교육의 본질과 방향. (출처) 미래유아교육학회편, 미래유아교
육의 본질과 방향. 서울 : 양서원.
- 이영석(1995b). 한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체제의 현황과 전망. (출처) 한국·호주 영
유아보육 학술 심포자움 : 한국과 호주의 보육정책 비교. 서울 : 부산대학
교 보육종합센터,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78~100.
- 이영석(1995c). 한국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 확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 1
권, 1~70.
- 이영석(1995d). 영유아교육과정. (출처) 보건사회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편,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교육반 연수용 교재. 서울 : 국립사회복지연수원. 81~181.
- 이영석(1997a). 유아교육론. 서울 : 형설출판사.
- 이영석(1997b). 미래사회의 유아교육. (출처) 원주전문대학 부설유치원 교원연수원편.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연구과정 연수교재. 200~213.
- 이영석·박제환·김경중(1985). 유아교육개론. 서울 : 형설출판사.
- 이영석·임명희(1992). 3~4세아를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 : 똑똑똑. 서울 : 삼화출판
사.
- 이종각(1997). 교육사회학신강. 서울 : 동문사.
- 이항재(1997). 정보사회에서 유아교육의 철학적 의미. (출처).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유아교육학의 방향 모색(1997년도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25~51.
- 임명희(1997). 한국 유아교육학의 심리학적 측면. (출처).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유아
교육학의 방향 모색(1997년도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69~100.
- 임재택(1995). 현대유아교육과정. 서울 : 양서원.
- 임재택(1996). 남·북한 보육교사 및 유아교사 양성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 2
권, 97~126.
- 정범모(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의 과제와 진단. 미
래유아교육학회지, 제 2 권, 1~14.
- 최민수(1996a). 북한의 취학전 교육. (출처) 열린유아교육학회 가을 정기 학술대회. 17

~82.

- 최민수(1996b). 북한의 유치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제 1 권, 제 1 호, 203~228.
- 최민수(1996c). 북한의 취학전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만수(1998). 북한 유아교육론. 서울 : 문음사.
- 최영표 · 한만길 · 홍영란(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II).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최한수(1997). 한국 유아교육 사상의 고찰 : '소학'과 개화기의 '학회지'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 4 권, 39~72.
- 한만길(1994). 남·북한 교육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 한국 교육.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 최영표 · 황규호(1994). 남·북한 교육과정 · 교과서 통합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황정규(1995).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적 인간상. 교육학연구, Vol. 33, No. 2, 131~150.
- 황정규(1997). 21세기를 대비한 유아교육학의 방향. (출처).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유아교육학의 방향 모색(1997년도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1~23.
- 황혜익(1997). 한국 유아교육학의 방법론적 측면. (출처). 21세기를 대비한 한국 유아교육학의 방향 모색(1997년도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157~186.

〈부록1〉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략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	○ 남북한 통일상사법의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權載烈(관동대 조교수)
	○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徐淳福(광주대 전임강사)
	○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 보스니아 사태 해결의 동아시아적 함의	崔晉宇(이화여대 전임강사)
	○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모델 연구 - 남북한 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CGE 모델을 중심으로	張錫仁(산업연구원 수석 연구원)
	○ 남북한 전력유통 상황 아래에서의 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연구	朴宗培(안양대 전임강사)
II	○ 체제전환기의 노사관계 변화 - 동구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沈宰用(상명대 부교수)
	○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李尙峻(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남북한 통일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 - 급진적 통일방식을 중심으로	林裁亨(단국대 강사)
	○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李容範(한국토지공사 해외사업실 과장)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체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전환 국가의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적용문제 연구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p>金哉翰(한림대 부교수)</p> <p>申東昊(보험개발원 팀장)</p> <p>李塚文(경북대 강사)</p> <p>金聖淑(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원연구원)</p> <p>崔洙滿(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p>
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 방안에 관한 연구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쉽 연구 ○대만·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경분리정책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도서관 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바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방안 연구 	<p>金景錫(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p> <p>李基永(성결대 전임강사)</p> <p>高正植(배재대 전임강사)</p> <p>宋啓儀(동서대 전임강사)</p> <p>金美賢(미국 연수중)</p> <p>安昌滿(강남대 전임강사)</p>
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통일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에 관한 일 연구 ○새 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 연구 	<p>金鴻秀(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p> <p>金國鉉(교원대 강사)</p> <p>金景模(경상대 조교수)</p> <p>韓美靜(성결대 전임강사)</p> <p>林明姬(동남보건전문대 전임강사)</p>

〈부록2〉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6~'98년)

'96년

〈통일정책 분야〉

-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협력분야〉

- 남북한 신뢰구축
-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북한 “인민”생활세계 연구
- 북한의 화법(話法)연구
-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통일환경 분야>

- 한·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97년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실태 일연구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교류협력·인도지원·남북협상분야>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홍보분야>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98년

<통일정책 · 통일환경 분야>

- 남북한 통일상사범의 정립방향
-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 모델연구
- 남북한 전력융통 상황 아래에서의 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 체제전환기의 노사관계 변화
-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방안
-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북한체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연구
-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적용문제 연구
-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남북회담 · 교류협력 · 인도지원 분야>

-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방안에 관한 연구
-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연구
-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 도서관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 바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방안

<통일교육·홍보분야>

-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일 연구
- 새통일 한국의 영·유아 교육 연구

統一教育 · 弘報 (V)

인 쇄 : 1998. 12. 5

발 행 : 1998. 12. 10

발행처 : 정보분석실 분석총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 02)720-2425~6

인쇄처 : 덕 성 문 화 사
☎ 02)274-5916
